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Contents

004	발간사
006	편집의 방향과 원칙
007	일러두기



## 제1장

010	제1장·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010	제1절 블랙리스트의 위헌성	[오동석]
033	제2절 예술 검열의 역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	[이동연]
066	제3절 해외 블랙리스트 사례와 그 시사점	[이재승]

## 제2장

098	제2장·블랙리스트 작동의 실태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해악	
098	제1절 지원기구에서 검열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이정]
145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이진아]
172	제3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천정환]



제 3 장

202	제3장·블랙리스트 사태의 다각적 조망	
202	제1절 김기춘을 중심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심용환]
222	제2절 논란이 된 작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블랙리스트의 텍스트성과 폭력의 징후들	[박현선]
250	제3절 '블랙리스트 문건'에 드러난 '전체성의 폭력' : 담론적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오창은]
274	제4절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이양구]

제 4 장

298	제4장·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행동 및 법률적 대응	
298	제1절 예술행동	[김소연]
355	제2절 법률적 대응	[장지연]

# 발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데 1년이 지나고,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가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공무원은 상명하복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일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한계로 조사권 등에 제약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의 구조와 흐름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진상 규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11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과 결과물을 정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기록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성의 거울로 삼아 창작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예산과 활동 기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역사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백서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촛불로 삼아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 ■ 편집의 방향과 원칙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는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중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1

##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제1절 블랙리스트의 위험성

제2절 예술 검열의 역사와 블랙리스트의 실제

제3절 해외 블랙리스트 사례와 그 시사점



# 1

## 국가범죄로서의 블랙리스트



### 제1절 | 블랙리스트의 위헌성

오동석\*

#### 1.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정의(定義)

블랙리스트는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박근혜 또는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준일(2017: 54)은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뒤 문서로 만들어 관리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이해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건이다.

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수단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표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범죄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블랙리스트 사태의 헌법적 개념 요소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리스트 기획·작성·시도·실행 등 일련의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적 범죄다. “헌행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며 … 헌정질서를 무력하게 만드는 반체제적, 반헌법적 국사범(國事犯)”이다(한상희 등, 2018: 30). 즉 헌법 제10조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제10조제2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예술·표현의 자유(제22조·제21조)·평등권(제11조) 등 인권의 본질적 내용(제37조제2항 단서)을 침해했고, 문화국가 원리(제9조)·법치주의원리를 위배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도(제7조)를 위반했다.

둘째, 블랙리스트 범죄의 주체는 헌법 제10조제2문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등이 헌법적 범죄의 주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집권세력은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했다.

셋째, 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은 현행 형사법 또는 개별 행정법상의 징계책임 등으로 해소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차별범죄 또는 정책범죄’(이재승, 2018: 116)인데, 그 속성상 중대한 헌법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기껏해야 직권남용죄다. 법원이 블랙리스트 범죄를 이해하는 정도는 협소하다.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뿐 그 본질의 중대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제21조 타인의 명예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sup>1)</sup>

헌법적 범죄에 대응하는 죄책을 묻는 ‘특별법’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넷째, 블랙리스트 범죄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도 아니고 다양한 사건들이 단순한 집합도 아니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단일한 의사결정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이기 때문에 선불리 일반화하거

1)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나 그 반대로 개별화하기 어렵다. 개별 사건들의 연계적 이해와 체계적 재구성 그리고 집단적·개별적 양 차원의 문책이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총합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명명하는 까닭이다.

## 2. 헌법의 본질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블랙리스트 범죄는 “입헌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면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전면적 부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 모든 관련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 자체를 침해한다”(한상희 등, 2015: 77).

###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때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권영성, 2010: 375).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다”라고 판시했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블랙리스트는 사상통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찰을 전제로 한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 밝혀졌다. 일제 고등경찰로 상징되는 사찰의 역사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중앙정보기관, 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의 정보부서 등에서 ‘합법’의 탈을 쓰고 있기도 하다. 일반행정기관까지 사찰 기능을 수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그 비밀 활동을 알지 못한다. 사찰대상인물은 정부에 비판적인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상의 전향 또는 세뇌의 대상이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된다. 블랙리스트는 사상 통제의 일환이다.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의 국가폭력이다. 각종의 블랙리스트는 군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취합되고 분류될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체제 반대세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과 내통하거나 적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는 비상상

황에서 고려할 여지가 없다. 폐기처분의 대상으로서 A, B, C 등의 등급만 매겨질 뿐이다.

일제는 불법강점기에 치안유지법(1925),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1941)을 제정하여 폭력적으로 통치했다. 정부수립 후에는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사건이 있었다. 보도연맹은 좌익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기구와 경찰이 주도하여 조직한 관변단체다.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미 육군 24군단 소속 첩보부대), 군, 경찰 등은 전쟁 발발 직후 7월에서 9월까지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여 학살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이러한 조직적인 국가폭력의 법적 장치다. 국가는 비판자를 ‘내부의 잠재적인 적(敵)’으로 상정하여 관리하다가 비상 상황이 되면 ‘실재하는 적으로 외부화’한다.

국가의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상 전향 또는 세뇌를 행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전향은 정치적·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믿음 또는 행동을 바꾸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칭한다.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강제와 자발을 함수로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상의 변화’라고 전향을 정의했다. 세뇌는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확신의 변화, 또는 어떤 견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강압수단을 적용하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는 절대적인 복종과 겸양을 요구하는 제도, 사회적 압력, 협조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추방이나 비판을 가하는 보상체계, 사회적 접촉 금지, 음식이나 수면의 박탈, 강제노역, 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국가범죄는 직·간접적으로 정권에 야합한 사람이 아니라면, 블랙리스트 당사자는 물론 지원정책 응모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을 동원한 체제범죄이기 때문에 예술가 이전의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지위를 침탈 당한 것이다.

#### 나.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위반

『헌법』 제10조제2문에서 명령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는 첫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것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소극적 의무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존중(respect)의무’ 또는 인권침해를 회피할 의무다.

둘째, 국가는 제3자가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즉 개인의 인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protect)의무’에 대응한다.

셋째,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절차를 확보하는 의무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진다. 전자는 자유권, 후자는 사회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충족실현(fulfill)의무’에 대응한다.

넷째, 국가는 국제인권법계와의 교류와 국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장려함으로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증진(promote)의무’에 대응한다.

국가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는 규범(rules, 규정)을 발생시킨다. 규범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어야 할 절대적 의무이다. 규범은 준수하거나 위배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규범의 힘은 ‘실질적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규범을 위배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Fredman, 2009: 32).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가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본권력 등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헌법의 명령을 위반한 국가범죄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집권세력에 포섭당해 국가범죄를 실행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인권증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의 존재의의에 필수불가결한 인권 보장 책무를 위반했다.

## 다. 민주공화국 부정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자체가 국가형태다. 민주는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을 민주주의로 형성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규정이다. 공화국은 모든 공권력이 국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귀속하며, 공공복리에 봉사해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공화제는 공동의 안녕(common weal), 즉 모든 시민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다. 공화제는 어떤 특정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집단이 평등하지도 않고, 다양한 정부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공화제 정부는 권력의 분권을 행해야 하며, 특히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적 다수자가 소수자와 공존하면서 공공선(common good)을 실현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헌법 차원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이름으로써 파당주의(factionalism)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소수 집권세력을 위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을 순응적인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위헌적인 행위였다. 국가권력은 예술가인 민주시민들을 단순히 선별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수단화하여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해 권력을 오용했기 때문에, 주권자가 국가에게 명령한 규범으로서 민주공화국 원칙을 위배했다.

### 3. 인권 침해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 가.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37조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란 당해 자유나 권리의 핵이 되는 실체를 침해함으로써 그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는 정도의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검열의 총체적 확장판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민주공화국 원칙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인의 각종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므로 문화예술인이 가지는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일정한 문화예술인을 배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또한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 나.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censorship, Zensur)은 정부 당국이 책, 영화, 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예술매체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다. 검열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제의견(官製意見)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표현만을

허용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검열의 직접적인 형태는 창작자가 대외적으로 작품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물을 당국에 제출하게 하여 검열 당국의 판단에 따라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의 사전심의로 포장한 경우도 당연히 검열에 속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이라는 것이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

그런데 박근혜 또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은 엄청나게 다양했다. 검열이라 하면 대본에 빨간 줄을 벽벽 긋는 것만 떠올릴지 모르겠다.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 공연을 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검열 잣대를 고집하는 탓이다. 일제 강점기 또는 독재 시대의 검열 관념과 감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권감성 또는 민주주의감성을 민주시민답게 날카롭게 버리지 못한 탓이다.

한국 사회는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서’를 내게 하고, CCTV 만능주의를 부추기며, 국가가 만든 유일 역사교과서를 강요하고, 정치적 표현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로막는 검열 천지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는 정부 수립 직후 제정한 사상 검열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 공모 방식은 거짓 공정성의 전형적인 방식이 되기 십상이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밀실에서 권력의 뜻을 관철하는 알리바이 구실을 한다. 당사자든 국외자든 저항하지 않고 실력이나 운이 없는 탓으로 돌리기 쉽다. 알게 모르게 순응의 기제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검열의 양상은 헌법재판소가 정형화한 검열 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포착 범위가 너무 좁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첫째,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

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둘째,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검열의 다양한 행태를 포섭하기 어렵다. 검열의 양상은 때로는 노골적이지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회피하는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행·재정적 지원의 제한 등의 방식으로 민간심사의 외양을 취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국가권력은 ‘돈’을 매개로 문화예술에 대한 추악한 간섭을 저지른다. 그것은 헌법의 법리 중 이중 기준원칙에 반한다. 이중 기준원칙은 기본권 중에서 정신적 자유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을 구별하여 전자의 가치가 후자의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은 엄연히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돈으로 문화예술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를 전도(顛倒)하는 것으로서 반헌법적이다.

문화예술계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제19조)·종교(제20조)·언론·출판·집회·결사(제21조)·학문·예술(제22조)·표현의 자유 침해다. 검열 금지는 언론·출판의 자유 조항(『헌법』 제21조제2항)에만 있는데, 헌법의 침묵은 학문·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제1항)를 검열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특별한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자율성과 비판성 그리고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의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전체주의화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여부이다. 무릇 예술이란 자유의 행위여야 한다. 미리 짜놓은 틀이나 승배의 대상이나 지배자나 선입견에 속박되지 않고 스스로 창작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보장할 때 예술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헌법의 핵심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의 주체로서 존엄한 존재이며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sup>2)</sup>

2) 그 밖에 불법적인 민간 사찰로서 개인정보권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한상희 등 3인, 2018: 37 아래 참조.

## 4. 헌법 원리와 제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범죄의 위헌성

### 가. 문화국가원리 위배

문화국가(Kulturstaat)는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활동인 학문·예술·종교 등의 분야에서 헌법이 부여한 일정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Steiner, 1984: 8, 42; 김수갑, 2007: 11 재인용).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문화영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영역인 사회에 속하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적 자율의 틀을 만들고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 곤란한 일이나 개인의 자율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오동석, 2018).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보호와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 보호와 지원 정책의 배경은 첫째, 자본과 시장의 경제 권력에 대한 문화의 종속 및 불건전한 상업적 문화의 폐해다. 둘째, 문화적 불평등, 즉 문화비용의 양등과 문화 향유의 불평등이다. 셋째, 제국주의적 문화종속 현상이다. 이것은 문화식민주의의 폐해다. 국가는 국가권력에 의한 문화의 종속을 배제하는 한편 여타 권력에 의해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국가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나 문화국가 개념 자체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즉,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주도적인 역할을 부과하는 국가, 적어도 문화가 활동하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고 혹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어주며 혹은 지켜주는 역할을 당연히 기대하고 혹은 부과하는 전통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개념”(최대권, 2003: 13)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신군부 총칼의 시퍼런 서슬 아래 개정된 1980년 헌법에서 헌법 제9조가 처음 등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문화를 조종하는 나치스의 ‘지도적 모델(Dirigistisches Modell)’로 가는 전조다. 이 사태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까닭이다.

### 나. 직업공무원제도 위배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간접적으로 임용되어 국가·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헌법은 공무원 제도로써 직업공무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의 연속

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을 두는 제도다. “모든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헌법』 제7조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이며, 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하여 정권이 교체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당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공무원에게 보장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충성했다면, 그것은 헌법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법적·행정법적 책임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공무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관료제 아래에서 공무원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뿐이다.

## 5. 블랙리스트 사태의 헌법적 정의

### 가. ‘적폐 청산’과 이행기 정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헌법적 정의(正義)는 국가범죄 또는 헌법범죄로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행기 정의는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거의 오류 및 상처를 말한다. 이행기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과거청산으로 표현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체제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와 현재의 체제 단절이 있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의 인권을 대량으로 침해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 청산’은 이행기 정의 요청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부처나 기관의, 법규범 아닌 행정규칙에 따른, 그것도 몇몇 개별적 사건의 사후 조사에 그치며, 구속력 없는 재발방지책으로, 몇몇 형사 처벌 가능한 범죄자만 문책하는 전 시행정이기 때문이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대량의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가 구현해야 할 이행기 정의 원칙으로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치유와 재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과 균경 공직자·미디어종사자·의료인 등에 대한 인권법 및 인도법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행기 정의의 원칙은, 진상 규명, 가치 판단, 피해 구제(명예회복, 배·보상, 정신적 치유 등), 책임 규명(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형이상학적 책임), 애도와 처우 그리고 기억, 재발방지 및 개선의지 등이다(김민철, 2005: 45; 안병욱, 2010: 48-49 참조).

이재승(2014a: 185)은 처벌과 배상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쇄신과 구조의 혁신을 정면으로 추구하는 ‘변혁적 정의’(Daly, 2002)에 주목한다. 이행기 정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보통사람들의 각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과거청산은 이들로 하여금 주체로 각성케 하여 국가범죄를 일삼는 국가를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행헌법에 비추어 과거 국가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으로서 이행기 정의 개념을 확장할 것을 요한다.

이행기 정의에서 ‘과거·현재·미래는 하나의 통일체’다(신영복: 김동춘, 2006: 206 재인용). 과거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를 드러내고 과거의 굴절된 정의를 현재에 바로잡음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며 사회통합을 이루는(김동춘, 2006: 206 참조) 헌법규범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행기 정의의 구현 정도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현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좌표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사전 또는 사후의 검열과 지원 배제, 위법·부당한 정책 변경, 지원 프로그램의 변경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청산의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과 배·보상 그리고 개별 사건 중심의 재발방지 대책과 다른 점이 있다. 문화예술생태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국가범죄에 동원되는 취약한 국가구조와 관료제 그리고 ‘관의 민간 지배(사이비 협치의 국가동원체제)’의 폐해를 청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나.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필요조건

### 1) 진상규명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첫 번째 필요조건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전히 진상 규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 유의할 것은 진상 규명이 가해자의 형사, 징계 책임을 향하여 또는 피해자의 인정 및 구제 차원에서, 그리고 실증적 문서나 지시에 따른 증명 요청에 따르는, 좁은 의미의 ‘진상 구성’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편에 서는 것이고, 2차적인 가해 행위다.

## 2) 회복적 정의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두 번째 필요조건은 회복적 정의다. 공권력의 오·남용의 결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그리고 치유 문제다. 문화예술인의 범위는 직·간접의 배제 효과에 따라 차별 당한 문화예술인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 3) 국가책임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세 번째 필요조건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민주공화국 헌법질서 유린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다. 국가책임은 공무원의 형사·징계·헌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경미하거나 또는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포괄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태를 방관 또는 침묵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자 등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인권적·헌법적 의미와 재발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4) 재발방지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네 번째 필요조건은 재발방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사상·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표현의 자유 문제인 점에서 그것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사회 혁신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문화예술생태계를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국가책임으로서 관여 공무원의 문책과 교육은 재발방지의 필수불가결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 5) 사과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다섯 번째 필요조건은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에

대해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장이 조사결과 인정,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이행,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담아 공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6) 화해와 용서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마지막은 앞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화예술인과 국민이 내리는 ‘용서’다. 정확히 말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용서의 가능성이 열릴 때 화해 또한 가능한 일이다. 화해는 경미한 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이외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치로써 이뤄진다. 화해를 통해 민주화를 넓히고 깊게 하는 이행기 정의가 일단락된다.

## 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정의의 현재

### 1) 진상 조사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특히 입법자는 입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를 두고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졌던 헌법질서 파괴행위의 진상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국회의 입법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을 제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와 관계인들의 증언 확보 등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한 가급적 신속하게 문화행정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는 직무권한을 발동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국회와 행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질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위원회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서(훈령 제2조) 일정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데(훈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자(훈령 제4조제3항),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훈령 제4조제2항제2호).

민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심의하지만, 조사 활동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권한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포괄적 지휘·감독 아래 기획조정실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 수행하고(훈령 제10조), 관련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관해서는 감사관이 관련 조사를 시행하며(훈령 제11조제2항),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장관이다(훈령 제11조제3항). 조사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일 수 없으며(『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2항), 그러한 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없다.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진상조사의 실제 활동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그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서 유래한다. 행정조사에 관한 법률로서 『행정조사기본법』이 있지만, 행정조사 개념이 광범위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기본법’ 형식의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조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검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납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고용의무 확인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인력수급 실태조사, 독과점시장 구조 조사 등 그

권력적 성격 여부와 조사 사항 범주 등이 천차만별이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의 판단은 개별 행정조사의 목적, 기능, 종류, 수행주체, 방법, 조사의 법적 성질,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행정조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존중 및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의 보존이라는 이익과 국민의 절차적 권익보호라는 이익의 형량을 요구한다(윤혜선, 201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이행기 정의 차원의 조사 활동이며 통상적인 행정조사 활동과 법적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제2항)라는 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민주공화국 헌법질서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제4항)는 반드시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법의 민주공화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상의 권한과 직무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2) 죄책 추궁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현재 우리의 존재의식과 자의식을 결정한다(Jaspers, 2014: 77). 이행기 정의의 중심에 죄책 개념이 있다.

### 가) 형사적 죄책

블랙리스트 작성의 명령과 집행 계통에 있었던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범죄성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하여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막연히 도덕적인 죄나 형이상학적 죄를 거론하는 것은 죄와 책임의 문법을 파괴하는 언동이다. 행위의 중대성에서 보자면 법적인 죄(책임)가 다른 어떤 죄(책임)보다 논리적 우선성을 갖는다”(이재승, 2014b: 228).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헌법상 책무에 상응하여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기껏해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정도

다. 법원이 헌법상의 공무원 책무를 고려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개별적·구체적 지시 형태 아닌 포괄적·추상적 지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형사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

#### 나) 징계의 죄책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동법 제56조 내지 제66조), 각종 의무 위반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8조). 그동안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표현을 억제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길들이기 구실’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무는 오히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련 있는 공무원들에게 징계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 다) 헌법적 죄책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한다. 또한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도 반한다. 국헌문란의 관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상 권력의 오·남용만으로 내란죄의 죄책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

블랙리스트 집행에 직접 참여한 자가 아니면 권력을 배경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명령 또는 지시 없이 포괄적 언사로서 국가범죄를 주도한 주범을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력에 비례하여 직접 집행자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고위직일수록 더 많은 죄책을 헌법에 근거하여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적 불법에는 시효도 없고 소급 금지원칙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향후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형사법으로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7조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것을 침해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sup>3)</sup>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국가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한 ‘자기 사면’이다. ‘사면’은 ‘죄’를 추궁하고 책임을 확정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벌’을 부여한 다음에야 비로소 여지가 생긴다. 공무원의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공무원의 헌법적 책임을 정립하는 길이다. 국민에게는 ‘모든 권력’에 순응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공무원이 절실하다. 시대적 소명과 이행기 정의에 대한 증대한 착오다.

## 라.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과제

### 1) 민주시민의 책무

다시 강조하건대,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현재 우리의 존재의식과 자의식을 결정한다(Jaspers, 2014: 77). 그러나 법의 특성과 법원의 보수성 때문에 법적 정의(正義)는 뒤쳐질 뿐 아니라 협소하기 십상이다. “공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국가가 행하거나 수인한 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국가라는 오명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Jaspers, 2014: 116). 검열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정의(正義)가 존재한다.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개인적인 몫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책무다. 헌법은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민주시민들이 답할 차례다. 국가폭력을 겪은 사회에서 민주시민이 최초로 응답할 의무는 타인,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와 화해를 위해 커밍아웃하는 것이다. 보편적 시민이라면 응답 사찰과 검열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나는 사찰자들과 검열자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사찰 받고 검열 받았으며, 당신과 당신 동료를 능욕했던 사찰과 검열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나는 사상과 표현 또는 예술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해야 한다

3) <경향신문> 2018. 4. 11.

(이재승, 2014b: 269 참조).

민주시민이라면 사찰과 검열 체제에서 마땅히 해야 할 구실을 하지 않았기에 구조적 부정의(不正義)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한국 사회의 사찰과 검열 체제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조직해야 한다(Young, 2013). 국가폭력은 사사로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물질적 배상으로 만족하는 열은 관점이 아니라, 국가폭력을 야기한 구조와 사고방식을 혁신하는 두터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이재승, 2014b: 229).

민주시민의 책무는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주춧돌이 바로 놓여야 민주 사회의 시민들은 비로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죄책을 감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통제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면서 통제에 맞서 민주적인 ‘정치적 권력’을 구성하며, 인류의 일원으로서 형이상학적 죄책을 부담하며 역사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 2) 헌법 차원의 과제

헌법적 차원의 조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 위원회 활동 등은 청와대와 문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자기 사면 또는 자기 면책일 뿐이다. 그것은 곧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사후 알리바이용 자기 변명일 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관련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규범을 침해하고 민주공화국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가범죄 사건이다.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헌문란의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양한 층위의 광범위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는 일이 기존의 배·보상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과거 청산 없이 현재와 미래는 없다. 이행기 정의 없이 적폐의 재발과 반복은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이다. 권력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신헌법 같은 ‘헌법적 불법’을 자행할 정도로 헌법규범을 조작하는 국가폭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핵심요소 중 하나가 공무원 조직이다. 공직자 윤리는 과거를 불문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낱알이 들춰내어 문책하는 것이다. 당연히 소급 입법인 특별법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일은 형사 처벌을 비롯하여 징계벌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형법이 국가범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후입법이 불가피하다. 형사 처벌의 사후 입법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원칙 중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개헌 시 헌법 부칙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범죄 사건이 발발했음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국헌문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의 혁신 여부는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헌법 부칙의 친일행위자 처벌 근거, 1960년 4·19혁명 이후 1960년 헌법 부칙의 반민주행위자 처벌 근거가 그 예다. 반동의 역사 또한 그렇다. 박정희 5·16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헌법 부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불법 은폐 근거, 박정희 유신쿠데타 이후 1972년 헌법 부칙의 비상국무회의의 불법 은폐 근거, 1979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쿠데타 이후 1980년 헌법 부칙의 국가보위입법회의의 불법 은폐 근거가 그 예다.

1987년 시민항쟁 이후 현행 헌법은 이행기 정의의 부칙이 없다. 1980년 광주시민의 항쟁도, 1987년 6월과 7·8·9월의 투쟁도 담지 않았고, 관련자 처벌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은 제10차 개정 헌법의 부칙을 보면, 그 일차적 완수 여부를 알 수 있다. 불법을 응징하지 못하는 법은 악법이고 더 나쁜 불법이다. 독재 시대에 불법을 응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불법을 응징하지 못하고 불법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우기 때문이다. 그만큼 피해자들과 국민의 상처는 깊어진다. 국회와 대통령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특히 법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그렇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정권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되풀이하여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헌법적 범죄에 대응하는 법제는 미약하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균형법상 반란·이적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공소시효의 문제는 사전 또는 사후에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국가범죄에 대처하려면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후처벌 입법은 헌법의 법리상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하는 면이 있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한 국가범죄에 가담한 공직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가능하다. 관련자들은 재판과정에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등 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조 공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형사 처벌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부칙 제○○조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명단을 작성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국가권력을 조직적으로 남용하여 반인권적, 반민주적 국가범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며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소급입법을 제정한다. 국회는 국민 5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는 경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 3) 법률 차원의 과제

헌법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 개정에 앞서 광범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요청한다. 몇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과거 불법적 ‘입법기구’의 ‘악법’을 조사하고, 그 잔재를 청산하여야 한다.

둘째,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롯한 각종 국가범죄 행위에 동원한 권력기구, 즉 국가정보원·검찰·검찰·군·감사원·청와대·행정각부 등 모든 국가기구를 망라한 국가시스템 자체를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 중심의 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불법에 불복종하여 저항할 책무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정치활동권·표현자유 등을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전직(前職)을 이용한 관련 산하기구와 민간기업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넷째, 그동안 예술표현은 물론 표현 일반의 자유를 제약했던 법조항을 폐지·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경찰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당 잡히게 하는 집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처하는 입법 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숙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여 차별 문화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확인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확정

(擴聲)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분배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토대를 다져가야 한다.

## 6. 결론

블랙리스트 사태의 헌법적 국가범죄는 문화예술표현 또는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시민의 사상의 자유와 모든 형식의 표현 자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이면서 국가의 존립 의의를 심각하게 묻는 문제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 해법은 먼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정리하여 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회에게 남겨진 몫은 시민사회 입법안의 재단이 아니라 수용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면서도 사회 차원의 문제기도 하다. 국가의 사찰과 감시 그리고 배제는 어느덧 시민사회에도 스며들지 않았는지 서로 공론의 장에서 성찰하고 발언하며 저항하고 응원하는 일이 제도와 구조,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성찰하는 의미의 특별법 제정과 헌법 개정은 민주적·규범적 정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 인권 침해와 헌정문란 사안이 적체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특히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이 신민(臣民)이 아닌 주권자로서 정체성을 정립하는 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의 행동과 실천은 이제 시작이다.



## Ⅰ 참고문헌 Ⅰ

-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동춘(2006), 「해방 60년, 지연된 정의와 한국의 과거청산」, 『시민과세계』 8, 2006. 2, 203-224.
- 김민철(2005),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 현황과 과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5. 6, 42-51.
- 김수갑(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 『문화정책논총』 18, 2007. 2, 9-46.
- 김영조(2007),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8(3), 2007. 8, 89-122.
- 더불어민주당(2017),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17. 4.
- 안병욱(2010),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역사비평』, 2010. 11, 32-60.
- 오동석(2017), 「문화국가의 헌법 이론과 원칙 그리고 법제 검토」(연구용역 결과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오동석(2018),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국회 의원회관, 2018. 4. 26, 21-34.
- 윤혜선(2012), 「캐나다 판례법상 행정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8, 2012. 5, 179-211.
- 이재승(2014a),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 역사』 101, 2014. 3, 183-217.
- 이재승(2014b),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Jaspers, Karl(야스퍼스, 칼)(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앨피, 2014. 11, 219-270.
- 이재승(2017), 「블랙리스트는 정책인가 범죄인가?」, <오마이뉴스>, 2017. 8.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831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8312), 검색일: 2017. 8. 24.
- 이재승(2018), 「블랙리스트 시대」, 『민주법학』 66, 2018. 3, 109-150.
- 이준일(2017),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연구』 23(1), 53-72.
- 최대권(2003), 「문화재보호와 헌법」, 『법학』 44(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7.
- 한상희 등 3인(2018),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 연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8. 1.

Daly, Erin(2002), Transformative Justice: Charting a Path to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12, 73-183.

Fredman, Sandra(프레드먼, 샌드라)(2009),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교양인.

Jaspers, Karl(야스퍼스, 카를)(2014), 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엘피, 2014. 11.

Young, Iris Marion(영, 아이리스 M.)(2013),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옮김,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 제2절 | 예술 검열의 역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

이동연\*

국가는 검열을 정당화하는 가치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자부한다. 그 말은 서적, 영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를 더 이상 옹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낙인 찍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메시지가 공적 영역에서 유통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혼란이나 충격, 혹은 상처를 주지 않는지 살펴서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검열이라 할 수 없고, 법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리라는 것이 국가의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법학자, 역사학자, 철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다. 청소년보호가 국가와 도덕률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적은 없으며, 공권력의 형태는 여전히 규범을 부여하는 것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로베르 네츠도 『검열의 역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출판에 대한 억압적 검열은 아무 관계도 없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가해질 때 더욱 눈에 잘 보인다.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는 구실에 불과하고, 그 구실이 오래전부터 이용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sup>

위 인용문은 프랑스와 벨기에 출신의 철학자, 판사, 변호사, 작가 등이 공동으로 저술한 『검열에 관한 검은 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유럽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검열에 대한 보고서이다. 유럽인들은 검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유럽에서도 검열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검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원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간혹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검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크게 틀린 말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가령 성적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거나, 폭력의 수위가 높은 표현물들을 무작정 청소년들에게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적 표현물을 심의해서 등급을 매겨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이른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가 검열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한 심의와 등급분류 제도도 검열의 한 유형으로 보려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체부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

1) 에마누엘 피에라 외, 『검열에 관한 검은 책』, 권지현 역, 알마, 2012, 225~226쪽.

위에 언급한 인용문은 청소년보호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이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공권력이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게 매우 위험한 것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지배의 규범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사회에 위 인용문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청소년보호 논리는 어떤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 사이의 대립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에 있어 청소년보호는 공권력에 의한 검열의 정당성을 사회적 규범의 형태로 확보하려는 명분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의 규정<sup>2)</sup>은 지나치게 보수적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이란 심의 기준은 너무나 모호한 사회적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든다.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한 공권력의 규제는 보수적인 청소년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시민사회의 규범적 의제로 변형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청소년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의제를 강하게 제기한다. 청소년보호는 어떤 점에서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로 행사되지 못하고 보수적인 부모 세대가 요청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검열의 의도, 규제의 위험한 규범성이 청소년보호 논리 뒤에 숨어 우리 안에 내면화된다. 청소년보호는 검열의 사회적 내면화를 위한 공권력의 통치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임을 알게 해준다. 검열과 규제, 규제와 심의는 어떤 점에서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검열이 공적 규제와 심의라는 합법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규제와 심의는 사실 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심의위원이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 검열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예술과 검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청소년보호와 검열의 문제를 말한 이유는 군부통치 시절의 말도 안 되는 정치

2)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적 검열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체계적인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건만 검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 검열은 국가의 합법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우리 안에 내면화하거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과 검열의 문제를 음반검열의 역사를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 1. 음반을 통해서 본 검열의 역사

### 가. 풍속과 윤리의 검열 시대

음반 검열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총력전 체제가 가속화되어 조선의 문화에 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중되었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33년에 조선 통독부령 47조 ‘측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 제정’되어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황성옛터’와 ‘아리랑’ 등이 금지곡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월북 가수들의 노래가 모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는데, 조명암의 ‘기로의 황혼’, ‘고향설’, ‘무정천리’ 등이 대표적인 금지곡들이었다.

음반에 대한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음반 심의와 검열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유신정권이 지속되는 1970년대 후반까지 시기로, 전근대적 풍속과 윤리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는 풍기단속의 시대였다. 군부정권은 풍기문란을 징벌해서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들을 근면한 산업 노동자로 만들려는 전략을 꾀했다. 영국 청교도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크롬웰의 『풍기단속법』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한국의 『풍기단속법』은 ‘퇴폐풍조 일신, 왜색문화 퇴출, 미풍양속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낭만적 청년문화를 강하게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음반 심의는 곧바로 금지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로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금지곡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금지곡인 이미지의 ‘동백꽃 아가씨’는 왜색이라는 이유로, 김상국 ‘껌 씹는 아가씨’는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이금희 ‘키다리 미스터 김’은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비하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니 리 ‘해가 뜬다’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살벌한 긴급조치가 행해졌던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금지곡

이 지정되었다. 1975년 긴급조치 9호로 인해 금지곡으로 지정된 곡들은 국내 가요 222곡, 해외 가요 261곡 총 483곡이다. 당시 박정희 군부정권은 국민기강을 바로 잡을 목적으로 기존에 있는 모든 곡들을 금지곡 대상이 포함할 지를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 자학, 비관적인 내용’, ‘선정, 퇴폐적인 내용’ 등이 금지곡을 판별하는 가이드라인이었다. 당시 ‘한국문화윤리위원회’라는 심의 기구가 제시한 금지곡의 세부 기준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황당한 내용들이었다. 금지곡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왜색, 창법저조, 창법퇴폐, 비탄조, 가사무기력, 가사현실도피, 가사조속, 허무감조장, 가사현실불만인식조장, 선정적, 냉소적, 치졸, 야유조, 주체성 없음, 너무 우울, 품위 없음, 반항감, 비참, 잔인

이와 같은 금지곡 기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곡이든지 금지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유신 정권 시절에 가장 탄압을 받은 받은 뮤지션이 바로 신중현이다. 당시 신중현은 최고의 기타리스트일 뿐 아니라, 작곡가, 음반제작자, 연예기획사 대표 등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박정희는 당시 잘나가던 신중현에게 유신을 찬양하는 곡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중현은 거절했고, 이후 그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쳤다. 신중현은 곧바로 대마초 사건으로 체포되고 정부는 그의 대부분의 곡들을 방송 금지시켰다. 말하자면 검열을 할 사람이 생겨나면, 위에서 언급한 음반 심의기준들은 자의적인 검열의 기준이 된다. 당시 금지곡으로 지정된 김추자 ‘거짓말이야’, 이장희 ‘그건 너’는 사회 불신 조장으로, 이장희 ‘한 잔의 추억’, 송창식 ‘고래사냥’은 퇴폐풍조로,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사운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인’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1976년에 ‘한국문화윤리위원회’를 대신해서 발족한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음반 심의-검열 기구로 기능했는데, 유신정권이 끝나는 1979년에만 국내 곡 376곡, 외국 곡 362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이렇듯 1970년대 까지 대중가요들은 군사정권의 사회정화라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금지곡의 반열에 오르는 수모를 겪었다.

## 나. 정치적, 이념적 검열 시대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주로 정치적, 이념적인 검열이 많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퇴폐적인 곡들을 금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곡이 김민기 작곡, 양희은 노래 ‘아침이슬’이다. 이 곡은 1973년 발표 당시만 해도 건전가요로 불리었지만,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라는 가사가 ‘붉은 태양’을 상징하여 북한을 찬양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도 한일관계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금지곡이었다.

제5공화국의 탄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바로 방송과 언론 분야이다. 5공화국의 언론 정책은 언론 통제와 지침과 방송통제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요에 대한 방송심의도 한층 강화되었다. 1981년 1월 에 시행된 『언론기본법』 제37조 규정으로 생겨난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 금지곡들은 가요보다는 팝송이 훨씬 많았다. 당시에 외국 팝 음반은 가사와 뮤직션의 정치적 성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되는 곡을 삭제한 채 라이선스로 발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발매하더라도 문제의 곡들을 삭제한 채로 발매하도록 조치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금지곡으로 묶어 놓은 가요는 모두 677곡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요는 50여곡에 지나지 않았다. ‘방송심의 위원회’와 더불어 가요 음반의 심의를 담당한 기관이었던 ‘한국공연윤리위원회’도 과도한 음반 심의에 앞장섰는데, 1983년 한 해만, 국내 곡 382곡, 외국 곡 887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제6공화국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가요와 음반에 대한 과도한 제제를 푸는 조치를 내렸다. 1987년 ‘문화공보부’에서 ‘공연금지해제조치’는 그동안 금지곡으로 묶여 있던 가요와 팝음악이 해금조치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월북 작가의 작품 88곡을 제외한 나머지 금지 곡들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김민기의 ‘아침이슬’ 등 186곡을 금지곡에서 제외했다.

1980년대에도 대중가요에 대한 음반발매 및 방송 금지 조치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시대에 대표적인 가요 및 음반 검열은 민중가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자연스럽게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낳았다.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해방가’, ‘농민가’, ‘술아 푸르른 술아’, ‘동지가’ 등 대학생들의 시위에 불린 많은 민중가요들

은 상업적으로 팔릴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음반심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지곡으로 분류되었다. 당시 민중가요들은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심의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중 제7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조항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검열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는 앞서 명시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에 적용하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구속되고 작품이 몰수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민중가요가 민주화 운동의 도구가 아닌 대중음악 산업으로 본격 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이다. ‘노찾사’ 1집 음반이 1987년에 발매되면서 민중가요들도 공식적으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음반에 수록된 ‘광야에서’, ‘사계’, ‘그날이 오면’을 비롯한 많은 곡들이 심의 이전에는 금지곡들로 분류되었다.

#### 다. 음란물 통제와 청소년 보호

세 번째 단계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첫 번째 음반 검열의 주된 지침이 풍기 및 윤리통제에 있었고, 두 번째 단계가 이념적 통제에 있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음란물 통제와 청소년보호에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음반의 검열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음반심의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음반심의 사전심의 철폐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1990년 6월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계법)안이 통과되어 음반심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음비계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해 정태춘·박은옥은 같은 해 10월에 낸 <아, 대한민국...>이라는 음반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제작·발매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이 음반이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음반 판매를 중지, 전량 수거 명령을 내렸다. 정태춘·박은옥은 이에 항의해서 음반 사전 심의는 창작의 자유와 국민들의 문화적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990년대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뒤바꾼 ‘서태지와 아이



들'의 4집에 수록된 '시대유감'이란 곡도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가사 수정을 요청 받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사를 삭제한 채 연주 곡으로 음반에 수록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공연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각종 캠페인을 벌였고, 이들의 여론 형성은 결국 음반사전 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음반의 사전 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해체되고, 대신 음반을 심의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1996년 학교의 폭력조직화의 심각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일진회 사건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 행위를 포함해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주된 규제 영역은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과 고시인데, 『청소년보호법』의 제9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는 매체 별 심의 기관이 있는 곳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로 사전 심의제도가 없는 음반 및 노래들이 집중적인 심의의 대상이다. 특히 음반심의의 법률적 근거였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음반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 음반 심의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어온 2006년 이래 2011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곡은 국내외 곡을 합쳐 3,538곡에 이르렀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곡이 늘어난 이유는 술과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가사의 경우 대부분 유해매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초기의 곡들로는 조 PD의 '조 피디 인 스타덤', DJ DOC의 'The Life ... DOC BLUES', 김진표의 '추락', 박진영의 '음음음', 비의 '레이니즘', 동방신기의 '미로틱', 장혜진 '술이야', 장기하와 얼굴들 '나를 받아주오', 싸이의 '라잇 나우' 등이 있다.

**[표 1] 음반 검열-심의의 시대별 변천사**

시기	검열-심의 법령	당당 기관	금지곡/청소년 유매매체곡
일제 강점기 (1954년 이전)	조선총독부령 47조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	조선총독부	황성옛터, 아리랑
산업근대화 유신정권기 (1946-1979)	풍기단속법	한국방송윤리위원회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동백꽃아가씨, 키다리 미스 터 김, 거짓말이야,
권위주의와 문민정부 (1980-1996)	국가보안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아침이슬, 솔아푸르른솔아, 광야에서
신자유주의 (1997-현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피디인 스타덤, 음음음, 레이니즘, 미로틱, 솔이야

## 2. 보수정부 10년, 검열의 특이성

### 가. 기독교 윤리와 검열의 논리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시절 한국에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을까?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면서 한국에서 검열의 특이성에 대해 설명 드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2012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기독교 단체의 항의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이다. 당초 이 공연은 12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레이디 가가 공연을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주최 측인 현대카드사를 압박하여 결국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래 인용문은 아래 인용문들은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되면서 생겨난 논란들을 옮겨 놓은 것이다.

레이디 가가는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조소하며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한다. 또 그녀는 가는 곳마다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고 있다. 혹시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고 레이디가가를 반대 한다면 정중하게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카드 회사는 많으니 미련을 버린다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 문자 20명 이상 전송 부탁함. ('한국교회언론회' 발송 문자 메시지)

레이디 가가 프리메이슨의 상징 검은 악마 형상의 섬뜩한 얼굴을 상징하는 악마 신봉자들. 거액의 자본력 이것으로 치장한 공연과 음악. 현대카드 정신 못 차리고 돈 버는 것도 정도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없는 콘서트 주최를 하다니 현대카드 거래를 모두 끊어버려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신력과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함

니다. 카드사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력을 좀먹으려는 카드사는 ..어짜피 현대캐피탈 사채 끼고 장사하는 곳이라 분별이 없습니까? 레이디 가가는 꿈을 꿀 때도 악마가 자신을 데려가는 꿈을 꾸다죠. 그래서 그 악마를 너무 사랑해서 꿈에서 깨기 싫어한다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음악을 비싼 돈 들여 정신 망쳐리며 왜 듣습니까? 공연 개최 취소 시켜야 합니다. (gut3\*\* 2012.04.10)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기준도 없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한류라 떠들고 유해라 눈감는.. 예능은 행정이 아니라 감성이다... 가가에게는 한날 해프닝이겠지만...”(황혜영 트위터)

“10대에게 유해하다는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근거가 어딤나. 쌍팔년도 성교육이나.”(유아인 트위터).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이 18금 판정 받았네요. 주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다가 우리 아이들 청정 국가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겠어요. 눈과 귀는 꼭 막힌 채로”(김중서)

위의 인용문들은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되면서 생겨난 논란들을 옮겨 놓은 것이다. 한쪽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의 청소년관람 불가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내한 공연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은 영등위의 결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율성을 해치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적 의미의 맥락을 거세했다는 입장이다.

사실 필자는 레이디 가가의 ‘몬스터 볼(Monster Ball)’ 공연을 2011년 3월 말에 미국 LA 스테이플센터에서 직접 관람한 바 있다. 당시 공연에 어떤 등급제한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연장에는 부모들과 동반 한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공연장에는 단체로 관람 온 10대 또래들과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모들과 함께 온 청소년들과 상당히 많았다. 물론 레이디 가가가 틈날 때마다 공연장에서 동성애를 지지했기 때문에 남성 게이들로 보이는 그룹들도 상당히 많이 관람한 걸로 기억한다. 공연콘텐츠는 비주얼의 강도가 아주 강렬하긴 했지만, 통상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비해 훨씬 완화되었고, 연주의 완성도나 퍼포먼스의 독창성이 돋보인 공연이었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의 청소년 유해성은 2005년 내한공연 때, 청소년 관람불가로 지정되었던 ‘마릴린 맨슨’의 것과 비교해보면 건전하다고까지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펼쳐지는 내한공연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이 공연이 청소년 관람불가가 된 것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번 레이디 가가 공연 사태에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기준이 『청소년보호법』 제정 초기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번 공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

체로 지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11년 10월 11일에 정해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세칙이 보수적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14개 항목에 걸쳐 새롭게 정리했는데, 그 심의 세칙 기준에는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와 흡연 관련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의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을 유해매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으로 당시 가요 35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술이라는 단어가 노래 가사에 나온 것만으로도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의 셋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문제의 ‘저스트 댄스(Just Dance)’의 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보도록 하자.

I've had a little bit too much, much(나 오늘 좀 많이 마신 것 같아)/All of the people start to rush, start to rush by(모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네)/caught in a twisted dance(흔들리는 춤 속으로 달려들어)/Can't find my drink oh man(내 술이 없잖아)/where are my keys I lost my phone(내 열쇠 어딤지, 핸드폰도 잃어버렸군)

이 가사가 술을 권하는 내용은 분명 아니고, 마신 후에 폭력, 성적 행위, 일탈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미화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굳이 말한다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는 가사를 일탈행위로 간주해서 유해매체로 고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가사를 근거로 유해매체로 고시하기에는 대단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레이디 가가가 한국어로 부를 리는 없을 테니, 이 노래를 영어로 듣고 청소년들이 일탈행위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 청소년들이 공연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레이디 가가 공연의 청소년 관람불가 결정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심하게 제한을 받은 탓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의원들과 공연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적 보수성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원들은 전형적으로 보

수성향의 인사들이고, 문화표현물을 심도 깊게 다루기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에 대중문화 전문가들이 보강되었다고 하나, 음악적 태도에 있어 보수적이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조건 하에서 레이디 가가의 공연물이 심의를 받을 때, 보수적이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매체를 심의하는 기관에 보수적 결정을 내리게끔 압력을 행사하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들의 집단행동도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다.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청소년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도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의 2009년 내한공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콘텐츠로 진행되었지만, 12세 관람가로 허가를 받았고, ‘현대카드’ 사 역시 과거의 기준과 이 공연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예컨대 일본, 홍콩, 태국에서는 특별하게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이 공연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과정에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 교계들이 영등위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기독교계는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발표 직후 이 공연을 보이콧하려는 운동을 곧바로 전개했다.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 기독교계의 막강한 파워는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사탄의 재림을 위한 유혹 퍼포먼스로 몰고 가면서 공연 주최사인 현대카드와 정부를 압박했다. 만일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면,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예정대로 12세 관람가로 갈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문화매체의 검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통제 장치가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정치적 보수성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활동, 창작, 수용을 건전성의 측면에서 보려는 보수적 기독교 윤리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통제 술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은 보수적 기독교계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레이디 가가의 반기독교적인 발언과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들은 보수적 기독교계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급진적 대중문화를 악마주의로 공격하는 보수 기독교계는 건전한 노동윤리와 건강한 문화생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수 정부 문화 통제 장치의 구성 요소가 된다. 레이디 가가 공연의 청소년 관람불가가 단지 청소년들의 문화적 불기회의 박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중 전체의 통제 장치로 활용된다.

## 나. 청소년 폭력과 유해 매체 모방론

두 번째,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논란이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012년 2월에 24편의 웹툰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사전 고시한다는 내용을 해당 작가들에게 알렸다. 심의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연재작 13편, 다음 연재작 5편을 포함 총 24편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반-폭력적이라는 것을 심의위에 나와 변론을 해야 했다. 해당 작품들 중에는 <열혈초등학교>, <전설의 주먹>, <더 파이브> 등 인터넷 웹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 들어있고, 이미 16편은 19세 이상만 볼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청소년 유해물로 사전 고시된 <더 파이브>는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문화부장관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 부문 대상작이기도 하다.

웹툰에 대한 난데없는 규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규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와 웹툰 검열의 목적은 매체 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자기 책임을 대중 매체로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권력 기관의 관습이 발동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2011년 12월에 대구에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학교 교육 지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자기 성찰 대신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손쉬운 희생양을 찾고자 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들의 심문 내용들은 이미 이러한 정부의 정치적 요청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다. “너는 왜 그렇게 폭력적이게 되었니?”, “하루 일과 중 네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이니?”, “주로 게임이나 만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식의 매체모방론으로 범행의 동기를 몰아가는 것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나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상적인 관행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칼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에도 미 연방경찰국은 이들의 범행동기로 1인칭 슈팅게임(FPS) ‘둠’과 록 가수 마릴린 맨슨(Marilyn Manson)을 지목했다. 1997년 일진회 사건 때도 학교 폭력의 주범으로 일본 만화가 지목되기도 했다. 대구 중학교 자살사건이 벌어진 후 정부기관과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사건의 배후에 청소년 유해매체가 있다는 것을 여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심의위원회가 예정에도 없던 웹툰 검열을 시도하려 했던 것도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이후였다. 2012년 1월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에서 가해자를 조사하던 중에 만화를 보고 모방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연재하던 <열혈 초등학교>를 맹공격했다. <조선일보>가 “열혈 초등학교,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2012년 1월 7일자)라는 제하로 1면에 대서 특필하자, 곧이어 심의위원회가 이 웹툰을 포함해 인터넷에 게재된 웹툰을 대대적으로 심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해당 업체가 인터넷에서의 만화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레이다 가가 공연이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게임과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을 위해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과거 일진회 사건 때 보수언론들이 매체모방론의 문제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1면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우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이전에 게임이 마약 같이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연재 기사를 1면과 주요 면을 이용해 일주일 간 진행한 적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이 전면에 나서서 게임, 웹툰 같은 부상하는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벌인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조선일보> 데스크가 보수 독자들을 의식해 게임의 중독성과 웹툰의 폭력성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기획의도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보수 정부의 콘텐츠 규제정책과 사전교감이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논의 후에 특집 기사가 기획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 이것은 보수 정부에 의한 문화적 보수화의 결과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 나가 이런 기사를 통해 문화적 표현물의 규제담론을 강화하여 사회 기강을 잡아보려는 통치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원인에 대해 ‘매체모방론’과 ‘사회구조론’은 아주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입시교육과 경제 양극화, 사회적 구별짓기라는 사회구조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과 왕따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현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체모방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한계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에게 원인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언제나 이미 대중매체였다. 게임의 중독성과 웹툰의 폭력성은 객관적 분석과 실증 연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대변하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웹툰의 폭력성은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특정한 국면 하에서 정치적으로 내려진 자의적인 가설 하에서 결정된다. <열혈초등학교>, <전설의 주먹>과 같은 웹툰을 자세히 본 네티즌들이라면, 이 웹툰들의 폭력적 장면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려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웹툰

에 초등학교 학생으로 그려진 인물들의 역설적인 모습이나, 마지막 반전의 메시지들은 이 웹툰의 주제가 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웹툰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폭력이 아니라 폭력이 구조화되는 사회 권력이다.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무리한 고시 예고에 반발한 만화가들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고시는 철회되고 대신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2012년 4월 9일 방송위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민원 등 웹툰 관련 불만 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한 협의,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 협력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의하면서 사태가 봉합되었다. 그러나 이번 웹툰 검열 사태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만화계의 강력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기 정리가 되었지만 보수 정부의 문화 검열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 다. 성 표현의 금기 기준

세 번째 김경목 감독의 <줄탁동시(啍啄同時)>가 2012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사례이다. <줄탁동시>가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이유는 이 작품에 성기가 노출되고, 동성애 장면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영화계와 문화예술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등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심의 기준의 의도성이다. <REC>, <박쥐>, <박하사탕>과 같은 영화에서도 성기노출이 되고, 그것이 작품의 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장면이라 판단되면,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용인된다. 그런데 <줄탁동시>는 제한상영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영화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심의 과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개봉금지 조치와 같다는 점이다.

영등위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할 때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영화에서의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을 심도 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기노출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작품과는 달리 <줄탁



동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문제는 영화 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고민이지 단편적으로 상영등급 분류업무와 연결시켜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영등위의 주장은 사실상 자기모순적인 발언이다. 영등위는 영화의 문제 장면들을 심도 깊게 심의한다고 말했다. 복합적이고 심도 깊게 판단했다면, 성행위 장면을 포함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려는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심의에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영등위의 심도 깊은 심의는 영화의 맥락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성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에 대한 시각적, 생물학적 판단에 치중한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판정한 근거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의 판단도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심의위원들의 성적취향과 시각적 불편함의 주관적 반응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이 전체 영화에서 어떤 맥락을 갖는가에 대한 심층적 고려도 없어 보인다.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영화 단체의 주장에 대해 영등위의 해명도 자기 모순적이다. 알다시피 등급보류 판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창작자의 표현의 권리의 침해 때문만이 아니라,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 법적인 판결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영공간에 존재하고 나서 실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일종의 부당전제이며, 사실상 등급보류 심의제도로의 회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서 다시 등급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영화들이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에 해당 장면을 삭제, 혹은 변형해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7월에 영화 내용에 따라 등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등급보류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에 영등위는 세부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관람등급과 제한상영가 등급의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람등급 분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기준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가.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나.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개정 2010.6.3)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라. 약물 중독·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잔혹하게 묘사한 것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마.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영등위가 새로 만든 제한상영가 분류 등급 기준을 봐도 분류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 표현, 성기 노출이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분류 기준에 대한 사실 적시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성애와 성기 노출에 해당되는 포괄적 기준은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정도가 되는데, 이 역시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영등위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고선 공식적인 분류기준 내용이 이처럼 모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것들을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이다. 차라리 영등위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동성애를 표현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성기가 노출되는 것과 같은 분명한 심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영등위의 기준을 보면 구체적인 등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영등위의 기준에는 성기 노출이나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대신 “성욕만을 자극하여”라는 모호한 말로 대신한다. 동성애는 “풍속에 등에 관한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정도로 설명되고 있다. 심지어는 심의 기준에 조차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특히 성기노출과 동성애의 공공연한 표현에 대한 사회적 포비아는 문화적 표현의 어떤 맥락도 탈-맥락화시킨다. 영등위 심의 기준은 성기중심주의

이고, 동성애 중심주의이다. <줄탁동시>가 “매우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다”는 영등위의 판단은 이성애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기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강하게 작용했다. 만일 그것이 이성애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면 수많은 한국영화들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성기중심주의 역시 ‘성기가 노출되면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다. 그것이 어떤 맥락 하에 표현되었더라도 성기가 일단 노출되면 일반적인 등급을 줄 수 없는 상황 말이다. 이는 포르노그라피는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회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단정한다. 과거 <박하사탕>이나 <박쥐>의 경우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도 작품의 맥락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성기노출의 시각적 불편함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성기노출, 포르노그라피, 동성애 섹스는 객관적 심의 기준이 가동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금기에 대한 공포심의 대상이며, 이 포비아가 결국 <줄탁동시>를 검열한 중요한 잣대이다.

### 3. 블랙리스트와 예술 검열

#### 가. 블랙리스트라는 기호의 의미작용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위와 예술인들을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국가 검열의 통치성의 논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청소년유해매체’ 고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정당한 심의이고,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 보호이데올로기’나 문화예술계의 ‘좌파청산 이데올로기’나 국가가 예술을 통제하는 통치술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과도한 유해매체 심의 역시 검열의 한 유형일 수 있고,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지원배제라는 논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청소년 보호론’에 입각한 국가 규제 장치는 블랙리스트의 배제 장치와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어떤 기호적 특성을 가질까? 블랙리스트는 감시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구별짓고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명부이다. 그것은 또한 정당성 없는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구적인 가설과 신념을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블랙리스트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초한다. “문화예술인이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

다. 그래서 예술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좌파예술가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는 적절한 조치다.”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신념은 언제나 이미 무의식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내적인 신념 체계를 갖춘다. 그 신념 체계 안에서 블랙리스트는 국가 문화발전과 모순되지 않는다. 적어도 박근혜와 공안적 관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적절한 개입이고 애국을 향한 양심적 행위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문화용성과 이항 대립한다. 그것은 문화용성의 타자이자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박근혜 문화통치의 기이한 상상을 야기한 문화용성은 블랙리스트라는 무의식을 표상하는 분열적 기표이다. 문화용성은 블랙리스트의 기표이며, 블랙리스트는 문화용성의 기의이다. 그래서 문화용성은 텅 빈 기호, 부재하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문화용성의 실체가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용성의 무의식이라는 점에서 정신병리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정신병리적인 성향은 박근혜 통치 안에 내재한 심리구조이고, 역사적 유산을 갖는다. 그것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배운 유신 문화정치의 학습효과이며, 유신의 문화정치를 재생산하려는 의지의 연장에 있다. 박정희의 ‘민족문화 중흥’과 ‘유신의 문화공안 조치’의 관계는 박근혜의 ‘문화용성’과 ‘블랙리스트’의 관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아니 전자는 후자로 계승되고 재생산된다. 문화용성도 유신의 애국적 향수를 재생산하며, 블랙리스트도 유신의 공안적 문화통제를 재생산한다. 유신의 문화정치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모순적이게도 문화용성과 블랙리스트가 공존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문화를 정신의 용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를 정신의 통제로 이중 관리하는 것, 이것이 유신의 문화정치이다. 박근혜 문화용성 정책의 주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정신문화’라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sup>3)</sup> 정신문화는 유신의 인문학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유신의 문화정치는 권력의 정당성과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라는 사회적 관리 장치를 탄생시켰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을 구별하는 일종의 살생부로 한정할 수 없다. 이미 그것은 노동운

3) 박근혜 정부 문화용성 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이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28일에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을 발표하면서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제시했고, 이 실천과제 중에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문화용성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2014년도 업무계획에 ‘인문정신의 재발견’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면서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였다.(오창은, 「‘인문 복지’를 넘어 ‘인문 주체’ 되기」, 『문화/과학』, 2014년 가을호, 79호, 참고)

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비판적 지식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암묵적인 사회 관리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유신의 문화정치는 정치적 히스테리와 문화적 포비아를 혼합하면서 탄생했다. 유신의 시대, 민족문화 중흥은 대중들로부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얻고자 문화민족주의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문화공안 조치는 정치권력의 붕괴에 대한 자기 공포의 감각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적 히스테리는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 원인이며, 문화적 포비아는 정치적 붕괴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융성은 정치적 히스테리로, 블랙리스트는 문화적 포비아로 등치시킬 수 있다. 단지 박근혜의 문화정치가 유신의 문화정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블랙리스트의 공작이 부친처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융성이란 기표는 블랙리스트를 은폐시키는 위장술이다. 은폐는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 은폐는 공포의 무의식이 작동한 결과이다. 은폐는 공포가 현실화될 때, 주체를 방어할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럴 때, 은폐는 비로소 본성으로 작동한다. 블랙리스트는 부재한 것이 아니라 은폐된 채로 현실화의 순간을 기다렸을 뿐이다.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위기의 순간을 관리하는 공안 카드로 문화적 포비아를 제거하고 싶은 불안한 충동에서 감행된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현실의 텍스트 안에서 스스로 의미작용을 한다. 그것이 기호체계인 것은 블랙리스트를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라는 사전적 정의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박근혜 통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언표이다. 그것은 이미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블랙리스트라는 기표는 그 문건 작성을 주도한 사람들이 스스로 명명하지는 않았다. 블랙리스트가 하나의 기호가 된 것은 그것이 세상 밖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그 안에 많은 질문들을 가능케 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블랙리스트를 사회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호로 상상하게 만든다.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텍스트로 작용하면서 그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현실을 규정하는, 박근혜의 문화융성의 야만적 실체를 이해하는, 통치자의 정신병리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기호의 의미작용으로서 블랙리스트는 그 안에 감추어진 통치자의 정신세계를, 그 작성에 동원된 관료들의 위계적 위치와 권력에의 의지를,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적 원리를 사회적 의미로 생산한다. 블랙리스트라는 기호의 의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블랙리스트의 시간의 계열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나. 블랙리스트 시간의 계열화

은폐된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은 정치권력이 위기를 의식하는 순간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위기의식이 문화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문화적 공포심을 현실화하는 시간이다. 예술가들에게 블랙리스트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설적으로 영예로운 징표일 수 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든 당사자들이다. 블랙리스트는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거꾸로 블랙리스트는 예술가들에 대한 공포심을 현실화한다. 어떤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조악한 권력 행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권력의 공포 심리를 표면화한다.

권력의 공포 심리로서 블랙리스트가 통치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의식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을 우리는 블랙리스트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의 시간 안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의 시간이 개입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재난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예술 검열의 시간이고, 세 번째는 비선실세의 시간이다. 세월호 재난의 시간은 블랙리스트의 시간을 앞당겼다. 예술 검열의 시간은 블랙리스트의 시간을 통해서 심화되었다.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 시간을 이용했다. 이 세 가지 시간은 박근혜 통치의 본질 안에 모두 응축되어 있다 폭발한 것이다. 세월호 재난의 우발성은 재난의 구조적 필연성 안에 존재한다. 예술 검열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미 자행되었지만, 블랙리스트 시간의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확장되었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예술 검열의 시계를 빨리 돌리고, 예술 검열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라는 공안정치에 기름을 붓고 문화행정을 공황 상태에 빠트려 사익 추구를 노골화하는 시간이다.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 공작을 통해 공공적 방어막을 무장해제 시켰다는 점에서 문화행정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장악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비선실세의 권력을 확장하고,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세월호 재난은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그것은 정치적 위기가 축적된 결과이자, 통치 위기의 시작이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정치적 위기가 시작되는 시간과 일치한다.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순간이 세월호 재난의 순간과 대체로 맞아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진룡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대체로 세월호 사건 직후라고 말했다. 세월호 재난은 박근혜 정부에게

너무 빠른 정치적 위기를 몰고 왔다. 세월호 재난은 이성에 기반한 국가 통치성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통치자의 숨겨진 사적 관계들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재난의 골든타임인 7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재난의 가장 중요한 7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거부하거나, 기억할만한 행동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각이 은폐의 알리바이든, 무능의 증거이든 모두 통치자와 통치의 재난적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세월호 재난은 통치성의 재난을 확인시켜주었고 통치자의 무능과 사적 의혹들을 증폭시키면서 정치적 위기를 고조시켰다. 세월호 재난의 가장 중요한 7시간 동안 베일에 가려진 통치자의 사적인 시간은 은폐되어야 했고, 은폐와 위기의 탈출을 위한 위장술이 필요했다.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위기와 통치자의 사적 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로 동원된다.

세월호 재난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의식을 갖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영화 〈변호인〉의 예상치 않은 흥행이다. 2013년 12월 18일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은 2014년 9월까지 총 1,13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역대 흥행에서도 9위에 오를 정도로 대중적인 호응이 폭발적이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영화 〈변호인〉으로 인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살아나 정권에 대항하는 제2의 촛불시위로 번질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한다.<sup>4)</sup>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청와대 조원동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2013년 연말에 영화 〈변호인〉 제작에 공동 투자한 CJ의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미경 부회장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4년 10월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다.<sup>5)</sup> 청와대는 CJ E&M의 계열 케이블 방송사인 TVN에서 방영하는 〈SNL 코리아〉의 풍자 패러디 코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다. 〈변호인〉, 〈광해〉, 〈SNL코리아〉 같은 오락물들이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흥행하고 대중적으로 유포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적대관계가 권력의 반작용의 형태로 재현되고, 박근혜의 캐릭터와 통치성이 풍자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세월호 재난의 국면과 연계되어 박근혜 정부에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여기에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에 대한 전시 중단 지시 논란이 있었는데, 2014년 8월 8일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4) 〈한겨레신문〉 2016년 11월 17일, 「청와대 CJ 압박, 영화 〈변호인〉이 결정적 이유」 참고.

5) 〈한겨레신문〉 2016년 11월 3일, 「청와대,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종용 의혹」 참고.

비망록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라고 적고 있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2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며 “문화예술계 좌파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2015년 1월 2일에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라고 적혀있다.<sup>6)</sup>

영화 <변호인>은 블랙리스트가 가시화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텍스트가 된 셈이다. <변호인>은 블랙리스트의 시계를 급하게 작동시켰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세월호 재난의 시간과 영화 <변호인>의 흥행의 사회적 효과가 오버랩 되는 2014년 여름, 그러니까 박근혜 통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통치의 파국의 시작되는 시점과 대략 일치한다. 그리고 예술 검열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전달 시점이 2014년 6월과 7월이고, 이후에도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1급 고위 관료들을 교체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의 작성은 매우 긴박하고 절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재난의 공포와 예술의 공포를 동시에 함축한다.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재난과 그 자체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재난 이후 예술가들의 예술행동이 즉각적이고 급진적이었다는 점<sup>7)</sup>, 세월호 재난 이후 통치의 재난의 실체가 드러나고, 깊은 애도와 성찰보다는 사회적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공안통치의 숨겨진 얼굴이 드러났다는 점은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재난과 깊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김기춘 식의 공안 통치는 세월호 재난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불온한 상상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의 실재하는 재난과 그것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다이빙 벨>과 같은 문화적 표현물의 불온한 접속은 블랙리스트라는 공안 통치의 음흉한 공작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재난과 통치에 저항하는 문화적 표현물은 블랙리스트의 시간을 작동시켰고, 블랙

6) 「김기춘 “홍성담 배제 노력…예술계 좌파 책동에 대응” 지시」, <경향신문> 2016년 11월 10일자,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특검 고발」, <연합뉴스> 2016년 12월 12일자 참고.

7) 세월호 재난을 애도하고, 그 사태에 개입하는 예술행동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애도, 애도의 정치로서 예술행동은 그 형식과 주체,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예술가에서 어린이, 팽목항에서 뉴욕, 급진적인 좌파에서 보수적인 시민, 대규모 집회에서 동네 모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동시에 팽목항으로 달려간 사진가들, 다큐멘터리 작가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의 육성들을 고스란히 담은 르포 작가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한 사진작가들의 빈방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기억으로서의 예술행동은 광범위하고 밀도있게 진행되었다(이원재, 『예술행동을 둘러싼 사회적 실천과 연대』, 『좌파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 문화과학사, 2016, 참고). 세월호 예술행동은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는 즈음에 ‘4.16 스테이지’란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리스트의 시간은 예술 검열의 시간을 심화시켰다. 예술 검열의 시간은 문화예술의 지원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합리적 문화행정을 붕괴시켰다.

비선실세의 시간이 개입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다. 비선실세가 만들고자 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막대한 이권과 민원을 위해 정치적 빅딜을 준비하던 재벌들에게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뇌물-이권 세탁’의 적절한 플랫폼이다. 재벌들이 출연한 800억은 자신들이 얻게 될 이권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재단의 출연금이 최순실- 차은택 비선실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출연금을 각출하고 자신들의 숙원 민원들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최순실-차은택 비선실세가 재단을 사익 추구의 플랫폼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의 적극적인 역할과 묵인, 막대한 돈을 출연한 재벌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체부 내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이 두 재단 설립의 주 목적이 비선실세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문화예술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애초에 논란이 있어났을 당시에 두 재단은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자금세탁소로 인지되었다. 블랙리스트는 이러한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식의 기사<sup>8)</sup>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특검의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두 재단의 장기적인 쓰임새의 주 목적이 좌파척결이 목적이었다는 점이 새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구상을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가 진보 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커 문화예술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재단 법인의 설립에 나섰다<sup>9)</sup> 이 같은 사실은 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주도적으로 나선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되어있고, 안종범 수석 역시 전경련 인사들과 재단 출연금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그런 점에서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의 시간과 두 가지 경로에서 만난다. 하나는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제거하는 경로와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척결의 경로이다.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의 시간과 이데올로기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경로를 공유하지만, 주되게는 블랙리스트 국면을 활용하여 문화행정의 공공 경로를 무장해제 시키고, 블랙리스트라는 공안 통치의 이름으

8)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 <동아일보> 2016년 12월 28일, 참고.

9) 「朴대통령, 문화계 '주도권 잡기' 차원 미르재단 추진」, <연합뉴스> 2016년 12월 28일, 참고.

로 사적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선실세의 시간은 박근혜와 김기춘과 같은 역사적 공안 정치와 공모하여 사익 추구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했다. 사익 추구를 위해 비선실세의 시간은 블랙리스트의 시계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블랙리스트의 시간과 연계된 세 가지 시간의 계열은 결국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와 그 공안적 통치의 본질을 구체화한다. 세월호 재난의 시간은 통치의 재난 상황을, 예술 검열의 시간은 문화융성의 허구성과 유신문화로의 회귀를, 비선실세의 시간은 문화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낸다. 블랙리스트의 시간은 박근혜 통치의 붕괴의 신호이자, 유신 회귀와 그 역사적 종말의 시간이다.

#### 다. 블랙리스트의 전달 체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공안 정국의 인장이자, 유신의 징표이다.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검열의 증거일 뿐 아니라, 문화현장에서 검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그것은 통치자를 정점으로 윗선의 지시로 전달되었고, 문서화되었으며, 실제로 실행되었고 확인과 정까지 거쳤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2조를 위반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통치자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등 비선실세들이 문화정책과 행정을 파탄내고 돈과 권력을 사유화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선실세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거나 묵인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공고해지면서 비선실세에 의한 돈과 권력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 예술가를 배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여지를 만들어주었고, 관료들을 겁박하거나 관직을 미끼로 그들에게 자발적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관료 체계 내 감시와 견제 장치를 소멸시켰다.

놀라운 점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블랙리스트가 사적 권력을 위한 관료의 충성 경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통치자 자신의 결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좌파 척결을 목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앞장섰다. 앞서 설명했듯이 박근혜는 문화계에 진보 좌파 세력의 영향이 너무 커 문화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미르재단의 설립에 나섰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데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애초에 이런 구상을 하고, 모금을 주도한 것은 박근혜 자신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이 블랙리스트와 예술 검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최종심급은 사익을 추구하려는 최순실이 아닌 진보적 문화계를 척결하려는 박근혜 자신이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블랙리스트라는 카드로 문화적 공안정치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수많은 곡들을 금지시킨 부친의 유신 문화정치를 부활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폭로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주목받았던 문화융성이란 국정과제는 허구적 기표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민족문화중흥과 문화검열을 공존시킨 부친의 유신 문화정치의 이중성과 일치한다. 문화융성은 문화적 공안정치를 숨기는 가면효과이자, 위장술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의 책임은 오로지 박근혜에게만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블랙리스트 작성, 전달, 수행에 가담하고 공모한 주체들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집단적 공모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전제로 한다.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동아일보> 2016년 12월 28일자 보도는 블랙리스트의 전달경로를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운선/정관주→(국정원 수집정보 동원)→모철민→김소영→문체부 담당국(예술국)→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제안자가 최순실이고 대통령의 동의 하에 블랙리스트가 일사분란하게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특검조사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블랙리스트의 실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점차로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최순실이 먼저인지, 박근혜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혼과 마음을 교신하던 운명공동체로서, 유신의 시간에서 탄핵의 시간까지 주술정치의 자용동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의 시작과 근원은 이 두 사람의 호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블랙리스트의 호명은 단지 둘만의 사교적(邪敎的) 주문으로만 인지되지 않을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공안적 공작정치이고, 유신의 악귀를 불러낸다는 점에서 공안과 유신의 아바타 김기춘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다. 김기춘과의 동맹은 블랙리스트의 역사적 유산을 완성시킨다. 블랙리스트의 역사적 유산을 완성하는 데 있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가 필요조건이라면, ‘박근혜-김기춘’의 관계는 충분조건이다. 블랙리스트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김기춘이다.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위계적 동맹체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대로 사이버 주술의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사교-유신 동맹체’이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자기 신념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것이 주술적이든 공안적이든 확고한 자

기 신념 하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다. ‘사교-유신 동맹체’에게 있어, 블랙리스트는 구국을 위해 척결해야 하는 부정 탄 주문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공안과 반공을 위해 죽여야 할 자들의 살생부이자, 유신의 아버지 박정희의 훈령을 불러내는 축문이다. 그래서 ‘사교-유신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구국 안보를 위한 공작의 대상이자, 주술의 대상으로 보려한다. ‘사교-유신 동맹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최순실-김기춘-국정원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된 것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안정치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맹체가 특이한 점은 주술의 정체성과 공안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의 주술 정치와 국정원의 공안정치가 조우할 근거는 희박하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동맹체를 이룬 것은 박근혜가 있기에 가능하다. 주술정치와 공안정치 이 양쪽을 연결하는 주체가 박근혜이며, 비로소 블랙리스트 통치의 정신세계에 ‘주술적 공안’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신체화 된다.

두 번째 동맹체는 두 번째는 ‘정치-관료 동맹체’이다. 이 동맹체는 결코 첫 번째 동맹체인 ‘사교-유신 동맹체’에 속할 수 없다. ‘정치-관료 동맹체’는 사교-유신 동맹체로 위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정치적, 역사적 아비투스(習性)를 체득할 수 없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정신을 신체화 할 수 없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역사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동시대의 정치적 권력의 이해관계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관료동맹체’는 ‘사교-유신 동맹체’에 종속되어 일방적 지시를 받는 2차적 위치에 머무른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표명하며 블랙리스트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무적 실무 기획을 주도 할 뿐이다. 그들은 블랙리스트라는 공안적 프로젝트를 제안할 위치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미션에 공모하고 아래 단계로 잘 전달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현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운선, 모철민, 정관주 등이 그런 자들이다. ‘정치-관료 동맹체’는 절대 최순실과 김기춘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안보와 국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대신 ‘정치-관료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권력의 획득을 위한 충성심의 징표로 본다. 전자는 유신이란 영혼을 지키려 하지만, 후자는 유신에게 영혼을 팔려고 한다.

세 번째는 ‘지식-권력 동맹체’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미션을 전달받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 이들은 단지 전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을 해야 한다. 그들은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동맹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해야 한다. 이들은 지식-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에서는 블랙리스트의 미션을 수행하고, 그 내역과 실적을 상위의 동맹체에 보고해야 한다. 정치-관료 동맹체가 사교-유신 동맹체에 속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지식-권력 동맹체는 정치-관료의 동맹체에 속할 수 있다. 자신이 블랙리스트의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동맹체의 계열로 진입할 수 있다. 예컨대 김소영, 김종, 김종덕, 박명진, 김세훈 같은 인물들이 ‘지식-권력 동맹체’들이다. 이들은 모두 대학과 학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대학교수나 학자로 활동하다 박근혜 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줄을 댄 사람들이다. ‘지식-권력 동맹체’들은 통치자와 정치적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보좌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념적, 사상적 검증을 받는 시험대에 오른다. 블랙리스트의 순간은 역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 세 번째 동맹체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구적 정당성을 갖고자 자신은 모르고, 알더라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문을 건다. ‘지식-권력 동맹체’에 속한 자들을 가장 비겁한 부역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인, 학자들이 공안적 문화 공작정치에 가담하고 공모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부인하려는 심리들은 바로 자신은 지식인이라는 허구적 신념을 내면화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물론 이러한 세 번째 동맹체 말고,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에서 실제 검열을 수행한 중간관료들, 혹은 하위 관료들이 있다. 이들 역시 출세와 진급이라는 권력에의 강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팔 준비가 되어 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 많은 중간관료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른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적 전문성을 운운하며 자신의 속셈을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다.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는 결국 문화의 영역에서 공안정치의 공작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위로부터는 권력의 행사를, 아래로부터는 권력에의 욕망을 서로 암묵적으로 교환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토대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위계적, 종속적 경로의 성격을 가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래에서 위로 되먹임 되는 효과를 내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가 가동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권력에의 욕망에 있기 때문이다.

## 라. 역사적 히스테리로서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소환된 것이다. 그것은 동시대 권력에 의해 소환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소환된 것이기도 한다. 그 역사적 유산이 바로 유신이다.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유신헌법은 1969년 10월 17일, 3선 개헌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지 3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3선 개헌은 4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했고 그 개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했다. 당시 박정희가 10월 17일에 발표한 담화문 중 일부를 보자.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에서 냉전 시기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2개월간 헌법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시킨다.<sup>10)</sup>

박정희 영구집권의 근거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인데, 이것은 권력 재생산을 위한 냉전적 적대관계의 재생산에 불과했다. “남한은 항시적으로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 추종세력들이 국가 불안의 야기 한다”, “남한이 적화통일 될 수 있다” 등등의 냉전적 가설들은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체제를 새롭게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근거로 활용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흉내 낸 박정희 유신의 정당성의 근거가 탈냉전적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인데, 그 근거로 만든 박정희의 정치 체제가 오히려 “안보와 공안을 강화하는 냉전체제로의 회귀”에 기반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체제는 신경증적인 히스테리를 낳는다. 냉전적인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탈냉전적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심리 기제로 인해 자신의 모순된 논리를 은폐 혹은 회피하려는 신경증적인 반응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히스테리는 지각의식의 장애나 기관이 기능장애의 신체적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상태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소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히스테리는 개인의 신경증의 한 병리적 현상으로 주로 자기중심적으

10) 정혜주, 『유신헌법 반대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16쪽.

로, 항상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바라고, 오기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또는 현시적인 병적 성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증상을 역사-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 사이의 모순에서 오는 신경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신은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에서 오는 히스테리 증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초기 저서 중의 하나인 『히스테리 연구』는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비겁성에서 비롯된 활동이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가 휘두르는 방어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의는 블랙리스트라는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도덕적인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조치’로 설명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블랙리스트는 배제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권력 주체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심리적 자의식과 그것을 만듦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 심리적 자의식의 기저에는 통치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와 통치자의 위기-공포감의 징후들이 발견된다. 박근혜-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주체들로부터 그것을 하달 받아 실행하는 주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특검에서 증언했던 것들의 심리적 기제들은 모두 ‘도덕적인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히스테리는 역사적 유산을 갖는다. 그것은 유신체제의 검열이 행한 히스테리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을 권력에 복종시키고, 예술가가 저항하면 감옥에 보내고 작품을 압수 폐기하는 일들은 이미 유신체제의 유산을 갖는다. 여전히 사교-유신 동맹체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예술가들의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고, 처벌하길 원하며 유신의 히스테리적 유산들을 소환시키길 원한다. 히스테리가 기억에 기초한 심리적 방어기제라는 점에서 역사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히스테리와 역사적 기억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적절한 텍스트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리어왕>에서 리어왕은 딸에게 모든 왕국을 분할해주고, 편하게 여생을 살고 싶었지만, 토지를 상실한 이후 그는 단지 딸에게 위임한 권력자일 뿐, 자신의 힘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리어왕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그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마침내 그의 심복인 켄트가 사위 그로스터의 집에서 간혀 감금당한 채로 있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3, 163쪽.

“O! how this mother swells up toward my heart; Hysterica passio! down, thou climbing sorrow”  
 (아,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구나! 염병아! 내려가거라! 치미는 슬픔아! 네가 있는 곳은 아래다)”

사실 여기서 리어왕이 말한 “Hysterica passio!”는 3판까지는 “Historica passio!”였다. 히스테리라는 개인의 심리 상태가 ‘역사적 염병’으로 오기되는 순간이다. 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히스테리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어왕의 모든 히스테리가 봉건제의 역사적 이행기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리어왕>이 쓰인 시기는 봉건제가 위기를 맞고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기로 이행하는 시점이었다. 토지를 잃은 리어왕은 봉건 지배체제하에서는 아무런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히스테리를 유발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히스테리의 심리 구조 안에는 역사적 전환이라는 맥락이 존재한다. 리어왕의 대사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개인의 정신병리적 현상으로서 신체화된 히스테리증상이 어떻게 역사적 신경증으로 전이되는가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적 히스테리의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는 역사적 히스테리의 증상이 가장 강한 곳이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의 히스테리 증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히스테리의 심리를 역사화 한다. 예컨대 유신시대에 자행된 수많은 문화예술의 검열과 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은 유신의 가장 극렬했던 히스테리의 순간이다. “인혁당 사람들을 사형시킨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무려 225곡의 가요를 금지곡으로 묶었고, 대마초 단속을 통해 이장희, 윤형주, 신중현, 김추자 등 인기 가수들을 포함해 27명을 구속했다.”<sup>12)</sup>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된 1975년 6월에 정부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하는데, 요지는 가요계를 정화시키는 일이었다. 이 대책으로 인해 1차에 130곡, 2차에 44곡, 3차에 48곡이 금지되었다.<sup>13)</sup> 1976년에는 레코드 제작시에는 의무적으로 건전 가요를 1곡씩 포함시키는 ‘건전가요의무삽입제’가 실시되었다. 영화산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통제와 검열, 정신의 백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1973년 영화법 제4차 개정안은 영화진흥공사 신설과 검열강화가 주 골자였다. 1975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영화 시나리오 사전 심의가 강화되어, 시나리오 반려 비율이 1970년 3.7 퍼센트였던 것이 1975년에는 무려 80퍼센트까지 급증했다.<sup>14)</sup>

12) 한홍구, 『유신-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한겨레출판, 2014, 161쪽.

13) 옥은실, 「1970년대의 금지곡과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 『문화과학』 80호, 2014년 겨울호, 201쪽.



역사적 유산으로서 유신의 검열은 문화의 히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그러한 히스테리가 역사적으로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전이는 ‘조국근대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sup>15)</sup>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전이된다. “박정희가 복제하고 싶은 대통령 1위에 꼽히고, 그의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인 지금, 유신시대는 살아 있는 과거”<sup>16)</sup>가 된 것이다. ‘끝나버린 유신체제가 자주 되살아나는 것은 박정희를 불러내는 세력’이다. 근대화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다시 소환되어 박근혜로 현시되고, 유신 체제의 문화와 예술의 검열은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역사적 히스테리로 부활했다.

####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이후

앞서 언급했듯이, 블랙리스트는 문화공안 정국의 입장이자, 유신의 징표이다.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검열의 증거일 뿐 아니라, 문화현장에서 검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다. 그것은 통치자를 정점으로 윗선의 지시로 전달되었고, 문서화되었으며, 실제로 실행되었고 확인과정까지 거쳤다.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2조를 위반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통치자의 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박근혜는 결국 탄핵되었고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차은택, 김종 등 비선실세들이 문화정책과 행정을 파탄내고 돈과 권력을 사유화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선실세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거나 묵인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와 포함의 논리가 공고해지면서 비선실세에 의한 돈과 권력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 예술가를 배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여지를 만들어주었고, 관료들을 겁박하거나 관직을 미끼로 그들에게 자발적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관료 체계 내 감시와 견제 장치를 소멸시

14)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2014, 62쪽.

15) 다음 인용문을 보자. “마오쩌둥이 중국인민의 수호 신이 된 것처럼 박정희는 적잖은 한국국민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가 몰아낸 무당들마저 그를 몸주신으로 받아들였을 정도니 말이다. 이는 일종의 방어전략인 동시에 ‘미신타파’의 총수였던 박정희를 5000년 가난을 몰아낸 영웅으로 재현한 결과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전근대적 민속신앙의 몸주신이 된 것은 근대화의 결과였다. 박정희는 이미 현대의 신화가 되어버렸으며 그 한복판에는 경제개발이라는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 놓여있다.”(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90쪽).

16) 한홍구, 같은 책, 22쪽.

켜버렸다.

통치 권력이 자행하는 예술검열은 나쁜 권력을 나쁘게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숨겨진 방어술이었다. 그러니 권력의 속성상 예술검열은 언제나 이미 영원하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안무가 정영두가 언급한대로 정말 예술가가 두려운 것은 검열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검열의 국면에서 역설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저항이 있으면 검열도 없다가 아니라, 저항이 없으면 검열도 없다”는 상상 말이다.

가령 ‘양상블 시나위’ 검열 사태는 이러한 역설적 상상의 근거를 알게 해준다. ‘양상블 시나위’ 검열사태의 가장 큰 공포는 국립국악원의 해명이 아니라, 국악계 스스로의 침묵이다. 안무가 정영두가 자신의 집안일처럼 국악국악원 검열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연일 1인 시위를 하는 사이, 이른바 ‘국악계’에 속한 어떤 사람도 1인 시위에 동참하거나,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양상블 시나위’와 다른 팀들도 모두 국악계의 동료들이고, 후배들이고, 제자들이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의 동료, 후배, 제자들이 검열사태로 인해 좌절하고 상심하고 있는 사이, 그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공개적, 공식적 용기를 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그래도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집단 침묵. 물론 그 침묵의 속사정은 익히 알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국악계의 구조적 커넥션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의 원인이라는 것을.

국악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악계는 그동안 검열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검열이 더 심화되지 않은 까닭은 역설적으로 저항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침묵은 저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은 일상적이지만, 침묵은 그 일상적 검열의 흔적들을 지워버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검열이 없는 듯해 보이는 것은 그곳에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저항이 없으면 검열도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저항이 있으면 검열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회비판, 더 노골적인 통치자에 대한 풍자, 더 다양한 정치적 표현 행위들이 생기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검열이 생길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저항은 아마도 지금부터이지 않을까 한다. 검열의 국면은 검열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검열의 그림자, 검열의 암묵적 주체들의 실체가 더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사태의 해결은 블랙리

스트에 속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될지 모르는 모든 검열과 유사 검열의 국면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다.

### 제3절<sup>1)</sup> 해외 블랙리스트 사례와 그 시사점<sup>1)</sup>

이재승\*

#### 1. 문제적 개념으로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정부권력은 시민을 적과 동지로, 좌우로 구분함으로써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관행화하였다. 그러한 권력은 철권통치를 구축할 때에는 노골적으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은밀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비밀리에 작동한 사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역설을 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과 동지, 좌와 우의 구분에 입각한 적대정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 적대정치와 적대성의 법제 그리고 이를 떠받드는 적대적 무의식을 근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업이다. 블랙리스트 문제 앞에 전망적인 개혁작업은 예술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계의 확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로,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 뽑는 맹렬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작품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삶의 형식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좁게는 고용기피대상자 명단을, 넓게는 공적인 비난을 살만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블랙리스트 등재자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형사범죄자, 행정적 조치의 대상자 또는 순수한 정치적 적을 지칭한다. 이러한 리스트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든다. 지난 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박해의 역사를 주목하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블랙리스트들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요시찰인명부(불명선인), 한국전쟁중 국민보도연맹원, 신군부의 해직언론인명단<sup>2)</sup>, 청명카드(기무사민간인사찰기록)<sup>3)</sup>, 운동권 학생(강제징집 및 녹화사업대상자), 전교조가입교사, 국정원존안자료등재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sup>4)</sup> 종북좌파교수명단이나 친북인명사전<sup>5)</sup>, 입국금지자(재일조선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 글은 2018년 3월 발간된 『민주법학』 제66호에 실린 「블랙리스트 시대」라는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1980년 신군부 쿠데타세력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하고 언론통폐합을 강행하였으며 해직언론인을 등급화하여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였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 사진상규명위원회종합보고서』 제3권, 2007, 663쪽 이하.

3)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종합보고서』 제3권, 2007, 463-556쪽.

적동포), 신원조회탈락자, 노조블랙리스트, 이적단체, 금서목록(이적표현물, 불온서적), 통진당원명부 등이 주목할 만하다. 밖으로는 태평양전쟁시 일본계 미국인명단,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나치의 숙청자명단, 나치독일의 체포대상자명단<sup>6)</sup>, 나치인명사전<sup>7)</sup>, 브란트의 급진파명단, 동구권의 취업금지자들,<sup>8)</sup> 9.11테러후 테러지원세력, 관타나모 수용소 수용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앞선 리스트 중에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적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리스트도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나 국가는 애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모든 조직 또는 관료제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익과 부담을 배정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양산된다. 동시에 블랙리스트 작업은 사회의 기억과 경계를 만들면서 정치적 권력과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친일인명사전과 독립운동가의 명단은 이러한 증좌다. 어떠한 그룹을 역사적 귀감으로 삼을 것인지, 역사적 악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국가의 보훈 및 보상, 기억의 정책에서 중요하다. 여기에서 쟁점은 리스트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인지이다. 어떠한 권한으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분류에 따라 작성되고, 어떠한 효과가 예정된 리스트인지가 문제이다. 블랙리스트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해주는 선형적인 기준은 없다. 리스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과 같은 당대의 가치표상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그 정당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인사정책에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공직임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과 정책적 재량의 영역을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정부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치적 공직의 임면에 있어서 광범

4) 『친일진상규명법(2004)』은 친일파의 유형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5) 국가정상화위원회(고영주 대표)가 2009년에 착수한 이 작업은 의도와 맥락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동일하다. 블랙리스트 정책을 확정하고 확대시키는 데에는 어디에서나 극우집단의 펌프질이 중요하다. 고영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 된 것도 방송계에서 블랙리스트 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6) 나치제국의 보안성이 제2차세계대전당시 영국점령시에 체포할 요인들의 명단(Sonderfahndungsliste G.B. 1944)을 작성하였다.

7) 미국 OSS(CIA의 전신)는 1944년 『나치인명사전(Who's Who in Nazi Germany)』이라는 비밀문서를 생산하였다. 이는 나치범죄자와 협력자명단으로서 2007년에 비밀에서 해제되었다.

8) 동구권 붕괴 이후 상당수 국가들이 구정권의 비밀경찰이나 KGB협력자들에 대해 숙정조치를 취했다.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137-142쪽.

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여기서 정치적 공직은 직업공무원제와 임기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의미한다. 현대국가는 공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엽관제<sup>9)</sup> 대신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임기제 공직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은 공직이 아니라면 정부는 공직임면에서 정책적 재량을 보유한다. 오히려 정부는 다양하고 세밀한 검증기준을 가지고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에 맞게 수립된 검증기준과 그 시행을 ‘문제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의 남용이다.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비단 문화예술계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였던 시민단체나 교수·연구자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나 사찰은 그 출발점이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영역에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억지로 축출하거나 창작지원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려 9천 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예술계를 넘어 일반 학계와 방송계, 사법부에서도 관철되었다.<sup>10)</sup> 정보기구들도 도감청, 사찰, 감시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업에 빠짐없이 관여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진보정당의 말살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은 오비 이락이 아니라 필연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독일과 미국의 정치사에도 확인할 수 있다. 단일한 영역으로서 문화예술의 장은 정치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정당을 해산시키는 정권이 문화예술계를 초도화하려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이 글은 20세기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통제와 정치통제가 결합되었다는 사정을 주목하고자 한다. 매카시즘 시대 미국은 민관 합작으로 할리우드에서 특정한 영화예술인들의 활동을 10여년 이상 금지하였으며, 나치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정당을 금지하고 유대인과 진보파 예술인들을 공직과 문화영역에서 모조리 추방하였다.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에만 블랙리스트 정책이 관철된 것이 아니었

9) 엽관제(獵官制)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자리를 자파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공직임면제도이다. 미국에서 잭슨 대통령이 시행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공직을 임의대로 채운다면 국가기능의 연속성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엽관제가 민주적 선거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근대국가는 엽관제를 폐기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켰다.

1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없었고, 그에 입각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구분, 감시와 동향파악, 자료구축, 분류와 명단작성, 후속조치와 스크리닝으로 이어진다. 법원의 자료구축은 사법권독립의 침해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부실한 발표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의 미수라고 주장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조사위의 발표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동향파악과 기록은 법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민당의 집권기에도 급진파리스트가 존재하였으며 21세기 현재에도 사라졌다는 점을 보증할 수 없다. 최근에 독일에서 브란트의 급진파리스트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하자 니더작센주는 주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면, 정당의 자유가 부정되는 곳이라면 예술과 예술가는 계토로 들어갈 차순위 대기자에 지나지 않는다.

## 2.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 가. 미국의 적색공포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앞서 미국사의 20세기 전반기를 검토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1791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수정헌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애덤스 대통령과 연방파는 선거국면에서 제퍼슨의 반연방파를 억압하고자 『외국인 및 선동규제법(The Alien and Sedition Acts)』(1798)을 제정하였다. 제퍼슨의 당선으로 이 법은 1801년 폐지되었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제1차 세계대전 말미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혁명적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미국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시작하였다. 특히 급진파들은 제1차세계대전에 미국의 참전을 반대하고 병역거부를 촉구하였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방첩법(Espionage Act of 1917)』과 『선동규제법(Sedition Act of 1918)』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를 제1차 적색공포(1919~1920)라고 부르는데, 평화의 주창자 우드로우 윌슨의 시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20세기 전반기 미국에서 급진적인 정치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출현하였다.<sup>11)</sup> 물론 노조운동가들의 블랙리스트는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체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미국에서 공산주의는 대공황 이후에도 저변을 넓혔으며 1939년에는 미국공산당

11) Elisabeth Dilling은 1934년 자비로 350쪽에 이르는 『붉은 네트워크(The Red Network: A Who's Who and Handbook of Radicalism for Patriots)』이라는 인명사전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1300명의 급진파를 수록하였으며 공산당이나 급진적인 정치조직은 물론이고 미국시민권연맹(ACLU), 미국노동연맹(AFL), 미국산아제한연맹(ABCL) 같은 단체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책자가 정치적으로 취업금지기준으로는 활용되지는 않았다. Karen Sue Cailteux, *The Political Blacklist in the Broadcast Industry: The Decade of the 1950's*, The Ohio University(Diss.), 1972, 50쪽 이하.

(CPUSA)의 당원수가 5만 명에 이르렀다. 이미 1938년에 의회는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를 발족시켜 공산주의와 연관성을 가진 개인, 공무원 또는 단체의 전복적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의회는 1940년에 제2차세계대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전복행위와 각종 선동행위를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5년간 정부공무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일명 ‘스미스법’ 18 U.S.C. § 2385)』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공산당원, 나아가 독일계나 일본계 미국인까지도 등록을 명령하였다. 1941년에 19명의 사회주의노동자당 트로츠키주의자들이, 1944년에는 30여명의 파시스트들이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9년부터 1958년 사이에 공산당의 지도자 144명이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기소 당해 100명 이상이 각기 1만 달러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법에 의해 정치적 적의 블랙리스트가 공식화되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동유럽의 공산화, 베를린 봉쇄, 중국공산화, 미국내 소련간첩 소동<sup>13)</sup>,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안에서 제2차 적색공포(1947~1957), 이른바 매카시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매카시즘의 씨앗은 민주당이 뿌리고 공화당이 수확하는 식이었다. 매카시즘은 트루먼(1945~1953)에서 시작되어 아이젠하워(1953~1961)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트루먼은 충성명령(Loyalty Order)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9835호(1947.3.21)를 도입하여 연방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 트루먼은 민주당 정부가 공산주의자에게 관대하는 우익의 비난을 잠재우고자 행정명령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트루먼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충성심사위원회(Loyalty Review Board)로 하여금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마녀재판을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어쨌든 3백만 명의 공무원이 충성심사를 받았고, 300명 정도가 안보위협인물(security risks)로 해직되었다.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이 점증하면서 충성명령은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장치가 되었다.

미국 내 전복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네바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 맥커랜(Pat

12)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는 1969에 ‘하원국내안보위원회(House Committee on Internal Security)’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에 폐지되면서 그 기능은 ‘하원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로 이관되었다.

13) 히스(Alger Hiss)는 미국무부 공무원이자 유엔 관리로서 유엔의 창설과정에 관여하였으나 전직 공산당원이자 소련 스파이였던 체임버스(Whittaker Chambers)가 1948년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에서 그의 스파이 활동을 증언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McCarran)의 발의로 방대한 『국가안보법(The Internal Security Act of 1950, 일명 맥커랜법)』이 통과되었다. 트루먼은 이 법이 ‘1798년 『외국인 및 선동규제법』 이래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고, ‘권리장전에 대한 조롱’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여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트루먼의 거부권을 ‘압도적으로’ 압도하였다.<sup>14)</sup> 당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만큼 처참하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국가안보법은 정부전복 및 선동행위를 처벌하고 공산주의단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전복활동 통제위원회(SAC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sup>15)</sup> 법무부 장관은 금지단체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연방수사국이 불법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금지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였다. 1953년 1월에 위스컨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가 상원상설조사소위원회(PSI)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폐해는 극에 달했다. 나아가 의회는 1954년에는 공산당을 금지하고 공산당원이 되거나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반공법(Communist Control Act)』도 제정하였다.<sup>16)</sup>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보안법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냉전체제의 공모관계가 확립되었다.

매카시즘의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으나 과거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수백 명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12,000명 정도가 실직하였다.<sup>17)</sup> 동성애자들도 매카시즘의 표적이 되었다. 블랙리스트는 영화계, 대학, 각급학교, 법조계 여타 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었다.<sup>18)</sup>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해안경비대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보안심사를 시행하였고, 3,000여명의 선원이 실직하였다. 냉전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불타오르는 극우 반공산주의는 전선 국가인 서독과 한국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하였다. 물론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억압법제 역시 특정한 시대의 광풍으로 그치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지속해왔다.<sup>19)</sup>

14) 하원은 286대 48로, 상원은 57 대 10으로 재의결하였다.

15) Leon Letwin, “Communist Registration under the McCarran Act and Self-Incrimination”, *Wisconsin Law Review*, 1951, 704-717쪽.

16) Mary S. McAuliffe, “Liberals and the 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3(1976), 351-367쪽.

17) 키트 케이지/최정학(옮김),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의 중지를 위한 투쟁」, 『민주법학』 12호, 1997, 302-314쪽.

18) 공산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양호한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성평가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Konigsberg v. State Bar of California*, 353 U.S. 252 (1957).

## 나.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미국역사에 가장 유명한 블랙리스트는 1940-50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 할리우드 영화예술계에 등장하였다.<sup>20)</sup> 영화제작사, 라디오 TV방송사 등이 공산주의 동조자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의 고용을 거부하였다. 하원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 파시스트들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잠재적인 전복활동에 관심을 두었지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중하였다. 위원회는 공개된 청문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약하는 공산주의 동조자를 색출하고자 했다. 연방수사국은 증인을 동료의 이름을 댄 ‘우호적 증인’<sup>21)</sup>과 수정헌법을 언급하고 동료의 이름을 대지 않는 ‘적대적 증인’으로 나누었다.<sup>22)</sup> 증인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거명된 사람들과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금지)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매카시는 이들을 『수정헌법』 제5조 공산주의자’라고 조롱하였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의 최초 희생자는 ‘할리우드 10인(the Hollywood Ten)’<sup>23)</sup>으로 알려졌다.<sup>24)</sup> 1947년 10월 열 명의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이 소환장을 받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공산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수정

19) 코올은 9·11테러 이후 등장한 애국자법(Patriot Act)을 매카시즘의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David Cole, “The New McCarthyism: Repeating History in the War on Terrorism”,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38(2003), 1-42쪽.

20) Larry Ceplair, “The Film Industry’s Battle against left-wing influences,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Blacklist,” *Film History* Vol. 20(2008), 399-411쪽.

21) 나바스키는 정보원(informer), 협력자(collaborator), 유책방관자(guilty bystander)를 구별한다. Victor S. Navasky, *Naming Names*, Hill & Wang, 2003, 1-70쪽.

22) Reynold Humphries, *Hollywood’s Blacklists: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81쪽 이하.

23) 할리우드 10인은 제작자 겸 작가 Adrian Scott, 감독 Herbert Biberman, Edward Dmytryk, 작가 Alvah Bessie, Lester Cole, Ring Lardner Jr., John Howard Lawson, Albert Maltz, Samuel Ornitz, Dalton Trumbo를 말한다. The Hollywood Ten: The Men Who Refused to Name Names, <https://www.hollywoodreporter.com/lists/hollywood-ten-men-who-refused-839762/item/alvah-bessie-1904-1985-839779>(최종검색일: 2018-1-10)

24) ‘할리우드 10인’ 명단에 앞서 ‘할리우드 19인’ 명단이 있다.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9인은 영화감독 Lewis Milestone, Robert Rossen, Irving Pichel, 배우 Larry Parks, 작가 Bertolt Brecht, Richard Collins, Gordon Kahn, Howard Koch, Waldo Salt 등이다.

헌법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의회모욕죄로 6월에서 1년을 복역하였으며, 10인 중 9인은 영화산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하원 청문회의 야만적인 심정색출작업은 5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의 다수는 이미 탈퇴한 정치적 조직과의 의리 때문에 이름을 대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감수함으로써 경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50년대에 미국사회의 반공 히스테리 아래서 대략 300여 명 정도의 영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이 이외에 청문회에서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지만 영화나 방송계에서 고용을 거부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잠재적 기피대상자로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회색리스트(graylist)’라고 부른다.<sup>25)</sup>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작가들은 차명(Front)<sup>26)</sup>으로 작품을 내거나 유럽으로 이주하여 경력을 이어갔다. ‘할리우드 10인’으로 유명한 달톤 트럼보(Dalton Trumbo)의 작품 <로마의 휴일>에 부여된 아카데미상은 차명인 헌터(Ian McLellan Hunter)가 수상하였다. 그런데 헌터도 나중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트럼보의 1956년작 <눈물어린 포옹(The Brave one)>이 또 다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로버트 리치(Robert Rich)가 차명인으로 수상하였다. 트럼보는 사후(死後)에 <로마의 휴일>의 작가로 공식적으로 정정되었다.<sup>27)</sup> 이와 달리 동료의 이름을 대고 은막에서 반공주의 성전을 전개한 인물도 있기 마련이다. 엘리아 카잔(Elia Kazan)과 에드워드 드미트릭(Edward Dmytryk)이 바로 그들이다.<sup>28)</sup>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업들은 청문회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을 고용하면 대중들이 자신들을 용공분자로 여길까 두려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는 의회, 연방수사국, 산업계의 협력작업을 통해 생성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적용되

25) Paul Buhle & Dave Wagner, *Blacklisted: The Film Lover's Guide to the Hollywood Blacklist*, Palgrave, 2003, glossary(XVIII) 참조..

26)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룬 우디 앨런의 영화제목도 <Front>이다.

27) Ronald D. Cohen, "A Dark Page in American History: Dalton Trumbo and the Hollywood Blacklist," *American Communist History* Vol 14(2015), 205-218쪽.

28) 카파도키아 출신의 그리스계인 카잔은 동료의 이름을 대고 난 후에 여러 작품활동을 했으며 1999년에 아카데미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 현장에서 상당수 영화인들이 전혀 갈채를 보내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부패를 박력 있게 다룬 그의 <워터프론트(On the Waterfront, 1954)>는 반공주의의 세계관에 썩 부합한 것이었다. 드미트릭은 원래 ‘할리우드 10인’에 속했으나 영국으로 도주했다가 귀국한 후 1951년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26명의 동료의 이름을 줄줄이 댔다. 이들의 작품활동에 대해서는 Humphries, 앞의 책, 128-143쪽.

었다. 때로는 민간단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국가가 공인해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반공기업가 알프레드 콜벅이 3인의 FBI 전직요원들이 만든 단체(아메리카 비즈니스 컨설턴트 사)를 후원하고 이 단체가 우익잡지 <반격 (Counterattack)>을 발행하고 곁들여 1950년 6월에 반공 책자 <레드 채널스 (Red Channels)>를 출판하였다. 이 책자는 151명의 배우, 작가, 음악가, 방송언론인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함으로써, 소위 ‘레드 채널스 리스트’<sup>29)</sup>를 제작함으로써 산업계에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sup>30)</sup> 정부당국이 영화인을 공산주의자로 찍으면 산업계가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적 재제방식을 가동하였다.<sup>31)</sup>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는 영화산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민관합작의 국가범죄였다.

#### 다. 블랙리스트의 소멸

적색공포는 50년대 후반 잦아들기 시작하였으며 이 흐름에서 미국시민권연맹(ACLU)과 민권법률가의 철폐투쟁이 주효하였다.<sup>32)</sup>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기념비적 판결로서 예이츠 사건(1957)을 주목해야 한다. 공산당원 열 네 명이 스미스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할란 판사는 “피고인들이 즉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고 그러한 행동의 발생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예측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행위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즉각적인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만이 처벌대상이다.”라고 함으로써 흄즈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처음으로 판결로 관철시켰다.<sup>33)</sup> 드디어 야만적 금제에 금이 갔다. 1965년에는 대법원은 공산당원

29) 레드 채널스의 정식명칭은 Red Channels: The Report of Communist Influence in Radio and Television이다. ‘레드 채널스 리스트’에 등재된 예술인 명단은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llywood Blacklist”, [https://en.wikipedia.org/wiki/Hollywood\\_blacklist#The\\_Red\\_Channels\\_list](https://en.wikipedia.org/wiki/Hollywood_blacklist#The_Red_Channels_list)(2018-10)

30) Cailteux, 앞의 글, 60쪽 이하.

31) Ellen Schrecker, “Blacklists and Other Economic Sanctions”, <https://www.writing.upenn.edu/~afilreis/50s/schrecker-blacklist.html>(최종검색일: 2018-1-10)

32) Martin H. Redish & Christopher R. McFadden, “HUAC, the Hollywood Ten, and the First Amendment Right of Non-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Vol. 85(2001), 1669-1728쪽.

33) 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 (1957)

에게 범죄사실(공산당원이라는 사정)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맥커랜법의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sup>34)</sup> 1967년에는 연방정부와 방위사업에 공산주의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맥커랜법의 해당조항도 수정헌법 제1조(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sup>35)</sup>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뉴욕주는 1950년에 반역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문서를 제작·유포하거나 폭력,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의 전복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교직에서 배제하는 법제, 일명 ‘파인버그 법(Feinberg Law)’<sup>36)</sup>을 구축하였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와 용공분자를 추방한다는 목표로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금지된 정치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약식으로 해직시켰다. 1952년 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뉴욕 공립학교에서 해직된 아들러는 수정헌법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파인버그 법제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sup>37)</sup> 이러한 법제는 1967년 케이시안 사건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사립 버팔로 대학이 주립 뉴욕대학으로 통합되면서 케이시안과 몇몇 교수들이 공무원법에 따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서약하라고 요구받았고, 이들은 이 법의 위헌성을 다투게 되자 대법원은 근로자로 하여금 공산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파인버그 법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화답하였다.<sup>38)</sup> 이 판결은 예이츠 판결의 의미를 현실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철폐시킨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1978년 공무원개혁법도 정치단체 가입을 이유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금지하였다.<sup>39)</sup>

미국에서도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차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34) *Albertson v. 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 382 U.S. 70 (1965)

35) *United States v. Robel*, 389 U.S. 258 (1967)

36) 뉴욕주 의원 Benjamin Franklin Feinberg가 주도하였다. 공무원법 제105조(전복활동, 파면), 교육법 제3201조(반역적 선동적 언동을 이유로 한 해임) 및 제3202조(전복적 인물의 해임), 주립 대학이사회규칙(전복활동), 뉴욕주형법(아나키범죄, 아나키 옹호), 뉴욕주립대학이사회의 결의 등을 파인버그법이라고 한다. James F. Twohy, “The Feinberg Law,” *St. John’s Law Review*, Vol. 24(1950), 197-220쪽.

37) *Adler v. Board of Education*, 342 U. S. 485 (1952).

38)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385 U.S. 589 (1967).

39) “수정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직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Rutan v. Republican Party of Illinois*, 497 U.S. 62, 110 S. Ct. 2729, 111 L. Ed. 2d 52, 5 I.E.R. Cas. (BNA) 673 (1990).(이 판결은 엽관제로부터 하위공직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다)

만, 40)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사적 영역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법이 모든 주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41) ILO규약 제111호(고용차별금지협약)와 같은 기준이 현재에도 미국의 사기업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2)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존 헨리 포크의 재판이 중요하다. 유명한 라디오 방송인인 포크는 1957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여 1962년 마침내 승소하였다. 43) 이 소송 이후 거액의 배상금에 부담을 느낀 텔레비전방송계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1960년 <스파르타쿠스>의 출연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할리우드 10인중 한 사람인 달톤 트럼보—트럼보는 당시 가명(샘 잭슨)을 사용하였다—가 이 작품의 작가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영화계 블랙리스트도 종지부를 찍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포크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들이 연합하여 특정집단의 취업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소지도 없지 않았다. 44)

40) *James Jacobin V. Industrial Foundation of Permian Basin et al.*,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ifth Circuit, March 16, 1972, *Federal Reporter 2d. Series* Vol. 456(1972), 258 쪽 이하.

41)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입각한 해고제한법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Donna Ballman, “Can You Be Fired For Your Political Beliefs Or Activities? Maybe”, [https://www.huffingtonpost.com/donna-ballman/can-you-be-fired-for-your\\_b\\_9154066.html](https://www.huffingtonpost.com/donna-ballman/can-you-be-fired-for-your_b_9154066.html)(2018-1-10)

42) 예컨대, 2001년 비영리단체인 굿월 인터스트리즈의 노동자 마이클 이탈리아는 사우스 플로리다의 시장으로 출마하여 노동자-농민의 정부를 수립하고 쿠바 혁명을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조직인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과의 관련으로 해고당하자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으나 플로리다 법원은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 고용주도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Timothy Noah, “Can Your Boss Fire You for Your Political Beliefs?”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hatterbox/2002/07/can\\_your\\_boss\\_fire\\_you\\_for\\_your\\_political\\_beliefs.html](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hatterbox/2002/07/can_your_boss_fire_you_for_your_political_beliefs.html)(최종검색일: 2018-1-10)

43) 1956년 유명한 CBS라디오방송 진행자로서 미국라디오TV아티스트연맹 뉴욕지부 제2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어웨어(AWARE)사를 이른바 용공적인 견해와 결사를 이유로 연에게 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행을 시행하는 우익기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어웨어사의 분노를 유발하였고, 어웨어사는 포크를 체제전복가들과 함께 반미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포크는 그 주장을 부정하고 어웨어사 및 레드 체널스의 공동발행인 빈센트 W. 하트네트, 반공주의자 로렌스 A. 존슨을 상대로 명예훼손(libel)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시작된 이래로 CBS는 포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포크는 방송업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 재판이 1962년에 끝나게 되었는데 배심원들은 포크가 원래 요구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하였다. 당시 배상금 3백 5십만 달러는 명예훼손에 관한 배상금으로서는 최고액을 기록하였지만, 항소법원은 다시 50만 달러로 감액하였다. *John Henry Faulk v. Aware, Inc., et al.*(1962)

44) *Nedrick Young et al., Appellants, v.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Inc., et al., Appellees*, 299 F.2d 119 (D.C. Cir. 1962); Note, ““Political” Blacklisting in the Motion

### 3. 독일판 블랙리스트

#### 가. 나치의 블랙리스트

직업금지가 정당금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역사를 서론에서 강조하였다. 비스마르크 체제의 사회주의자금압법(Sozialistengesetz 1878)이 독일현대사에서 블랙리스트법의 원조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치인압살과 극우 쿠데타를 계기로 공화국수호법(Republiksschutzgesetz)을 제정하였지만 정당을 금지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악습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당은 집권과 동시에 공산당과 사민당을 해산시키고, 신당결성금지법과 당국가통일법을 제정함으로써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다. 독일에서 직업금지는 정치적 좌파(나치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비나치 세력)와 유대인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었으며, 후자에 대한 공격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

나치는 『직업공무제복구법(Berufsbeamten-gesetz 1933.4.7)』을 제정하여 진보파와 유대인을 공직에서 대규모로 추방하였다.<sup>45)</sup> 이 법은 “과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민족적 국가를 항상 유보 없이 지지하는 것에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해직시키도록 하였다(제4조). 이 조항은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의 진보파를 해직시키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원래 『직업공무원제복구법』(제1조)은 제국, 주, 자치단체, 공법인과 동등한 영조물, 제국은행, 제국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겨냥하였으나 시행령은 이를 공공 분야에 일하는 사무직원 및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당시 독일의 법과대학 교수들의 해직상황을 살펴보면 정교수 389명중 120명이 나치집권초기인 1933년에 해직되고, 잔류자중 3분의 1정도가 추가로 1939년(2차대전 개전시점)까지 해직되었으며, 그 자리를 전도유망한 젊은 나치들이 차지하였다.<sup>46)</sup>

『직업공무원제복구법』은 ‘아리아인 조항’으로 유대인을 공직에서 숙청하였다(제3조 제1항). 조부모 4인중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인 경우에는 비아리아인으로 취급되었다. 유

Picture Industry: A Sherman Act Violation”, *The Yale Law Journal*, Vol. 74(1965), 567-580쪽.

45) 연합국은 독일점령 직후 나치법폐지에 관한 포고령(통제위원회법률 제1호)에 따라 나치악법 29건을 즉시 폐지하였고 그중 직업공무원복구법도 포함되었다. 연합국은 나치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복직 포함)를 단행하였다.

46) Ingo Müller, *Furchtbare Juristen. Die unbewältigte Vergangenheit unserer Justiz*, München, Klaus Bittermann, 2014, 88쪽 이하. ‘비판법학지’는 반나치투쟁에 동참한 민주적인 법률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엮어 『법률가열전』으로 출판하였다. *Kritische Justiz, Streitbare Juristen: Eine Andere Tradition*, Nomos, 1988.

대인이 1914년 8월(제1차세계대전) 이전에 공무원이 되었거나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제국 및 그 동맹국을 위해 전선에서 군인으로 참전했거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 전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직을 유보하였다(제3조 제2항). 참전자나 전사자 예외조항은 참전한 장군 힌덴부르크와 히틀러간의 타협의 결과였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유대인 공무원(약 5,000명) 중 절반가량이 살아남았으나 이들도 1935년 『독일혈통보호법(뉴른베르크 인종법)』에 의해 모두 해직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한 1918년 이후 공직에 취임한 사람들은 경력을 통해 통상적인 모범(나치국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해직되었다(제2조). 이와 같은 숙청조치는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의사 자격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었다. 『변호사자격법(1933.4.7.)』에 의해서 유대인은 변호사자격을 상실하였고, 상당수는 참전조항으로 변호사직을 1938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sup>47)</sup>

괴벨스와 그의 제국선전부(RMVP)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광범위한 통제를 펼친 사실은 유명하다.<sup>48)</sup> 나치는 바이마르 시대 다원주의적 예술관을 청산하고 나치즘으로 획일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모든 예술문화단체들을 제국선전부 산하 문화위원회에 강제로 통합·편입시켰다. 제국문화위원회 의장은 제국선전부 장관 괴벨스(Goebbels)가 맡았다. 제국문화위원회법(Reichkulturkammergesetz 1933.9.22.)과 시행령(1933.11.1.)이 예술에 대한 나치의 통제장치이다. 제국문화위원회는 도서, 언론, 영화, 라디오, 음악, 연극, 미술 등 7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시행령 제1조, 제2조). 예술가들은 작품활동을 수행하려면 관련 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제4조).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은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제25조). 분과위원회는 전문단체들만으로 구성되므로 개인은 전문단체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얻게 되었다.<sup>49)</sup> 해당분야의 전문단체가 없는 예술인은 직접적으로 분과위원회에 가입해야 했다.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전문단체의 정관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며, 전문단체의 대표 및 사무총장의 임면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치적 세계관에 충실한 관제예술과 예술가길드가 탄생하였다. 유대인 및 진보파들은 분과위원회에 속할 수 없었

47) 1930년 기준으로 독일인구중 유대인은 0.76%였으나 변호사중 유대인비율은 32.3%에 이르렀다. 당시 독일변호사 총수는 19,500명이었는데 4,394명이 유대인이었다. Müller, 위의 책, 77쪽 이하.

48) 나치초기 문화계 관료제의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Jonathan Petropoulos, *Art as Politics in the Third Reich*,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19-50쪽.

49) 예컨대 제국미술분과위원회(Reichkunstammer)에는 건축, 조각, 회화 등 10여 개 이상 전문단체들이 통합되어 있다.



기 때문에 작품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회원 자격 없이 작품활동을 감행하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제29조).

1933년 『언론인법(schriftleitergesetz)』도 언론인의 자격기준을 도입하였다. 모든 언론인은 제국문화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구받았고, 일정한 기간의 교육과 수습을 거쳐 준공무적 지위를 얻은 후 나치제국에 충성을 약속해야 했다. 이제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선전으로 변질하였다.<sup>50)</sup> 『언론인법』으로 인해 약 1300명의 언론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자유주의적 신문들은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

‘비독일적 정신에 대한 행동’으로서 작품에 대한 공격이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1933년 4월 발족한 ‘베를린 시립도서관개편위원회’에 참여한 나치당원이자 도서관 사서 볼프강 헤르만(당시 29세)은 도서 대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나치 독일학생회는 1933년 5월과 6월 사이 22개 대학도시에서 유대인, 마르크스주의자, 평화주의자들<sup>51)</sup>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불태웠다. 헤르만의 블랙리스트는 사찬(私撰) 리스트에 불과했지만 ‘독일출판업계지’에 프로이센의 공식적인 금서목록으로 출간되었다. 이 블랙리스트와 분서조치의 대상리스트들은 증보과정을 거쳐 제국선전부의 리스트로 발전하였다.

제국선전부 산하 제국문화위원회 도서분과위원회가 1935년 작성한 ‘유해도서목록’에 따라 나치당국은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 서점, 출판사, 도서대여점, 서점, 고서점을 청소하였다. 이 유해도서목록은 인도주의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작품 또는 유대인이 저술한 작품 12,400종과 149명의 작가의 모든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였다.<sup>52)</sup> 문화위원회법에 따라 작가들은 도서분과위원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했으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필금지까지도 당했다.<sup>53)</sup> 작가들은 이제 금서로 판정받을지 모른다는

50) Ruchner, Max, “Bemerkungen zum deutschen Schriftleitergesetz, Neue Zürcher Zeitung vom 10.10.1933”, <http://pressechronik1933.dpmu.de/bemerkungen-zum-deutschen-schriftleitergesetz-neue-zurcher-zeitung-vom-10-10-1933/>(최종검색일: 2018-1-10)

51) 독일학생회본부의 회람에는 Karl Marx, Karl Kautsky, Heinrich Mann, Ernst Glaeser, Erich Kästner, Friedrich Wilhelm Foerster, Sigmund Freud, Emil Ludwig, Werner Hegemann, Theodor Wolff, Georg Bernhard, Erich Maria Remarque, Alfred Kerr, Kurt Tucholsky, Carl von Ossietzky 등 15인이 분서리스트에 올라있으며, Sigmund Freud, Theodor Wolff, Georg Bernhard, Carl von Ossietzky는 볼프강 헤르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다.

52) 나치시대의 작가 및 작품의 블랙리스트는 Verbrannte und Verbannte, [http://verbrannte-und-verbannte.de\(2018-1-15\)](http://verbrannte-und-verbannte.de(2018-1-15))

자기검열 아래서 게슈타포에게 감정의견을 듣고자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학이 죽자 대략 1500명의 작가가 인접국가로 망명하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망명작가 작품만 취급하는 전문출판사가 따로 세워졌다. 나치가 유럽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개시하자 이들은 다시 미국, 소련, 남미로 탈출하였다. 국내에 머문 작가들은 나치적 세계관으로 획일화되거나 내적 망명 속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나치들은 ‘독일적 미술’과 ‘타락한 미술’을 대비하였다. 유대인의 미술, 나아가 나치적 예술관과 양립하지 않는 현대미술—표현주의, 인상주의, 다다이즘, 바우하우스, 초현실주의, 신즉물주의, 입체파, 야수파—을 타락한 미술로 규정하였다. 1937년 뮌헨에서 나치당국이 화가 110여명의 작품으로 타락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미술탄압은 극에 달했다. 당국은 일부 화가들에 대해 미술분과위원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창작 및 전시금지 지시를 내렸으며, 이 지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비밀경찰이 화가의 자택을 급습하기도 했다. 작품에 대한 검열이 일상화되자 화가들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등 자연주의적 화풍으로 전환하였고, 원래의 경향을 고수하다가 타락한 미술로 규정받게 되어 국외로 탈출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나치 집권 후 『직업공무원제복구법(1933)』에 따라 유대인 오페라 가수, 연주자, 배우, 감독들은 국립 오페라하우스, 교향악단, 극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해직당한 유대인 음악가들은 1933년 ‘독일유대인문화동맹’이라는 자조적인 조직으로 결성했으며 그 회원수는 베를린에서만 2만 명에 이르렀다. 결국 이 조직은 유대인의 통제와 계도화에 이용되었다. 제국문화위원회 산하 음악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나치문화정책을 수행하였다. 음악분과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은 음악 활동을 거부당했다. 여기서도 나치들은 ‘독일적 음악’과 ‘타락한 음악’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나치들은 모차르트, 바하, 헨델, 브람스, 베토벤 등 독일작곡가들의 작품을 나치적으로 재해석하고, 유대인 작곡가의 작품을 ‘타락한 음악’으로 규정하고 연주금지조치를 내렸다.<sup>55)</sup>

나치들은 타락한 음악의 하나로 ‘검둥이 음악’을 타격하였다. 나치들은 20년대 후반에

53) 작가와 도서시장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Jean-Pieter Barbian, *Literaturpolitik im NS-Staat. Von der Gleichschaltung bis zum Ruin*, Fischer, 2010, 193쪽 이하.

54) 작가, 출판업자, 저적상의 협력, 동조, 저항에 대해서는 Jan-Pieter Barbian, *Die Vollendete Ohnmacht? Schriftsteller, Verleger und Buchhändler im NS-Staat*, Klartext, 2008. 특히 출판사의 성격변화에 대한 글이 흥미롭다.

55) 구스타프 말러, 멘델스존, 쇤베르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나치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대 Alban Berg, Paul Dessau, Hanns Eisler, Ernst Krenek의 작품도 금지되었다.

나돌던 재즈가 아프리카적 리듬과 유대인의 재해석 결과라는 견해를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수용하고 재즈 음악을 박해하였다. 나치집권 이전인 1930년에 이미 나치당원 이자 튀링엔주 교육부 장관이었던 빌헬름 프리크(Wilhelm Frick)<sup>56)</sup>이 공포한 ‘독일민중 문화를 위해 검둥이문화를 반대하는 명령’은 나치적 예술관이 어떤 것인지를 예시해 주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2년 파펜 정부는 흑인 음악가의 출연금지를 지시하였고 나치집권후인 1935년 제국방송사장 오이겐 하다모프스키는 ‘전독일 라디오방송에 검둥이 재즈의 최종적 금지’ 지시를 발표하였다. 나치들은 1938년에는 재즈 음악 연주자를 흉하게 묘사한 포스터 등을 자료로 ‘타락한 음악’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종주의적 편견을 널리 유포하였다. 이와 같이 나치는 모든 예술영역에서 광범위한 직업 및 활동금지를 통해 나치적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은 예술가와 유대인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궁극적으로 파괴하였다. 유대인 예술가들의 다수는 유대인만을 상대로 공연하는 비루한 삶을 연명하다가 절멸캠프로 이송되었다.<sup>57)</sup>

#### 나. 연합국의 나치리스트

1945년 이후 연합국은 나치전범의 처벌뿐만 아니라 나치협력자들의 처벌과 속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청산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친일파청산작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문인, 작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5.30.)’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나치협력자의 엄격한 청산을 관철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에 나치들이 인종과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시행하였다면, 연합국은 나치체제와 전쟁범죄의 관여자를 규제하였다. 미군 점령지역에서 시행된 『나치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3.5.)은 모든 독일인을 주범, 중범(열성파, 군국주의자, 향유자), 경범, 단순가담자, 무혐의자로 분류하였다.<sup>58)</sup> 이러한 나치숙청법은 나치체제의 주요공직, 비밀경찰, 나치방계조직, 산업조직, 사회단체에 각기 등급을 부여하고 그러한 단체의 지도자·이사·간부들에 대하여 예외없이 속죄조치를 시행하였고,

56) 프리크는 제2차세계대전후 수괴급전범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57) 연극무대의 파괴과정에 대해서는 Wolfgang Benz etc., *Kunst im NS-Staat*, Metropol, 2015, 165쪽 이하(이 책은 예술의 전영역에서 나치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58) 이 법률과 부록의 번역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법령 I: 해제와 법령번역」, 2007, 155-200쪽.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도 속죄조치를 부과하였다. 이 법은 나치전제정치에 비범한 정치적 선전활동을 수행한 자를 주범으로 규정하였다(제5조 6호). 또한 나치 학자 및 문화 예술인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단죄하였다. 예컨대, 발언이나 행동으로, 특히 언설이나 저술을 통해,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또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생활에서 자신의 개인적 명예나 권력을 동원하여 나치 권력지배를 조성 강화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제7조 제2항 1호), 나치이론이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한 자(2호), 확립된 도덕원칙을 무시하고 나치 폭력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혼인생활을 붕괴시킨 자(3호),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재판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로서 자신의 직책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자(4호),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선동적 또는 폭력적으로 교회, 종교단체, 세계관결사에 반대한 자(5호),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예술과 학문의 가치를 농락하고 훼손하고 파괴한 자(6호)를 중범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수용소수감, 특별노동부과, 재산몰수, 공증인 및 변호사 금지,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및 정당활동금지, 노조 및 직업단체 활동금지, 자유업활동 제한 및 기업체에 대한 투자제한, 교사·목회자·저술가·방송인 활동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제16조). 그러나 독일에서 연합국의 나치전범에 대한 처벌과 직업금지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협력자로 숙청되었던 나치들이 군정의 막바지에 대부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재나치화’라고 냉소하였다.<sup>59)</sup> 개선한 나치들이 냉전의 고착과정에 편승하면서 나치의 억압적 전통을 다시 정상화하였다.

#### 다. 브란트의 블랙리스트

정보인권 전문가인 롤프 괴스너 변호사의 추산에 의하면, 독일연방공화국 시민 중에서 15만에서 20만명 정도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7천 여명 정도가 처벌받았다.<sup>60)</sup>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되자마자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 후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출범기인 1949년 선거에서 독일공산당과 극우정당이 연방의회에

59) Joachim Perels, “Die Restauration der Rechtslehre nach 1945”, *Kritische Justiz*, Vol.17(1984), 359-379쪽.

60) Rolf Gössner, *Die vergessene Justizopfer des kalten Krieges. Verdrängung im Westen - Abrechnung mit dem Osten*, Berlin, 1998, 125쪽 이하.

진출하자 기민당의 아데나워는 1950년 9월 19일 아데나워 명령(Adenauer-Erlass)을 발령하였다.<sup>61)</sup> “연방공화국의 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 『연방인사법』 제 3조에 따라 연방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태를 통해 민주적 국가관에 고백해야 한다.” 아데나워 명령은 독일공산당과 사회주의제국당을 포함해서 13개 단체를 금지하였다. 명령은 극우와 극좌단체를 동시에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방정부의 공무원, 관리직 또는 노동자로서 자유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항하는 조직이나 단체활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위해 행동하거나 기타 지원하는 사람, 특히 공산주의 통일사회당(SED)의 제3차 당대회와 전국회의의 폭력행동을 목표로 하는 결의의 과업이나 취지에 따라 활동한 자는 중대한 직무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좌익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독일청년(FDJ 공산주의 청년조직), 문화동맹뿐만 아니라 나치체제피해자단체(VVN)도 포함되었다.<sup>62)</sup> 명령은 관련자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지위여부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서 의심을 받는 자는 공직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이렇게 하여 서독에서 정당금지와 직업금지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정당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었다. 네오나치계열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은 1952년에, 독일공산당(KPD)은 1956년에 각기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다.<sup>63)</sup> 과거청산 과정에서도 배제조치는 계속되었다. 서독은 1956년에 나치불법배상법(BEG)을 도입하였는데 나치박해의 피해자들에게 8개의 피해항목에 따라 배상을 연금형태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동법은 1949년 5월 23일 이후에 기본법의 취지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배상청구권을 배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산당원으로서 적극적인 자나 동독 통일사회당 노선의 추종자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자에 해당한다.<sup>64)</sup>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형법이 존재하지

61) Beschluß der Bundesregierung vom 19. September 1950 über »Politische Betätigung von 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gegen die demokratische Grundordnung«, Erhard Denninger,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II, Suhrkamp, 507f.

62)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회 활동을 특수범죄로 처벌한 전례가 있다.

63) BVerfGE 2, 1 - SRP-Verbot(1952); BVerfGE 5, 85 - KPD-Verbot(1956). 공산당금지판결의 역사적 파장에 대해서는 Ekkehard Lieberam, “DAs KPD-Urteil und die drei Wellen der Kommunistenverfolgung”, *Marxistische Blätter*, 6\_2016, 71-80쪽.

64) Walter Brunn & Richard Hebenstreit, *Bundesentschädigungsgesetz*, Erich Schmidt

않지만 일반형법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위협죄’를 규정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독일이 이러한 특수한 보안범죄를 폐지하거나 사문화하지 않는 한 공산당 및 급진적인 정당이나 정치단체들은 언제든지 범죄조직으로 전화될 수 있다. 결국 동구공산진영에 대항한 서방의 최전선으로서 위축된 독일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공산당이 금지된 나라의 사민당과 공산당이 금지되지 않는 나라의 사회당이 걷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현대정치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로 나타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독일사민당의 대표자인 빌리 브란트가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속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브란트의 망각된 희생자’라는 별칭을 얻었다.<sup>66)</sup> 사회주의자들의 내적인 자기검열이 현실의 검열체제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1972년에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와 독일연방의 주지사들은 합의하여 ‘급진파명령 Radikalenbeschuß 1972.1.28.’을 도입하였다.<sup>67)</sup> 대연정그룹(기민당·기사당 및 사민당)은 1964년 창당된 나치계열의 민족민주당(NPD)이 일부 주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1968년 공산당(KPD)이 재건되고 공산당과 가까운 사회주의학생동맹(SDS 1964-1970), 마오이스트 그룹, 적군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 위협을 느껴 급진파를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sup>68)</sup> 급진파명령은 68세대 급진파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수적인 정치권의 공모적 대응이었다. 급진파명령은 명분상 적군파와 테러리스트를 겨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과 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려는 것이었다. 급진파명령은 극좌와 극우를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에서는 주로

Verlag, 1965, 46쪽 이하.

65) 『독일 형법』 제84조-제86조의a

66) Manfred Histor, *Willy Brandts Vergessene Opfer. Geschichte und Statistik der politisch motivierten Berufsverbote in West-deutschland 1971-1988*, Ahriman Verlag, 1989.

67) Beschluß der Regierungschefs des Bundes und der Länder vom 28. Januar 1972 über »Beschäftigung von rechts-und linksradikalen Personen im öffentlichen Dienst«, Erhard Denninger,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II, Suhrkamp, 1977, 518쪽.

68) 사회민주당원 게르트 뵘른젠(Gert Börsen)은 1973년 8월 <디 차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극단주의자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후기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은 국가업무에서 극우 및 네오나치 이데올로그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좌파들, 즉 체제전복자들로부터도 발생한다. (...) 자본의 집중과 경제의 독과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국가 및 사회에 이러한 비판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서독에서 법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비판세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조치들을 촉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집단들의 체제위협적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권력정치의 문제이다.”(G. Börsen, *Extremisten-Erlass ein widersinniges Abkommen*, Die Zeit, 1973. 8. 24. Nr. 35).

좌익을 겨냥하였다. 공산당, 사회주의 및 좌익단체 구성원, 평화운동단체와 심지어 친사민당계열 학생조직까지도 겨냥하였고, 급진파명령을 비판하는 사민당원까지도 규제하였다. 이 명령은 정당원뿐만 아니라 정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브란트는 나중에 급진파명령을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솔회하였다. 1979년 사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 아래서 급진파명령은 철회되었지만 그 후에도 주정부들은 한번 시작한 잘못된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이미 1971년 헌법재판소는 아테나워 시대에 확립된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규정한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공무원법<sup>69)</sup>을 합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적 논쟁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 관념<sup>70)</sup> 속에서 민주정치의 이상은 실종되었다. 원래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목표 아래서 반파시즘 투쟁의 슬로건으로 도입된 방어적 민주주의가 냉전질서 아래서 반공산주의로 변질된 것이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정규신원조회로 헌법보호청은 약 3백 50만 명의 독일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들에게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약 11,000건이 직업금지절차로 이어졌고 1,250명의 공직후보자가 채용되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에 260명의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교사와 대학교원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 체신청 및 철도청 직원, 행정공무원, 장교, 비서, 사회교육자, 도서관사서, 의사, 요양사, 간호사, 수영장관리인, 약국조제보조까지도 영향을 받았다.<sup>71)</sup>

냉전질서 아래서 독일의 비정상성은 시민의 심정,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나 적대성을 색출하려는 제도로 발현되었다. 인간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정치적 유무죄를 가리는 법질

69) 기본법의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헌신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만이 공무원관계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동법 제9조 제1항 2호). 이 법에 대한 현재의 결정은 BVerfGE 39, 334(Extremistenbeschluss)

70) 이에 대해서는 국순옥,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211쪽 이하; 급진파명령의 기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Dominik Rigoll, *Staatsschutz in Westdeutschland: Von der Entnazifizierung zur Extremistenabwehr*, Wallstein, 2013; 독일과 미국의 비폭력적 급진파세력에 대한 감시체제의 비교는 Gereon Flümman, *Streitbare Demokratie in Deutsch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Springer, 2014, 336쪽 이하.

71) Parlamentarische und zivilgesellschaftliche Initiativen zur Aufarbeitung des sogenannten Radikalenerlasses vom 28. Januar 1972, Deutsche Bundestag, 18.8.2017, 6쪽.  
<https://www.bundestag.de/blob/531136/a0a150d89d4db6c2bdae0dd5b300246d/wd-1-012-17-pdf-data.pdf>(최종검색일: 2018-1-5)

서는 그 자체로 파쇼적이다.<sup>72)</sup> 모든 면에서 한국의 법질서와 그 운용관행은 독일법 전통을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적대성이라는 전투적 개념으로 체제비판적인 단체나 인물을 합법영역에서 밀쳐내고,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행사를 위협하고 처벌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의 역사였다.

## 라. 블랙리스트의 퇴조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서독의 직업금지는 헌법의 평등권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 서독의 직업금지는 유럽공동체에서 유일한 것이었고,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규탄하였다.<sup>73)</sup>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항의운동이 전개되었고 프랑스의 좌파들은 독일의 사민당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주정부차원에서 자르란트가 1985년 6월 25일 최초로 급진파명령을 폐지하였다. 다른 주들도 자르란트의 전례를 따라 폐지하거나 주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하게 보완적인 규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 여부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인권법원은 1995년 포크트 사건에서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sup>74)</sup> 이러한 중요한 판결 후에도 급진파명령에 입각한 신원조회와 직업금지가 독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도리어 이

72) 직업금지절차에서 저명한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은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의 의견서는 다음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berufsverbote.de/index.php/22Gutachten.html>(최종검색일: 2018-1-10)

73) 1987년 2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업금지조치가 ILO규약 제111호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Gerhard Stuby, *Die Empfehlungen des ILO-Untersuchungsausschusses zur Praxis der Berufsverbote*, Oldenburger Universitätsreden Nr.14, 1988 참조.

74) 포그트는 1990년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에 해임되자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제10조), 집회 결사의 자유(제11조) 위반으로 유럽인권법원(ECHR)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여교사 포크트는 중등학교의 독일어와 불어 교사였다. 그러한 직책은 본질적으로 안보위협을 포함하지 않았다. (...) 포크트 선생이 학교 밖에서도 실제로 헌법적대적인 발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헌법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독일공산당(DKP-공산당(KPD))이 금지된 후에 1968년에 재건된 조직: 필자)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으며, (...) 결과적으로 제소자의 활동은 그 자체로 전적으로 적법한 것이었다.”(Vogt v. Germany, Grand Chamber Judgment, Para. 60). 독일정부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파면기간 동안의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그 기간을 연금기간에 산입하고, 교사로 채용함으로써 포그트와 화해하였다.



러한 관행이 구동독지역과 그 출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대부분의 주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이른바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1991년 바이에른은 일반신원조회를 철폐하였으나 모든 공직지원자에게 공직지원용 신원진술서에 헌법적대적 조직이나 구동독 대중조직의 가입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크 문화부장관 안네트 샤반은 과거에 극좌로 분류된 ‘하이델베르크 반파시스트단체(AIH)’에 속했다는 이유로 실업학교 교사 미카엘 차스코치(Michael Cszkóczy)에게 직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7년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이 직업금지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차스코치는 손해배상(33,000유로)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였다.<sup>75)</sup>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16년에도 헌법보호청은 독일공산당(DKP)의 일원인 케렘 샴베르거(Kerem Schamberger)가 뮌헨대학의 연구원이 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sup>76)</sup>

직업금지의 희생자들(68세대의 노인들)은 최근에 독일 각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직업금지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연금보상조치)을 요구해 왔다. 니더작센주는 2016년 사민당, 동맹 90/녹색당 및 좌파당의 제안으로 주의회 차원에서 급진파명령을 ‘니더작센주의 역사에 오욕의 한 장’으로 규정하고 급진파명령에 따른 직업금지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주의회는 기민당과 자민당의 반대 속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1990년 6월 26일자로 니더작센주에서 적록연정(사민당과 동맹90·녹색당)의 의결에 따라 급진파명령은 폐지되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는 직업금지, 감시, 조사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단

75) 차스코치는 칼스루에 행정법원에 헌법보호청을 상대로 자료열람과 자료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4월 22일 현재 1심에서 패소하였다. Holger Buchwald, “Linker Lehrer aus Heidelberg verliert Prozess gegen Verfassungsschutz”, [https://www.rnz.de/nachrichten/heidelberg\\_artikel,-Heidelberg-Linker-Lehrer-aus-Heidelberg-verliert-Prozess-gegen-Verfassungsschutz-\\_arid,186333.html](https://www.rnz.de/nachrichten/heidelberg_artikel,-Heidelberg-Linker-Lehrer-aus-Heidelberg-verliert-Prozess-gegen-Verfassungsschutz-_arid,186333.html)(최종검색일: 2018-1-10)

76) 2016년 샴베르거가 뮌헨대학의 연구원이 되고자 했을 때 이른바 ‘헌법충성심사질의서양식’을 작성해야 했다. 헌법보호청은 대학당국에 보낸 회신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지지 및 공산주의자라는 자기서술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썼다. 샴베르거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학당국에 출두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017년부터 뮌헨대학에 출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tripleC-Interview mit Kerem Schamberger über Berufsverbote, linke Kommunikationswissenschaft und Kritik an der deutschen Wissenschaftslandschaft, <http://www.triple-c.at/index.php/tripleC/article/view/841/943>, 2018. 1. 10.

으로 다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로, 소위 급진파명령의 실행은 니더작센주의 역사에서 오욕의 한 장이며 그러한 사태는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넷째로, 니더작센주의 조치의 피해자들은 심정조사, 직업금지, 장기간의 소송절차, 차별 여타 실직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통을 겪었다. 다섯째로, 니더작센주 의회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급진파명령 및 직업금지에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대단한 열성으로 민주적 원칙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sup>77)</sup> 나아가 주의회는 조사를 위한 옴부즈만을 임명하고, 피해자, 노조의 대표자와 더불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회복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청산을 달성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백서를 정치교육에서 활용하겠다고 결의하였다.<sup>78)</sup> 니더작센주의 조치는 다른 주에도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금지판결과 급진파명령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독일연방 차원의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

#### 4. 블랙리스트 범죄

정치사회는 고래로부터 내부의 위협세력을 적으로 선언하고 그들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였다.<sup>79)</sup>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는 일정한 유형의 정치적 적들에게 추방을 명하고 살해를 허용하였다. 현대국가의 보안권력이나 정보기구도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체제 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시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억압과 배제는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ILO규약 제111호(고용차별금지협약)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키는 활동의 정당한 혐의가 있는 자,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제4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테러분자뿐만 아니라 비폭력적 급진파까지도 포괄적으로 체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어 수난을 당한다. 프랑수아 다윈주의 국가는 비폭력적 급진파와 체제 위협세력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비폭

77) Radikalenerlass - ein unrühmliches Kapitel in der Geschichte Niedersachsens(zu Drs. 17/1491, 17/7064 und 17/7131) <http://nonsociological4.rssing.com/browser.php?indx=3758610&item=7621>, 2018. 1. 10.

78) 니더작센주는 2017년 11월말 현재 블랙리스트 백서 작업을 진행중이다. Dietrich Mohaupt, “Niedersachsen dokumentiert Berufsverbote,” [http://www.deutschlandfunk.de/aufarbeitung-niedersachsen-dokumentiert-berufsverbote.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http://www.deutschlandfunk.de/aufarbeitung-niedersachsen-dokumentiert-berufsverbote.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 2018. 1. 10.

79) 법률용어로서 Ächtung, Bann, Proskription, Friedloslegung, hors-la-loi는 모두 법의 보호 박탈을 의미한다. 카를 슈미트, 김효전·정태호(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2012, 61쪽.

력적 급진파를 정치적 경쟁집단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사고에 찌든 정치체제는 체제 위협세력과 정부 비판세력조차 구분하지 않으며 비판적인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한마디로 이런 체제에서 보안권력이 적이라고 규정하면 누구든지 적이 된다. ‘체제 위협세력’이나 ‘국가안보’의 개념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히스테리 속에서 무소불위의 확장성을 갖는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를 정밀타격하는 기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이물질들을 ‘빨갱이’로 총괄하고 공산주의자를 제조하는 심정공학적 이상주의이다. 반공주의는 일상적이고 심층적인 공포심에서 유래하는 공격적 이데올로기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도한 균형화 전략은 정치적 표적집단에 대한 무한한 공격을 가하던 나치의 완곡어법 ‘획일화’의 개념적 변주에 불과하다.

블랙리스트와 그에 입각한 정책이 모두 범죄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의적인 분류와 자의적인 처우가 헌법위반이고 불법행위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종족적 기원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개인을 선별하고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면 당연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sup>80)</sup> 국제노동기구는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새로운 체코공화국이 숙청법을 제정하여 과거 공산당 및 여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개별심사 없이 일괄해서 배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였다.<sup>81)</sup>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sup>82)</sup> 미국에서도 공공영역에서 의심스러운 사유(suspect class)에 입각한 차별처우는 엄격심사를 받기 때문에 평등보호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견해와 태도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11호 한국발효일 1999.12.20.)을 정면으로 위반한다.<sup>83)</sup>

80) J. David Golub, “Blacklisting,” David Schultz & John R. Vile(ed.), *The Encyclopedia of Civil Liberties in America*, Routledge, 2015, 95쪽.

81) Human Rights Watch, *Czechoslovakia: Human Rights Developments*, <http://www.hrw.org/reports/1993/WR93/Hsw-03.htm>, 2018. 1. 14.

8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3)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블랙리스트 재판과정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치인은 좌파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1심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은 이제 사태에 맞지 않다.<sup>84)</sup> 정책적 재량의 논리는 경제영역에서 ‘성장이나 분배나’의 정책선호와 정책적 합목적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갖겠지만 예술의 자유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제1심재판부는 관제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독재를 정책이라는 느슨한 용어로 합리화하였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정치적 표적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예술의 정치적 내용성, 예술가의 정치성을 이유로 특정한 예술경향과 예술가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정책은 문화예술영역에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을 위반한다.<sup>85)</sup> 부당한 범주설정에 입각한 블랙리스트는 차별범죄이거나 정책범죄에 해당하며, 극단적인 인권침해(추방, 말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로 상승한다.<sup>86)</sup>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관음증적 소재로 소비되거나 지원정책의 개선으로 무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해서 적대정치를 폐지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부패한 나라라면 관행이지만, 민주국가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후진성 때문에 관련자들은 블랙리스트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그 존재를 부인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부인행태가 역설적으로 리스트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증명해준다. 블랙리스트 정책의 설계자나 지시자들, 수작업을 통해 이를 마무리하고 적용하는 하위공직자들, 심사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은 조직범죄의 공범자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sup>87)</sup> 블랙리스트라는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

84)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2017.7.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85) Jarass/Pieroth, Grundgesetz Kommentar, 8.Aufl., C.H.Beck, 2006, Art.5(Jarass- Rn. 110a); Scholz,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C.H.Beck, 2005, Art. 5 III(Rn. 9. 및 Rn. 79).

86) 차별범죄나 정책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참작한 용어이다. 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확인가능한 표적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 공격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국민적 이유로’ 박해나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면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제7조).

87) 하위결정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의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위배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공직자는 공적 자원에 대한 신청자의 접근권과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 있다.<sup>88)</sup> 특히 불법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허위의 사정을 기재하거나 은폐한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sup>89)</sup> 이제 블랙리스트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불법적 명령을 시행한 공무원이나 심사관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복종이 범죄, 곧 복종범죄라는 점을 각 인시켜야 한다.<sup>90)</sup>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복종행위를 처벌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가범죄와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무직 고위공직자를 벌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악습을 근절할 수 없다. 인류역사에서 제노사이드는 바로 보통사람들의 복종행위 때문에 자행될 수 있었다. 말단의 집행자와 결제라인의 공직자를 복종범죄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면 지난 20년간의 과거청산 작업에서 올바른 경로를 추가하는 것이다.<sup>91)</sup> 따르기만 되는 편안한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공무수행자도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최소요청 앞에 무반성적으로 살 수 없다. 최근에 문대통령은 하위공직자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범죄의 처벌 문제와 정책적 실패에 대한 면책 문제를 명료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sup>92)</sup> 이것이 하위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언술로 곱해되는 한, 공직자들의 조직범죄에 대해 일반사면장이 발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88) 현재까지 법원은 권리행사방해에서의 권리를 확립된 기득권으로 한정하였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89) 방위사업청 무기구매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성능평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 충족했다고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지만(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블랙리스트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고, 무관한 사정을 공문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0) Herbert C. Kelman & V. Lee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Yale University Press, 1989.

91)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의 귀중품을 수납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오스카 그뢰닝이라는 인물이 2015년에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용소소장,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 넣은 사람들만 살인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가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므로, 수용소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학살이라는 조직범죄의 일원인 것이다.

92) 「문대통령 “적폐청산, 중하위 공직자 불이익 안돼”」, <한겨레>, 2018. 4. 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0016.html>.

## Ⅰ 참고문헌 Ⅰ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종합보고서』 제3권, 2007.
-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11.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외국의 식민지·점령지 과거사청산법령 I: 해제와 법령번역』, 2007.
- 카를 슈미트/김효전·정태호(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2012.
- 키트 케이지/최정학(옮김),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의 중지를 위한 투쟁」, 민주법학 12호, 1997, 302-314쪽.
- Ballman, Donna, “Can You Be Fired For Your Political Beliefs Or Activities? Maybe”, [https://www.huffingtonpost.com/donna-ballman/can-you-be-fired-for-your\\_b\\_9154066.html](https://www.huffingtonpost.com/donna-ballman/can-you-be-fired-for-your_b_9154066.html)(2018-1-10)
- Barbian, Jan-Pieter, *Die Vollendete Ohnmacht? Schriftsteller, Verleger und Buchhändler im NS-Staat*, Klartext, 2008.
- , *Literaturpolitik im NS-Staat. Von der Gleichschaltung bis zum Ruin*, Fischer, 2010.
- Benz, Wolfgang etc., *Kunst im NS-Staat*, Metropol, 2015.
- Brunn, Walter & Hebenstreit, Richard, *Bundesentschädigungsgesetz*, Erich Schmidt Verlag, 1965.
- Buchwald, Holger, “Linker Lehrer aus Heidelberg verliert Prozess gegen Verfassungsschutz”, [https://www.rnz.de/nachrichten/heidelberg\\_artikel,-Heidelberg-Linker-Lehrer-aus-Heidelberg-verliert-Prozess-gegen-Verfassungsschutz-\\_arid,186333.html](https://www.rnz.de/nachrichten/heidelberg_artikel,-Heidelberg-Linker-Lehrer-aus-Heidelberg-verliert-Prozess-gegen-Verfassungsschutz-_arid,186333.html), 2018. 1. 10.
- Buhle, Paul & Wagner, Dave, *Blacklisted: The Film Lover's Guide to the Hollywood Blacklist*, Palgrave, 2003.
- Cailteux, Karen Sue, *The Political Blacklist in the Broadcast Industry: The Decade of the 1950's*, The Ohio University(Diss.), 1972.
- Ceplair, Larry, “The Film Industry's Battle against left-wing influences,

-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Blacklist,” *Film History* Vol. 20(2008), 399-411쪽.
- Cohen, Ronald D., “A Dark Page in American History: Dalton Trumbo and the Hollywood Blacklist,” *American Communist History* Vol 14(2015), 205-218쪽.
- Cole, David, “The New McCarthyism: Repeating History in the War on Terrorism”,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38(2003), 1-42쪽.
- Denninger, Erhard,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II, Suhrkamp, 1977.
- Flümann, Gereon, *Streitbare Demokratie in Deutsch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Springer, 2014.
- Golub, J. David, “Blacklisting,” David Schultz & John R. Vile(ed.), *The Encyclopedia of Civil Liberties in America*, Routledge, 2015, 95-98쪽.
- Gössner, Rolf, *Die vergessene Justizopfer des kalten Krieges. Verdrängung im Westen - Abrechnung mit dem Osten*, Berlin, 1998.
- Histor, Manfred, *Willy Brandts Vergessene Opfer. Geschichte und Statistik der politisch motivierten Berufsverbote in West - deutschland 1971-1988*, Ahriman Verlag, 1989.
- Hoffman, Julia, “Terrorism Blacklisting: Putting European Human Rights Guarantees to the Test,” *Constellations* Vol. 15(2008), 533-560쪽.
- Humphries, Reynold, *Hollywood’s Blacklists: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0.
- Human Rights Watch, *Czechoslovakia: Human Rights Developments*, <http://www.hrw.org/reports/1993/WR93/Hsw-03.htm>, 2018. 1. 14.
- Illich, Richard B.(ed.), “The Paris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Norm in a State of Emergenc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9(1985), 1072-1081쪽.
- Kelman, Herbert C. & Hamilton, V. Lee, *Crimes of Obedienc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Yale University

- Press, 1989.
- Kritische Justiz, *Streitbare Juristen: Eine Andere Tradition*, Nomos, 1988.
- Letwin, Leon, "Communist Registration under the McCarran Act and Self-Incrimination", *Wisconsin Law Review*, 1951, 704-717쪽.
- Lieberam, Ekkehard, "Das KPD-Urteil und die drei Wellen der Kommunistenverfolgung", *Marxistische Blätter*, 6\_2016, 71-80쪽.
- Lind, William S., "Understanding Fourth Generation War(2004-1-15)," <https://original.antiwar.com/lind/2004/01/15/understanding-fourth-generation-war/>, 2018. 1. 10.
- McAuliffe, Mary S., "Liberals and the Communist Control Act of 1954",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3(1976), 351-367쪽.
- Mohaupt, Dietrich, "Niedersachsen dokumentiert Berufsverbote," [http://www.deutschlandfunk.de/aufarbeitung-niedersachsen-dokumentiert-berufsverbote.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http://www.deutschlandfunk.de/aufarbeitung-niedersachsen-dokumentiert-berufsverbote.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 2018. 1. 10.
- Müller, Ingo, *Furchtbare Juristen. Die unbewältigte Vergangenheit unserer Justiz*, München, Klaus Bittermann, 2014.
- Navasky, Victor S., *Naming Names*, Hill & Wang, 2000. [http://www.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http://www.1769.de/html?dram:article_id=401671), 2018. 1. 10.
- Noah, Timothy, "Can Your Boss Fire You for Your Political Beliefs?"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hatterbox/2002/07/can\\_your\\_boss\\_fire\\_you\\_for\\_your\\_political\\_beliefs.html](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politics/chatterbox/2002/07/can_your_boss_fire_you_for_your_political_beliefs.html), 2018. 1. 10.
- Note, "'Political' Blacklisting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A Sherman Act Violation", *The Yale Law Journal*, Vol. 74(1965), 567-580쪽.
- Redish, Martin H. & McFadden, Christopher R., "HUAC, the Hollywood Ten, and the First Amendment Right of Non-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Vol. 85(2001), 1669-1728쪽.
- Perels, Joachim, "Die Restauration der Rechtslehre nach 1945", *Kritische Justiz*, Vol.17(1984), 359-379쪽.
- Rigoll, Dominik, *Staatsschutz in Westdeutschland: Von der Entnazifizierung zur Extremistenabwehr*, Wallenstein, 2013



- Ruchner, Max, “Bemerkungen zum deutschen Schriftleitergesetz, Neue Zürcher Zeitung vom 10.10.1933”, <http://pressechronik1933.dpmu.de/bemerkungen-zum-deutschen-schriftleitergesetz-neue-zurcher-zeitung-vom-10-10-1933/>, 2018. 1. 10.
- Schrecker, Ellen, “Blacklists and Other Economic Sanctions”, <https://www.writing.upenn.edu/~afilreis/50s/schrecker-blacklist.html>, 2018. 1. 10.
- Stuby, Gerhard, *Die Empfehlungen des ILO-Untersuchungsausschusses zur Praxis der Berufsverbote*, Oldenburger Universitätsreden Nr.14, 1988 참조.
- Twohy, James F., “The Feinberg Law,” *St. John's Law Review*, Vol. 24(1950), 197-220쪽.
- Parlamentarische und zivilgesellschaftliche Initiativen zur Aufarbeitung des sogenannten Radikalenerlasses vom 28. Januar 1972, Deutsche Bundestag, 18.8.2017, 6쪽. <https://www.bundestag.de/blob/531136/a0a150d89d4db6c2bdae0dd5b300246d/wd-1-012-17-pdf-data.pdf>, 2018. 1. 5.
- Radikalenerlass - ein unrühmliches Kapitel in der Geschichte Niedersachsens (zu Drs. 17/1491, 17/7064 und 17/7131) <http://nonsociological4.rssing.com/browser.php?indx=3758610&item=7621>, 2018. 1. 10.
- tripleC-Interview mit Kerem Schamberger über Berufsverbote, linke Kommunikationswissenschaft und Kritik an der deutschen Wissenschaftslandschaft, <http://www.triple-c.at/index.php/tripleC/article/view/841/943>, 2018. 1.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2

## 블랙리스트 작동의 실태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해악

**제1절** 지원기구에서 검열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절**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제3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 2

블랙리스트 작동의 실태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해악

## 제1절 | 지원기구에서 검열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이정\*

## 1. 가장 많은 ‘지원 배제’를 실행한 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기관이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망가진 조직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이미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복구의 주체도 없다. 이름 즉, 껍데기만 남은 조직이 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 복구가 난망해진 조직이 있다. 바로 ‘블랙리스트’에 의해 몰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규모와 정도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시민과 예술가들의 자유를 상대로 살육과 전쟁을 벌인 것이다. 특히 예술지원기구인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 배제’를 실행한 기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주 업무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가장 많은 지원 배제가 예술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술계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예술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예술위라는 기구 자

\* 연극평론가

체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치기구를 표방하며 2005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권 당시의 실행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예술위는 조직 자체가 와해되어 의미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예술위는 어떤 조직인가? 설립된 지 십 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예술위는 반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만들어진 조직이다. 예술위는 1973년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 문화예술진흥원으로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예술지원기구였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예술위를 정부 기관에서 해방시켜 자율성을 지향하는 준정부 기관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예술위는 현장 예술가들의 독립적인 회의체(Council)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예술위가 이런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 역시 예술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 4년간 예술위는 예술가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검열의 '최대' 수행기관이 되었고, 그 결과는 예술위 조직 자체의 실질적 파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독립성과 전문성을 표방하고 탄생한 예술위는 도대체 왜 그렇게 취약하게 무너져버린 것일까? 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 기관으로 바꾼 지위는 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는가? 예술위가 예술가들의 독립적 조직으로부터 정권의 검열 수행 기관으로 바뀐 경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공공기관의 독립성은 어떻게 지켜지며 어떻게 파괴되는가? 과연 그간 예술위는 무엇이었나? 앞으로 예술위 혹은 이에 상응하는 예술 지원 공공 기관이 진정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술지원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독립성·전문성을 표방하고 탄생한 예술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쓰여졌다. 그것을 위해 2005년 예술위의 설립의 뜻을 통해 예술위라는 조직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을 살펴보고 그 정신이 변질되어 온 과정, 변질의 주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 2. 민간예술인 중심의 예술 지원 기구-예술위의 기본 정신과 취약점

예술위 홈페이지에서는 예술위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후략)

예술위 설립을 위한 가시적 논의는 이미 2001년부터 있었다. 2003년 11월 15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를 발족하면서 발표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예술인 3000인 성명」을 보면 예술인들이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민간 예술인 중심의 예술 지원 기구를 얼마나 염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에 동참하는 예술인들은 현시대에 걸 맞는 민주적 제도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적극 촉구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문화예술진흥원의 수직적 관료중심체제를 개선하여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민간예술인 중심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호혜평등의 기회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라고 믿는 바이다. 그로 인해 모든 창작 지원은 이제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조리와 비합리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권위적이면서도 일방적인 관행 대신 상부상조의 정신이 대두될 것이다. 더욱이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계의 많은 의식의 개혁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일제치하, 군사독재체제 등의 어려운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지도 2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시민의식은 비약적으로 고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 걸 맞는 문화에 대한 갈망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우리 예술인들의 의식이 그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시대에 예술은 이러한 시민의식을 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우리 문화예술계도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술인들의 의식개혁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반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위원회제도가 지닌 본질적인 정신 때문이다. 위원회제도가 내포하는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독립, 자율, 민주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향하는 예술정신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 반대할 명분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곧 이러한 시대정신, 예술정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같으며 과거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sup>1)</sup>

2001년 발의를 거쳐,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힘을 받고 진행된 문예진흥법 개정 운동은 범문화계의 폭넓은 지지와 촉구를 통해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 결과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준비단’이 구성되고 7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준비과정은 결실에 이른다.<sup>2)</sup>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non-profit) 문화예술 단체·개인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없으면 유지,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위의 방향성과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설립 목적으로 보면 예술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1973년에 설립된 문예진흥원과 같다. 그러나 2005년 출범한 예술위는 진흥원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달랐다. 첫째는 법적 지위다. 정부산하기관에서 준정부기관인 민간자율기구로 바뀐 것이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문체부나 독임제 위원장, 혹은 사무조직이 아니라 현장 예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신설하여 예술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길을 열었다. 셋째, 예술위 직원들의 지위다. 진흥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직원들은 2005년에 퇴직 절차를 거쳐 준공무원 신분으로 예술위에 소속되었다. 예술계 현장을 알고 행정에 전문성이 있었던 예술위 직원들은 사무처 소속의 행정조직 속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을 집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위상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무처가 전문 문화 행정 기구로 전환될 것이 요청되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추진 경과’, 「범예술인 3,000인 성명」.

2) 문화예술진흥법 제6장 23조 1항. 여기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현재는 여기에 만화가 포함되어 있다. 법률 조항의 인용은 2005년 1월 27일에 개정된 법률을 기본으로 한다. 이 자료는 예술위 홈페이지 위원회전환 추진경과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12월 20일에 개정된 현재의 법률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14429,20161220\)](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14429,201612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립 당시 예술위 조직의 구성 원리는 상향식 구조였다. 조직의 중심은 11인의 ‘위원회’에 있었다.<sup>3)</sup>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한다. 문화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 1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sup>4)</sup>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이들로 구성한다.<sup>5)</sup>

위원회가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계로 열린 소위원회라는 통로가 필요했다. 해당 분야의 현장예술인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해당 분야 위원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 통과되었다. 1기 예술위에서 소위원회에는 위원 11명을 포함하여 90인 가까운 예술인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했던 1기 예술위에서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관계도 민주적이었다. 위원들이 먼저 위촉되고 이들이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위원과 위원장 관계 속에서 위원들의 권한이 위원장에 버금가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사무처장과 논의하여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리해보면 ① 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② 위원들이 위원장 호선, ③ 다수의 예술인들을 포함하는 소위원회, ④ 위원장 주도의 사무처장 위촉이 예술위의 독립성·전문성·현장성을 보장하는 주요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위는 조직적 약화의 길로 접어든다. 첫 번째 약화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이 새로 제정되고 예술위가 이 법의 적

3) 2005년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예술위 운영도 이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바뀌었다. 위원 수는(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바뀌었고, 문화부 장관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었던 것이 ‘위원장은 3년,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4) 위원은 문화부에서 조직한 추천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2명씩 추천하여 장관이 지명한다.

5) 소위원회 위원장을 꼭 위원이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기 1차 소위원회에서 연극위원회는 8명이었는데, 이중에 박종관, 심재찬 두 사람이 위원으로서 소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연극(소)위원회 위원장은 더 연장자였던 극작가 이강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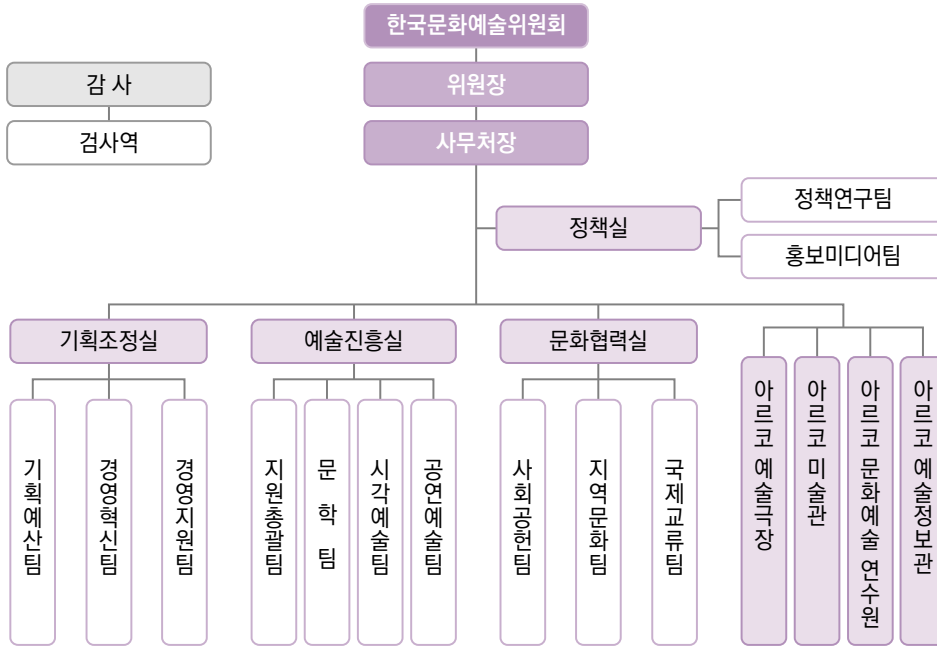


용 대상이 되면서 일어났다. 위원장 호선제가 무너지고, 위원장 공모를 통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추천인사 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선택, 위촉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1대 김병익 위원장이 중도사퇴한 후 2대 위원장을 뽑을 때부터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거해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또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위원회, 위원 등의 지위가 없으므로 예술위 위원들의 법적 지위가 ‘비상임 이사’로 바뀌었다. 3년 임기로 위원장과 진퇴를 같이했던 위원들의 임기도 ‘공공기관 운영법’의 ‘비상임 이사’ 규정에 맞춰 2년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예술위에게는 큰 후퇴였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모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던 다른 공공기관에게는 투명함을 마련하는 제도였을지 모르나 그 직전인 2005년에 획기적인 상향식 민주주의 합의 제도를 마련했던 예술위에게는 다시 하향식 구조를 강요하는 제도였다. 특히 이후 ‘문체부장관에 의한 위촉 제도’를 낙하산 인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정권 하에서 예술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심대하게 훼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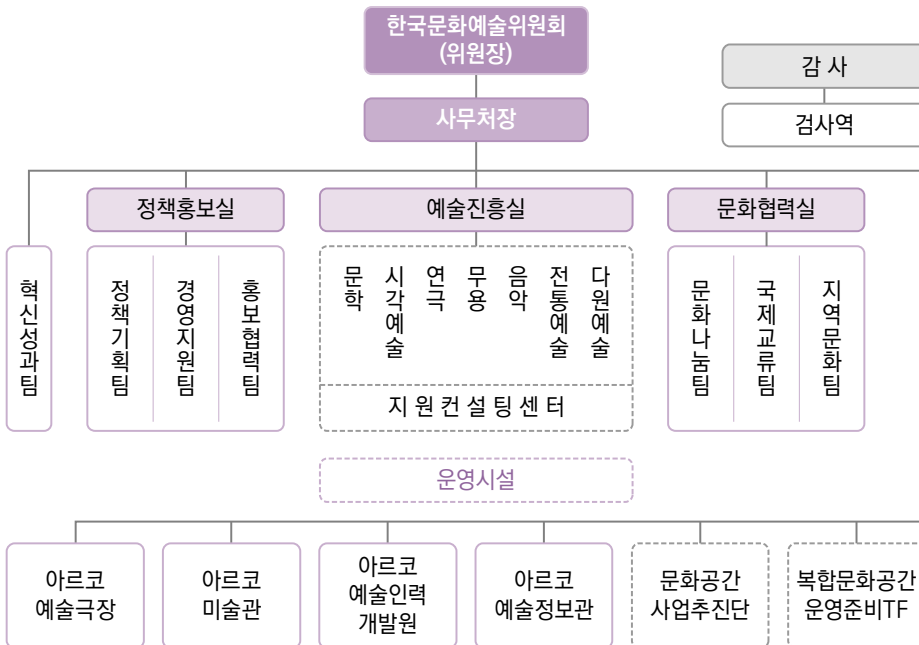
새로 설립된 예술위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 구조로는 곧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기금의 모집)에 따라 극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등을 관람할 때 일정 비율(2~6.5%)을 부가 징수함으로써 조성되었지만, 2001년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자로 모금이 폐지되었다. 예술위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새로운 문예진흥기금 조달 방안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기관(문화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예술위의 종속 위험도 예술위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기금으로는 예술위가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다년간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국고 예산으로는 독립적인 사업 기한을 결정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사업 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까닭이다.

이처럼 예술위는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난관을 헤쳐 나가며 제도적 보완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불완전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2007년까지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실제로 2007년 사무처 조직도를 보면 2005년 처음 시작될 때보다는 조직의 목적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진흥실은 장르별로 세분화되어 사무처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지원컨설팅센터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정보관 등 운영시설 역시 독자적 구조화의 전조를 보인다.

[표 1] 2005년 08월26일 개정 조직기구표 - 4실 4관 13팀(검사역 포함)



[표 2] 2007년 02월23일 개정 조직기구표 3실 4관 7팀 1검사역



### 3. 이명박 정부에서 예술위의 독립성 파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술위의 독립성은 완전히 부정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정권에 의해 예술위 위원장이 강제로 교체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sup>6)</sup>은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문체부 산하단체장들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했다.<sup>7)</sup> 유인촌의 거명에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더불어 2007년 9월에 취임한 김정현 예술위 제2대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인촌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여 그 자리를 이명박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인사로 채우고 있었다. 예술위 위원장이 사퇴 압력에 굴복하지 않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08년 12월, 2대 위원장을 중도해임한 뒤, 2009년 2월, 3년 임기의 3대 위원장으로 오광수를 임명<sup>8)</sup>한다. 김정현 위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으로 대응하면서 ‘한 기관 두 위원장’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3대 위원장인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1982년부터 87년까지 민중미술 작가들을 투옥하고 작품을 압류하는 등 군부정권이 미술계를 단속하는데 쓰인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sup>9)</sup> 2인 중 하나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또한 유인촌 장관 재임 시 예술위는 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개편, 심의제도 변화 등 상당한 제도적 변질을 겪었다. 우선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김정현 위원장을 중도 해임한 시점에 구성한 2기 소위원회(2008.12.19.~2010.초)부터는 1년 단위의 장르별 소위원회는 사라지고 프로젝트 형 단기 소위원회가 이를 대신했다. 예술위가 예술 현장과의 소통 구조를 잃게 된 것이다. 예술위의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이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정국에

6) 임기 2008.2.29.~2011.1.26.

7)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간 문화예술 기관장 25명이 표적감사를 당하거나 사퇴 압박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 직권면직으로 교체되었다. 해임에 한정해도 20명에 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5.8. 26쪽.

8) 임기 2009.2.12.~2012.2.11.

9) “80년대 ‘민중미술’ 권에 대한 흑심했던 탄압의 뒤에도 역시 전문미술가들이 있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그림을 그렸던 ‘현실과 발언’ 동인들이 80년 10월 17일부터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려던 창립전은 서양화가 권옥연 등이 위원으로 있던 ‘전시회 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대관취소 결정으로 개막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또 82년부터 87년까지 민중미술 작가들을 투옥하고 작품을 압류하는 등 군부정권이 미술계를 단속하는데 쓰인 이른바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인 이경성과 전문위원이었던 오광수였다”. 『5,6공 군항발 ‘찬양의 노래’ 부른 문인들』, 한겨레신문, 1996.1.25.

서 예술위가 왜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예술지원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제도도 이 때 변질되었다. 2009년 6월의 예술위 「예술지원정책 개편방향 발표」와 7월 「문예진흥기금 사업지원 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는 ‘전문심의관 도입’, ‘책임심의관제’라는 말이 나온다. 2009년 7월 토론회 당시 황치준(예술위 사무처 예술진흥실장)과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에 의해 발표된 ‘책임심의관 제도’는 “지원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0년에 예술위에 도입되었다. 첫 해인 2010년에는 1년간 상시적으로 각 분야의 지원심의를 참가할 책임심의위원으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 장애인창작 및 향수지원 등 9개 부문에 각 5명씩 4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각 분야 전문가 4인과 함께 예술위 사무처 직원 1명씩이 포함되었다.<sup>10)</sup>

#### 10) 2010~2015년 책임심의위원 명단

##### \* 2010

- 시각예술 : 김미진, 최병식, 임창섭, 김찬동
- 연극 : 최치림, 김태훈, 김선욱, 김미혜, 황치준
- 무용 : 배정혜, 정귀인, 이원국, 문애령, 양한성
- 음악 : 김홍수, 박재은, 왕치선, 최덕식, 김창욱
- 전통예술 : 강호중, 이창신, 채치성, 전지영, 이정만

##### \* 2011

- 문학 : 유안진, 오생근, 성석제, 박상우, 이성겸
- 시각예술 : 김정희, 김원방, 유진상, 윤익, 이윤희
- 연극 : 이병훈, 김성희, 최현묵, 송현욱, 황치준
- 무용 : 양정수, 박희태, 정은혜, 유인화, 황치준
- 음악 : 박영근, 허미경, 이석렬, 정준호, 김창욱
- 전통예술 : 박상진, 노복순, 김희선, 김성욱, 이정만

##### \* 2012

- 문학 : 유안진, 성석제, 오생근, 박상우, 이성겸
- 시각예술 : 김원방, 유진상, 윤익, 김정희, 김찬동
- 연극 : 이병훈, 최현묵, 김성희, 송현욱, 황치준
- 무용 : 정은혜, 박희태, 양정수, 유인화, 황치준
- 음악 : 박영근, 허미경, 이석렬, 정준호, 김창욱
- 전통예술 : 김성욱, 김희선, 노복순, 정대석, 이정만
- 다원/예술일반 : 김윤섭, 강석란, 김미은, 박호빈, 김윤희
- 통합심의(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 이병훈, 황치준(연극), 이석렬, 김창욱(음악), 김성욱, 이정만(전통예술), 강석란, 김윤희(다원/예술일반)

##### \* 2013

- 문학 : 강은교, 구효서, 김재용, 정미경
- 시각예술 : 김성원, 김성희, 윤진섭, 이지호
- 연극 : 구태환, 김방욱, 송전, 이은경
- 무용 : 김예림, 박재희, 장선희, 최성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심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지원심의는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심의에서는 예술위 외부의 예술 전문가들을 개별 심의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했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심의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했으며 심의위원 명단은 심의결과와 함께 발표했다. 예술인들과 행정적으로 관계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제도의 경제적 비효율성이나 편파성을 문제점으로 들어 1년간 단일한 심의위원단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술행정의 공정성 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간 경우라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수는 많을수록 다양성과 공정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이 제도 도입 당시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이 1명씩 책임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심의과정에 대한 관의 통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은 행정 인력이다. 이들이 설사 10년, 20년을 예술위에 근무한다 해서 저절로 예술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행정 인력을 책임심의위원회 속에 삽입한 것은 예술위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sup>11)</sup> 책임심의위원회 제도 속에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이 포함되

- 음악 : 김창재, 이택주, 장일범, 한방원
- 전통예술 : 김만석, 김성욱, 신혜영, 임준희
- 다원/예술일반 : 강석란, 김미은, 김성연, 박인석
- 통합심의(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 이은경(연극), 김예림(무용), 한방원(음악), 김만석(전통예술), 강석란(다원/예술일반)

\* 2014

- 문학 : 권영민, 김기택, 신덕룡, 임철우, 정미경
- 시각예술 : 고충환, 김미진, 김영호, 이수균, 전진삼
- 연극 : 류경호, 안경모, 이은경, 이진아, 장성희
- 무용 : 김서령, 김예림, 김용걸, 박호빈, 최영란
- 음악 : 박선희, 윤승현, 채경화, 한방원, 홍승찬
- 전통예술 : 김승국, 남상일, 원일, 임수정, 힐러리 핀첩 성
- 다원예술 : 박인석, 이영준, 장재호, 조성주, 최재천

\* 2015

- 문학 : 권지예, 김기택, 유홍준, 이남호, 하응백
- 시각예술 : 고충환, 김성연, 심상용, 양정무, 정귀원
- 연극 : 백로라, 서재형, 송 전, 정명주, 조광화
- 무용 : 박성혜, 박재홍, 오해순, 최두혁, 최해리
- 음악 : 김규태, 윤승현, 이민정, 정만섭, 최승한
- 전통예술 : 김진이, 노복순, 윤명원, 이화동, 진옥섭
- 다원 및 융복합 : 이경미, 이 준, 조성주, 최연구, 하동환

11) 2015년 5월 29일 예술위 161차 위원회, 책임심의위원회제를 심의위원 풀제로 전환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 제7조 ‘심의위원의 선정’ 1항에는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는 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다.<sup>12)</sup>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예술위는 이미 독립 기구로서 지위를 상당부분 잃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에게 예술위는 독립적 전문적 기관이 아니었고 장악하여 강력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권력의 하부기관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유인촌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최장기(2년 11개월)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유인촌 당시 신임 문체부 장관이 예술위를 수하에 두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인촌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째 되던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
  -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청산 필요.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도려.
- ※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밀줄은 필자가)

이 문서(2008.8.27.)는 2개의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거명하는 블랙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었다.<sup>13)</sup> 2009년 2월 국정원에서 만든 「문화·연예계정부비판세력」 문서에서 블랙리스트는 82명의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한다”고 되어 있었다. 심의위원 후보에 사무처 직원이 우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12) 그런데 이런 제도까지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적용 국면에서는 충분치 못했다. 2015년 5월 29일, 161차 예술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창작지원부장 장OO은 책임심의위원제를 대체할 ‘심의위원 풀제’를 제안한다. 1년 임기제의 책임심의위원제(2015.2월 종료)가 1년 동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재가 곤란함에 따라 심의위원을 풀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작품의 선정 논란 차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검열백서 준비1호: 사건일지와 질문들』에 따르면, 이후 박근혜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과, 국공립예술기관 및 단체장들이 주로 심의위원에 위촉되며 박계배, 손상원, 정현욱 등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 13)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문화예술단체는 민예총, 문화연대 등 2곳, 문화예술인은 명계남, 문성근, 이창동 등 3명으로 총 5건이 등재됐다. 종합발표 26쪽 참조.

#### 4.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한 전략들

##### 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건전화’」 문서, 문체부에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가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문체부로 블랙리스트가 하달되기까지

예술위를 독립적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예술위 장악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더욱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위원장 인사를 통한 예술위 장악은 계속되었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2년 3월에 임명된 4대 위원장 중앙일보 언론인 출신 권영빈(2012.3.15.~ 2015.6.8. 3년 3개월)에 이어 박근혜 정부 중반 임명된 5대 위원장 박명진(2015.6~ 2017.5)을 보면 예술위 위원장 인사가 그 자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전공 교수 출신의 박명진은 당시 문체부장관(김종덕)의 측근으로서 내정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다.<sup>14)</sup>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놀라우리만치 지속적이고 촘촘하게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2013.2.25.)하자마자 2013년 3월 15일,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에는 단체 12개, 개인 17인을 거명한 박근혜 정부 첫 블랙리스트가 등장한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 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한다고 진단하면서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철저히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6개월 후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임(2013.8.8.)하면서 「특정편향(좌편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한다. 국정원은 8월 16일 「문화예술계 좌 성향 세력 활동 실태」를 청와대에 보고한다. 문체부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거를 남길 경우 잡음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비 8월 30일 저녁 청와대 교문수석실 A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를 전달한다.<sup>15)</sup> 문체부는 대응방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주요임원 교체 시 또는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 시 특정

14) 「정권 입맛 맞춰 ‘심의’했던 박명진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김종덕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했던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 미디어스, 2015.6.5. 등 참조.

15) 국정원 문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2013.9.3.) 참조.

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①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 시 특정 편향 인사 배제(예술위 위원 2013.11월 3명 임기만료, 2014년 2월 9명 임기만료, 책임심의위원: 8개 예술분야 총 40명, 임기 1년(2013.3.3.~2014.2.)) ②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순수 예술이 아닌 특정 편향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 등을 제시한다. 또 국정원은 2013년 10월 2일 「문예계 내 좌 성향 세력 재 확산 시도 차단 건의」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야) 문체부 산하 예술위 등 공공기관장 성향 및 좌 성향 문예진 지원여부 등을 점검, 임기만료 등 계기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인물 배제.

(민간분야) 좌성향 단체·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공동사업·공모작 선정 배제 등 보조금·운영자금 중단 원칙 기조를 확대. 자금줄 차단.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횡령·유용 여부 등을 면밀 조사, 퇴출.

문체부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에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9.3.~9.15.)를 문제 삼은(9.6.~9.7.) 후 2013년 9월 9일,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키 위해” 조현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를 구성(~2014.4.)한다.

김기춘은 2013년 12월 10일 “문화예술계 좌편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12월 20일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나 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시정하라 지시”한다. 이에 국정원은 2014년 1월 27일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제하에 문예기금 지원 기준 변경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2014년 2월 20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 체계 보완 필요 여론」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 제도적 대응책 필요성을 청와대에 종합 보고한다. 국정원은 『민족미학』,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과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지원금 수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선정 심의위에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건의한다. 그 방안으로 “①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 추천(1.2배수)→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 ②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 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예술인사 참여 확대 필요”를 제시한다.

청와대는 이 내용의 문서를 2014년 2월 21일, 문체부에 팩스로 송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문체부로부터 ‘예술위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으며, 좌성향 인물·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술위의 예술기금 지원 명단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검열을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이날 바로 작성한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서는 위 ‘팩스로 송부 받은 문서’가 지적하고 있는 단체 등이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선정된 경위를 밝히고 향후 조치 계획을 밝힌다. 문체부의 조치 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을 관리하겠다(위원 구성에서 문체부와 사전 조율하도록 조치, 심의위원 선정 기준 강화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배제, 책임심의위원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위 직원 1명씩을 포함시켜 관리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4년 2월(혹은 3월)부터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105명 후보자 중 19명의 배제 명단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로 블랙리스트가 본격 하달되기 시작한다.<sup>16)</sup>

16)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된 책임심의위원은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2014년 책임심의위원 선정은 이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이 아니었다. 2014.2.21.경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 보고서를 건네고 대면보고를 한 이후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과 오OO 사무관은 이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 명단(‘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 포함)을 김소영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통해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한다. 모철민은 그 내용을 대통령과 김기춘에게 보고했고,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로 이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한다. 신동철은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 중 19명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 참여, 노무현시민학교 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배제의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했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A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오OO은 이OO 예술진흥본부장과 장OO 창작지원부장에게 이 배제 명단을 전달한다. 이OO, 장OO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 결국 이들 19명은 2014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에서 배제되었다. 책임심의위원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예술위 사무처 장OO 창작지원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4.3.경 각 장르별 예술위원 등으로부터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이를 문체부에 송부한 후 문체부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수 차례 배제 지시를 받았고, 권영빈 위원장과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예술위원들에게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을 한 후 해당 후보자를 배제하여 책임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이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전체회의(2015.3.28.)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다. 특히 연극 분야의 경우 배제 대상자가 많아서 정OO 위원에게는 별도로 설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 나. 블랙리스트 적용 전략의 1차 완성-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문체부의 TF 강화와 예술위 지원 심의 제도 개편 과정

7개월간 운영된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에 따라 2014년 4월 21일부터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로 명칭을 변경(2015.4.20.까지 1년 운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에서 닷새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검열 강화를 지시했을까. 그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21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 문서를 보면 문체부(장관 유진룡)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에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를 하는 책임심의위원 후보들에 대해 성향검증을 실시, 좌 성향 인사들을 전원 배제시키고 좌성향 단체가 참여한 현장예술인 지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고한다<sup>17)</sup>.

또한 국정원이 2014년 9월 26일 작성한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문서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4.9.26.경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서 좌성향 단체 지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 사업 심의 시 신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배제 명분을 마련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의를 담당하는 책임심의위원들을 보수 인사로 선임한 후 책임심의위원들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제외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sup>18)</sup>

문체부 예술정책과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간부들이 2014년 4월부터 준비하여 2014년 10월 21일에 청와대에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에서는 201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448건 중 이념 정치 편향 단체/개인 3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는 문체부에 큰 변화가 있던 때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4년 7월 17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면직하고 8월 21일 김종덕 장관을 임명하였으며, 8월부터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3명(최○○ 문체부 기조실장, 김○○ 중무실장, 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대해 강제사직을 추진하여(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0월 8일에 완료한다. 3인의 강제사직 후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는 더 강화된다. 문서는 심사단계(책임심의위원 심의)에서 1차 검증에 실패

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2018.6.8. 88~91쪽 참조.

17) 위의 보고서, 47쪽.

18) 위의 보고서, 50쪽.

했으며 의결단계(예술위 전체 회의)가 형식적 절차로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분석하고 개선방향으로 심사단계의 1차 검증 강화와 의결단계의 재검증 기능 강화를 제시한다.

함께 제출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은 2015년 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검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모(신청 및 접수)-심사(책임심의위원)-의결(예술위 전체회의)-집행’으로 진행되는 예술위 문예기금 일반 공모사업의 각 단계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일단 ①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한다. 그리고 ②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③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 ④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⑤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⑥최종 의결 전 재확인(문제발생시 최종 의결에서 배제) 등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다.

‘사전 단계’에서 기존 관행적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예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반 공모 사업의 규모를 줄여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늘린다는 뜻이다. 남은 예산은 예술위에서 자체 기획하는 신규 사업으로 돌린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을 100% 지원배제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구의 역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스스로 예술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모 단계(신청 및 접수)’에서는 먼저 ①예술위와 문체부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전협의한다, ②예술위 사무처에서 특이사항(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을 확인하고 심의자료에 반영한다, ③예술위 사무처는 필요시 책임심의위원과 사전협의한다. ‘심사 단계(심의 및 선정)’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책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한다, 예술위 사무처 간부가 간사로 심의에 참여하고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②심의 후 문체부와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확인 한다, 문제 발생시 위원장 책임 하에 해결 조치한다. ③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며, (문제가 남은 부분은) 최종 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한다. ‘사후 관리 단계(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서는 예술위가 지원사업 관리 운영, 환류를 강화하여 위반 사업은 차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다. 지원 배제를 위한 보완-「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와 서계동 혹은 ‘문화역 서울284’ 회의, 2016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및 지원제도 개편안

2015년 지원배제는 대체로 방침대로 실행되었으나, 몇 가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돌출된 사건들이 나타났다. 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 등 지원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예술위 지원 사업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 2015.2.25.자 문서를 보면, 예술위 2015년 공모 지원 사업 관련,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2015.4.20.자. (TF마지막 날) 문서에도 예술위 공모 사업이 4월 20일 현재 33건이 진행 중, 각종(블랙)리스트를 관리·공유하고 있고, 사전 스크리닝에 대한 부담에 따르는 추진 상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TF에서 논의된다. 2015년 4월 20일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해소되고 2015.4.21.~2016. 상반기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매주 1회 세종시에서 열린다.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 현안관련 부서장 등 7~8명의 사무처 직원들은 봉고차로 예술위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 세종시로 이동하였다.

2014년에 마련한 문체부와 예술위의 대응책은 방대한 블랙리스트의 적용을 위해서는 부족한 전략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배제 대상 예술가/단체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심의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하는 등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배제 대상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길어지면서 심의나 결과 발표가 한정 없이 지연되기도 했다.<sup>19)</sup> 심의에서 특정 인물들을 배제한 결과 지원금 규모는 애초 배정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축소되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10억 배정 중 7억만 지원했고, 우수문예지 발간 사업은 10억 편성에 3억 지원, 문학 행사 및 연구 지원은 2억 편성에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결국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1월 초 사이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사무처 간부들)는 ‘문화역서울284’ 지하 혹은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청와대 지시에 따른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및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문체부가 2015.12.8.~2016.1.8. 최종 확정된 예술위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에서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공모형 지원’ 제도를 대폭 폐지하고 자체 ‘기획

19) 위의 보고서, 68쪽.

사업'으로 바꾼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① (사업방식) 소액, 다건식 단순공모를 축소하고 기획공모사업의 비중을 강화
- ② (심의제) 소수 예술전문가 중심 심의제를 폐지하고, 개방적, 다원적 심의제를 도입하여 심의위원 풀제, 예술성 뿐만 아니라 대중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다원적 시각에서 심사
- ③ (평가, 환류) 객관적, 정량적 평가 도입으로 예술단체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 등

여기에는 2015년 8월 혹은 9월에 결정된 책임심의위원회 폐지가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대신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 효과 등 계량 평가지표 등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심의제도 개편안이 들어있었다.<sup>20)</sup> 2015년의 공모 규모 축소가 2016년에도 연장,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소액 다건 단순 공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예술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요청에 대한 공모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며 이를 예술위 스스로 하는 대형 기획 사업으로 대체 공모한다는 것이다. 심의제의 경우는 2010년부터 운영해오던 책임심의위원회도가 블랙리스트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어 이를 심의위원 풀(pool)제로 전환한다. 이후 이 심의위원 풀제를 운용하면서 예술위는 개인 예술인·전문가보다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 산하기관 직원, 단체장 등 주로 문체부의 권력에 협조적인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 5.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예술위 구성원들은 무엇을 했나

우리는 박근혜 정부 전 시기에 걸쳐 예술위의 모든 심의 과정에서 점점 더 높은 강도로 이루어져 간 블랙리스트 사태를 살펴보는 가운데, 검열이 예술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예술위의 지시 체계와 협력 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며 만들어진 예술위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예술위와 공적 예술지원체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그 일면이 다음과 같은 발언들에서 드러난다. 2014년 9월 경 김OO 예술

20) 위의 보고서, 69쪽.

정책관이 예술위 사무처장(이OO)과 본부장들(이OO 예술진흥본부장, 이OO 경영전략 본부장, 양OO 문화나눔본부장)을 세종시로 불러 설명할 때,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단체들”이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지시는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개인/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였던 것이다. 또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소영은 진술에서 자신이 2014년 상반기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에게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을 때 이 명단이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명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소영은 이것을 조현재 문체부 1차관에게 전달하면서 “세월호 관련 비판적 의견,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시국선언 같은 것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에 청와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sup>21)</sup>

공공적 지원의 지원 주체는 정부나 문체부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이고 국민 전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정부의 지원’이라고 여겼다. 정부의 돈, 심지어 집권 대통령의 돈이어서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를 지지했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들, 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일까? 예술 지원금을 분배하는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예술위이고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것은 예술가들과 국민임에도, 또 다른 위임받은 선출 권력인 정권이 이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공적인 것(공공성)을 사적인 것(정부, 대통령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예술위 장악 과정,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수행한 국가범죄 행위들을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예술위가 독립된 민간기구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이렇듯 오랜 기간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예술위에 부과되는 동안 예술위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립성·전문성·현장성이 담보되었다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본격화한 2014년 이후 예술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혹은 폭로의 목소리가 나오고 불복과 투쟁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술위 심의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폭로한 것은 2015년 6월 창작산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지원포기 종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중 한 명이 2015년 9월 9일에 JTBC 보도를 통해 폭로하고 국정감사에 제보한 것과, 그 직후 2015년 초에 있었던 다원예술지원 심의와 관련하여(윤한술의 <안산순례길>, ‘프린지페스티벌’의 지원 배제 사건) 2015 책임심의위원 중 한 명이 국정감사에 제보하고,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고발한 것 뿐이다.

21) 위의 보고서, 73~74쪽.

이 긴 기간 동안 예술위 위원장들, 위원들로부터는 단 한 번의 폭로나 내부고발, 혹은 공개된 불복의 싸움도 없었다. 예술위 소속 직원 중에서는 2015년 10월 공연예술센터의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사건’ 당시 내부고발을 했던 000 딱 한 사람이었다. 블랙리스트 정국에서 예술위 위원직을 사임한 것은 2015년 11월 사퇴서를 제출한 김00과 2016년 3월 예술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사임한 구00 뿐이다. 이들도 스스로 물러났을 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 김00 위원은 사퇴의사를 정하게 된 이유를 “제가 보기에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문제’, ‘문광부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저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오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sup>22)</sup>라 밝히고 있다. 김00 위원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꼭 한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에 들어온 지 5개월인데 위원들은 없습니다”라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유령 취급을 받는다고 항의한다.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에 대해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술위를 지켜야 할 위원장은, 위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2015년 5월 29일의 제161차 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도중 권영빈 당시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한다. 이 개정안은 ‘책임심의위원제도’를 ‘심의위원 풀제’로 바꾸자는 내용이었다.

(전략) 지금까지는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략)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심사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밑줄은 필자가)<sup>23)</sup>

이 발언은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책임심의위원 선정에 ‘해당기관’의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책임심의위원들이 지원 심의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해법이 없으니 심의 사안마다 ‘유연하게’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블랙리스트를 좀 더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2차(2015.6.5.) 위원회 회의록」, 33쪽.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61차(2015.5.29.) 위원회 회의록」, 10~11쪽.

다면 최소한 이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책임심의위원제도와 심의위원 풀제 중 무엇이 낫다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작동하고 있던 블랙리스트 문제 자체를 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원들은 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영빈 위원장의 위 발언 후 이어진 정OO 위원의 발언은 전혀 다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 일정부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 개인이 욕을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심의가 이렇게 나왔느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게 나왔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차라리 제가 책임을 지면 “너는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런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는 반드시 심의에 위원이 참여해서 심의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24)</sup>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면 “책임심의관이라는 제도는 없어져도 됩니다”라고 말한다. 위원들이 심의위원을 겸하면 블랙리스트 적용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인가? 당시 문체부와 청와대에서 모든 지원 대상자 명단을 검열하고 배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짚어 내려 보내 하나의 개인/단체도 허락 없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던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위원 개인들이 심의위원 혹은 심의위원장이 된다 해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적용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을 정OO 위원이 몰랐을 리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현존하는 책임심의위원제까지 ‘유연한’ 제도로 바꾸어 블랙리스트 적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위원들이 심의까지 하여 권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차피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으니 위원인 내가 심의위원장이 되어 떨어진 개인/단체에게 떨어진 이유를 ‘책임지고’ 잘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이날 회의에서 권영빈 위원장이 지적하듯이 위원회 위원과 심의위원을 분리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1기 위원회의 경우 연극 분야에서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소속된 인사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날

24) 위의 회의록, 11쪽.



권영빈 위원장은 1기, 2기 때 미술 분야나 음악 분야에서 위원이 심의에 들어가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로도 (권영빈 위원장의 임기는 이미 2015년 3월에 3년이 지났다) 위원과 심의위원 분리는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OO 위원은 사무처가 위원들과 관계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사무처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비판한다. 그러나 권영빈 위원장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소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어려운 점을 충분히 주지시켜” 드려야 한다고 권유한다. 이날 권영빈은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책임심의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위원들 중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아해 하고 있다.<sup>25)</sup>

이날 김OO 위원은 “왜 갑자기 ‘책임심의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경위가 없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이 논의를 중요하게 다룰 것을 제안했지만 다른 어떤 위원들도 이것을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관시켜 논의하지 않았다. 이때는 블랙리스트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매주 1회 세종시에서 예술위 사무처 7~8명이 참여하여 열리고 있던 초기<sup>26)</sup>다. 5월 29일 예술위 회의에 제출된 ‘책임심의위원회 폐지’는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안이었고 창작지원부장 장OO과 위원장은 그 맥락을 계속 설명한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위원은 없다.<sup>27)</sup>

다음 회의인 162차 예술위 회의(2015.6.25.)에서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더욱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이날 참석한 예술위원들은 신임위원장 박명진을 비롯하여 김OO, 김OO, 김OO, 김OO, 김OO, 오OO, 정OO 등 8명이며 감사 강OO도 참석했다. 이 때는 제4대 위원장 권영빈의 임기가 끝나고 제5대 예술위 위원장으로 박명진이 취임(6.9.)한 지 16일째가 되는 날이다. 양OO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은 ‘2015년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대상단체 결정의 건’을 보고하면서 “연극을 보시면 무용이나

25) 위의 회의록, 12~15쪽.

26) 회의는 2015.4.21.부터 2016 상반기까지 지속된다.

27) 그리고 2015년 7월 31일 예술위 165차 전체회의에서 책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의결된다.

음악, 전통예술에 비해서 지원선정 단체 수나 지원인원수에서 차등이 나는 이유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연극분야의 제외되는 단체들이 타 분야에 비해서 많았던 탓으로 연극분야는 지원단체수에서 20% 정도, 지원인원수에서 10%정도가 신청 현황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3월 2일에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고,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았고 4월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6월 11일에 지원심의를 진행했다. 지원신청과 심의 사이에 '정부와 협의' 기간이 2개월여가 있다. 정상적인 심의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절차다.

사무처 직원은 위원들에게 스크리닝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 배제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나온 반응은 두 가지이다. 정OO 위원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요,(중략)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배제된 단체, 이 단체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인력개발원 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 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sup>28)</sup>라면서 "굉장히 난감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정OO은 지원 배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배제 단체의 질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반대로 김OO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부와 협의과정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오프더레코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왜 기록하면 안 되는 건가요?"<sup>29)</sup>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대해 이날 회의를 처음 주재한 신임 위원장 박명진은 "저도 최근에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 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sup>30)</sup>라며 논의를 끝낸다.

5월 29일(161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안건 중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사안이 있었다. 바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역량 있는 문학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1천만원을 100여 명에게 지원하는 10억 규모의 사업으로, 문인들의 관심도가 높아 매년 약 1천여 명의 문인들이 신청하는

28) 앞의 「162차 예술위 회의록」(2015.6.25.), 17쪽.

29) 위의 회의록, 19쪽.

30) 위의 회의록, 같은 쪽.

대표적인 문학창작지원 사업이다. 바로 이 사업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3단계 심의 과정으로 진행된 터라 이 사건의 개요는 좀 복잡하다. ‘김기춘 등 판결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2014.11.11.경 공모신청을 마감, 2015.2.까지 3차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위 공모신청에서는 총 8개 분야에서 95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공모신청을 받은 예술위 장OO 부장은 당초 예년과 같이 지원신청자에 대한 간단한 통계보고를 문체부에 보냈지만, 문체부는 지원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작품분석까지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장OO이 이를 포함한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자 문체부는 그 중 7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예술위는 2015.1.21. 및 1.22. 무기명 심사인 1차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1차 심사에서는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배제대상자 명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심사 결과 198명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장OO이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보내자 오OO이 이를 청와대로 송부하여 정무수석실 정관주의 검토를 거쳐 1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이 하달되었다.

예술위는 2015.3.31.부터 4.1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2차 심사 단계에서도 1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장OO은 2차 심사 통과자 94명과 예비 8명을 포함한 102명의 명단을 오OO에게 송부하였다. 위 102명에는 배제대상자로 통보된 16명 중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그 중 이윤택을 포함한 6명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청와대에서 배제대상자 명단이 추가로 하달되었다.

예술위의 장OO 등은 2015.5.경 000 책임심의위원을 찾아가 ‘상부의 배제지시로 사업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업이 중단되게 생겼으니, 2심에서 선정된 102명 중 배제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000은 이를 거절하였다. 2015.6.5. 열린 3차 심의에서도 장OO은 책임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의위원들의 거부로 심의가 연기되었고, 다시 열린 6.27. 3차 심의에서는 장OO이 ‘도저히 할 수 없는 8명만 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책임심의위원들이 거부하여 결국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예술위 박명진 신임 위원장의 요청으로 문체부와 청와대의 협의로 당초 청와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대상자 중 5명(박석근, 이윤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을 지원배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2015.7.17. 예술위 제164차 회의에서 서면결의로 위 5명을 배제하고 7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sup>31)</sup>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은 원래 2015년 3월에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3차 심의일정을 승인하지 않고 3개월 지연시켰다. 블랙리스트 수행을 위해 선정기준이 급조 고안되기도 했다. 시와 소설 분야는 60%로 축소지원 결정하고, 시조 등은 육성 차원에서 지원후보 100% 결정 등 세부분야별 형평성 안배를 감안하

31)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15~19쪽. 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95쪽에서 재인용.

겠다는 선정기준을 만들었으나 이는 단편소설 분야 박석근 작가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문체부 지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sup>32)</sup> 결국 이후 열린 3차 심의(6.27.)에서 책임심의위원들이 배제 지시를 거부하자, 예술위는 7월 17일 위원회 서면결의로 선정 인원을 70명으로 축소하여 확정한다. 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만을 지원하고 3억 원은 아무 이유 없이 남겨졌으며<sup>33)</sup> 이듬해인 2016년에 이 사업은 폐지되었다.<sup>34)</sup>

161차 회의가 열린 5월 29일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는 3차 심의(6.5.)를 남겨두고 있었으나 책임심의위원들이 배제지시를 거부하고 있어서 배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책임심의위원회 폐지’가 제안되고 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에서 비롯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오OO 위원은 이런 발언을 한다.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책임심의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고, 차선책으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은 대강 아실 겁니다.”<sup>35)</sup>

2015.5.21.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건 참고자료인 “2015년 문제사업 현황(‘15.5.13.현재)”에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 현황으로 “1,2차 심사를 통해 총 83건 중 69건 배제 조치 및 14명 미해결 상태”(후보자 102건 중 14건 특이사항 통보)가 적혀 있고, 그 해결책으로 1안: 14건 전원 제외 조치 시도 중(문학분야 오OO 위원, 심사위원 5인 대상 설득 작업중)이라는 내용이

32) 위의 「종합 발표」 103쪽.

33)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배제 사건’의 여파는 ‘주목할 만한 작가상’의 급조로 넘어간다. 10억 원 중 7억 원만 지원한 채 끝난 이 사업의 잔여 예산 3억 원으로 갑작스런 후속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사업은 총 예산 3억 원을 20인에게 1,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기금이 기성 작가들에게 천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1인당 지원액을 500만 원 더 높였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중 현재까지의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의 문학적 성취에 지원이 필요한 우수작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하여 시, 소설, 아동·청소년 문학을 선정분야로 했다. 이 사업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지원과 달리 비공모 형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추천위원회 및 예비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배제 지시를 수월하게 이행하고자 했다. 추천위원회에서 300여명 작가들을 후보군으로 추천하고 이들 중 2인 이상의 중복 추천을 받은 80여 명의 후보 풀을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27명 배제지시를 하달했다. 앞 「종합 발표」 106~107쪽 참조.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태인 ‘2015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지원 배제 사건으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잔여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생겨난 사업은 ‘2015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과 ‘2016 기간 문학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다. 위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97쪽 참조.

34)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외에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해 2016년에 폐지된 사업은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 ‘공연예술 발표 공간 지원 사업’, ‘창작산실 대본 공모 사업’ 등이다.

35) 「제161차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45쪽.

적혀 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①14건을 제외하기 위해 문학분야 오OO 위원을 비롯, 책임심의위원 5인 대상으로 설득 중이다, 혹은 ②14건을 제외하기 위해 문학 분야 오OO 위원이 책임심의위원 5인에게 설득 중이다. 그런데 심의에 대해서 위원인 오OO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심의 결과를 위해 오OO 위원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오OO 위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문학 분야 책임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앞의 오OO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5.29.회의에서 장OO 창작지원부장은 “오OO 위원님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 예술가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본다. 특히 오OO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문학계의 거목이다. 오OO가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오OO는 예술위원으로서 심의 결과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어거거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문인 오OO가 2015~2016 2년 간 예술위 밖으로 아무 잡음도 내지 않고 예술위 위원직을 수행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가 블랙리스트 실행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오OO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에 의해 엄청난 지원배제가 강요되던 2015년에 예술위 위원직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블랙리스트 방조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거기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들은 예술위 위원이라는 위임 받은 권력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가? 사무처 직원들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에도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예술위 위원으로서 “블랙리스트를 조율하려 했다”는 자기변호도 있다. 그 말을 믿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행위였을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위원들 개인들이 블랙리스트의 일부의 ‘양해’를 구해 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100명의 블랙리스트를 70명으로 줄인다 해서 이들이 영웅이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블랙리스트는 일종의 거래리스트가 된다. ‘양해’를 구해 주는 자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을 뿐이다.

예술위 위원들의 배임(背任) 행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력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 초, 예술위가 민간예술가들에게 지원해야 할 기금 중 6억 원을 국립무용단 무용공연 <향연> 예산으로 쓰도록 국립극장에 내주기까지 했다. <향연>은 국립

무용단이 국민 방문 등 국가 주요행사에서 선보이는 대표 레퍼토리 <코리아 환타지>를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가 총연출을 맡아 의상 위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sup>36)</sup> 8월에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자 국립극장과 국립무용단에서 갑작스럽게 제작했으며 12월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틀간 초연했다. 여기에 6억 1,437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공연에 국립극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술위원회의 민간예술 지원기금 6억 원이 전용되었고, 문체부 지시에 따라 예술위는 위원회 전체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6억 원 중 1억 원은 2015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박근형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지원 배제로 인해 발생한 잔여예산이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조하고 그것을 방관, 방조한 것도 커다란 배임이지만 수억 원의 민간지원기금을 국립극장의 특혜성 홍보 공연으로 전용하도록 결의한 것은 더욱 큰 배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들 역시 문체부를 통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지령에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 2014 책임심의위원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이래 이들은 한편으로는 문체부 관료들과 함께 지속적 회의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 심의 사안마다 블랙리스트를 하달 받으면서 예술위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근거지로 만드는 수족 기능을 했다. 사무처 직원들은 심의에 간사로 들어가 배제 대상 개인/단체들의 부적격 요인을 강조하여 배제를 유도했으며 이를 위해 과거 정산보고 불이행 여부, 중복 지원 전력 등 절차적 사유를 조사하고, 지원 배제 명단의 단체들이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도 “지금 상황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곤란하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술위 직원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관철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지원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실상 이 말은 문체부 직원들이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며 이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이 말을 반복한 것은 예술위 사무처가 문체부의 하부 기관에

36) 「김종덕 전 장관, 민간 지원예산 문체부 산하기관에 전용」, 박창욱, 박정환 2016.11.17. <뉴스1> 참조.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다. “국립극장 다른 관계자는 “문화융성을 내건 이번 정권에서 내세울 만한 전통 공연을 만들라는 문체부 지시에 향연 기획안을 8월말 제출했는데 채택됐다”며 “예산이 없어 기획회의만 열리다가 11월 마지막주에야 예산이 확정돼 겨우 20여 일 연습해 공연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이처럼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해 갑작스레 향연 제작을 지시한 데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차씨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차씨는 대통령 소속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내며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정권 홍보를 위해 순수 예술 지원예산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 중 검열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을 한 것은 공연 예술센터의 직원 한 명뿐이었다. 직을 걸고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도 예술계의 지지를 구하는 예술위 위원도 없는 예술위,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수 있고 안에서 지키는 이 없는 예술위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것이다.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직원 등 예술위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 6. 예술위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문제

이렇게 예술위는 위원장,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 조직의 심각한 변질을 통하여 예술인들과 관계를 끊은 채 문체부 산하기관 중 블랙리스트 적용의 최대 수행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문체부와 예술위가 지원 심의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을 실제로 실행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공모 과정에 들어갔던 심의위원들이었다. 이들이 실제로 블랙리스트 배제 명단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블랙리스트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들이 모두 배제 명단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고 사무처 직원이 배제 대상 단체에 대해 만들어낸 ‘가짜 정보’에 속았던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배제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발하거나 저항한 심의위원들도 있었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에서 당시 문학 책임심의위원들은 배제 지시에 저항했고 ‘2015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이후의 배제 과정을 폭로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초 문체부의 김OO 사무관이 예술위에 “지원심의위원 구성 시 (문체부 소속)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인사(기관장, 예술감독)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심의위원들을 좀 더 문체부/예술위 결정에 협력적인 사람들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현장 예술가, 비평가 등 예술계의 개인들로 구성되던 심의위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장, 산하기관 직원과 협회장, 프로듀서 등 이권을 가진 인물들로 교체되었고, 2016년도에는 공모 지원 자체가 대폭 축소된다. 그럼에도 개별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 중에는 문화예술계의 창작자, 평론가, 교수 등도 여전히 있었다. 이들 중에는 블랙리스트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인지하고 협력한 사람도 있다. 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가장 최선의 자기변호가 “내가 노력해서 블랙리스트 적용 숫자를 줄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심리가 있다. 그것은 공적인 정보를 사적인 관계로 오인하는 것이다. 심의 위원들에게 “선정하면 곤란한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예술위 사무처 직원이 이야기할 때, 심의 위원들은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오는 압력이고, 국가적 범죄다. 여기에 협력하면 나중에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심의 위원들이, “아, 예술위 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는 모양이다. 내가 도와주어서 이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사적 관계’의 사고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적인 개인을 돕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위 밖에 있는 예술가 개인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 중 몇 명을 ‘구제’시켜주고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 단체/개인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심의위원’은 시민사회의 공적인 임무를 위임받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받은 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다. ‘공인’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개인의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의 근원이며, 우리를 국가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개인 비리나 배임을 낳는 원천이다. 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심의위원들 역시 이런 인식적 오류와 잘못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7. 정권의 예술위 장악 시도는 예술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예술위의 독립성·전문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이 장악·통제할 조직으로 인식하면서 2005년 출발한 예술위는 2008년부터 발전을 멈추고 퇴행의 길을 갔다. 그 퇴행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토양이 되었으며 블랙리스트 실행은 예술위에 더욱 큰 퇴행을 야기했다.

### 가. 예술계와 관계 끊는 위원장 임명과 위원회 인선

가장 눈에 띄는 퇴행은 위원장의 낙하산 인사다. 2008년 말, 당시 유인촌 장관이 폭력적으로 2기 위원장을 중도해임하고 3기 위원장을 임명하여 위원장을 강제 교체한 이래 예술위 위원장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4기, 5기 위원장은 예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론계 인사, 언론 관련 교수가 맡게 된다. 예술위가 예술계와 1차적으로



관계를 끊게 된 것이다.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보아도 예술위가 예술계의 대표성에서 떨어져 정치화한 정황을 알 수 있다. 1기 위원회는 11인 전원이 예술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장르 이기주의라는 폐단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초기적 상황이었으며 예술위 자체의 민주주의와 자정 작용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2기 이후 문체부 관료 출신, 조·중·동 언론인 출신, 대통령직속 무슨 무슨 위원회 출신인사들이 점점 더 많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심지어 경제인과 법조인까지 들어온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예술 현장 중심의 예술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의기구인 예술위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었다.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위원들의 경우도 실질적인 현장 전문가라기보다는 협회 등 단체의 수장이거나 그 출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단체 수장의 경우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권력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 임명권자가 진정으로 예술 전문가의 목소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길들이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나. 소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퇴행은 소위원회의 유명무실화다. 사실 예술위에서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위원회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춧돌로서 예술위가 예술계의 관심과 지향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소위원회라는 뿌리를 통해 예술위는 예술계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다. 소위원회를 통해 특별한 논의가 수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예술계 의사 반영이다. 원래 소위원회는 예술 장르별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란 그 분야의 ‘현장예술인’을 일컫는 것이었다.<sup>37)</sup> 예를 들어 1기 1차 소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하여 88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예술위 활동 방향이 조금 안정된 1기 2차와 3차 소위원회에는 각각 70명과 64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소위원회의 기본 구성은 7개의 장르별 소위원회였으며, 여기에 주제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정책위원회, 기초예술의 가치확산위원회, 예술의

37) 200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13(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사회적 역할 확대 위원회 등이 추가되었다.

장르별 소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지원제도 창안의 기초다. 예를 들어 ‘정기공모사업 개선’이라 해도 예술 분야별로 다른 대안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책은 이러한 예술 장르별 다양성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김정헌 위원장을 중도 해임한 시점에 구성한 2기 소위원회(2008.12.19.~2010.초)부터는 장르별 소위원회는 사라지고 예술 현장과는 관계없는 연구 용역 형 단기 소위원회가 이를 대신했고, 1년 단위로 안정적으로 구축되던 소위원회 체계도 무너진다. 5기에 이르면 소위원회 숫자도 더욱 줄고, 소위원회를 모두 위원회 위원들이 독점하여 소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위원회 자체의 세부 논의 구조에 불과하게 된다. 장르별 소위원회는 2기 때 사라져서 복원되지 못했다. 1기부터 5기까지 소위원회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어떤 소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변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 \*소위원회 변화 과정

#### 1기 1차(2005.11.1.~200610.31) 소위원회 위원 수: 88명

문학위원회(10명)	이시영 강영숙 김병익 김이구 김정환 나희덕 서영채 성석제 은희경 최영철
시각예술위원회(11명)	김정헌 강태희 공성훈 백기영 안상수 안인기 양지연 이영준 이경민 이종빈 이지호
연극위원회(8명)	이강백 김명화 박종관 심재찬 이상우(연출) 이승엽 이종국 임진택
무용위원회(10명)	김현자 김공수 김말복 김민희 박명숙 손인영 성기숙 이종호 정은혜 정의숙
음악위원회(10명)	정완규 박정원 백영은 윤승현 유영재 윤경화 이나리메 이석렬 이해전 함일규
전통예술위원회(12명)	한명희 김덕수 김승근 노재명 박영규 송혜진 양성옥 원 일 장경희 지애리 진옥섭 현경채
다원예술위원회(7명)	전효관 김소연 김준기 박준흠 원영오 이규석 이원재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10명)	박신의 김성원 김세준 김채현 김형수 박인배 양성원 주재연 최준호 허권
지역문화위원회(11명)	박종관 김기봉 나호열 김채현 박승희 서영수 양미경 이종인 이춘아 전고필 지금중 함한희

**1기 2차(2007.3.1.~2008.2.29.) 소위원회 위원 수: 70명**

문학위원회(6명)	이시영 권혁웅 김병익 도종환 이해경 전성태
시각예술위원회(7명)	장화진 권혁수 김성원 김정현 김학량 이경민 최태만
연극위원회(5명)	임진택 김명화 심재찬 오세곤 허순자
무용위원회(5명)	김현자 김승현 양정수 정은혜 최태지
음악위원회(7명)	정완규 김태현 백영은 안두진 유전식 이나리메 이택주
전통예술위원회(7명)	한명희 김승근 송혜진 이애주 이지영 이진원 장경희
다원예술위원회(7명)	전효관 김소연 백기영 오성화 이원재 이진아 조동희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7명)	박신의 김형수 이나리메 장광열 조동희 주재연 허 권
지역문화위원회(7명)	박종관 김기봉 김선태 김소연 나호열 박영정 신동호
정책위원회(6명)	강준혁 박신의 박종관 이원태 전효관 정재욱
기초예술의 가치확산위원회(7명)	김언호 김광일 김성원 노재현 도종환 백영은 최태지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위원회(6명)	박종관 김세준 김정현 양정수 오세곤 주흥미

**1기 3차(2008.3.1.~2008.9.30.) 소위원회 위원 수: 64명**

(※ 2차 소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 및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함)

문학위원회(5명)	이시영 권혁웅 도종환 이해경 전성태
시각예술위원회(7명)	장화진 권혁수 김성원 김정현 김학량 이경민 최태만
연극위원회(5명)	임진택 김명화 심재찬 오세곤 허순자
무용위원회(5명)	김현자 김승현 양정수 장선희 정은혜
음악위원회(7명)	정완규 김태현 백영은 안두진 유전식 이나리메 이택주
전통예술위원회(6명)	이애주 김승근 송혜진 이지영 이진원 장경희
다원예술위원회(7명)	전효관 김소연 백기영 오성화 이원재 이진아 조동희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7명)	박신의 김형수(소설가) 이나리메 장광열 조동희 주재연 허권
지역문화위원회(7명)	박종관 김기봉 김선태 김소연 나호열 박영정 신동호
정책위원회(5명)	강준혁 박신의 박종관 이원태 전효관

기초예술의 가치확산위원회(7명) 김언호 김광일 김성원 노재현 도종환 백영은 최태지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위원회(7명) 박종관 김세준 김정현 김혜자 양정수 오세곤 주홍미

## 2기 1차 소위원회(소위원회 필요 인원 42명, 실제 참여 인원 16명)

지원심의제도 개선 소위원회(6명) 2009.4.21~2010.3.31  
 2012 전략 개발 소위원회 (6명) 2009.4.21~2009.12.30  
 2010 기금운용계획편성 소위원회(3명) 2009.4.10~2009.6.30  
 정기공모사업 개선 소위원회(3명) 2008.12.19~2009.2.27  
 별도공모사업 개선 소위원회(5명) 2008.12.19~2009.2.27  
 자체기획사업 개선 소위원회(3명) 2008.12.19~2009.2.27  
 지역협력형 사업개선 소위원회(4명) 2008.12.19~2009.2.27  
 복권기금사업 개선 소위원회(3명) 2008.12.19~2009.2.27  
 자체시설운영 개선 소위원회(3명) 2008.12.19~2009.2.2  
 재원 확충 소위원회(6명) 2009.4.21.~2009.12.31

### (소위원회 구성원)

최정일(1955년생) 예술위 위원, 6개 소위원회에 참여.  
 조운조(1945) 예술위 위원, 5개 소위원회에 참여.  
 정중헌(1946)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에 참여.  
 최상윤(1940)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에 참여.  
 백병동(1936)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김복희(1948)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유진룡(1956)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김치수(1940)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신달자(1943)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오광수(1938) 예술위 위원장, 2개 소위원회에 참여.  
 김정수(1961)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흥재(1954) 전주정보영상원 원장,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이규동(1949)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등급심의위원.

임경식(1958) 서울연극협회 상임이사, 극단 숲 대표.  
 손관중(1960)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현대춤협회 회장.  
 이범헌(1962) 오픈옥션 아트센터 관장, 서울메트로 자문위원.

## 2기 2차 소위원회(소위원회 필요 인원 17명, 실제 참여 인원 9명)

2기위원회 성과평가 소위원회(4명) 2010.1.1~2010.9.18  
 예술전용공간 지원 소위원회(4명) 2010.6.4.~2010.9.18  
 재원확충 소위원회(6명) 2009.4.21.~2010.9.18  
 2011 기금운용계획편성 소위원회(3명) 2010.1.1.~2010.9.30

### (소위원회 구성원)

김복희(1948)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조운조(1945)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정중헌(1948)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에 참여.  
 유진룡(1956)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에 참여.  
 최정일(1955)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에 참여.  
 김치수(1940)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에 참여.  
 신달자(1943)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에 참여.  
 노재현(195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 기자.  
 홍승기(1959)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저작권위원회 위원.

## 3기 1차(2011.1.28.~2011.12.31.) (소위원회 필요 인원 28명, 실제 참여 인원 19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소위원회(4명)	왕치선 박은실 이무용 이문섭
중장기사업전략 소위원회(5명)	김희근 박은실 왕치선 이무용 홍찬식
기금지원제도 소위원회(4명)	박계배 송혜진 왕치선 유인화 이성훈
민간기부활성화 소위원회(8명)	박은실 김성규 김주영 엄치성 이원섭 임태형 최남인 홍찬식

교류협력강화 소위원회(7명)

이무용 라도삼 송은옥 송혜진  
이용식 이문섭 최남인

(소위원회 구성원)

왕치선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박은실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이무용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에 참여.

홍찬식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에 참여.

2개 소위원회에 참여: 송혜진 이문섭 최남인

1개 소위원회 참여: 김성규 김주영 김희근 라도삼 박계배 송은옥 엄치성 유인화 이성훈  
이용식 이원섭 임태형

### 3기 2차 소위원회(소위원회 필요 인원 38명, 실제 참여 인원 20명)

중장기사업전략 소위원회 (5명)

김희근 박은실 왕치선 이무용 홍찬식

기금지원제도 소위원회 (9명)

박계배 이충기 제임스전 권문성 김병호  
문애령 유인화 장승현 정현욱

민간기부활성화 소위원회 (7명)

박은실 왕치선 김성규 안이영로 엄치성  
이원섭 임태형

교류협력강화 소위원회 (6명)

이무용 김주영 송혜진 이문섭 이충기  
최남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소위원회(5명)

왕치선 박은실 이무용 이문섭 이충기

미래전략포럼준비 소위원회 (6명)

김희근 박은실 왕치선 송혜진 이무용  
이충기

(소위원회 구성원)

박은실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

왕치선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

이무용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

이충기 예술위 위원, 4개 소위원회

김희근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송혜진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이문섭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김주영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박계배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제임스전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홍찬식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최남인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권문성 김병호 김성규 문애령 안이영로 엄치성 유인화 이원섭 임태형 장승헌 정현욱

#### 4기 1차 소위원회(2013.1.25. ~ 2014. 1. 25) (소위원회 필요 인원 23명, 실제 참여 인원 12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예술지원 소위원회 (6명)	정대경 김희정 이충기 양기철 제임스전 최상화
지역협력 소위원회 (6명)	양기철 김영철 노재현 박은실 제임스전 최동호
문화복지 소위원회 (5명)	노재현 김영철 김희정 제임스전 최동호
예술나눔 소위원회 (3명)	박병원 박은실 백태승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소위원회 (3명)	박병원 이충기 정대경

#### (소위원회 구성원)

제임스전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김영철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김희정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노재현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박병원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박은실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양기철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이충기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정대경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최동호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백태승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참여

최상화 예술위 위원, 1개 소위원회 참여

#### 4기 2차 소위원회(필요 소위원 27명, 실제 참여 위원 16명)

예술지원 소위원회 (7명) 정대경 김운미 김희정 양기철 최상화 남기욱 박영정

지역협력 소위원회 (5명) 양기철 김영철 김운미 노재현 최동호

문화복지 소위원회 (6명) 노재현 김영철 김운미 김희정 최동호 양혜원

예술나눔 소위원회 (6명) 백태승 박병원 최상화 김효진 이선철 박용재

기금운용계획 및 증장기전략 소위원회 (3명) 박병원 백태승 정대경

#### (소위원회 구성원)

김운미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김영철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김희정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노재현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박병원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백태승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양기철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정대경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최동호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최상화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남기욱 박영정 양혜원 김효진 이선철 박용재

#### 5기 1차 소위원회(2015.3~기간 불분명)(필요 인원 26명, 실제 참여 인원 9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예술지원 소위원회(6명) 정대경 김규태 김운미 오정희 이형환 정연심

지역협력 소위원회(4명) 김태익 박병원 오정희 정연심

문화복지 소위원회(5명) 김혜선 김규태 김태익 이형환 정대경



예술나눔 소위원회 (6명) 김운미 김규태 김태익 김혜선 오정희 정연심  
 기금운용계획 및 증장기전략 소위원회 (5명) 박병원 김운미 김혜선 이형환 정대경

(소위원회 구성원)

김규태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김운미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김태익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김혜선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오정희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이형환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정대경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정연심 예술위 위원, 3개 소위원회 참여  
 박병원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5기 2차 소위원회(필요 위원 18명, 실제 참여 인원 9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예술지원소위원회(6명) 김규태 오정희 정연심 구자홍 김태익 정의숙  
 문화나눔소위원회(5명) 조현재 김태익 김혜선 박병원 오정희  
 예술확산소위원회(4명) 구자홍 김규태 정연심 정의숙  
 기금운용계획 및 증장기전략 소위원회(3명) 박병원 김혜선 조현재

(소위원회 구성원)

구자홍,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김규태,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김태익,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김혜선,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박병원,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오정희,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정연심,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정의숙,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조현재, 예술위 위원, 2개 소위원회 참여

### 5기 3차 소위원회(필요 인원 12명, 실제 참여 인원 6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예술지원소위원회(4명) 김규태 오정희 정연심 정의숙

문화나눔소위원회(3명) 김혜선 박병원 오정희

예술확산소위원회(3명) 김규태 정연심 정의숙

기금운용계획 및 중장기전략 소위원회(2명) 박병원 김혜선

#### (소위원회 구성원)

김규태 2개 소위원회 참여

오정희 2개 소위원회 참여

정연심 2개 소위원회 참여

정의숙 2개 소위원회 참여

김혜선 2개 소위원회 참여

박병원 2개 소위원회 참여

2기 1차 소위원회 때부터 소위원회 성격은 변화한다.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임무를 갖는 소위원회가 아닌 짧은 현안 중심의 사업 개선 소위원회가 2~3개월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다. 연구 용역 기능을 갖는 소위원회들이다. 2기 1차 소위원회 위원 구성의 필요 인원은 42명이지만 총16명이 모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원심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에 참여한 이규동과 임경식, 2012 전략개발 소위원회에 참여한 김정수, 이흥재, 그리고 재원 확충 소위원회에 참여한 손관중, 이범현 등 각각 한 개의 소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 외에는 모두 예술위 위원들이 소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심지어 최정일은 6개 소위원회에, 조운조는 5개 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독점하고 있다. 2기 2차 소위원회 역시 사안별, 중단기 소위원회이며, 그 숫자는 네 개로 줄었다. 필요 인원수는 17명이지만 9명(7명의 위원과 2명의 외부인사)으로 구성된다. 4기 1차 소위원회(2013.1.25.~2014. 1. 25)는 소위원회 전원(필요 인원 23명)이 예술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2015~2016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위 위원들이다. 장르별 소위원회가 없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이것은 각 예술 장르를 '단 한명'의 위원회 위원이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기, 5기 예술위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틀어 연극 장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정OO

한 명이었고, 문학 장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5000 한 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와 임무를 방기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위의 폐쇄적인 구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극제의 아르코극장 대관 탈락 사건’이 일어났던 2015년에 연극계는 예술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대학교X포럼’을 만들기도 했다.

- 5기 1차 소위원회 (필요 인원 26명, 실제 참여 인원 9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 5기 2차 소위원회 (필요 위원 18명, 실제 참여 인원 9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 5기 3차 소위원회 (필요 인원 12명, 실제 참여 인원 6명, 전원이 예술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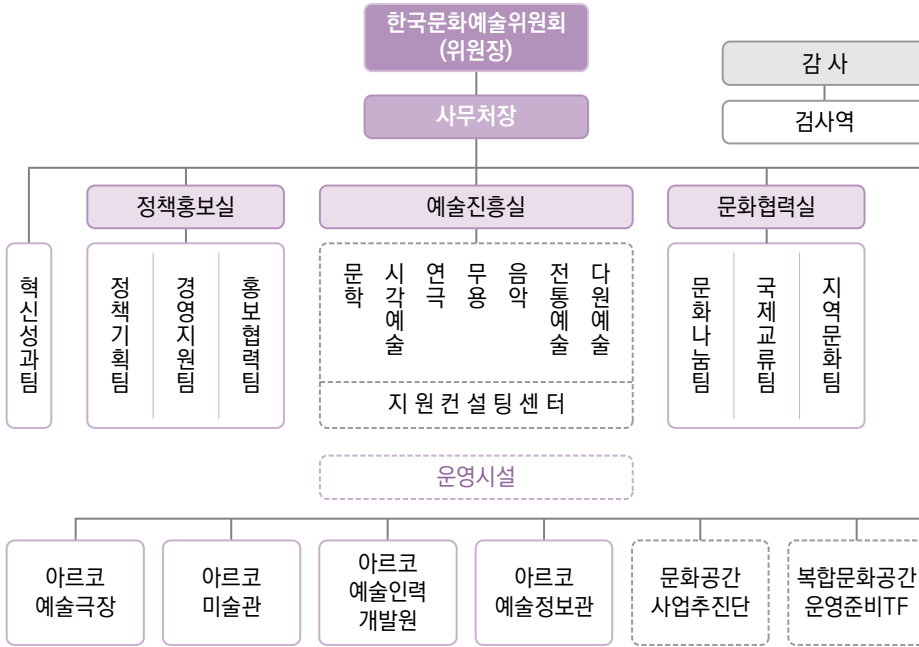
우리는 2기부터 5기까지 진행된 소위원회 변질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예술위를, 특히 예술위 소위원회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의 소산이다. 소위원회의 유명무실화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장르별 소위원회를 없애고 소위원회 인적 구성을 바꿔 ‘해당 분야(장르) 전문가’ 다수가 예술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② 소위원회의 목적을 예술 지원의 일상적·장기적 비전을 논의하는 문제제기 형에서 예술위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바꾼다, ③ 소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위 위원들만으로 구성한다. 결국 소위원회는 예술위원회가 세부 논의를 하는 단위로 전락했다. 예술위 폐쇄화의 가장 주된 부분이 소위원회 폐쇄화였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수행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 다. 사무처 조직구조의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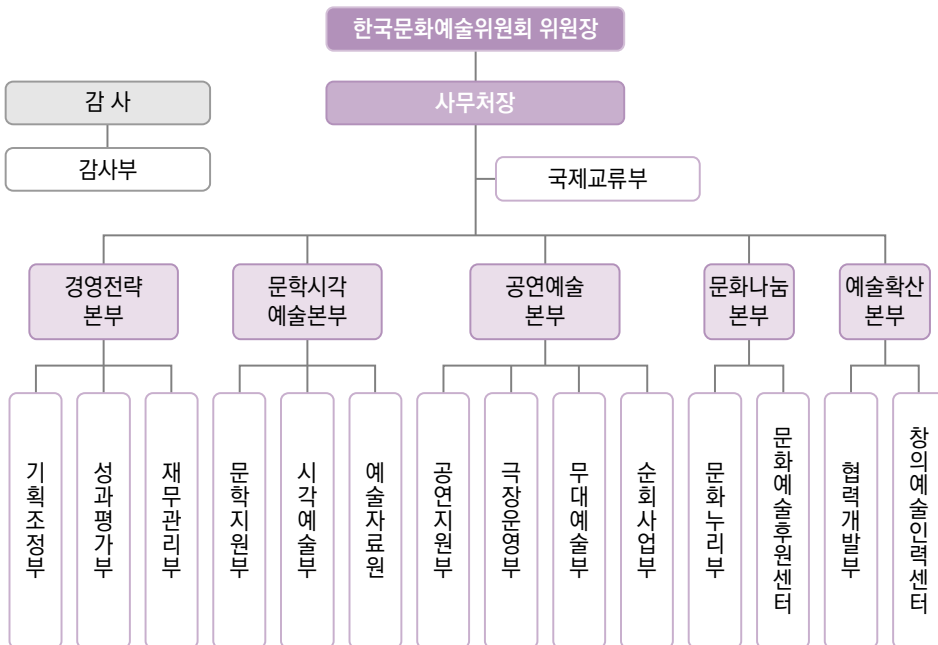
사무처<sup>38)</sup> 조직 역시 2008년 이후 후퇴했다. 2007년과 2015년의 조직도를 비교해 보면 그 후퇴가 눈에 보인다. 2007년 사무처는 예술진흥실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지원컨설팅센터가 구성되어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정보관 등 운영시설은 따로 분리되어 독자적 구조화의 전조를 보인다. 그러나 2015.11.13 개정 조직도를 보면 예술지원 부분은 문학시각예술본부와 공연예술본부로 나뉘어 다른 부서들과 섞여있다. 지원정책 전반을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다.

38) 2005년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 23조의 14(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표 3] 2007년 2월23일 개정 조직기구표, 3실 4관 7팀 1검사역



[표 4] 2015.11.13. 개정 조직도, 1처 5본부 16부



2015년 조직도는 2014년 6월 1일 개정 조직기구표에서 변화한 것인데, 이전에는 그나마 창작지원부가 예술진흥본부 안에 모여 있었다. 2015년 11.13. 조직도는 문제가 되었던 예술진흥본부, 창작지원부를 없애고, 지원업무를 문학시각예술본부, 공연예술본부로 나누어 장르별로 분리한다. 예술 지원 기구의 모양새가 더 이상 아니다.

예술위 운영시설 중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유인촌이 문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2010년 3월 3일자 조직도에서 빠져 독자조직으로 독립했다가 유진룡 장관(2013.2~2014.7) 때 권영빈 위원장에 의해 2014년 6월 1일자로 공연예술센터와 예술자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온다. 사실상 이 기관들은 독립을 해야 독자적 예산과 독자적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 이 기관들을 독립시킨 것은 이 기관들을 독자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위 조직을 축소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조직들은 독자조직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을 나눠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임직원 일동’ 명의로 게재된 ‘사과문’<sup>39)</sup>은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예술위가 어떻게 형해화했는지를 적실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사실상 ‘위원장+임직원’, 즉 과거 문예진흥원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 이 때 예술위 구성원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①낙하산인사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재임한 ‘위원장’(박명진), ②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만들고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회유하고, 지원제도를 뜯어고쳐 축소시켜 온 사무국 ‘직원’들, ③그 과정에서 거수기와 협력자 역할을 한 ‘위원’들, ④88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고 그나마 위원들이 겸직으로 독점하고 있던 ‘소위원회’. 예술위가 예술 현장으로 열려 있으려면 각 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존재해야 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예술인들이 예술위 내부를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2008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예술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39) 2017년 2월 23일,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으로서 힘이 없었고 용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지원 배제를 거부하고 배제가 최소화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외부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심사위원의 선정 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폭 개선해서 2017년도 사업 심의에 적용하였으며 불만사항을 신고받아 다루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복원되어야 할 사업들을 다시 세우고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금번 사건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예술위원회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임직원 일동’

## 8. 여파, 현재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감추기 위해 예술위는 2015년 1월부터는 심의 결과 공개 제도도 변경했다. 전체 명단을 공표하지 않고 개별 단체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자기 결과만 볼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2015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의 결과발표(2015.6.4.)의 경우에는 심사평, 심의위원 이름, 선정 건수만 공개한 채 “지원심의 선정 결과는 단체별 유선 통보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한다. 예술 현장에서는 아무도 누가 어떤 지원 심의에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지원 심의 결과에 대한 어떤 공적 논의도 할 수 없었다.

심의는 합당한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그 공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속적인 피드백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술위는 심의 결과 공개를 비공개 제도로 바꿨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끝난 현재 예술위는 완전히 복원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너무 긴 세월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예술위의 지원 제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너져 버렸다. 거기에 블랙리스트 사태가 밝혀지고 난 후 예술위와 사무처에 대한 불신은 예술 지원 제도의 반지성화, 그리고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

심의 제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예술위는 공정성을 담보한다면서 예술계 각 단체(이들은 대부분 협회 등의 이익단체들이다)에 일정량을 할당하여 2018년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추천을 받았다. 연극계를 예로 들면 배우협회, 연출가협회, 희곡작가협회, 평론가협회 등 모든 단체 회장에게 정해진 숫자의 심의위원 풀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것이다. 아마도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추천받기 위한 해법으로 단체의 임원진을 제외하고 추천받았다 한다. 과연 이런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 심의위원단의 질적인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술위는 믿을 수 없지만 각 협회는 믿을 수 있는가? 협회의 추천은 얼마나 공신력을 갖는가?

이런 제도가 내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예술 지원 제도를 급격하게 ‘기존 권력’ 중심의 체계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제도 속에서 그 권력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지원 제도는 철저히 개인에 기반한 제도여야 하고 개인을 보호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술위가 대안으로 내놓

은 제도는 반대로 기성 권력과 짬짜미가 가능한 제도이며 개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문제는 협회 추천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임원진이 아니라 해도 협회에 대해 심리적 귀속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세 번째 좀 더 특수한 문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비판의 대상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엉터리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극평론가협회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추천할 만한 주요 활동 평론가는 대부분 15명 내외의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 추천제도에서는 예술위의 공적인 심의 제도에서 이들이 모두 제외된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는가? 무책임과 어리석음의 극치다.

현재 제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여파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은 예술위가 내놓은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반지성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 각해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기계적이고 산술적이어서 문제 제기의 소지가 적어보이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실행의 역사가 예술위 시스템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공정성은 공정성이 아니다. 공정성은 책임 회피 속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열린 논의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2005년, 미래지향적인 예술 지원 제도의 정립을 위한 예술가들의 염원을 모아 만든 조직이었던 예술위가 설립된 후 12년의 기간 동안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예술위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법적 지위와 권한을 정비해왔다면 예술위는 한국 예술의 지원 기관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외압 속에 예술위는 정반대로 추락과 굴욕의 역사를 겪었다.

예술위가 검열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쫓겨난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사무처도, 예술 위 위원들도 아니고 바로 예술인들과 국민들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이 지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술 지원 제도의 공공성 유지에 대해 책임지지 못했다는 인식이어야 할 것이다. 예술위가 탄생한 이래 우리는 예술위가 거저 생긴 기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없이 예술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부록] 역대 예술위 위원 명단

1기 위원회 (임명: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임기 3년)

김병익(위원장, 문학)

김현자(무용)

김정현(시각예술)

박종관(지역문화, 연극)

전효관(다원예술)

한명희(전통예술)

김언호(출판)

박신의(예술경영)

심재찬(연극)

정완규(음악)

2기 위원회 (임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9.18.~2010.9.)

유진룡(52·을지대 여가디자인학과 교수·사진) 전 문화부 차관,

오광수(70)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복희(60) 한양대 예술학부장·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치수(68) 이화여대 불문학과 명예교수

백병동(72)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신달자(65)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정중현(62)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

조운조(63)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최정일(53)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최상윤(68) 동아대 명예교수

3기 위원회(11명) (임명: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기:2010.11.4.~2012.11.3.)

김주영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소설가)

김희근 코리아나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겸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은실(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송혜진(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왕치선(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위원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

이문섭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성훈 변호사

최남인 대전오페라단 단장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4기 위원회 (임명: 최광식 문체부 장관, 임기: 2012.12.5.~2014.12.4.)

신규로 임명된 위원(10명)

김영철 강원민방 대표이사,

김희정 상명대 음악대학 교수,

노재현 중앙일보사 논설위원 겸 문화전문기자,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철 신성대 학사지원부 음악교수 겸 충청오페라단 단장,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겸 삼일로 창고극장 대표,

최동호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시인,

최상화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원장.

연임: 3기 위원 박은실(추계예술대 교수) 1년간 연임 임명 (임기: 2012.12.4.~2013.12.3.)

이후 추가된 위원(임명: 유진룡 장관)

김운미 한양대 예술학부 교수, 무용 (임기: 2013.11.15.~2015.11.14.)

5기 위원회 (임명: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 2015.2.2.~2017.2.1.)

신규 6명

김규태 목원대 작곡·재즈학부 교수,

김태익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태철 청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김혜선 순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정희 소설가,

정연심 홍익대 예술학과 교수

1년 연임

박병원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정대경 한국소극장연합회이사장

기존 위원

- 권영빈 위원장 (임기: 2012.3.12.~ 2015.3.11.(3년))

- 김운미 위원 (임기: 2013.11.15.~2015.11.14.(2년))

추가 신임 위원 2016 3.4.~2018.3.3.

구자홍(71) 안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의숙(64)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

조현재(56) 동양대 석좌교수

박병원(64·국민행복기금이사장) 위원은 연임돼 2017년 3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 제2절 |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이진아\*

## 1. 불신의 시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2018년 5월 8일 종합 발표로 마무리되면서, 검열 기관이 되어버렸던 국공립기관 및 기관장의 사과가 잇따랐다. 2018년 4월 4일에는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sup>1)</sup> 5월 14일에는 이성열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였다.<sup>2)</sup> 5월 16일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 문화정책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에 앞서 “국가가 지원 배제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였다.<sup>3)</sup> 5월 17일에는 최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중추기관의 책임을 저버리고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라는 참담한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현장 예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였다.<sup>4)</sup> 5월 23일에는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우리 재단은 특정성향 단체와 개인 지원 배제를 위해 심사결과 지체와 해당 사업 폐지, 대체사업으로 집행 실행한 중차대한 잘못이 있다”며 “예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저항은커녕 그에 순응하고 내면화

\* 연극평론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 1) 「‘대국민 사과’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조사 계속”, 〈오마이뉴스〉, 2018. 4. 5.,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21375](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421375), 2018. 6. 15.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 국립극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977, 2018. 5. 14. <http://www.ntck.or.kr/ko/content/board/notice/41374/form?>, 2018. 6. 15.
- 3)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식 사과... ‘사람 중심 문화’ 새 비전», 〈경향신문〉, 2018. 5. 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62142005&code=96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62142005&code=960100), 2018. 6. 15.
- 4) 「예술위 ‘블랙리스트’ 사과했지만... 예술인들 ‘짜늘’», 〈한겨레〉, 2018. 5. 17.,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45109.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45109.html), 2018. 6. 15.

시킨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하였다.<sup>5)</sup> 더불어 위의 기관들은 조사위의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잇단 사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물론 대한출판문화협회처럼 도종환 장관의 사과 발표 이튿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에 대한 출협의 입장>을 게시하고 “(도종환 장관이) 공식 사과의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단체도 있었다.<sup>6)</sup> 그러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들 기관의 사과문에는 사과의 진정성도, 처벌과 징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성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쇄신 의지도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5월 17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국민 사과 발표장에서는 “사과 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사과문을 읽는 중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직접 관여한 이○○ 예술위 사무처장의 사퇴 없는 예술위의 사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거센 항의도 있었는데, 이에 다음날 사표가 제출되어 24일 수리되기도 하였다.

예술인들의 분노는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로도 이어졌다. 이미 2017년 9월 18일 조사위의 제1차 경과보고 이후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 의하여 사퇴 요구를 받았던 정○○ 한국연극협회 이사장(2014~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역임)은 2018년 5월 8일 종합 발표 후 연극계로부터 더욱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sup>7)</sup> 이미 사퇴한 주요 국공립기관장들에 대한 예술인들의 고소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는 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이 발표되면 수사 의뢰 대상자나 징계 대상자가 구체화될 것이고 법적 책임을 지는 이들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8)</sup>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순응 통렬히 반성」, <연합뉴스>, 2018. 5. 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04840005.HTML?input=1195m>, 2018. 6. 15.

6)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에 대한 출협의 입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73, 2018. 5. 17.,

[http://member.kpa21.or.kr/kpa\\_bbs/%eb%8f%84%ec%a2%85%ed%99%98-%eb%ac%b8%ec%b2%b4%eb%b6%80-%ec%9e%a5%ea%b4%80%ec%9d%98-%eb%b8%94%eb%9e%99%eb%a6%ac%ec%8a%a4%ed%8a%b8-%ec%82%ac%ed%83%9c-%ec%82%ac%ea%b3%bc%ec%97%90-%eb%8c%80%ed%95%9c/](http://member.kpa21.or.kr/kpa_bbs/%eb%8f%84%ec%a2%85%ed%99%98-%eb%ac%b8%ec%b2%b4%eb%b6%80-%ec%9e%a5%ea%b4%80%ec%9d%98-%eb%b8%94%eb%9e%99%eb%a6%ac%ec%8a%a4%ed%8a%b8-%ec%82%ac%ed%83%9c-%ec%82%ac%ea%b3%bc%ec%97%90-%eb%8c%80%ed%95%9c/), 2018. 6. 15.

7)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5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대경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회의(이하 블랙타파)’ 역시 5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 정대경 이사장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자진 사퇴나 이사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는데, 정대경 이사장의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7월 17일 블랙타파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8)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문체부는 조사위에서 권고한 징계 104명, 수사의뢰 26명에 대해 자체 법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회 정의를 가시화하는 일이다. 정의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사회는 정의를 감각할 수 없다. 고소와 고발 역시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 잘못에 대하여는 합당한 처벌을 하고 피해에 대하여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이 사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하여 훼손된 정의가 모두 회복될 수 있을까. ‘사과 받지 않겠다’는 예술인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화해와 용서가 시작될까.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무너진 기관에 대한 신뢰와 예술계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신뢰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 법적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십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블랙리스트와 같은 저열한 범죄가 다시, 그리고 그리도 간단히 가능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토양은 무엇이었을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그리하여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권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오랜 시간 쌓여온 예술계 내부의 여러 문제들과 적폐가 뒤엉켜 제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현장 예술가들의 같은 듯 서로 다른 입장의 분노,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예술행정가들의 자괴감, 기관으로 초빙되어 활동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기변명과 자기기만이 뒤엉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제 의미를 잃는 것을 본다. 제 혀는 이미 오래 전 기능을 잃었는데 제 것도 아닌 말을 골라 휘두르는 상황도 본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예술계 안팎의 반응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이들의 반응을 다시 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엉킨 것에 진상 조사 이후의 우리의 과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위법적 행위 이면의 비가시적 문제와 그것의 의미를 들

를 검토 결과 12명만 주의 처분하고 7명(문체부 5명, 예술위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의’는 공무원법에 의한 정식 징계가 아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문체부 내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조사위는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0명’ ‘셀프면책 선언’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또 서울연극협회, 무용희망연대오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극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도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문체부와 도종환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2018년 9월 28일 현재 문체부는 ‘관련자 전원 면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다보려는 시도이다.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그 경계에 나 자신도 잠재적 방조자이자 무지의 동조자로서 서 있음을 전제로 시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검열과 배제가 현장에서 점차 강하게 체감되던 2014년 하반기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마무리된 현재까지의 시간 동안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과 대응을 돌이켜 보려 한다.

지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사건은 선후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선택되고 다루어 질 것이다. 주관적으로 취한 몇몇 장면들을 검토하고 서로 대조하며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를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신뢰 회복’ ‘화해와 치유’의 출발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하는 것은 본 글의 능력을 넘는 일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정도가 본 글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 2. 무너진 신뢰

### 가. 예술인들의 분노와 슬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몸통이 청와대이며 그 뜻에 따라 문체부가 이 모든 실행을 총괄하면서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등에 지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실행과 경과 보고를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상급기관보다는 일차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국립극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향한다. 이는 이들 기관 실무자들의 현장예술인들과의 접촉이 상급 기관인 문체부보다 많고 그간의 관계도 긴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의 긴밀함은 단순히 직접 접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 구축된 신뢰 관계와 상호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배신감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실행 초기, 지원 심의 과정에서 기관의 실무자들이 예술가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산 미비’ ‘서류 미비’ ‘중복 수혜’ 등의 각종 이유를 고안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시 참고해야 할 의견으로 둔갑하여 제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그들의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믿고 진행하였던 것도 그간 구축된 신뢰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랜 신뢰를 일방적으로 깨고, 예술가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다.

2015년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지원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던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기획자들은 조사위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우리는 2015년 봄을 기억합니다.

프린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분야 기금에서 탈락되고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프린지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보다 하면서 씩씩하게 웃었던 순간을. 긴 기간 서로 믿어왔던 정책의 파트너로부터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던 허탈했던 순간을. (중략)

지금 블랙리스트 진상보고서를 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했던 지난 날이 다른 의미로 환기되고 있습니다. 검열의 지시와 배제의 실행이 담겨있는 그 증언의 보고서 사이로 예술가들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혜를 받지 못한 자의 박탈감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프린지가 느꼈던 고립감과 허탈함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프린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념이, 정권이, 성격이, 다르더라도 예술을 향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프린지의 힘입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소통하고 논쟁하는 것이 프린지의 저력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고 투명하지 않았던 정책실행자의 태도는 프린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료 예술가들에게 축하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지만 누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16년간 함께해온 정책파트너가 전문가들을 통해 판단한 최근의 경향과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해 프린지는 그간 잘 소통해왔던 소중한 상대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융성을 부르짖던 예술기관이자, 바로 국가였습니다.<sup>9)</sup> (밑줄 필자)

오성화 대표를 비롯한 프린지 페스티벌의 기획자들이 느낀 허탈감과 분노는 정치권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쌓아왔던 예술행정기관 실무자와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에서 온 배신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고 장르 지원 분야로 ‘다원예술’이 새로 만들어질 때부터 이 분야 예술 정책과 장르 개념 규정에 많은 참여를 해 왔다. 당시,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실험적 경향들, 즉 탈장르적이고 복합장르적인 예술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다원예술’ 개념은 ‘장르가 아닌 것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르 개념’이라는 모순으로 인하여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서울프린지네트

9)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페이스북 게시물, 2018. 5. 17.,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75402625823393&id=310430935653912](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75402625823393&id=310430935653912), 2018. 5. 25.

워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고안해 낸 이 개념어를 오늘날과 같은 위상으로 일반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고 도우며 이 개념어를 현장에 유통시켰고, 현장의 작업 경향과 요구를 다시 정책 언어로 바꾸어 예술위에 전달하였다. 민간이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이 민간을 전인하는 선순환이 그 당시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하고 예술정책과 예술작업이 서로를 믿고 지지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체험으로 갖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최근까지도 놓지 않으려 했을 터였다.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협의해 온 정책 파트너가 그간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일방적으로 배신하고 있었으며 기만적인 태도를 이를 숨겨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데에서 온 충격과 분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예술가들이 믿고 지켜왔던 신뢰는 단순히 추상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기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였다. 그 사람들이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 파트너라고 믿은 것에서 온 신뢰였다. 그들이 예술계 일원으로서 예술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예술가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믿은 데에서 오는 신뢰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신뢰를 큰 상처와 배신감으로 예술계에 돌려준 사건이다.

극작가 고연옥은 사과 릴레이가 이어지던 5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블랙리스트 관련한 국립극단의 사과문이 대단히 미온적이며 그저 형식에 그쳤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립극단이 연극 <개구리> 이후 문체부로부터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조치’의 처분을 받은 이후 기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 대해 소재의 제한을 시도한 것이 단순히 당시 공연기획팀장의 사소한 말실수가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명백한 검열행위인 것입니다. (중략) 국립극단의 사과문은 ‘큰 과오’는 인정하면서 그 과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블랙리스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방식도 현 예술감독님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개인적 사과’에 그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와 검열을 시도했던 당사자들은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극장으로서 국립극단에 대해 우리는 같은 동료 연극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문체부 산하 어느 기관보다도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며 그에 따른 청산과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청산과 개혁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sup>10)</sup> (밀줄 필자)



위 글에서 고연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검열의 내면화 문제이며, 이차적으로는 동료로서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대한 문제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립극장 산하 예술단체들이 해체되면서 국립극단은 소속 배우와 무대 스태프 등 단원을 모두 해산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서계동에 자리 잡았다. 기획인력 중심의 제작극장으로서 국립극단이 레퍼토리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연극인 동료들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원기관과 제작극장의 경계에 위치했던 국립극단은 현장의 요구와 국립극단의 미션을 조정해나갔다. 배우와 무대 창작 스태프를 갖고 있지 않은 국립극단이기에 동료 연극인들과의 교감과 협조 없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새로 기획할 수도 없었고 제작할 수도 없었다. 국립극단이 필요로 하는 연출가와 배우와 무대예술팀은 모두 ‘연극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없이는 그 어떤 비전도 세울 수 없었으며 그 어떤 미션도 수행할 수 없었다.

국립극단은 자신의 장단기 계획을 여러 동료 연극인들, 여러 세대의 연극인들과 소통하며 구체화해 나갔다. 서계동의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국립극단은 빠른 시간 안에 연극계 깊숙이 자리 잡았다. 대학로 연극계와 국립극단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장충동 시절과는 다른 행보였고 다른 위상이었다. 국립극단은 연극계의 수많은 극단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국립극단은 기성 연극인들의 플랫폼이었고 신진연극인들의 인큐베이터였다. 지원기관이자 제작극단의 경계에서 그들은 연극계 허브가 되기를 지향하였고 그렇게 네트워킹했다. 때문에 연극계는 국립극단의 기획 실무자들을 ‘동료로서’ 믿고 신뢰했다. 동료의식, 동료와의 협업은 국립극단이 자신의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동력’이었다. 국립극단이 잃은 것은 바로 그 ‘동료의식’이다.

기획자 임인자는 5월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10) 고연옥, 페이스북 게시물, 2018. 5. 2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22266974500049&id=10000150292593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22266974500049&id=100001502925934), 2016. 5.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검열이 행해지고, 예술인교육사업 등이 행해지던 시기 중에는 고 김OO 배우님이 돌아가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술인복지재단에 기재부, 문체부 등에서 사업 예산을 잘 내려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당시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을 축소하고, 사업에 대한 공지 등을 지연하면서, 예술가들의 죽음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바로 그 기관에서 말입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5년 10월 젊은 연극인들의 공연인 '팝업씨어터'에서 세월호를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의 공연방해가 버젓이 일어나고, 그에 저항하며 수많은 연극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행위방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을 경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sup>11)</sup> (밑줄 필자)

임인자는 예술가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위해 행동하기는커녕 제 자신이 지켜야 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한 예술인의 죽음을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한다.<sup>12)</sup>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저버렸을 뿐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배역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의 일은 아니었다. 문체부를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관련 기관이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었다. 그들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진흥' 대신 '검열'했고 '지원' 대신 '배제'하였다.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고 향유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예술가 대신 정권을 위한 나팔수를 키웠고 예술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자신들이 설립된 목적을 제 손으로 지웠으며 그 목적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의 모든 문화예술기관,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국립극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출판진흥원 등은 모두 지난 정권 동안 '예술검열기관'이었다.

지난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검열기관

11) 임인자, 페이스북 게시물, 2018. 5. 2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18823128164665&id=10000110984466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18823128164665&id=100001109844663), 2018. 5. 25.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좌편향 예술가 배제를 위한 정권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축소·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복지 사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일을 말한다.

이 되어버렸던 가해자나 검열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나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사과’ ‘사과 받는 이를 고려한 사과’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즉 그것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관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가 아닌, 기관 공무원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와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에 반발부터 하는 문체부 및 산하 기관들을 보면,<sup>13)</sup> ‘과거에 대한 진실한 성찰’은 상당히 요원한 듯하다.

#### 나. 예술행정가들의 사과와 변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새 예술 정책이 발표되고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문에 대한 예술계의 항의가 이어졌던 시기, 5월 23일자로 68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연명한 성명서가 24일 아르코 혁신 TF의 혁신 방안 공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배포되었다. “우리 기관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반헌법적 국가범죄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았고, 어떤 식의 사과로도 부족할 것임을 알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예술위 집행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적 인식도 없고 검열기관이 되어버렸던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안도 없는 사과문을 발표하여 예술계의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한 예술위 직원으로서의 입장을 담고 있었다. 같은 글에서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당사자인 문체부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고, 우리는 자율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못하며, 여전히 그들의 공식, 비공식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는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듯 몰아붙이는 문체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예정입니까?<sup>14)</sup>

지난 정권동안 예술위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자신들을 검열 도구로 만들었던 문체부가, 이제 와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술위에 전가하려는 듯 “기관의 위상

1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현직 공무원 등 130명 무더기 수사의뢰 징계 권고 논란」, 〈동아일보〉, 2018. 6. 28., <http://news.donga.com/3/all/20180628/90812625/1>, 2018. 6. 29.

14) 2018. 5. 23.

은 축소되며, 문체부와 타 기관이 우리(예술위)의 역할을 나눠 가지게 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체부의 입장에 대하여 아무 의견도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예술위 위원회, 예술위 간부, 선배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비교적 조용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립극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의 사과문에는 유독 예술계의 항의와 분노가 거세었다. 산하 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던 문체부보다는 이들 기관이, 현장 예술가들에게는 블랙리스트의 직접적 실행자로서 체감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위 직원들 역시 이 같은 점을 알기에 예술위 사과문에 쏟아진 비판을 ‘가해자로서’ 뼈아프게 자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권력으로 자신들을 강제했던, 그리하여 이 사태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한 문체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듯하다. 때문에 자신들 역시 권력의 강압에 눌렸던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싶어 한다.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음악 칼럼니스트 노승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산하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벌이 필요하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키고 실행을 강요한 문체부에 대해서 더욱 혹독해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에 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빚어졌다. ‘새 예술정책과 문화비전 2030’에 참여했던 민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 문제를 의식하고 정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문체부 기능 축소와 일부 부서 폐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발표된 새 예술정책 발표 안에는 문체부 자체 개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혁신 내용만으로 채워져 민간 위원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마치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 소재를 산하기관의 부실함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관과 현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방패삼아 이 순간만 모면하고 다시 구태의연한 예술 간섭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문체부라는 ‘시스템’이 이처럼 변할 생각 없이 유지부동이기 때문이다.<sup>15)</sup> (밀줄 필자)

성명서에 연명한 예술위 직원들은, 관료중심적이고 수직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녔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2005년 다수의 민간예술인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적 결정에 참여하는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을 때 가졌던 위상을 되찾고 싶을 것이다. 그때 구축했던 현장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것이다.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예술행정가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졌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15) 노승림, 「노승림의 인사이드 아웃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결국 실무자 탓하나」, <국민일보>, 2018. 5. 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622&code=13140000&cp=mv>, 2018. 6. 15.

예술위는 설립 초기 실질적으로 현장 예술가들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다. 예술인과의 소통과 접촉이 긴밀했고, 민간의 정책 참여도 활발했다. 이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에 장르별, 직무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구조적으로 예술위의 민간 참여가 확대된 까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환 초기(김병익 제1대 위원장(2005.08~2007. 07)과 김정현 제2대위원장(2007.09~2008.12))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현장 예술인들이 예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예술위 직원과 토론하고 협조하는 구조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 협치 속에서 현장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현장에 대한 인식이 서로 성숙하여 갔다. 기관의 예술행정 담당자들이 갖는 전문성도 제고되었고 이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두터워졌다. 공공기관의 포럼이나 토론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초대되는 것 못지않게 현장의 포럼이나 토론회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참여가 독려되었고 초대되었다. 실질적 동반 관계가 생성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술위원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때문에 예술위의 비전과 미션이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어 간 지난 9년간의 책임을 모두 예술위 스스로의 문제로 돌리는 듯한 문체부의 새 정책 안이 발표된 것이 예술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 당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 장 OO은 심문 말미에 김기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화제를 모았는데, 이 낭독문에서 그는 “예술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창작지원부장 자리는 저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으나 배제 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고통이자 슬픔의 자리로 변했다.” “2015년 지원배제 리스트는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명령으로, 민심에 반하는 명령이었다.” “실행하기 너무 힘들었고 큰 고통이었다”고 토로하였다.<sup>16)</sup>

그런데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해 하는 것은 비단 예술위 직원만은 아닌 듯하다. 문체부 공무원 뿐 아니라 고위직 간부들도 모두 ‘피해자론’을 들고 나온다.

16) 「김기춘 만난 예술인 직원 “어처구니없는 지시 내린 당신, 만나고 싶었다”」, 〈한겨레〉, 2017. 5.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499.html#csidxd981010b0904a85b9314359cff7dc9d](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499.html#csidxd981010b0904a85b9314359cff7dc9d), 2018. 6. 22.

블랙리스트 관련해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고해성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을 지낸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라는 지시에 많이 힘들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A 주 영국 한국문화원장은 “청와대에 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직에 지원했는데, 임명 5일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을 지낸 장OO 문화누리부장은 “산하기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00보를 가라는 명령에 70, 50, 30보로 줄여서 가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가담 여부나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진술은 모두가 동일하다.<sup>17)</sup> (밀줄 필자)

김OO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2016년 12월18일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 및 이하 차관들에게 ‘간곡한 건의서’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썼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가동 물증이 보도를 통해 밝혀진 후 모든 직원이 상부의 ‘은폐 방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김 전 과장은 건의문에 “문체부에는 어느 누구 하나 고통 받지 않는 직원이 없었다”며 “OOO 서기관(블랙리스트 명단 관리 담당자)은 자괴감을 호소했다. 눈 뜨는 것조차 무섭다고 한다. 업무를 인계받은 사무관은 사실에 맞지 않는 대응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통 받는 하루 보낸다”고 썼다.

김 전 과장은 “대외적으로 사실이 밝혀지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문체부 예술 정책의 앞날이 얼마나 무너질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2015년 부당한 지시를 듣고 이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 OO 예술진흥본부장과 장OO 창작지원부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책임을 다 떠안았다. 문체부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sup>18)</sup> (밀줄 필자)

그런데 위의 기사에 의하면, 그들의 ‘고통’은 이 일이 ‘사실에 맞지 않는’ ‘조작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불법적 일임에도 이를 해야한다는 점,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이것이 불법이며, ‘조직 밖의 다른 이들이 알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OO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조윤선 당시 장관에게 건의서를 썼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 다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은폐 방침 때문에 직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신이 호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위증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이유는 ‘조직이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감’ 혹은 ‘조윤선 장관이 조직을 보호하는

17) 김일송, 「「문화현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겨레〉, 2017. 6. 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8029.html#csidx44dc6472a292db3ae097dd9936b6920>, 2018. 6. 16.

18) 「문체부 간부는 조윤선에게 ‘간곡한 건의서’를 올렸다», 〈미디어오늘〉, 2017.4.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95#csidx827db457fd0e29c8ebd429762a270fc>, 2018. 6. 16.

데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위법 부당한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행한 이유는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간에 폭로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개념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행정적 절차의 하나로, 해야 하는 여러 업무 중 내게 '주어진 업무'로, '당시의 법과 규칙에 따라' '사유 없이' '무비판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 즉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은 매 순간 타협하고 매 순간 방어했다. 그들은 그 타협의 결과로 '위법'을 '선택'했다. 그들은 매순간 계산하였고 그 계산의 결과로 스스로 '위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아무 인지 없이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다. 판단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꺼이 위법을 선택한 공무원이다.

그들은 그 선택의 대가로 자신의 '일상을 보장' 받았고, 그 선택의 책임으로부터 '조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국민보다 조직을 믿었고 조직을 선택했다.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공무원의 책무보다는,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분으로서의 몫이 계산 결과 더 컸던 것이다. 즉 공적 개인보다는 사적 개인의 몫이 그 계산 결과 더 컸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였고 스스로를 고립된 개인으로 만들었다.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으로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잊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적으로 이해했고 공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지난 시간 동안 그 관계를, 자신과 연결된 공동체를, 자신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그 의무와 의미를 잊지 않았던 유일한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직원이었던 김진이다. 그는 '팝업 씨어터 사태' 당시 공연예술센터 내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고발하면서 '검열의 존재'를 증언했다. 그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공연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그 이유로 거짓을 꾸며 말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유일한 이다.

팝업 씨어터 사태 당시,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의 주관 행사였던 SPAF(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공연예술센터 운영 공간들의 예술적 활용도를 높이며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팝업 씨어터'라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팝업 씨어터는 "어떤 장르, 어떤 컨셉도 용서된다. 카페, 로비, 공원 등 둔

감해진 일상적 장소를 모두의 놀이터로 만드는 ‘팝업씨어터’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운 행사였다. 대학로예술극장 건물 1층에 위치한 ‘씨어터 카페’에서, 마치 웹 사이트의 팝업 창처럼, 극장 관객이 모인 공간에서의 공연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돌발적으로 15-20분 정도의 짧은 공연이 진행되는 콘셉트의 기획이었다.

당시 ‘팝업 씨어터’에는 3명의 젊은 연출가, 김정, 송정안, 윤혜숙의 작업이 예정되었는데, 그 중 첫 공연이 〈이 아이〉(조셉 폼무라 작, 김정 연출)였다. 조셉 폼무라의 원작 희곡은 죽은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러 시체 안치소를 방문한 두 명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연출가는 이 작품에 죽은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설정과 어머니가 아들임을 확인하는 단서로 아들이 입은 옷의 상표 ‘노스페이스’를 언급하는 장면을 넣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공연을 방해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주최 측은 이러한 ‘자체 검열에 의한 공연 중단의 이유’를 숨기고, ‘공연이 팝업 씨어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카페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도록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실무자였던 000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위배되는 이러한 명령도, 이를 감추고 예술가들에게 거짓 설명을 해야 하는 지시도 모두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 그는 거짓된 설명으로 검열을 은밀히 작동시키는 대신 연극계와 관객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알렸다. ‘조직’과 ‘상관의 지시’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이로서 법과 상식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따른 것이다.

저에게 내려왔던 일들 그리고 이런 지시와 그 공연 방해 자체가 부당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연예술센터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모두 공공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현장에서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연을 관객들과 만나지 못 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sup>19)</sup> (밀출 필자)

그녀는 내부고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를 떠나야 했으며, 현재 복직도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1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수학여행이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이야기 아냐?”」(방송일 2015. 11. 3. 19:05), 〈노컷 뉴스〉, 2015. 11. 4., <http://www.nocutnews.co.kr/news/4498609>, 2018. 06. 16.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다.

이렇게 볼 때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 즉 조직 보신주의와 파벌주의에 빠져,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이에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상급자의 지시와 조직의 안위를 더 중시 여기는 우리 공직 사회의 오랜 악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즉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지난 수년간 공무원들이, 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감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이 정해 놓은, 예술지원기관과 직원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 즉 ‘공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임무보다 ‘조직 보존’ ‘자리 보존’이라는 사적인 이익, 사적으로 상관에 의해 지시된 업무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임무’보다 ‘사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행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책임 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사회의 토양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불행히도 예술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여러 국공립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보여준 것은 끝없는 자기변명과 방어적 태도이다. 그리하여 예술위 직원 뿐 아니라 문체부 고위직까지도 모두 ‘피해자론’을 들고 나온다. 반성이나 성찰보다 ‘개인적 고통’이니 ‘인간적 고백’이니를 토로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러한 ‘피해자론’에 우리 사회는 ‘진정한 참회록’이니 ‘절절한 자기 고백’이니 하는 평가를 내리며 반응한다. 그들도, 우리 모두도 진정 반성과 성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이것이 제도 개선만으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반성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인지하고, 그렇게 검열하고 배제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기하며 그들 개개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반성은 반성이 될 수 없다. 피해자의 눈을 마주하고 하는 반성만이 진정한 반성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하는 반성만이 진정한 반성이다. 반성 없는 쇄신과 반성 없는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반성 없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 다. 민간 전문가들의 자기기만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에는 예술계의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기관장, 예술감독, 예술위 위원, 각종 지원사업의 심의위원 등의 직을 맡아 참여하기 마련이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기간 동안 이러한 직을 맡았던 민간 전문가들은 음으로 양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조하거나 협조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당시 이러한 직을 맡아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되었던 이들 중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반성하거나 사과한 민간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 대하여 ‘나름의 저항’을 했다고 항변한다. ‘부정’과 ‘자평’은 종종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모두 자신에 대한 방어의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는 종종 자기분열을 드러내기도 한다.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간 논박은, 예술계 인사들의 이 같은 자기분열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다. ‘작가의 방 사태’는 ‘팝업 씨어터 사태’와 유사하게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검열 내면화’와 관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2017년 3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국립극단도 검열했다」…“‘개구리’ 같은 작품 쓰지 말라” 강요(손준현 기자)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립극단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사과문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를 발표한다.<sup>20)</sup> 김윤철 예술감독의 이름으로 게시된 이 글에서 그는 한겨레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국립극단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는 해당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립극단이 권력기관의 검열을 두려워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립극단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여도 국립극단 또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지만 국공립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정도는 함께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과문 발표 후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며 토론하기를 위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회의’와 ‘계간 『연극평론』’이 공동 제안하여 국립극단과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sup>21)</sup> ‘작가의 방 사태’ 역시

20)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립극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813, 2017. 3. 17., <http://www.ntck.or.kr/ko/content/board/notice/40807/form?q.searchType=title&q.searchText=%EC%82%AC%EA%B3%BC&>, 2018. 6. 15.

21) 일시 : 2017년 5월 2일 18시, 장소: 마로니에공원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블랙리스트와 검열의 문제인 까닭에 토론은 자연스레 작가의 방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예술계 검열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은 (국립단체로서의 위치 등을 생각할 때, 또 그러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생각할 때) “국론을 분열하는 작품은 피하고 싶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론을 불러 일으켰다. 연출가 김재엽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반지성적 태도”이며,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연극평론가 김소연은 “우리가 회피해야 하는 국론 분열시키는 연극이라는 건 어떤 연극인가”라고 반문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할 터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국론분열’이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김윤철 예술감독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평가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평적 안목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론 분열 그 얘기는, 정치적 이슈가 예술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연극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씀입니다.<sup>22)</sup> (밀출 필자)

그런데 ‘비평적 안목’ ‘비평적 기준’은 비단 국립극단 예술 감독 뿐 아니라 각종 심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후에 자신들의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를 부정하면서 특정 작품이나 개인을 탈락 시킨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다.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미학적 기준’에 따라 심의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단체와 개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전문가로서의 비평적 기준에 따른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는 이러한 ‘믿음’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검열과 배제가 노골화되어 갔던, 그리하여 예술계 모두가 이를 체감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문화기관직원들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 놓기 시작하였던 시기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도 적용된다. 심의위원으로서, 단체장으로서, 국가행사의 예술적 책임자로서 행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일이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도 당시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로서 일관되게 제시된다.

그들의 ‘비평적 기준’은 블랙리스트 작동을 위해 예술위 직원들이 부당한 이유를 내세운 경우, 예컨대 ‘정산 미비’나 ‘서류 누락’ 등과 같이 자료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22) 김나뵈 정리,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 -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호. 136쪽.

않고 주장한 경우나, ‘과거 지원 내역 유무’ ‘역사가 오래된 단체 우선 지원’ ‘사전 공지된 것과는 달리 지원 범위 축소’ 등과 같이 평소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지원 불가 사유로 제시되고 심의위원이 이를 별 이견 없이 수용한 경우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도 고수된다. 직원들이 제시한 그 모든 다양한 이유는 오직 하나의 이유 즉, ‘정권의 지시로 인하여 지원 불가함’이었고 실제로 ‘심의위원들은 이를 꽤 잘 알아들’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도, 심지어 그 모든 일이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지금도, 오로지 ‘자신의 비평적 안목’이 기준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을 거부하는 미계몽의 야만이다. 설사 당시의 자신의 행동이 ‘비평적 기준’이었다고 하여도 오늘날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이 정권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돕고 방조하는 결과였음을 이제 알았다면 그들은 ‘전문가로서’ ‘비평적 안목을 가진 이로서’ 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성찰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가’라는 타이틀과 ‘비평적 안목’이라는 잣대를 제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이러한 자기방어는 검열기간 중의 행동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며 정당한 임무를 수행해냈던 숭고한 일로 기억하려는 것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2016년 2월 『한국연극』과의 인터뷰에서 ‘문체부 간섭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던 김윤철 예술 감독은, 앞서 언급한 2017년 5월의 토론회에서는 문체부의 간섭과 검열을 시인한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내가 순교할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 이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문체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설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이윤택도 했고, 고선웅도 했고, 김영하도 했고, 다 했잖아요”라고 말한다.<sup>23)</sup> 그러나 정권은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소통은 없었으며 지시와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가끔 ‘과도한 블랙리스트 적용이 정부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보고에 응답하여 ‘양해’ 정도를 해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문체부가, 예술위가 그저 자신들의 설득의 대상일 뿐이며 실제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기기만이다. 제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과 ‘비평적 안목’이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도 ‘비평적 안목’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정권의 폭압과 그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이다.

23) 김나뵈 정리,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 -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 2017. 여름호. 136~137쪽.

사실 이러한 자기기만적 사고는 우리 근현대연극사 안에서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제 말 친일연극시대를 대형 연극을 국가 지원을 받으며 할 수 있었던, 그리하여 연극이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대로 회상하거나, 5·10 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총선거 선전문화계몽대’를 ‘브·나로드’ 운동의 성격으로 미화하는 일이 그러하다. 서구의 실험극, 아방가르드극의 형식 미학은 추구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작업이 태어나게 된 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그러한 형식 미학을 통해 그 사회에서 행했던 정치사회적 역할은 제거해 왔던, 그리하여 미학적 혁명을 사회와 역사로부터 분리한 채 아카데미즘의 추상성 속에 가두어 왔던 우리 현대연극사도 상기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 중 민간 전문가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자기폭로되는 몇 순간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2016년 5월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된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의 <민중의 적>(헨릭 입센 작, 오스터마이어 연출)이 내한공연을 왔을 때다. 이 연극은 공연 후반 스톡만 박사의 시의회 연설 장면에서 객석의 조명을 모두 켜고 관객들과 즉석에서 토론하도록 연출되었다. 헨릭 입센이 제시한 ‘다수는 언제나 옳은가’, ‘직접민주주의는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현실 속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샤우뷔네의 내한 공연에는 많은 연극인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국론을 분열시키는 공연’에 부정적인 입장인 국립극단의 예술감독과 기획팀도 공연을 보기 위하여 극장을 방문했다. 김윤철 예술감독은 이 작품을 프랑스에서 이미 보았으며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관객도 이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극장과 페스티벌 등에 추천해 왔다고 말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예의 그 토론 장면에 다다랐을 때 객석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관객은 그 자리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부당한 횡포와 세월호의 슬픔과 해결되지 않은 4대강 문제와 당시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토론했다. 객석의 뜨거운 열기에 스톡만 역할을 맡은 배우는 매우 놀라워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장 거리로 나가 정부와 싸워야겠네요!”

2016년 가을 SPAF(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개막작으로 폴란드 브로츠와프 폴스키 극단의 <우드커터>(토마스 베른하르트 원작, 크리스티앙 루파 연출)를 초청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었는데, 크리스티앙 루파는 이 공연을 통하여 폴란드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위에 간여하는 예술가들의 위선과 반예술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공연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시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무대에서 풍자되고 비판되는 예술위의 무능과 위선, 그에 동조하고 협조하면서 예술가연 하는

예술가들의 기만적 행태는 그대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검열기관이 되어버린 예술위 주최의 행사였기에, 작품의 의미를 홍보하고 크리스티앙 루파의 세계적 위상과 그의 지성적 작업을 칭찬하는, 예술위에서 발간한 공연 프로그램에 수록된 글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의 자기 폭로극, 자기 풍자극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OO 공연예술센터 대표는, 크리스티앙 루파가 서울 공연의 객석 반응에 매우 만족했다면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무대 메커니즘은 물론 관객들의 열정에 거듭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의 이런 반응은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하면서도 드문 것으로 안다”<sup>24)</sup>며 기쁨을 포함으로써 상황의 아이러니를 완성했다.

그런데 당시 크리스티앙 루파는 폴란드 문화부로부터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었다. 새로 들어선 정권과 문화부 장관이 사회비판적인 루파의 활동에 부당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루파는 유럽의 연극 동료들에게 이를 알리고 부당한 예술탄압에 저항하여 연대하고자 했다. 자신이 해외 투어를 가는 나라마다 무대 위에서 이를 알리고 연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폴란드 연극인들은 아르코 무대 위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일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두 번째 날 공연 직후 통역도 없이 무대에 오른 폴란드 스태프 하나가 영어로 우리 관객들에게 폴란드의 현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객석 뒤에서 SPAF 관계자들이 조금은 초조하고 조금은 망연한 얼굴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슬프고도 우스운 우리 현실이었다.

### 3. 왜곡된 제도

#### 가. 제도의 투명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기간 동안 정권은 예술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검열과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관계를 바꾸어나갔고 심의제도와 지원 사업을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은 크게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예술 진흥이 아닌 예술 검열이, 예술가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배제가 그들 기관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일례로, 2015년 7월 예술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책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배제 시도에 대하여 일부 책임심의위원이 반발하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칼럼, 이재훈(뉴시스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 2016. 10. 10., [https://blog.naver.com/jump\\_arko/220832546710](https://blog.naver.com/jump_arko/220832546710), 2018. 6. 16.

는 등 배제 계획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자 리스트에 의해서 1차로 걸러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심의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검열과 배제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 제도 개선이었다.

또, 정기공모를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할 경우 리스트에 있는 배제 대상자를 일일이 대조하여 배제하는 과정이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의기간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길어져 결과 발표의 지연, 사업 기간의 왜곡, 민원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기공모를 비롯한 공모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기획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술위 주도 하에 자체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정기공모를 통한 소액다건의 직접 지원이 지닌 한계를 검토했다든가 기획 사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예술지원의 효과성과 수월성에 있어 더 적절하다든가 하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검열과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외에도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리스트에 있어 검열과 배제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사업을 폐지 혹은 축소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의 비평적 관점에 의한 정성적 평가방식 대신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효과 등 계량적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지난 수년간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기 위하여 정책과 제도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변형되었다.<sup>25)</sup>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예술지원기관을 오로지 검열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 더도 덜도 아니었다.

이렇게 변형되고 왜곡된 제도나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은 조사위의 결과 보고에 따라, 또 각 기관의 자체 조사와 감사 등을 통하여 다시 제 목표에 맞도록 바로 잡고 원상복귀 될 것이다. 또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정책과 제도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쇄신안 제안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제도 개선만으로 다시 블랙리스트 이전으로 회복될까.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폭로되고,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송수근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sup>26)</sup>한 2017년 초, 예술위는 당해년도 정기공모를 진행 중이

25)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 5. 8., 68~75쪽.

26) 「[전문]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지원의 공정성 문제 야기…머리 숙여 사과”」, <경향신문>, 2017. 1. 23.,

었다. 지난 수년간 이미 심의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블랙리스트를 적용시켜온 예술위는 책임심의제도 폐지 이후 구성해 놓은 심의위원 풀을 새로 진행되는 정기공모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예술위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였다. 홈페이지에 2016년 12월 23일자로 게시된 ‘201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주요 개편 내용 중 이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예술계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받는 등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 후보군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sup>27)</sup>

이듬해인 2018년 정기공모에서도 심의제도 개편 문제는 다시 재론된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년의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였다는데,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를 유지하였으며 근원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 지난 해에도 이미 개편 내용에 있었던 ‘지원심의 음부즈만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이를 공지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공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편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전면 개편합니다.

#### 지원심의 음부즈만 제도 확대

2017년도에 신설되어 문예진흥기금사업에만 적용되었던 지원심의 음부즈만 제도를 2018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국고 수탁사업 및 타 기금사업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지원심의 음부즈만 제도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음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1405001&code=960100#csidxec65c93bd29c9c1b33cdc3c7e676efa](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1405001&code=960100#csidxec65c93bd29c9c1b33cdc3c7e676efa), 2018. 6. 22.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모사업 > 아르크 공모/결과 > 사업공모, 2016. 12. 23.

[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11&cid=475525&sf\\_icon\\_category=cw00000019](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11&cid=475525&sf_icon_category=cw00000019)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기구입니다.<sup>28)</sup>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의 정기공모사업 심의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직능별 협회, 관련 학회, 여타 예술계 단체 등에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예컨대 한국연출가협회에서 추천받은 자, 한국희곡작가협회에서 추천받은 자,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추천받은 자, 한국연극학회에서 추천받은 자 등으로 심의위원 풀을 꾸리겠다는 것이었다.

직능별 단체에 의뢰하여 각 분야 연극인들로 고르게 심의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은 얼핏 ‘심의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말하듯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에서 보듯, 현장의 민원에 대하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겠다는 태도도 보인다. 심의제도에 대한 어떤 잡음도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도 읽힌다.

사실 직능별 협회가 그 분야 예술가들을 대표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구시대적이다. 40대 중견예술인들만 해도 상당수가 이미 직능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협회에 가입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미온적이다. 이보다 더 젊은 세대의 협회에 대한 입장은 더욱 회의적이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오늘날 협회가 예술계의 무엇을 대표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점점 더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추천, 즉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한 후, 각 직능별 추천자군에서 1인씩을 선정하여 최종 심의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기계적이고 계량적 투명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해보겠다는 사고 외에는 별다른 정책적 철학도 예술적 의미도 읽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예술위의 이러한 태도는 그 스스로 자신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무화시키는 일이다. 계량적이고 기계적으로 확보하는 형식적 투명성으로 심의위원 선정에 쏟아질 지도 모를 비난이나 면해보자는 태도로는 그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절대로 다시 확보할 수 없다. 이것은 제 스스로 기관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모사업 > 아르코 공모/결과 > 사업공모, 2017. 12, 28.

[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3&cid=529197&sf\\_icon\\_category=cw00000019](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3&cid=529197&sf_icon_category=cw00000019)

의 존재 의미를 흔드는 것이며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심의위원 구성은 일차적으로 예술위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어떠한 인적 구성인가, 그들이 어떠한 예술관과 비평관을 지녔으며 세대 구성은 어떠한가가 선정 결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술위의 지향성과 해당 사업의 방향성을 현장에 제시한다. 직능별 추천, 협회 추천은 이 모두를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심의위원 구성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떤 심의 결과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뚜렷한 지향점과 분명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이라면 이에 대하여 예술 현장은 비평적, 미학적으로 반응하고 토론할 수 있다. 갈등과 저항은 당연한 것이며 건강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끌고 정책으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반면, 직능별 협회 추천 1인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예술정책에 대한 철학도, 사업이 지향하고 가늠하는 미래도 없다. 그저 갈등과 논란을 통제하려는 방어적 의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심의위원 구성의 방기이며, 사업 방향성의 방기이다. 심의제도가 지니고 있는 비평 기능의 무화이며, 전문가 심의제도가 지닌 근원적 의미의 부정이다.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던 지난 시간들로 인하여 잃은 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몰락이 아니다.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서 예술행정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의 상실이며 정상적인 수행 능력의 상실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보는 그들 스스로가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제 본연의 목적과 임무를 잃었다. 그저 자기방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을 최선으로 여긴다. 그들이 기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확보해 보려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예술지원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기는커녕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무화하는 일이 될 뿐이다.

무너진 제도는 바로 잡아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무너진 마음은 복원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왜곡된 정책 기조는 다시 회복하여도 왜곡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너진 시스템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 나.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예술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여러 국공립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보여주는 태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비틀어지고 뒤틀린 과거를 스스로 바로잡으려면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에

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기관의 위상도 신뢰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왜곡된 제도와 이로 인한 폐해는 무엇보다 기관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책임 규명도, 제도 개선도, 제도 운영도, 이 모든 상황에 그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만 임한다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그들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직시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스스로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그 스스로를 쇠신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예술정책이나 예술계의 문제를 쇠신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것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문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다. 지난 일에 대한 책임 규명과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언제나 과거에 발목 잡히고 스스로의 일에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 비난을 받게 되면, 지적된 문제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쟁점화하여 토론해야 한다. 논쟁과 논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논쟁은 분열이 아니다. 논쟁은 갈등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거리를 좁히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정책도, 어떤 제도도, 어떤 심의결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언제나 민원은 제기될 것이고 불만과 비난은 생길 것이며 협회 등의 압력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그 결과가 공유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합의한 것이 정책으로 환류되는 것이 건강한 구조이다. 이것이 제도의 투명성이고 공정성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계적이고 계량적인 방식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의 비평적 책임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다. 심의위원의 심의 기준과 이에 따른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대하여 현장 예술가들이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다시 그 과정을 통해 합의된 바가 심의에 환류될 때, 즉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 가능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직능단체별로 추천 권한을 고르게 안배하고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심의위원 구성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김으로써 논쟁을 사전에 막고 토론을 두려워하는 태도로는 심의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없다.

예술행정가들은 심의 제도가 지닌 비평기능을 재인식하고 이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

도록 스스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관과 민이 서로 신뢰하고, 예술행정인력의 전문화가 다시 확보되며, 예술가들이 예술정책에 제 목소리를 전달하고 예술정책이 예술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상호 파트너십을 다시 구축하는 일은 행정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이에 바탕을 둔 자긍심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4.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블랙리스트 사태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깊다. 예술가들에게도 행정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긴 상처가 크고 깊다. 때문에 추상적인 기관, 추상적인 예술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치유와 화해는 가능하지 않다. 땅에 떨어진 기관의 신뢰도, 무너져 버린 예술가로서의 자긍심도, 의심과 미움으로 갈라진 예술계의 갈등도 회복될 수 없다. 팝업 시어터 사태 당시 당사자였던 세 명의 젊은 연출가들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정:**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현실적으로 도망갈 부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했다면, 실제로 부당함을 겪은 후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의식을 마주하게 된 거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가 아니면 다음 누군가가 당했을 일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고 느꼈고 나같이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도 나설 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윤혜숙:**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사실이고 그때 감정을 되돌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선 분노와 모멸감이 컸어요.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무시를 당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무기력함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는 것도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죠.

**송정안:** 맞아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어요. 사실 저희도 시기마다 기억이 다르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남긴 부분도 있어요. 당시에는 많이 당혹스러웠던 거 같아요. 바깥으로 향하는 분노라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김정 연출 일이 있었을 때 같은 프로그램에 속한 연출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가 그 안에서 스스로 정당한지를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싶기도 했고 피해자라고 해서 너무 당당해져도 전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 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sup>29)</sup> (밀출 필자)

29) 「[인터뷰] '팝업시어터 논란'에서 '검열각하'로 돌아온 김정-송정안-윤혜숙 연출가 "반 년이라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책임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적 책임을 진 이들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다툼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잘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사회와 예술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끝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하는 사건이다. 책임 규명과 법적 책임,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남긴 사건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는 언제나 최후의 안전망 같은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이며 우리의 문화이다.

이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질 것인지, 어떤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를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위법적 행동 뒤에 가려진 더 많은 문제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에는 얽혀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오래 오래 시간을 들여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토론하고 또 토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든 다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시험대다.

시간 길어, 검열 기억하기 위한 연극인들의 몸부림”], <뉴스컬처>, 2016. 7. 10.,  
[http://www.newsculture.asiae.co.kr/sub\\_read.html?uid=84412](http://www.newsculture.asiae.co.kr/sub_read.html?uid=84412), 2018. 6. 22.

### 제3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

천정환\*

#### 1. 서론 :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의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시기와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시기는 비슷하다. 2014년 연말 경부터 이미 연극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2015년 가을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예술계 검열 문제가 제기됐지만,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블랙리스트 사태가 급물살을 타며 전국민적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촛불항쟁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처음 언론이나 일반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인 당사자들도 블랙리스트가 일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배제라는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는 단지 일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아니라, 권력이 ‘좌파 척결’ 따위를 명분으로 거의 전 장르에 걸친 문화예술계에 개입하여 자율성을 갖는 ‘장(場)’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또 이런 작용을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선전·세뇌 작업을 벌이려 했던 국가범죄임이 드러났다.<sup>1)</sup>

그런데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또 블랙리스트 범위를 넘는 민간인 사찰 등이 자행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구를 동원하여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감시를 자행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방송 장악 등의 행위를 해왔다.<sup>2)</sup>

이같은 사실들을 볼 때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범위와 수단이 총체적인 것이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였다. 물

\* 문화사 연구자, 성균관대 교수

1) 따라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책동 같은 사안과도 이어져 있는 것이다.

2)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만 해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저질러져 왔으나 이명박 정권 하 민간인 사찰은 그 전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론 이는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sup>3)</sup>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같은 대규모 국가범죄가 저질러져 왔는가? 그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지 문화예술계의 문제나 문화정책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통치성’<sup>4)</sup> 전반과 결부된 것이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시민과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통치하려 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조계나 과학계 등 다른 영역의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새로운 축적체제에 걸맞은 정치적 전략과 계급투쟁의 관리술을 수반하는 지배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자·소수자·이주자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정치기술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이런 정치수단과 한국에 특수하다 할 수 있는 분단 냉전 정치를 결합한다.

주지하듯 분단 냉전 정치는 안보상황과 분단을 과장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약하고 탄압하는 정치 행태다. 이는 일종의 ‘전쟁정치’이기도 한데 동족상잔을 겪고도 극복되지 못한 분단과 휴전상태가 빌미가 되는 계급투쟁의 전략이다. ‘내부의 적’을 다루는 사법절차나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전쟁정치에서 국가 내부의 적 혹은 적으로 지목되는 시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정치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나 저항세력의 인권은 검찰·경찰 등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쉽게 무시되곤 한다. 따라서 정치사회학자 김동춘의 말처럼 전쟁정치는 한국 정치의 폭력성과 파행의 근본적 본질이라 볼 수 있다.<sup>5)</sup>

그런데 국가건설기에서부터 5공화국 시기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전쟁정치와 국가범죄는 ‘민주화’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인해 완화되어왔다. 이를테면 학살·고문·불법구금과 검열은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일상적으로 마구 자행되었으나 ‘민주화’는 이를 (일부) 멈추게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갔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종합발표 자료집』, 2018.5.8, 16면. 이하 『종합발표』로 줄임.

4) 미셸 푸코 등의 개념으로 권력이 인간(생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통치의 이데올로기나 기술, 정책의 방향 등이 포함된다.

5)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강경 진압, 민간인 불법 사찰, 방송 장악, 세월호 참사 등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폭력을 휘둘렀다. 국정원과 검찰 등 전쟁정치의 주요 주체인 공안세력은 다시 득세했으며, 전방위적으로 검열정치가 부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저강도의 전쟁정치’가 문화예술계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잊어서 안 될 것은 한국의 문화예술계와 시민이 촛불항쟁을 통해 이같은 통치에 저항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근본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사실이다. 냉전정치·검열정치는 실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이 나라의 고질이지만,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 연대 저항 행동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촛불항쟁의 시민들과도 굳게 연대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지 권력남용 국가범죄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킨 효과와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사태’로 봐야겠다.<sup>6)</sup> 이 모두를 살펴야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적·사회문화적 의미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둘로 나눠 이야기해보았다. 첫째 블랙리스트 제작의 핑계가 된 ‘좌파 척결’의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살피고, 이것이 권력의 반민주성과 어떻게 긴히 관련되는지를 보겠다. ‘좌파’ 딱지 붙이기는 한편으로는 매우 낡고 상투적인 냉전적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방편이며, 다른 한편 심화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둘째, 검열정치로서의 블랙리스트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하겠다. 검열정치란 언론·출판 및 예술에 대한 검열이 주요한 정치적 수단과 전략으로 사용되는 권력정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부활시킨 검열정치는, 단지 문화예술 분야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공 규율권력의 행사이며 동시에 냉전의 핵심인 사상·심리전과 상사성을 지닌다.

한편 앞서 말했던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반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범죄지만, 나머지는 그 파급 효과와 극복의 노력이다.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글의 후반부에서 논하겠다. 첫째 ‘블랙리스트’ 담론이 어떻게 우리 공론장과 사회에 의미화되었는지를 살피고, 둘째 블랙리스트 사건이 한국 문화예술 생산자들에 미친 영향을 논하려 한다. 또한 이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의 문제를 조금 살피겠다. 우리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큰 시련을 겪었고 아직도 그 상흔은 남아 있으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에는 성찰할 점이 많다.

6) 이같은 견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병용하고 또 구분해서 쓰려 했다.



그래서 이 글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 노력과 반블랙리스트 촛불항쟁의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특기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그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 문화에 근본적인 차원의 숙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 2. 블랙리스트 사건의 반민주주의

### 가. ‘좌파’ 딱지 붙이기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실용주의와 시장의 지배를 표방한 ‘새로운 보수’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터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과 대규모 촛불 시위 때문에 모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전방위적인 공안통치의 통치술로 나아갔다.<sup>7)</sup>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부터 민간인 사찰과 촛불 시민에 대한 탄압 등 치졸하고 불법적인 공안통치를 감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박근혜 정권의 행태와 닮은 데가 많다. 무능과 위기 대응의 실패가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정권은 시민사회와 비판 세력을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 이때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 억압 기구는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무차별하게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악명 높은 문건 하나를 만들어 이명박에게 보고한다. 바로 블랙리스트 뿐 아니라 이명박 권 문화예술 정책의 기초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다. 이에 의하면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가 있고, 그들이 “문화권력화” 하여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를 획책한다. 특히 그 ‘좌파’들은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sup>8)</sup>했던 것이 사례이다.

이 문건에 나타난 문화예술과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 대한 인식은 흥미롭고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우선 이들에게는 세상이 딱 둘로 나뉘져 있다. ‘좌파’와 ‘우파’가 그것이다. 예컨대 영화에도 ‘좌파영화’와 ‘우파영화’가 있다. 그래서 ‘좌파영화’ 대신 “작품성과 상

7)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89, 2011.3. 참조.

8)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 3.

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 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하자고 한다. 이런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좌파’를 척결하고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sup>9)</sup>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런 인식이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우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sup>10)</sup>한다고 전제한 뒤, “좌파”들을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sup>11)</sup>하여 국민의식을 물들이거나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한다는 ‘좌파’란 대체 과연 누구인가?<sup>12)</sup>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르면 “02년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 명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노문모)’를 결성하면서 실제적 권력집단화”하고 “이후 좌파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배치했다 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좌파’인가?

박근혜 정권의 문건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도 ‘좌파’를 적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좌파예술단체’로 민예총, 작가회의, 문화연대 등을 꼽고 여기 가입된 민미협(미술), 민음협(음악), 민극협(연극) 등의 단체와 신경림·조정래·공지영 등의 작가들과 ‘문화예술계 교수 등’을 거론했다. 또한 영화계에서는 영화제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독립영화협회 등을 지목하는 한편, ‘좌파행사’를 주도하거나 사

#### 9) 위의 글

10) 이 문건은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블랙리스트 공작 세부 물증 드러났다」, <한겨레> 2017.7.1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2902.html#csidxb1bba48b9586d699c5aa0886b24222a](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2902.html#csidxb1bba48b9586d699c5aa0886b24222a)) 이외에 ‘좌파’ 운운하는 청와대와 국정원 문건은 여럿이다. 몇 가지 예만 들겠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청와대 박준태 행정관 작성 문건, 2014. 5.); 「‘문예계 내 좌 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국정원 문건, 2013.10.02)»;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국정원 정보보고, 2013. 12. 5.);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국정원 문건 ‘2013. 9. 26. 限 파기’)

1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 3.

12) ‘좌편향’, ‘좌파 성향’ 따위의 용어가 병용되기도 했다.

회를 보는 탁현민, 김영준과 김제동·김미화·권해효·김여정 같은 연예인을 ‘좌파’라 했다.<sup>13)</sup> 따라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장악한 세력과 국정원 등의 공안 공무원들은 매우 광범위한 문화·예술인들과 교수 등 지식인들을 ‘좌파’라 지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예술가들과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적인 지향을 지닌 예술가나 시민들이 포함된다. 그들의 눈은 난시와 사시가 겹쳐있다. 한편 세상이 좌나 우로만 보이고, 다른 한편 극우가 아니면 다 ‘좌파’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진영정치 또는 정치의 양극화가 그 배경이었으나 문제는 그같은 지목이나 명단 작성 자체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영역인 인간의 이념이나 정치성향을 ‘불온하고 문제 있는 무엇’으로 간주한다는 점이고, 또 이런 딱지 붙이기를 통해 색깔론과 레드콤플렉스를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야당이나 비판자들에 대해 ‘중북좌파’ 또는 ‘좌파’ 딱지 붙이기가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다. 한때 이명박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진 사찰의 맥락을 살펴보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권력을 사유화한 이너써클(inner circle)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사찰 컨트롤타워’라고나 할까. 사찰은 MB와 이상득의 권력을 배경 삼아 이루어졌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 라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등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기관들을 다 동원했다. 권력을 움직이는 이너써클이 개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정점에 박영준, 이영호 등이 있었고, 사실상 MB와 이상득은 아는 듯, 모르는 듯하면서 사찰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사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사적이었고 비열했으며 지휘 체계도 문란했다” 한다. “최악의 권력사유화가 벌어진 게 사찰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사찰의 목적은 지금까지 좌파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해 왔”으나 사실 사찰대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으며 좌파와 무관한 사람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지어 “이권 청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찰하기도 했다 한다. 회고를 다시 들여보자.

13)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14) 정두언, 「최고의 정치, 최악의 정치 - 정권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 16. MB 정부 민간인 사찰의 결과 속,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dooun-chung-/story\\_b\\_13139218.html](https://www.huffingtonpost.kr/dooun-chung-/story_b_13139218.html)

권력을 잡았으면 화합을 해서 다 끌고 가야지, 좌파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사찰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 바탕을 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그러나 그것도 시능에 불과했으며 사실은 다른 짓을 하기 위한 구실이었다. 자신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찰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 이가 이태규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다.(...)

한마디로 MB 권력은 권력을 비판하거나 눈엣가시인 존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찰을 했던 것이다. 또 자신들이 챙기는 이권과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찰을 활용하기도 했다. 사찰 중 가장 질이 안 좋은 것이 이권 청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사찰이었다. 이 또한 많은 사례가 있다.<sup>15)</sup>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좌파’를 핑계로 한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며, 공무원을 동원하여 결코 사용(私用)해서는 안 되는 청와대·감사원·국정원·국세청·경찰의 권한을 동원한 ‘국기문란’이다.<sup>16)</sup>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좌파’ 딱지 붙이기가 결국 어떻게 부패와 권력형 비위의 빌미가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김기춘의 권력 남용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와 얼마나 같고 다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동맹은 ‘좌파’ 딱지 붙이기를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오도하고, 많은 정치적 이득을 취해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201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공개 파동이나 통진당 사건 등에서 보듯, 이런 딱지 붙이기는 일부 대중의 안보 불안이나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하는 손쉬운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매우 넓고 상투적인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방법이기도 하고, 심화된 신자유주의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관리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양극화의 부대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중사회가 ‘민주화’에 대한 회의에 젖고 보수화되기도 했었다. 그 결과가 이명박·박근혜의 집권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중복몰이나 ‘좌파’ 딱지 붙이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15) 위의 기사

16)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경찰의 민간인사찰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이다. 「MB 정부 불법사찰 ‘들통’…창고에 감춰다가 증거만 남겼다」, 〈뉴시스〉, 2018.3.22.

## 나. 민주화 또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블랙리스트 사건을 필두로 한 이명박·박근혜의 공안통치는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다. 특히 친이·친박 세력은 ‘잃어버린 10년’ ‘비정상적 정상화’ 등의 프레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여 선동하고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그들은 민주화와 민주정부를 총체적으로 부정했다. 그들에게 민주정부란 단지 경쟁하는 정적에게 패배한 결과고, 민주화가 단지 정권을 잃어버린 일이거나 ‘비정상’ 상태인 것이다. 관련하여 김동춘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온건 우파보다는 공격적 우파들이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단순히 보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민주세력을 역칭산(이것을 그들은 ‘대못 뽑기’라고 표현함)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sup>17)</sup>고 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친노’ 세력에 대한 일각의 반발심을 이용하였다. 박근혜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박근혜는 한발 더 나아가 냉전과 극우적 국가주의를 넘어서 모든 것을 ‘비정상’이라 불렀다. 일베 용어 ‘민주화’나 ‘편충’ 같은 말이 상징하듯 대중적인 수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가 커졌다.

지금도 자유한국당 등에 존속하는 냉전·수구·극우 세력은 권력을 비판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라 함부로 딱지 붙인다.<sup>18)</sup> 그들만의 진영 구분법이나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도 멈추지 못한다. 정치권에 포진한 일부 세력과 극우·기득권 집단의 일부 영남과 노인층 대상 ‘안보 장사’나 때 지난 ‘종북몰이’가 가져다 준 정치적 실리 외에도, 그들의 오래 묵은 깊은 정치적 무의식과 국가관(?)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건국절’에 대한 집착이나 현재 북핵 위기 해소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팔아넘긴다’는 언설에서 보듯, ‘그들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시민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나 외세의 극복 노력에서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좌우 분열과 북한과의 대결에서 빚어진 피와 피해의식에 있다. 그들의 대한민국은 전쟁 트라우마와 적대적 공존으로 성립하고 지탱되는 국가이다. 그들은 남북의 화해 협력으로 이 축이 무너지거나 친미·친일에 근거한 냉전을 넘어서는 일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정부 시기의 남북 화해 협력의 시도도 ‘퍼주기’라든가 ‘종북’으로 폄하했다. 대결과 ‘멸공’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구든 조봉암이든, 김대중이든 문재인이든, 평화공존과 남북협상, 중도와 중립을 모두 ‘용공·좌경·종북’으로 간주해왔

17)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11. 3.

18) 「홍준표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노컷뉴스>, 2018.5.2.

<http://nocutnews.co.kr/news/4963861>

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는 식민과 냉전의 부산물이자, 극우 이데올로기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정치종교의 일종이다.<sup>19)</sup> 이들의 선대는 국가형성기에 친일파와 분단이 낳은 극단의 극우·반공주의자들이자 제주·여순 사건과 보도연맹 학살 등에서의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이다. 이후 군부독재가 양성한 무소불위의 국가폭력 기구와 그 담당자들,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권력과 재산을 누리는 이데올로기와 후예들이다. ‘냉전·수구·극우’는 각각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병적인 상태의 정치심리<sup>20)</sup>를 표현하는 말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지식인(?)들은 촛불항쟁과 대통령 탄핵을 “사법권력이 몰가치의 실정적 폭력으로 변질함에 따른 더없이 참혹한 재앙”이라 하고, 문재인 정부를 “법외의 음모와 술책으로 권좌를 차지한 저들 민중민족진영은 그 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몰역사와 반근대의 저지성을 체질화한 집단”<sup>21)</sup>이라 부른다.

### 3. 검열정치 = 저강도의 전쟁정치, 신자유주의 공안통치

#### 가. 검열정치의 역사적 지평과 블랙리스트 사건에서의 검열

한국 근·현대사에서 검열은 자유주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열은 지배의 핵심 전략이자 계급투쟁과 이념 전쟁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열은 언제나 특정 역사적 국면 하에서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식민지 하에서는 일제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의 관리·제압, 해방기로부터 한국전쟁기까지는 미군의 한반도 장악 전략과 전쟁 승리를 위한 심리전, 해방 이후에는 군사독재의 유지와 냉전문화의 관철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열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진 혹독한 검열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실로 널리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19) 왜 김대중 노무현 같은 중도나 자유주의자조차 좌파라 간주하는 극우가 한국사회와 정권의 체계모니를 갖게 되었는지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20) 이동연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유신으로부터 유증된 “역사적 히스테리”로 규정했고, 홍석률은 보다 큰 차원에서 극우·반공·안보 정치를 “분단의 히스테리”라 해석한 바 있다. 각각 이동연, 「블랙리스트와 유신의 종말」, 『문화과학』,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21) 「“문재인 정부 1년,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선언서 발표한 지식인들」, 〈한국경제〉 A10면 1단, 2018.3.23.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사전) 검열이 사라졌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검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sup>22)</sup> 이로써 언론 검열제도의 핵심 수단이던 언론·출판사에 대한 허가제와 문화부가 맡던 신문·잡지·도서·음반에 대한 사전검열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다. 안기부·보안사의 우편·출판물 검열이나 대검찰청·치안본부가 하던 금서 지정 따위의 일도 표면적으로는 없어졌다. 또한 민간기구의 형식을 취하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하던 영화 사전검열도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부활했다. 그 방식도 매우 ‘고전적’(?)이다. 국방부가 금서를 지정하는 일도 있었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물’의 제작·소지 등 관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노동자가 구속된 사건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로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이 제작 중인 영화의 시나리오를 검열하여 그 결과를 문체부나 하위 기관들에게 지시하는 일도 벌어졌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국가권력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검열과, 국민을 억압하고 옹졸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검열정치 부활의 종합판이라 할 있다.

검열은 다가성·모호성을 내포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뤄진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검열은 사법기관의 가시적인 검열 규칙과 표준의 적용 외에도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상통제술·심리전 일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검열은 다음과 같은 권력 행위와 그에 관련된 효과 전반을 의미한다.<sup>23)</sup>

- 1) 언론·출판 및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권력기관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금압과 가위질
- 2)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 지원과 배제
- 3) 민간 검열 : 자본과 문화매개자들(Cultural Intermediary)의 자발적이거나 간접적인 검열
- 4) 작가·창작자들의 자기검열과 ‘동료 검열’ : 검열의 개인적·집합적 내면화

22) 이는 그러나 사실상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금지만이라고도 해석된다. 옥은실, 「1970년대 금지곡과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80호, 2014.12, 194쪽.

23) 천정환, 「현대 한국 검열의 계보학 :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검열과 문예진흥정책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89, 2017.3. 참조.

- 5) 작가·창작자·운동가들에 대한 인신 구속과 사상 탄압(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간첩 조작, 전향 공작)
- 6) ‘풍속검열’과 이를 통한 사회문화에 대한 파시즘적 통제

블랙리스트 사건은 2)에 주로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와대와 문체부가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 하위 기관들에게 지원 배제나 심사 탈락을 지시하여 관철시킨 행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이용해야 할 뿐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들의 공모 또는 복종,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서의 위계구조가 필요하다.<sup>24)</sup>

따라서 공식적인 검열기구와 검열관을 두고 검열을 자행하던 때와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인 지시와 이행의 ‘채널’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권의 박영준,<sup>25)</sup>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이 대(大)검열관 같은 역할을 하며 그들의 기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나 작품들을 ‘좌파’ 등으로 재단했다. 국정원이 참모 역할을 하고 문체부나 기타 산하기관들은 수족이 되었다.

우선 경악할 것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권력기관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삭제와 가위질(위 1번)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I/O(정보관)과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문제영화 또는 이른바 ‘건전·애국영화’에 대한 제작현황 등을 수시로 요구하여 보고받았”다.<sup>26)</sup> 예컨대 영화 <덕혜옹주>(2015)의 시나리오를 국정원(직원)이 사전검열하여 박정희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영진위에 ‘지시’했다. 또 “영진위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지원 사업에서 먼저 신청자와 시놉시스 등 작품 내용들을 검토하는 사전 검열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정보원이나 문체부로부터 하달된 ‘배제 키워드’에 의한 것이었다.” 그 키워드는 ‘국가수반의 명예훼손’, ‘4대강 등 정부정책이나 시책비판’, ‘강정

24) 이 검열의 실행체계에 대해서는 『종합발표』의 53~58쪽 참조.

25) 박영준은 「균형화」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의 실장이었다. ‘이명박 청와대’의 왕(王)비서관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컸으며 이명박의 최측근으로서 서울특별시장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한나라당 소속의 고려대 출신 의원 보좌진 사이에 ‘큰형님’으로 불렸다 한다. 송홍근, 「박영준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 『신동아』 2008년 4월호 ; 「기획관리비서관을 수석급으로 ... 청와대 ‘직할 통치’ 강화 나선다」 『중앙일보』 2008. 12. 22(news.joins.com/article/3428944) 등을 참고.

26) 『종합발표』, 135~136쪽.



해군기지 반대나 용산 철거민 투쟁’, ‘노동자 투쟁 문제’, ‘세월호 문제’, ‘국정원 비판’, ‘국가보안법 비판’, ‘북한 관련(분단을 소재로 앞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따위로 비판적 사회 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이었다.<sup>27)</sup>

1), 2) 방식의 검열(노골적인 금압과 가위질, 선별적 지원과 배제)의 부대 효과는 강력하여, 다른 방식의 검열과 배제를 유발하였다. 결국 블랙리스트를 매개로 모든 방식의 검열이 다 저질러졌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지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판사, 에이전시, 갤러리 등 문화매개자들(Cultural Intermediary)의 검열인 3)의 경우나 작가·창작자들의 자기검열과 ‘동료 검열’<sup>28)</sup> \*4)를 유발하려 한 경우를 보자.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이 전시 취소된 일과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은 비서실장 김기춘이 직접 지시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교문 수석 송광용, 문체부 차관 김희범과 김종, 행안부 고위 관료 등이 광주시를 압박하였고, 광주시 공무원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전시가 취소되었다. 또 김기춘은 “예술을 빙자한 저급한 정치성 작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광주비엔날레에 ‘국비지원 재고 또는 축소 경고’를 지시하고 실제로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은 삭감되었다.<sup>29)</sup>

김기춘의 청와대는 위에서 그리고 배후에서 공권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서는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일선 기관이나 해당 장의 게이트키퍼가 검열하고 예술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또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 회의에서 홍성담 작가에 대해 “추적하여 처단’ 등의 극단적 용어를 쓰면서 사찰”<sup>30)</sup>을 지시하여 검열 대상이 된 예술가나 시민에게 직접 위해를 가했다(5)의 사례). 이후 〈세월오월〉 작품 또는 홍성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추가 피해를 입은 단체와 문화예술인도 있었다.<sup>31)</sup> 이처럼 중앙의 강한 권위주의 권력의 작용은 민간 기구와 기업·지자체 등에서의 2차·3차 검열, 즉 (자기) 검열이나 ‘동료 검열’을 유발한다. 불이익과 처벌이 일으키는 연쇄 부대 효과이다. 김기춘은 검열 권력의 이런 작용 메카니즘

27) 『종합발표』, 135~136쪽.

28) ‘동료 검열’은 친구·동료 문필가·예술가의 안위를 걱정해준다는 명목 하에 출판사·신문사 등의 경영진·편집진들이 원고의 수정을 권하거나 때로는 자의적으로 침삭 검열했던 행위·상황을 일컫는다. ‘편집자 검열’ 또는 ‘내부 검열’이라 부를 수도 있겠으나, 정실로 뒤엀킨 한국 문화예술계를 생각하면 ‘동료 검열’이 더 어울리는 어휘라 생각한다. 천정환, 「현대 한국 검열의 계보학」.

29) <2014. 8. 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위 『종합발표』 151쪽 재인용.

30) 박근혜 정부, 세월호 공연 현장 찾아가 조직적 방해, <한겨레>, 2018.4.13.

31) 『종합발표』, 151~152쪽.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연극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 사례인 국립극단의 <구름> 검열도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연극 <개구리>가 청와대와 김기춘이 관심을 기울여 극악하게 탄압한 사례가 되고 난 뒤, 후속작인 <구름> 대본은 특정 정치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을 쳐 연출가에게 전달되었다 한다.

<망루의 햄릿>이라는 작품의 포스터가 단지 광화문 광장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게시된 포스터를 삭제·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립극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예술지원기관들은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예술검열 논란을 거치면서 기관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하는 등 자기 검열의 단계에 접어들었”<sup>32)</sup>던 것이다.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의 직원이 ‘팝업씨어터’ 참여작인 연극 <이 아이>라는 작품을 공연 도중에 방해하고 중지시킨 일도 있었다.

분단체제 하의 한국사회는 반공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즉 일반적인 근대 규율권력이 ‘반공’의 압도적 권세와 침윤된 상태였다. 반공주의는 단지 정치적 금압 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도덕적으로’ 규율하는 원리로도 사용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심급에서의 반공·반좌파 검열과 도덕적 엄숙주의는 때때로 한몸이 되어 검열정치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이 풍속-정치 검열은 섹슈얼리티나 성소수자에 대한 통제나 문화예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6)의 사례).<sup>33)</sup> 이 검열의 목적은 ‘건전’한 사회문화의 기풍과 문화예술을 진작한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 나타난 ‘건전’ 문화예술에 대한 추구(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이에 대한 적실한 예일 것이다. ‘반좌파·반공=건전’의 인식론은 김기춘과 그 아류들의 파시즘적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을 듯하다.

## 나. 저항도의 전쟁정치 : 검열과 심리전

박근혜 정권의 검열정치의 인식론과 방법이 박정희 시대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sup>34)</sup> 박정희 정권은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 문교부 보안사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혹독하고 체계화된 검열 정책을 시행했다. 전체 예술 분야는 물론 언론

32) 『종합발표』, 69쪽.

33) 이에 대한 논구로는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과 이 백서에 실린 이동연의 글을 참조.

34) 이동연, 「블랙리스트와 유신의 종말」, 『문화/과학』(통권 제89호), 2017년 봄호 ; 천정환, 「현대 한국 검열의 계보학 :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검열과 문예진흥정책을 중심으로」

과 출판 등 전방위적이고도 일상적인 국가 검열이 자행되었다.

그런데 미국·영국 같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전시동원체제에서는 검열이 수 행된다. 전시 검열은 대적 사상·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총력 안보’를 부르짖던 박 정희 정권기의 검열은 비전쟁기에도 행해진 심리전이라 볼 수 있다. 박 정권은 1965~69 년 안보위기를 겪으며 시민의 일상과 공론장 전체를 일상적으로 검열하고, 또 유신 이후 의 장기집권 책동과 전체주의적인 개발동원에 사용했다. 그같은 통치는 정상정치 (normal politics)나 현대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동원’이나 ‘권위 주의’ 같은 서구 정치학의 개념들을 불충분해 보이게 한다. 사회전반을 병영화하고 군사 적 통제로 물들이는 ‘병영국가’ 명제나 ‘군사화된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sup>35)</sup>에 박정희 통치가 잘 들어맞는다. 통치성이 권력의 복합적 작용효과며 사회와 국가의 상 호작용을 의미한다면, 박정희 정권 통치성의 본원적 차원 또는 무의식적 차원은 냉전을 사회 내부로 내재화한 것이다.

검열은 전쟁에 필요한 동조세력을 늘리고 적의 선전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상·심리전 의 일환일 뿐 아니라,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죽이거나 고립시키는 전쟁정치의 수단이 다. 그 자신이 남로당 프락치 출신이며 남북한 국가형성기(1945~53)의 참혹한 내전과 학살을 경험한 박정희의 공포는 ‘내부의 적’(=간첩)을 만들어내어 끝없는 전쟁정치를 수 행하게 했다.<sup>36)</sup> 유신 시기에 박정희의 영구집권 욕심이나 대미 관계 악화 등의 상황과 합 쳐지면서 검열/전쟁정치는 극에 달한다.

바로 이 시기에 정치와 통치술을 배운 김기춘과 박근혜 또한 정부 비판자들이나 사회 참여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나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다. 김기춘은 2013년 9월 9일 실수비에서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은 중복세력 지원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 제작자 와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복 친북 세력 척결 나서서,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sup>37)</sup>하라고 지시한다.

이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엘리트들은 국민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없어 ‘좌파’에 ‘감염’될 수 있는 취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고, 또는 그저 생각이 좀 다른 동료 시

35) 이 개념은 Moon Seungsook,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ke Univ. Pr, 2005를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김동춘 등이 제기한 ‘전쟁정 치’와 militarized modernity 사이의 탐구가 필요하다.

36)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관련 장 을 참조.

37)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5쪽.

민이 아니라 불온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존재는 대한민국 성립 시기부터 ‘좌빨’ ‘빨갱이’라 함부로 치부되었으며 공안세력의 힘이 막강하고 폭압이 만연한 시대에는 ‘간첩’으로 조작되기도 했다.<sup>38)</sup> 그들은 절멸 아니면 귀순·전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화와 자유주의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신의 적자들도 고문과 조작을 일삼지는 않고, 돈과 블랙리스트를 사용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검열정치는 이같은 ‘내부 사상·심리전’의 성격을 지닌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sup>39)</sup>한다 했던 것이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수준 낮은 단체나 ‘우파’ 개인들을 육성하려 했던 것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전은 금압과 검열만이 아닌 양(陽)의 육성정책도 포함한다. 요컨대 이 전체를 저항도의 전쟁정치 또는 변형된 공안통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정치나 ‘악마’로 이미지화된 북한의 존재가 보증해주는 것이며,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국민관·정치관에서 기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게 북한과의 대결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들은 9년 간 남북관계를 완전히 경직시켜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서 전쟁 위기까지 자초했다. 대결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면 이들이 국민을 옥쇄서 통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사라진다. 북한과 대결하기 때문에 안보논리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립을 만들어낸다. 또한 ‘중북’ 세력과 ‘좌파’ ‘빨갱이’를 많이 잡아들여야 노동자·여성과 대중의 저항이 조용한 세상이 된다.

덧붙여 이는 단지 김기춘 같은 노회한 파시스트·국가주의자 몇명이 아니라, 검찰·경찰과 국정원·보안사 등에 오랫동안 밥을 먹어온 ‘생계형’ 공안 공무원들, 그리고 부자 기득권 세력과 안보 장사꾼들 같은 ‘냉전 기생 세력’의 네트워크와 동맹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38)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39) 김기춘은 유신시절 간첩 조작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

## 4.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의 반응

### 가. 블랙리스트 사태 담론

한국사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과 간섭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법원은 김기춘 징역 4년, 조운선·김종덕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김소영 18개월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단죄 전까지 검열의 역사라 해도 될 한국 근·현대사에서 검열을 자행한 권력과 개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sup>40)</sup> 김기춘이 블랙리스트와 검열을 ‘정책’처럼 이해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검열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요 국가범죄다.

이 절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의 하나로 ‘보수’의 블랙리스트 담론을 조금 살피려 한다. 중립적이거나 상식적인 인식으로는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한 사상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또 블랙리스트로 인해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sup>41)</sup>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사회는 허구적인 좌우 대립과 진영론적인 인식이 팽배해있다. 일부 정당과 보수 언론은 매우 낙후한 냉전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합의(콘센서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퇴사하여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1호’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자신이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라는 주장했다. 세간에서 이런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적하자 그는 “최승호 MBC 사장이 ‘배현진은 뉴스에 출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42)</sup> 현 정권이 실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공공연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씨는 설명하지 못했다. 배씨가 블랙리스트 사태

40) 5공 신군부 집권 시 ‘언론 학살’이라 불릴 정도로 참혹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을 주도한 허문도 같은 이도 5공 비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처벌 받지 않았다.

41) 「사실 :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한 법원」, 〈한국일보〉, 2017.7.27.

42) 「배현진 “난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김세희와 한목소리」, 〈경향신문〉, 2018.3.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71618001#csidxc61373af32bd6f99bd9ae54fff903e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71618001#csidxc61373af32bd6f99bd9ae54fff903e6)

의 정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런 말을 했을까? 어쨌든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도 블랙리스트는 ‘나쁜 것’이며 권력의 언론이나 문화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라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43)</sup>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문제로 수십 개의 기사와 사실을 쏟아낸 적이 있다.<sup>44)</sup>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소재 대학 부설 한국학 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끊은 사실을 구성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가동 증거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태의 본질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실 해당 연구소의 방만경영이라는 지적과<sup>45)</sup>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가 증거 제시 없이 다수의 익명 취재원의 ‘추측’과 ‘푸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비판이 있었다.<sup>46)</sup>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용례를 따르더라도 ‘블랙리스트’란 권력을 ‘코드’에 맞게 남용하는, 있어서는 안 될 정치행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심으로 성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조선일보〉는 김기춘·조윤선 등이 구속된 즈음,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2013년 8월 취임한 김기춘이 “업무 첫 날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40년 전이나 쓰이던 말을 했던 일을 상기했다. 즉 “청와대 분위기는 경직됐”고 누구도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sup>47)</sup> 불가능해서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질렀다는 해석이다. 이는 검열정치·공안통치의 공동 기획자이거나 오히려 박근혜보다 더 앞장섰던 김기춘의 역할을 단순히 하수인으로 오해·축소하는 것이며,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도 호도하는 것이다. 단지 박근혜의 ‘시대착오’적 권위주

43)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 「“자유한국당의 블랙리스트 조사 탄압은 또 다른 공작정치”...문화예술인들 반발」, 〈서울신문〉, 2017.10.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7500001#csidx50da17344e2c57db2483728ed7d1dd3>

44) 「사설- 정권 바뀌면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나」, 〈조선일보〉, 2018.4.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319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3199.html) 등을 참조.

45) 「KDI, 이미 2013년 ‘한미연구소 지원’ 문제점 지적」, 〈한겨레〉, 2018.4.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39952.html>

46) 「조선-중앙, 추측과 사실 왜곡으로 ‘블랙리스트 몰이」, 〈오마이뉴스〉, 2018.4.13.

<http://v.media.daum.net/v/20180413095104638>

47) 「사설 - 수갑 찬 김기춘·조윤선 모습을 보며」, 〈조선일보〉, 2017.0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2/201701220194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2/2017012201949.html)

의적 문제가 광범위한 국가범죄며 일부 세력의 냉전의식·공안 통치술이 블랙리스트의 본질에 가깝다.

〈조선일보〉는 한편 좌우(?)를 막론한 어떤 정권 때나 정권의 ‘코드’에 맞는 문화예술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끌고 가기도 했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 개입은 이 정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친(親)정권 예술인들을 집중 지원했다. 회원 수가 예총의 10분의 1에 불과한 민예총 지원 예산이 예총보다 많았던 적도 있다. 지금도 야당이 단체장을 맡은 지자체에선 각종 사업들이 친야 성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우호적이냐 아니냐를 잣대로 지원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반(反)문화적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한다.<sup>48)</sup>

얼핏 ‘친정부냐 아니냐가 지원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른 결론을 내리는 듯하지만 이 글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을 깔고 있다.

우선 ‘코드’에 따른 지원’과 블랙리스트는 같지 않은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코드’에 따른 지원’이라고 축소시켜서 의미화하면 안 된다. 양자는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코드에 따른 지원’이 해치는 것은 (표면적인) ‘공정함’이지만,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검열과 탄압을 내포하는 범죄적 행위다. 이는 법정에서 자기가 한 일이 단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단체들을 지원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했던 김기춘의 논리와 비슷하다.<sup>49)</sup> 블랙리스트는 검열과 배제이며, 탄압을 야기한다. 예술가들이 양심과 창작 정신으로 만든 작품을 김기춘이나 그 하수인들처럼 낮은 문화예술 의식을 가진 이들이 ‘정치성’ 운운하며 함부로 재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예술적 양심으로 하는 심사를 권력으로 간섭하는 것이며,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문장과 장면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로써 시민이 누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간섭하고 해치는 것이다.

48) 「사설 특검 블랙리스트 확인,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조선일보〉. 2017.1.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8/201701080156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8/2017010801563.html))

49) 김기춘·조윤선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 측은 공판 내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 - 법원, 블랙리스트 실체 인정 “헌법정신과 법률 위배」, 〈경향신문〉, 2017.07.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750001#csidx81c33a325984f75a45641f56521c9fc](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750001#csidx81c33a325984f75a45641f56521c9fc))

둘째, ‘모든 정부가 코드 지원했다’는 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몰타기에 가깝다. 어떤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하여, 일부러 배제하거나 권력을 동원하여 ‘표적’을 만드는 방식의 문화예술 정책을 폈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밖에는 없다. 이런 ‘모두가 문제’라는 식의 담론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오류를 저질렀거나 불리할 때 꺼내놓는 특유의 화술이다. ‘모두가 나쁜 놈’이라는 식의 인식은 반(反)정치 담론이나 정치허무주의 담론과 연관된다.

이처럼 블랙리스트가 반민주적이며 반문화적이라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으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진지하게 사유하지 않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촛불항쟁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영 논리로 사태를 해석하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이런 태도는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의 잘못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검열을 자행한 이명박·박근혜와 그 하수인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코드 지원했다’는 말을 할 때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정부나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비해 어찌면 이 명제는 꽤 복잡하다. 이는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가진 것임을 인식하고, 또 문화예술이 지니는 본연적인 비판적 성격과 (혹 국가나 자본의 지원에 기대는 경우에도 그것을 넘어서야 예술로서 성립하는) 현실초월성을 이해할 때에 성립한다. ‘투입 대비 산출’의 효용론을 넘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한국사회가 얼마나 깊이 공유하게 될지,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 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한국 문화예술 생산자들에 미친 영향

블랙리스트 사태는 한국 문화예술의 사회적 존재방식과 가치를 새롭게 드러내고 일깨워주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계에 큰 상처를 입혔다. 동료였던 누군가가 권력에 빌붙어 동료의 작품을 일부러 폄하하거나 검열하고, 권위를 가진 비평가·교수·원로가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굴종하여 양심을 어기고 후배·동료의 삶과 예술을 위협에 빠뜨렸다.<sup>50)</sup> 이들 ‘가해자가 된 동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같은 일을 했을까? 블랙리스트 사건은 한편 문화예술의 ‘일상’을 지배하는 장의 논리나 자율성의 옷을 입고

50) 예컨대 연극계의 “일부 부역자들은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검열에 짓눌린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김미도, 「블랙리스트, 네버엔딩 스토리」,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 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연극과인간, 2017), 118쪽.



있기도 했다. 심사와 지원은 관료적이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이른바 ‘전문가’들이 ‘정부 돈’을 집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이 낮은 문화예술계는 ‘전문가’나 ‘돈’에 취약한 면을 갖고 있었다.

한편 피해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협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정체성·자존감에 침해를 겪었다. 영화배우 김규리 씨는 영화계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SNS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적 소신을 밝혀 정권에 미운 털이 박혔다. 김규리 씨는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자 “이 몇 자에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네. 10년이란 소중한 시간이. 내가 그 동안 낸 소중한 세금이 나를 죽이는데 사용되었다니”라 했다.<sup>51)</sup>

2018년 5월 국립극단이 뒤늦게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사과했을 때 연극인들이 발표한 「문체부 부속 국립극단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안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국립극단에 의한 검열, 성폭력, 물리적폭력이 어떠했는지.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작가의 방 사태에서 국립극단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얼마나 안일한 발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준비했는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대신 사태를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했는지. (...) 우리는 안다. 지난 10년간 비정상이었던 문화부와 문화정책으로 인해, 젊은 예술가들은 끔찍한 10년을 보내야 했고, 관련 공무원들이 팔아 넘긴 영혼의 댓가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갈아넣어야만 했다. 지난 청춘을 돌려달라는 말은 안할테니, 가해의 주체들은 사과하라. 사과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sup>52)</sup>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적인 일을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극단으로부터 겪은 연극인들은 좋은 연극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존엄 나의 안전과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고 했다.<sup>53)</sup>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은 ‘가난한 예술’과 예술의 공공성 문제를 다시 일깨워주었다. 블

51) 「이슈+: 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로 아픈 문화계」, 〈한국일보〉, 2017.9.20.

52) 「“블랙리스트 반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공연계 “말잔치” 사과 거부」, 〈민중의 소리〉, 2018.5.24. (<http://www.vop.co.kr/A00001291195.html>) ; 전운환(극단 엔드씨어터 대표) 페이스북, 2018.5.20. 참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25259844214253&id=100001907700628](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25259844214253&id=100001907700628)

53) 물론 모든 피해자가 저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수정권의 행태가 ‘부당하지만 그냥 그런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저항이나 문제제기가 초래할 더 큰 불이익이나 ‘불편함’ 때문에 보신주의·순응주의에 머무른 경우도 없지 않았다.

랙리스트 사건이 한편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며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독과점도 극심해지면서, 독립적이고 비상업적인 문화예술은 독자적인 생존과 재생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 자원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재원을 가진 기관의 권력이 더 커지고 간섭과 억압도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를 파고 들어, 문화예술을 옥죄고 국가주의와 우파 이념 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예술을 위한 한 가지 방책일 것이다. 오늘날 시민의 문화향유는 소득과 교양의 양극화와 독과점적인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구조에 의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헌법(제22조)을 개정하여 모든 사람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는 문화예술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sup>54)</sup>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한국의 공무원·지식인

김기춘이나 박근혜를 제하면 누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책임이 있는가? 검열을 직접 실행한 전현직 문체부장·차관과 전 현직 예술위원회장이 그 다음이다. 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누구보다 높은 애호 정신으로 앞장서서 문화예술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름 노릇을 했다.

전현직 문체부장관과 달리 문예위 위원장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일은 어떤지? 그들은 우수 대학의 교수나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 문화·지식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검열의 주역이자 역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외에도 예술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지원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식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부역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성찰과 청산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적극적인 고백”<sup>55)</sup>이 필요하다.

54) 『종합발표』, 181쪽.

55) 김미도,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작동」,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연극과인간, 2017, 139쪽.

정의와 원칙이 실종됐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이 한 행위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학살을 수행한 하수인들을 통해 개념화한 ‘악의 평범성’ 명제와 연결시킨 담론이 무수히 나왔다. 1만 명 “블랙리스트 명단이 오스트리아에서의 유대인 추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며,<sup>56)</sup> 연루된 공무원도 아무 생각도 성찰도 없이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범죄를 저지른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sup>57)</sup> ‘악의 평범성’ 명제를 가져와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그에 연루된 공무원을 유대인 추방·학살에 연루된 나치들에 비유하는 것에 100% 동감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성격과 사태의 맥락이 다르거니와 죄의 경중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힘 없는 올’이자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생계를 잃을까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식의 변명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관료주의와 ‘먹고사니즘’에 기대어 국가범죄에 아무런 반성과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지난 10년 간의 극심한 정치적 진영 갈등과 고용 불안은, 복지부동과 무책임의 공무원 문화를 더 확산한 것 아닌가?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부역’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은 어렵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위직 연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사니즘’이 직업윤리와 시민윤리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지배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나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퇴행을 불렀던 것이 아니겠는가?<sup>58)</sup>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자체와 사과가 그렇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다시 또 사과했다. 이어 그 산하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극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sup>59)</sup>

56) 이동연, 앞의 글

57) 김미도, 「김기춘과 아이히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연극과인간, 2017; 이동연, 「세상읽기: 한국의 아이히만」, 〈경향신문〉, A31면1단. 2017.01.19. 강정석, 「블랙리스트와 예술검열 실태 분석-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문화과학』 2017년 봄호 (통권 제89호), 2017.3. 외에 많은 신문 칼럼 등이 있다.

58)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과 영혼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의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부정행위 공무원 상급자 핑계 못 댈다”」, 『한국정책신문』 2017.01.13; 「주장: 영혼 있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2018.5.18

59) 예술위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블랙리스트 지원배제라는 참담한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예술가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던 연극인들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렸다.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저질렀던 검열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sup>60)</sup> 또한 임인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면서 하는 말은 ‘블랙리스트 순응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것”이라며 “진정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과와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sup>61)</sup> 아직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따라서 이 청산은 적절한 방법을 더 찾아야 하는 ‘진행 중’인 작업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징계 및 수사의뢰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과 직원 104명 중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2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실명 권고했지만 문체부는 이중 문체부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 등 7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sup>62)</sup>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문체부의 결정은 지난 11개월간 파헤쳤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처참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sup>63)</sup>

## 5. 블랙리스트 사태 극복의 노력과 그 문화사적 의미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촛불항쟁에 가장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가능하게 했고, 한국 문화예술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촛불항쟁 초기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밝혀지자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를 모토로 하여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를 결

60) 「예술위 “사과하겠다”, 예술인들 “받지않겠다”」, 〈노컷뉴스〉, 2018.5.17.

61) 〈민중의 소리〉, 앞의 페이지.

62) 「‘문화계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규탄, 출판계도 한목소리」, 〈한겨레〉 A22면1단, 2018.9.17.

63) 「도중환은 왜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을 올렸나」, 〈노컷뉴스〉, 2018.9.18.

성하고, 시인 송경동, 사진작가 노순택, 판화가 이윤엽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점거와 예술인 캠핑촌 만들기에 나서서 연대했다. 2016년 11월 4일 220개 문화 예술단체 약 7,500명이 시국선언을 한 이후 2017년 3월 25일까지 무려 4개월 15일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궁핍현대미술광장, 광장극장 블랙텐트, 광화문미술행동, 목요춤교실, 하야하락 전국콘서트, 광장신문, 광장토론회, 광장정치학교, 비주류예술가들의 ‘옴’, 길거리 붓글씨쓰기, 시화전, 대동풍물판굿, 광장문화행진, 다큐영상제, 매주 토요일 집중 광장 예술행동 등 다양한 실천과 공연, 판을 만들고 진행했다.

‘문화연대’의 이원재 소장은 이같은 ‘광화문 예술행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예술 검열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면화했다. 2) ‘광화문 캠핑촌’ 활동은 “공유지(communs)로서의 예술행동”을 둘러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광장의 정치를 둘러싼 새로운 상상력과 관계성을 만들어냈고, 연대의 가치를 확장하였다.<sup>64)</sup>

이에 동의하면서 촛불항쟁 전체에서 반 블랙리스트 운동이 가진 사회적·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더 확장하여 말해보려 한다.

첫째, 반 블랙리스트 운동은 촛불 시민항쟁을 선도하며, 광장 민주주의의 문화와 주체성의 구성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 항쟁이나 민중봉기에서 문화예술이 하는 일은 원래 많지만, 이번 촛불항쟁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투쟁의 문화화·축제화는 2000년대 이후 증대돼 왔으며 2016-17년 촛불항쟁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차은택 등의 ‘문화 농단’ 때문에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더 늘어났고 세월호 참사 이래 기억투쟁과 확산에 문화적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광장의 문화는 단순히 투쟁의 수단이나 어떤 부산물·결과물이 아니다. 문화예술은 시민 직접행동의 주요한 내용이자 형식 그 자체다. 시위나 저항행동만이 아니라 연설·토론회, 문학·음악·미술·공연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작용으로써 광장 민주주의의 ‘현장’과 그 안에서 주체성이 구성된다. 즉 ‘현장’의 문화정치는 집회·시위의 여러 의례와 집합행동 퍼포먼스를 통해 공감을 만들고 주체성을 창출한다. 광화문의 예술가들이 만든 박근혜상, 대형 촛불, 세월호를 태운 고래 등의 조형물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촛불항쟁 자체의 상징물이 되었다.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예술가의 분노와 열정

64) 이원재, 「블랙리스트 예술 검열에 저항하는 예술운동의 실천과 전망」, 『문화/과학』(89호) 2017년 봄호.

이 담긴 조형물들은 집회에 참여 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sup>65)</sup>던 것이다.

조형물 뿐 아니라 ‘블랙텐트’ ‘궁핍미술관’ 등 광화문 광장의 퍼포먼스는 거의 다 ‘흥행’했다. 각 문화·예술 영역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한 ‘예술적 공유지’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 사이의 연대도 깊어진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촛불 광장에서의 노래·조형물·공연과 언어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며, 그 예술 경험을 자신의 문화 향유에 반영할 것이다.

둘째, 촛불항쟁과 광장의 문화는 다른 혁명이나 항쟁이 그런 것처럼 항쟁 이후에도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의 주체를 만들어내며 문화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적 가속주의(accelerationism)는 ‘촛불 이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조직할 수 있는 힘을 주어 미투(#Me\_too)운동과 노동조합 결성운동의 바탕이 되고 있다. “촛불 실천의 주체적 경험이 ‘시민으로서의 여성 정체성’”<sup>66)</sup>이나 노동자로서의 자각에 작용했을 것이다. 광장의 토론회장에서 이제껏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성소수자·여성·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젊은 ‘흙수저’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 또한 정치 냉소주의 젓어있던 기성세대 시민에게는 다시 민주주의의 열망·주권의식을 일깨웠고, “승리해 본 경험이 없”어 “정치 냉소와 무력감”에 젓어 있었던 청년세대에게는 ““해봤자 되겠어”에서 ‘해보니 되더라’로 경험의 감각회로가 변경”되게 했다.<sup>67)</sup> 비폭력 평화 투쟁을 끝까지 견지하여 승리한 것은 또다른 자부심을 시민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그것을 광장의 문화예술이 매개했다.

셋째, 반블랙리스트 운동과 촛불항쟁은 문화예술의 정치성과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예술의 존재를 재고(또는 재고)하게 했다. 강조하건대 장르를 초월하여 수행된 예술가들의 대규모 연대 저항은 유례 없는 것이다. 이를 반블랙리스트 운동과 촛불항쟁의 한국 문화사·예술사적 의미라 해도 되겠다. 원래 현실참여적 성격이 강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실천적 성격이 약화되어 왔던 한국 문화예술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촛불항쟁을 계기로 더

65) 이나바 (후지무라) 마이, 「광장이 가르쳐 준 것- 촛불 시위와 광화문 텐트촌 예술가들」, 『내일을 여는 역사』 67, 2017.6.

66) 정희진, 「여성들은 매일 미투를 외친다」, 『한겨레 21』, 2018.3.13 ; 「민주노총 조직률 빠른 속도로 상승, 조합원 200만 시대 청신호」, 『노동과 세계』.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451>(민주노총 뉴스) 2018.4.30.

67) 「촛불 1년 - “촛불 이후, 나는 비로소 국민이 되었다”」, <한국일보>, 2017.10.28.  
<http://hankookilbo.com/v/3e4d204e4a4641f58ecc3845aecb9f01>

나은 정치성과 새로움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연극 평론가 김방옥은 ‘블랙리스트 이후’의 한국 연극에 대해 조망하면서 “1980년대 정치극이나 9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 연극의 흐름과도 다른” “정치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양식적으로도 새롭고 “분석적이고 자기성찰적”인 “연극적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어 “우리 연극계의 르네상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새로운 역동적 변화”가 창출되고 있다<sup>68)</sup>고 평했다. 알다시피 연극계는 블랙리스트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분야이다.

연극 뿐만 아니다. 미술계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대표 작가들”과 다른 세대에 속한 ‘파견미술’ 팀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하며 ‘전통을 갱신’하였다 한다. 스티로폼을 소재로 박근혜·이재용·김기춘·조윤선 등 다섯 인물상을 만들었던 나규환 작가는 촛불 광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말했으며, ‘파견미술가’ 전미영 작가도 “개인은 약한 존재이지만, 모두가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작품은 강”하다며 “변혁을 위한 아방가르드의 한 걸음에 함께 서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sup>69)</sup>

두 사람의 말로 이같은 반블랙리스트 촛불항쟁의 문화예술사적 의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한국 미술사 연구자인 이나바 마이 교수는 광장 예술에서 “가장 감동한 것은 예술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광장에 모인 많은 예술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예술로 투쟁했다”는 사실이라 했다.<sup>70)</sup> 시인 송경동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길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본이 된다는 기대가 벅차다”<sup>71)</sup>고 했다.

마지막으로, 반블랙리스트 운동과 촛불항쟁은 국가의 문화정책 전반을 크게 바꾸게 했다. 2017년 7월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5대 국정 목표 중 네 번째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내세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부장관이 여러 차례 천명했다.<sup>72)</sup> 이런 원칙이 국가로부터 실행된 것은 문화예술 정책 사상 처음이며 그 사회적·문화적 의의도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언제나 무척 좁았으며, ‘간섭하지

68) 김방옥, 「촛불시위와 ‘삶의 연극화’」,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연극과인간, 2017, 358쪽.

69) 이나바 마이, 앞의 글.

70) 위의 글.

71) 송경동, 「새로운 연극은 시작되었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엮음,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연극과인간, 2017. 『한국극예술연구』 57, 한국극예술학회, 2017.9, 334쪽.

72) 『종합발표』 4쪽.

않'기는커녕 검열과 처벌이 '진흥'이나 '융성'과 혼동되거나 더 근본적인 문화·언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한다.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장 선출과 지원금 배분도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다.<sup>73)</sup> 이로써 1973년에 박정희의 손으로 설립된 문예진흥위(설립 당시는 문예진흥원)는 국책 예술 지원 기관으로서의 45년 영욕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신의 적자'라 할 만한 박근혜와 김기춘의 블랙리스트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같은 큰 정책 변화가 야기할 장기적 효과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 6. 결론 : 더 풀어야 할 숙제

촛불항쟁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의 자유 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낸 일이다. 참가 연인원 근 1,700만에 이른 촛불은 한국의 정체성이 '좌의 척결(반공)'이나 '애국(건전)'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과 또 광장의 민주주의 정치가(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의회·법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굳게 새겼다.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하려는 문화예술인과 시민 사회의 노력은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듯하다.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국가범죄라면 그 온전한 청산 작업은 적폐청산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공동체의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된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물질적인 제도를 남겨야 한다. 나아가 더 온전한 자유와 복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지려면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정원 등의 폭압기구와 국가보안법 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공국의 건설

73) 「문예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위원장 선출도 자율로」, <연합뉴스>, 2018.5.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54200005.HTML?input=1195m>



이나 문화권의 향유 또한 그렇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판의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왔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에 해당하는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을 사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새 정부 하에서도 검찰 및 국정원 개혁은 아직 미진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문화예술의 유통·배포에 있어서의 독과점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포획 당한 예술과 독점자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배가 있다. 예컨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한 수단이 ‘문화펀드’의 조성이었음을 상기해보자. 이명박 정권의 영화진흥위원회는 1천억 원(15편 규모)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SKT 같은 거대 기업과 함께 6.25 전쟁영웅에 관한 영화 제작 계획을 세웠었다. 이런 일이 실행됐을 때 우리 사회의 이념지형과 문화예술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또한 거대 문화기업을 통한 우회적 검열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편향적 ‘화이트리스트’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완화된 형태의 검열이나 배제가 언제든 가능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언론·문화 예술 각 영역에 포진한 대기업 자본이 가진 힘과 생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것보다 더 깊은 논의를 요하는 것일 수 있다.

아직 북미회담과 그 결과로 야기될 지정학적 변화의 전도를 구체적으로는 점칠 수 없지만, 오늘날 한반도에서 탈분단/탈냉전의 희망에 관한 상상력은 만개하고 있다. 이는 당장 전쟁 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져다주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지형 변화를 예시하는 것일 테다. 또 70년 넘게 이어져온 냉전 상태와 극우 반공 이념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일 테다. 탈냉전·탈분단이 수행되고 동북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추동된다면, 국가주의나 안보논리가 탄압과 차별의 빌미가 되는 일이 줄고 ‘좌익을 척결’ 한다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분단/안보국가에서 평화/문화국가가 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평창올림픽과 남북 예술단 교류에서 보여주었듯 문화예술 영역은 교류와 한반도 차원의 민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다.



# 3

## 블랙리스트 사태의 다각적 조망

- 제1절 김기춘을 중심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제2절 논란이 된 작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블랙리스트의 텍스트성과 폭력의 징후들
- 제3절 ‘블랙리스트 문건’에 드러난 ‘전체성의 폭력’ :  
담론적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제4절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3

블랙리스트 사태의  
다각적 조망

## 제1절 | 김기춘을 중심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심용환\*

졸업식 날이면 법대 건물 앞 광장이 심하게 붐비죠. 그래서 거기에는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와중에 끝까지 밀고 들어온 새까만 차가 있었어요. ‘어떤 인간이 차를 타고 여기 들어오나’ 했는데, 김기춘이에요. 김기춘 사위가 제 동기거든요.

김기춘이 그때 검찰총장을 할 때였습니다. 신사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박사 가운을 입고 내리는 거예요... 법학도서관 계단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기어코 본인들 사진을 찍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서울지방법원장이고 하니까... 멋있다, 저래서 총장을 하는구나...<sup>1)</sup>

변호사 최강욱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겪은 김기춘 비화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하여 김기춘은 대통령 박근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집행자 그 자체이다. 사실상 비서실장 김기춘에 의해 블랙리스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공무원을 교체하여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공직 기강을 세웠고 비서실장 사퇴 이후에도 이때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섬세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김기춘이 적극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매달렸

\*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학부 외래교수

1) 최강욱,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창비, 2017, p.121.

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성실한 공직자인가, 아니면 대통령과의 인연,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각별한 충성심을 지녔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문화예술계의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만약 문화예술계에 관한 고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신념의 근거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유럽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 장 모네(Jean Monnet)의 말을 굳이 빌리겠다.

사람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대통령 박근혜는 비서실장 김기춘, 즉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통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을 풀어갔다. 즉, ‘인격’이 작동하고 있었다.

김기춘을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개인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라는 작금의 사회 현상을 촉발한 ‘사회적 인격’에 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며 한국 사회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법치주의자?

“제6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민이 투표로써 선택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나 타도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며 국가기강의 유지에 등뼈와 같은 중요한 조직입니다. 좌익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선봉장이 되어 왔으며,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검찰총장 김기춘의 ‘시국현안’에 관한 공식 입장<sup>2)</sup>이다. 김기춘은 법치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추구했다.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한 이후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변호사, 법과대학원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 「시국현안에 대해 金淇春 검찰총장에 듣는다. “사회불안 요소를 척결하는 데 전 검찰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사법행정 31, 1990.

법조인으로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시절 김기춘은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확고히 한다.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 ‘인권의 옹호자’, ‘법치주의의 감시자’이기 때문에 ‘엄정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투’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간다. 특히 그는 국민들에게 ‘무질서, 범죄, 폭력’에 대한 비판정신을 요구한다. ‘1987년 하반기 이후 민주화 열기에 편승하여’ 급속도로 확산된 노사분규에 ‘급진 폭력세력’이 개입하여 배후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에 저해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학원가, 즉 대학들 역시 ‘좌익폭력세력’이 판을 치면서 ‘화염병투척’ 같은 위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끝까지 추적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부동산투기, 조직폭력, 마약, 절도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주의로 일관하겠다고 초지일관한 태도를 보인다.<sup>3)</sup>

강력한 법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 한나라당 의원으로 ‘현 정권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6공화국의 제3기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정부라는 수식어를 비판하기도 했다.<sup>4)</sup>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sup>5)</sup>

2006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크게 비판을 받지만 사실 그는 보다 법리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공박한다. ‘불법적인 돼지저금통과 각종 허위폭로’, ‘허위공약’을 낱발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sup>6)</sup>

3) 앞의 인터뷰 중.

4) 「한나라당 의총 이모저모」, 〈연합뉴스〉, 1999. 2.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19665>, 2018. 6. 10.

5) 「다시 읽는 ‘김기춘턴’... ‘내부자들’ 저리가라」, 〈한겨레〉, 2016. 11. 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3389>, 2018. 6. 10.

6) 「사회.문화분야 질문요지-②김기춘」, 〈연합뉴스〉, 2003. 10.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487224>, 2018. 6. 10.

그리고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당시 김기춘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맡는다.

나로서는 법에 있는 대로 임무를 수행할 뿐  
법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 소추위원의 권리를 상기하며 필요하면 대통령을 직접 신문(訊問)하겠다고 의지를 불사른다.<sup>7)</sup> 일반인들은 ‘신문’ 하면 뉴스페이퍼가 생각이 날 것이고 ‘심문’ 하면 법정을 떠올릴 텐데 그는 굳이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신문(訊問)’은 법원 등 국가기관이 피고인 등에게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  
관련 증거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한에 ‘범위반’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었지만 선관위원들의 표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문제를 총선 결과와 연계 시켰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한 범위반이다.  
이 밖에도 경선자금, 불법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측근비리 등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심각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작금의 경제파탄, 외교불안 등은 국정운영을 소홀히 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인데 이 역시 헌법적, 법률적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행위이다.  
그리고 냉철한 법의 심판보다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여론은 문제가 있다.<sup>8)</sup>

7) 「김기춘 “필요하면 대통령 직접신문”」, 〈연합뉴스〉, 2004. 3.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591461>, 2018. 6. 10.

8) 「탄핵심판 창과 방패-김기춘」, 〈연합뉴스〉, 2004. 3.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591683>, 2018. 6. 10.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김기춘의 답변은 ‘법치주의’였다. ‘법을 위반해놓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문제가 중하다는 것’이다.<sup>9)</sup> 당시 탄핵 정국에 반발하며 강력하게 벌어지는 촛불집회에 관해서도 ‘집단시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있으니 ‘냉철히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훈수를 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약 두 달 후인 5월 14일에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흥미로운 점은 하광룡 변호사 등 다른 소추위원단이 심리 절차 등을 두고 ‘아쉽고 개탄스럽다’는 등의 반응,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식의 발언을 쏟아낸 것에 비해, 김기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담박한 소감을 밝혔다는 점이다.<sup>10)</sup> 법치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대목으로 보인다.

김기춘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1939년생으로 1958년 서울법대에 입학했고 대학교 3학년 당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1963년, 1964년 그는 5·16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5·16장학회에서 이름을 바꾼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낸다.<sup>11)</sup> 1990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안전보장 부문으로 5·16민족상을 받았고<sup>12)</sup> 201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도 맡는다.<sup>13)</sup> 제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와 긴밀한 인연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유신이 이뤄진 1972년에 나는 임용된 지 7년 된 만 32살의 평검사였다.<sup>14)</sup>

9) 김기춘 「대통령 탄핵사유 추가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 2004. 3.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0043933>, 2018. 6. 10.

10) 「‘탄핵기각’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 <연합뉴스>, 2004. 5.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48877>, 2018. 6. 10.

11)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한겨레>, 2013. 12.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738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7380.html), 2018. 6. 10.

12) 「Who Is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BUSINESSPOST>, 2017. 3. 14.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44757>, 2018. 6. 10.

13) 「다시 읽는 ‘김기춘년’... ‘내부자들’ 저리가라」, <한겨레>, 2016. 11. 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3389>, 2018. 6. 10.



1972년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의 암흑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대 위기인 유신 체제로 들어서는 시점이다. 극단적인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신 헌법’을 사실상 김기춘이 만들었다는 한태연의 폭로에 대해 김기춘은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부인한다. 당시 법무부 검사들이 실무작업을 했다.<sup>15)</sup> “한태연 개인 기억의 착오에 불과하다. 나는 프랑스가 비상사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 보고했을 뿐이다.”<sup>16)</sup>

정확히 얼마만큼 유신헌법에 김기춘이 참여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유신헌법을 옹호했는가를 확인해 가는 어렵지 않다.

신생민주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동요의 중요한 원인이 서구식 민주제도를 맹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견제와 균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반목·갈등에 있음을 간취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우리사회에 있어서 정치과잉 현상 때문에 그동안 빛어낸 자원, 정력 및 시간의 낭비가 얼마나 컸었던가는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익히 보아왔고 많은 반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sup>17)</sup>

그가 쓴 ‘유신헌법 해설’의 일부이다.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물론 ‘푸에토리코’, ‘월남’, ‘에집트’ 사례까지 끄집어낸 것은 물론 박정희 정권 당시 흔히 사용되던 ‘한국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토착화’ 같은 단어 역시 수차례 반복해서 쓰고 있다. 유신헌법에 대한 해설을 넘어 적극적인 강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갖춰진 다음 해, 1973년 김기춘은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부장 검사급)으로 승진한다. 고시 2년 선배인 정해창의 증언에 따르면 ‘유신체제의 법령 입법과 개정의 공로와 실력이 높게 평가되어 유례없이 발탁’ 되었다고도 하는데 당시 대부분 사법고시 8회 합격자들이 승진하는 과정 중에 12회 합격자인 김기춘의 승진은 매우 인상

14) 앞의 기사.

15) 「편파적... 애들 장난도 아니고... 친북좌파임 증명」, 〈오마이뉴스〉, 2004. 2.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42103>, 2018. 6. 10.

16) 「유신헌법 초안 의혹 김기춘, 이젠 대통령 탄핵 검사로」, 〈오마이뉴스〉, 2004. 3.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47&aid=0000043860>, 2018. 6. 10.

17) 「김기춘, “유신헌법 해설”」, 『검찰』 제4집 통권 제48호, 대검찰청, 1972, 40-42면 중,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p.245에서 재인용.

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1973년 말 그는 중앙정보부로 자리를 옮겨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이 된다.

이후 김기춘은 각종 중요한 시국사건 담당자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즉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 당시 암살범으로 지목된 ‘문세광’의 심문에서 큰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해 이미 35세의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승진한다.<sup>18)</sup> 민청학련사건(1974), 장준하암살사건(1975)을 비롯하여 서슬 퍼런 유신시대의 인권유린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을 견지했을까.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했으면 오늘날 김기춘은 없다.<sup>19)</sup>

200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은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게 아니’ 라면서 소위 ‘고문기술자’로 지칭되는 국회의원 정형근의 이름을 거론하자 펄쩍 뛴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재판과 소송을 대신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을 만들었고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라면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1975)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1988)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0)

그가 전면에 나섰던 사건들이다. 유신시대 대공수사국장으로 직접 발표했던 ‘11·22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1975)’은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났다. 고문과 폭력에 근거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였던 강종건은 김기춘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뒤늦게 그의 존재를 알았고 다만 당시에는 CCTV를 보면서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고문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sup>20)</sup> 직접적 증

18)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한겨레〉, 2013. 12. 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738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7380.html), 2018. 6. 10.

19) 「고문수사 했으면 오늘의 나 없다」, 〈오마이뉴스〉, 2005. 7.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6941>, 2018. 6. 10.

20) 「우리를 버린 건 조국이 아니라 박정희」, 〈오마이뉴스〉, 2016. 5. 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08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087)

거는 없고 재심이 이루어졌고, 무죄가 판결<sup>21)</sup>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 피디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의 대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였을 뿐이다. 노태우 정권 당시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검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sup>22)</sup>으로 소신을 피력할 정도였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김기춘은 법치주의자라 할 수 없다. 충분히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했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반공주의자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이 또한 부분적으로 정답일 수밖에 없다.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범주를 충분히 넘어서고 반공주의만을 강조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체성이 훨씬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 2. 출세주의자?

김기춘은 단순히 법조계 내에서 유능함으로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인맥을 구축하고 소위 ‘연줄’에 의지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젊은 검사 김기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1971년 6월 신직수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두 달 후에 김기춘은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발령이 난다. 다시 1973년 말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이 되자 김기춘은 중앙정보부장 법률보좌관이 된다. 그리고 또다시 1979년 신직수가 대통령 법률특보로 가면서 김기춘은 법률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얼마 후 10·26사태로 대통령 박정희가 서거를 하면서 유신체제가 무너지던 중에 김기춘은 검찰로 복귀,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된다.<sup>23)</sup>

이 시기 김기춘이 중앙정보부에 있던 1977년 ‘20사단 대대장 월북사건’이 터진다. 현역 대대장이 사병까지 대동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참으로 드문 사건인데, 이로 인해 군에

&PAGE\_CD=N0002&BLCK\_NO=&CMPT\_CD=M0123, 2018. 6. 10.

21) 「김당의 나까프 6. ‘신(新) 김기춘년’ (2): 신직수가 찍은 김기춘, JTBC ‘스모킹퀵’에 쓰러져, <오마이뉴스>, 2017. 1.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90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902), 2018. 6. 10.

22) 「편파적... 애들 장난도 아니고.. 친북좌파임 증명’, <오마이뉴스>, 2004. 2.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720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67207), 2018. 6. 10.

23) 「김당의 나까프 6. ‘신(新) 김기춘년’ (3): 김기춘 위기에 빠트린 사건 세 가지의 결말,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423](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423), 2018. 6. 10.

는 큰 파장이 일어난다. 암호체계, 전술교범, 훈련체계 등을 바꾸는 등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군대내 정보기관인 보안사가 이 사건을 대강 덮으려고 했다.<sup>24)</sup> 사건의 핵심에 대대장과 보안사의 갈등, 그리고 보안사의 횡포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담당자가 김기춘이었던 것이다.

10·26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고 이를 진압 수사한 것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붕괴는 중앙정보부에서 보안사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한다. 즉 1970년대 후반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김기춘은 권력이동기인 1981년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 부장으로 발령 받는다.<sup>25)</sup> 좌천성 인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사실상 6년간 한직에서 시간을 보낸다. 노태우와 각별한 사이이자 ‘공화국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은 자신의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김기춘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에게 수차례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허화평의 도움으로 몇 차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관직을 지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두환 정권(11~12대, 1980~1988) 동안 간신히 연명했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권(1988~1993)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승진의 발판이 된 듯하다.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김기춘은 허화평을 제외하고 5공인사 49명을 구속하면서 ‘5공비리 청산’<sup>26)</sup>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한다. 김기춘은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1990년대 초반 대학교 운동권의 강력한 저항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의 일이다.

하지만 위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립내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접대를 좀 해 달라... 아 당신들이야 지역발전을 위해서이니 하는 것이 좋고..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거야.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 광고주들 모아 기자놈들 돈 주면서...<sup>27)</sup>

24) 앞의 기사.

25) 「특집 : 청와대의 백투더 패스트, 늙은 총복에 얽혀 과거로 달리는 박근혜」, 『주간경향』, 2013. 8.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25960>, 2018. 6. 10.

26) 「5년마다 되풀이되는 전·현 정권 갈등...향배 주목」, 〈연합뉴스〉, 2018. 1. 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50100001.HTML?input=1195m>, 2018. 6. 10.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유명한 사건인데 당시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김 영삼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던 도중이었다.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박일 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교육청 교육감,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곳에서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세간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지역감정 문제’ 혹은 ‘선거역풍’ 같은 정치적 관점에서 다룬다. 하지만 적어도 김기춘 개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난관을 법으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징역 1년

김기춘은 과감하게 ‘위헌제청’을 신청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김기춘에 관해서는 ‘공소 취소’로 마무리 짓는다. 법을 아는 자의 법리 투쟁이 승리를 거두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sup>27)</sup>

이후 김기춘의 행보는 ‘김영삼-이회창’으로 이어진다. 거제 출신인 김기춘은 동향의 김영삼과는 경남고 선후배였고 1996년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연이어 3선 의원이 된다. 대통령 동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일축하행사에 명사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회창은 두 차례 대선에 나와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고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 김기춘은 두 정부와 싸우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전력투구하는 모양새이다. 탄핵을 전후로 친일규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전면에 나섰으니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 소위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과 ‘친박근혜’의 계파 투쟁 가운데서 ‘공천학살’을 당하면서 그는 강요된

27) 「김당의 나카프 6. ‘신(新) 김기춘년’ (4): “난 깨끗한 비단옷 입은 아낙네” 김기춘 ‘악의 평범성’ 보여주다」, 〈오마이뉴스〉, 2017. 5. 6.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7202](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7202), 2018. 6. 10.

28) 「김당의 나카프 6. ‘신(新) 김기춘년’ (3): 김기춘 위기에 빠트린 사건 세 가지의 결말」, 〈오마이뉴스〉, 2017. 1. 4,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423](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423), 2018. 6. 10.

정치 은퇴를 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사회활동은 계속된다. 그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제8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제2~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직을 맡는다. 법조계 인사 혹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지 않는 동안에도 막강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이명박의 라이벌이자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 정국을 극복해낸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다. 여러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내 썩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직을 맡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그는 다시 한 번 우뚝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다.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뒤늦게 제기되었지만 김기춘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다. 면역세포 원정치료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총 2천여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되어야 하지만 446만 원만 냈고 일부 치료는 가족도 함께 받았다.<sup>29)</sup> 농심과의 특별한 인연도 문제가 된다. 1989년 삼양식품에 치명타를 입혔던 '공업용 우지 파동'은 결국 무죄 판결이 되지만 이미 직원 천여 명이 회사를 떠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다. 그가 2008년 '공업용 우지 파동'의 최대 수혜기업인 농심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으니 '보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sup>30)</sup>

이 뿐이 아니다. MBC의 자회사인 iMBC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기춘을 비롯한 고영주 이사장,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 허연희 전 iMBC 사장 등과 동행한 가운데 뉴코리아CC에서 호화골프를 즐겼으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도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sup>31)</sup>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도 10만 볼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해드렸고..<sup>32)</sup>

29) 「'특혜·원정'까지...갈수록 증폭되는 '차병원-김기춘' 의혹」, JTBC, 2016. 11.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9278&fcode=PR10000403](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9278&fcode=PR10000403), 2018. 6. 10.

30) 「농심, 김기춘과 '특별인연' ... 이제 '특별부담'으로」, <연합뉴스>, 2017. 2.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146700030.HTML>, 2018. 6. 10.

31) 「MBC노조 "고영주 김기춘 MBC 자회사서 골프 접대」, <한국일보>, 2017. 10. 17.

<http://hankookilbo.com/v/5216ed86095546f29582204586643769>, 2018. 6. 10.

32) 「속보: 성완중 '김기춘·허태열 금품 폭로' 녹음 파일 공개」, <한겨레>, 2015. 4. 10.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었고 이후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인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술한 의혹의 사실 유무를 논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김기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대강이라도 그를 둘러싼 사회적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을까. 법치주의, 엄벌주의, 반공주의, 출세주의, 연고주의, 박정희 집안과의 특별한 인연, 탁월한 인맥관리와 언제나 사회 지도층으로 머물 수 있는 확실한 능력 그리고 용공조작, 부정부패 등등 수많은 단어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김기춘은 극히 출세지향적이었으며 수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듯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모진 한국현대사의 축소판으로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하지만 마냥 출세지상주의자였다면 그의 마지막, 비서 실장으로서의 치열한 활동이 이토록 단순하고 폭력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 3.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지도자

문화권력이란 순수·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한다)

2008년 8월 28일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서두이다.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시작되는 이 문서는 고작 6장 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 문서는 ‘우파와 좌파의 행태 차이’를 분석하면서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를 분석한다.

보수를 대표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은 외형과 자리다툼에 치중할 뿐 구심점의 기능은 상실했다.

좌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을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세력이 됐다.

더구나 2002년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등 700여 명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노문모)’을 결성하면서 권력집단이 돼버렸다.

또한 이들은 문화부, 각종위원회 및 기관, 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자본의 힘에 매우 익숙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들은 ‘문화’를 통해 국민의식을 ‘좌경화’시키는 데 특히 반미정서와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영화 <괴물>, <공동경비구역JSA>, <효자동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급한다. 영화에 투자한 자본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과 수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열심이다.

어떡할 것인가? ‘건전한 우파’를 중심으로 문화권력을 재편성해야만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해야만 한다. ‘좌파집단’은 ‘소리 없이’ 인적청산을 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고사’시켜야 한다.

이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물리적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이 소유한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를 물색했으며 ‘20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하며 무엇보다 ‘CJ, KT, SKT’ 그리고 ‘메이저신문’과 협력하여 자본의 투자 방향은 물론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도모할 방안이 담겨있다. ‘청와대(BH)는 총괄기획을 담당하며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하고 문화부는 새로운 우파세력 육성을, 기재부는 대규모 예산 지원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원 계획까지 세운다.

이 문서는 5년여 흐른 2012년 당시 국회의원 정청래에 의해 폭로가 된다.<sup>33)</sup>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전후 관계를 파악하거나 보다 조직적인 정책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소위 보수진영에서 이런 식의 ‘통념’이 일반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33) 「문화예술계 “靑”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은 현대판 분서갱유” 비판」, <뉴스1>, 2012. 7. 25. <http://news1.kr/articles/?751882>, 2018. 6. 10.



이념편향적인 것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 보조금 지원 관련 종합계획을 만들어보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이 취임 후 2개월 뒤인 2014년 10월 15일에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받은 지시사항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작성된 상태. 장관 김종덕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송OO에게 종합계획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획조정실은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한다.<sup>34)</sup> 내용은 종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목 그대로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분야별로 나뉘어서 보다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기준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금액을 20~40% 축소하며 동시에 1차 심사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자.  
 ‘과도한 정치편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특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편향 인사’를 배제하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며 또한 정부출자펀드의 경우 사전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자.

보고서에서는 ‘배제’, ‘개선’, ‘강화’라는 말이 반복된다. 좌파 인사를 배제시키고, 기존 제도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사전심이나 예산삭감 등 구체적인 실행 강화를 분야별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지원 사업, 광주를 비롯한 지역 비엔날레 지원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 영화제 지원, 한국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선정 사업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업에 관하여 수년전 스스로 예언했듯 소위 ‘돈 줄을 쥔’ 각종 전략이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보고서와 실행 체계는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내려놓은 2015년 2월 이후에도 계속된다. 차이가 있다면 계획이 실행되면서 기존과는 납득하기 힘든 공모탈락 단체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검열 의혹’ 논란이 문학, 연극, 미술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배제보다는’ 청와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보다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이 모색된다.<sup>35)</sup>

34) 「김종덕 “박근혜 ‘잘못된 영화, 문체부가 관리하라’ 지시”」, <로디프>, 2017. 9. 7.  
<http://www.lawde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7>, 2018. 6. 10.

35) 「감사원, 감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2017. 6.

여하간 강력하고 구체적인 구상과 실천은 김기춘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시기 김기춘은 의지와 열정에 충만하다. 일명 ‘박준우 수첩’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박준우가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기록한 비망록에는 빼곡히 비서실장 김기춘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내용이 적혀 있다.<sup>36)</sup>

비정상적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2013. 8. 21)  
 천안함(영화).. fund 제공자 용서 안 돼(2013. 9. 9)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 용서 안 돼(2013. 9. 9)  
 각 분야의 증복·친북 척결 나서야(2013. 9. 9)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2013. 9. 11)  
 비서가 악역을 해야... 적당 타협 안 돼(2013. 9. 11)  
 일전불사의 각오로(2013. 9. 11)  
 증복, 좌파 끌어내야 모든 분야 침투(2013. 9. 11)  
 조용히, 단호하게 정리해 나가야, 정권토대 굳건히 할 수 있는 조치(2013. 9. 26)  
 인사: 능력보다 국정철학 공유 의지 중요(2013. 10. 23)  
 “변호인”, “천안함” - 어제 점심 울분...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 모두 함께 고민, 분발(2013. 12.18)  
 (VIP당 최고위 송년 만찬)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 MB 때 한일 없어”(2013. 12. 19)

김기춘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주도면밀한 인사 정책을 추진한다. 애초부터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면전에서 과감함을 불사하는 스타일인 듯하다.

친박입니까, 친이입니까?

2014년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의화가 면전에서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들었다는 말이다.<sup>37)</sup> 문화체육관광부 전 실장 최규학의 증언<sup>38)</sup>에 따르면 박근혜

36) 일명 ‘블랙리스트 재판’ 도중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당일 특검팀이 공개한 수첩이다. 일명 ‘박준우 수첩’ ‘증제785’로 관리, 박준우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과의 진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박준우 前수석 수첩 공개…김기춘 ‘영화 천안함 용서 안돼」, 〈서울경제〉, 2017. 5. 4. <http://www.sedaily.com/NewsView/1OFSJB7WMT>, 2018. 6. 10. 이후 법정 공판에서 신동철 등은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기도 한다. - 「신동철 “블랙리스트 문건, 부속실에 보고”」, 〈로디프〉, 2017. 9. 8. <http://www.lawde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2>, 2018. 6. 10.

정부 들어서 압박의 강도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여기를 지원해줘라’는 식으로 선별 지원 지시가 내려오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여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배제’가 아니었고 ‘명단을 내려 보내고 안 따르면 나가라는 식’으로 대놓고 압력 넣는 일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처음 겪었다는 것이다.

시점을 정확히 집어본다면 2014년 5월경 비서실장 김기춘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지시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15년 5월 초순에 최초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 비서관 김소영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조현재에게 전달된다.

이거 당신들이 만든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냐?

조현재 1차관의 질문에 대해, ‘기준’에 대해 김소영 비서관은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

정부 쪽에서 받아온 명단이다. 잘 적용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꼭 가져가서 장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진룡이었다.<sup>39)</sup>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 있고 대통령 박근혜의 막강한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진룡 장관과 관련 당사자들은 ‘소극적 대응’을 시도한다.

장관은 물론 관련 업무 1급 실장들을 비롯한 부서의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은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OO, 총무실장 김OO, 문화콘텐츠실장 신OO 등과 협의하여 ‘배제 요청이 청와대로부터 오면 개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37) 「회고록 낸 정의화 “2014년 김기춘이 묻더라, 친박이나 친이냐”」,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75306>, 2018. 6. 10.

38) 「“김기춘 오더가 왔군요” 다음달 “직을 면함” 전자결재... 문체부 최규학 전 실장 인터뷰」,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38716>, 2018. 6. 10.

39) 당시 정황에 관해서는 유진룡 장관이 언론과 법정에서 수차례 자세히 진술을 하였다. 대표 관련 기사 - 「유진룡 전 장관, “청와대가 문체부 국장·과장 인사 개입”」, 『시사인』, 2014. 12. 5.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1917>, 2018. 6. 10.

「유진룡 “블랙리스트, 수시로 김기춘 지시라고 내려왔다”」, 〈노컷뉴스〉, 2016. 12. 26.

<http://www.nocutnews.co.kr/news/4707369#csidx6bc289a8ae0480487cc45e8ae2df17d>, 2018. 6. 10.

거절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끔씩은 TF 회의를 한다는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기로만 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편 가르기를 해라. 그리고 내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라.

유진룡 장관 뿐 아니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급 실장들이 김기춘에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이며 초기 대응은 ‘모양새는 갖추되 예외조항 등을 두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것인데 실패하고 만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포용론을 펼치며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던 유진룡 장관은 2014년 7월경에 면직, 조현재 차관 역시 경질된다. 그리고 이들에 동조했던 기획관리실장 최OO, 종무실장 김OO, 문화콘텐츠실장 신OO 등은 모두 ‘성분불량자’로 분류, 사표 제출을 요구받는다.

성향확인.. 중요부처 실국장 동향 파악

고 김영한 업무일지<sup>40)</sup>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기춘은 직접 새로 임명된 김희범 1차관에게 연락하여 성분불량자 3인방에 대한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유진룡 장관의 뒤를 이은 김종덕 장관에게도 재차 지시한다. 결국 2014년 9월 18일경 성분불량자 3인방을 포함한 실장 6명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다. 나머지 3명은 모양새를 갖추고자 한 것이었고 국정감사를 염려하여 1개월간 사직서 수리가 미뤄진 후 결국 일괄 처리된다.<sup>41)</sup>

어디 이 뿐인가. 블랙리스트 사업은 곧장 문화체육관광부 여러 직원들의 ‘좌천, 인사 조치’ 등으로 이어진다. ‘창비 등 진보성향의 문예지를 지원’한 이유로 김OO 국장(전 예술정책관)은 장관 질책 후 인사 조치된다. 비슷한 이유로 정OO 과장(전 출판인쇄산업과장) 역시 출판문화진흥원 관리 부족으로 국립국어원으로 전보조치되었고 김OO 전 콘텐츠정책관, 김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윤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은 영

40) 김영한 업무수첩 관련 내용 역시 언론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졌다. 김영한 업무수첩 입수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 기사 참고 -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명해져 갔다」, 〈한겨레〉, 2017. 1. 27.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023.html](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023.html), 2018. 6. 10.

41) 「거부할 수 없던 협박...사과와 부끄러움은 누구 몫일까」, 『한겨레21』, 2017. 6. 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201.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201.html), 2018. 6. 10.

화 〈다이빙 벨〉 등 현안 관련으로 미숙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찍혔고’ 일괄적으로 서면 경고를 받는다. 김OO 국장(전 예술정책관)의 경우 〈개구리〉 연극 공연 논란 이후 실장 진급에 수차례 누락되었고 ‘좌파인사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강OO 사무관(전 예술정책과 사무관) 역시 저작권 정책관실로 인사 조치가 된다.<sup>42)</sup>

이런 식의 인사 조치는 법정 증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문화공간 인디스페이스에서 〈자가당착〉이 상영되자 문OO 부장이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장에서 보직 해임되어 직급이 부장에서 부원으로 강등, 근무지까지 바뀐 사실을 김OO이 증언했으며 이 OO 사무관은 1단계도 아니고 2단계 강등이라고 증언하였다.<sup>43)</sup> 또한 이OO는 보수 언론지인 ‘미래한국 기사를 보고 청와대에서’ 경고가 있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재호 출판진흥원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해서 실제 사표를 수령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다.<sup>44)</sup>

검찰을 진두지휘했던 경험, 각종 공직에 몸담으면서 공무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조직 세계의 운영 원리에 능숙한 김기춘은 몇몇 장애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현실화’하려고 한 것이다. 머리가 손발 노릇까지는 할 수 없을 터 관료제와 몇몇 충성스러운 혹은 순응적인 장관들을 활용하면서 말이다.

#### 4. 피고 김기춘 - 최후가 될 것인가?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의 점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의 점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의 점  
영화 관련 지원배제의 일 - 동성아트홀, 인디플러스,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도서 관련 지원배제의 일 - 2014년 세종도서 관련, 2015년 세종도서 관련

판결문<sup>45)</sup>에 나와 있는 대강의 그의 범죄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과 변호인들은 매우 꼼꼼하게 무죄를 강변하고 있다.

42) 이후 이들의 인사 조치는 다음 기사 참고 - 「문체부, ‘블랙리스트’ 논란 부서 물갈이인사」, 〈한국일보〉, 2017. 2. 2. <https://www.hankookilbo.com/vv/ec9b1db0bab9415782e68a865cd97ea8/1>, 2018. 6. 10.

43) 법정증언, 2017. 5. 19.

44) 법정증언, 2017. 5. 10.

45)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사건 2017노2425, 2017노2424), 2018. 1. 23

본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적법하다.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특별검사가 일부 관련자들만 선별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위증으로 몰아 고발한 것 역시 부적법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관한 내용들에서 사실이 오인된 부분이 있으며 법리 또한 오해되어 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용하고 있다.

어차피 김기춘 인생 전체에 대한 판결도 아닐뿐더러 핵심은 ‘권한남용’, ‘강요’ 등의 법리적인 다툼이다.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결과가 달랐지만 결국 판결 기준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상의 다원성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는 원론적 가치와 구체적인 ‘직권남용’을 둘러싼 지난한 공방이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단, 공소사실 중 사직강요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은 무죄였다. 2심은 징역 4년인데 1심에서의 부분적 무죄에 대한 입장이 번복되면서 형량은 조금 늘었고 연극계를 비롯하여 탄압의 대상이었던 문화예술계는 판결의 결과를 크게 반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여 여러 차례 훈장을 받기도 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심 판결 당시 개별적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정상 참작 내용이다. ‘술 마신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듯 ‘고령과 건강상태’를 따졌다는 부분이 참으로 의아한데 무엇보다 공직자였다는 점, 오랫동안 일했다는 점, 훈장을 받을 만큼 공직 업무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점은 지나온 그와 그의 시대를 고려한다면 납득하기 힘든 정상 참작이다.

수감된 상태에서도 김기춘은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특히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사례를 참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공무원 숙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표를 받은 후에 선별 수리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든 것이다. 성분불량자 3인방에 대한 변칙 사표 수리에 관한 방어 명분으로 직접 과거 대법원 판례를 끌어들였고 이 밖에도 2003년 3월부터 2014년 12월 각 부처에서 벌어진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 사례 11건을 제시하기

도 한다.<sup>46)</sup>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2·12 군사반란 이후 무력으로 권력을 거머쥔 전두환 정권이 헌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5·18광주민주항쟁 등을 짓밟으며 소위 ‘사회정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을 대거 몰갈이했던 사건이다.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보안사의 원한을 샀음에도 간신히 위기를 돌파하면서 연명을 거듭했던, 어쩌면 본인이 당할 뻔했던 서슬 퍼런 독재정권 시절의 사례를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인용한 것이다.

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인가. 아니면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인가. 혹은 사회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법리만으로 세상을 판단해온 탓일까. 여하간 적어도 김기춘의 입장에서 재판이란 현실과는 무관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각개의 법리적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비록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적당히 형량을 채우거나, 가능하면 판결을 빌미로 면죄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김기춘은 지난 한국 현대사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한 개인의 인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다지 의미 있는 과정도 아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김기춘이라는 인격을 통해 지난 한국 현대사가 얼마만큼 ‘법치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출세주의’ 같은 것들이 상호 모순적이며 모호하게 발전해왔는지를 가늠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말년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행태들이다. 수사의 초점이 김기춘에게 집중되고, 수많은 연루자들이 밀어올리기 식으로 증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수많은 증거자료 가운데 드러난 김기춘은 그저 충직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확신과 열정에 찬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종국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끔찍한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만다.

김기춘이라는 작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결코 판결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김기춘이라는 인격을 만든 대한민국의 사회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권력자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관료제도의 한계 같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6) 「단독: 김기춘의 ‘아~옛날이야’... “80년 국보위 8000명 숙정도 합법’ 판결 참고하라”, 〈중앙일보〉, 2017. 4. 22. <http://news.joins.com/article/21500458>, 2018. 6. 10.

## 제2절 | 논란이 된 작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 블랙리스트의 텍스트성과 폭력의 징후들

박현선\*

## 1. 서론

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이를 대신해 청소년보호법, 영상물등급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수집 등 여러 가지 방식의 규제와 감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열을 담당하던 국가기구<sup>1)</sup>가 사라진 지 이미 20여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그 족쇄가 끊어졌다고 믿었던 검열 정치의 폭력적 손길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얼마나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계 각 단체와 사람들에게 뻗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 2016년 10월의 촛불 혁명과 더불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2013년 봄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그리고 그 해 여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은 이후 문화계 안과 밖을 속속들이 들쭉시며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를 향한 취임식이였다. 김기춘을 몸통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검열 정치는 이전 보수집권세력인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마련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냉전 분파주의적, 권위주의적 통치술을 뒤섞어 검열-배제-지원이라는 자신들만의 묘약을 만들어냈다. 이 묘약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화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sup>2)</sup>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처방전으로, 사회정치적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율성과 권리를 지닌 문화계 인사들 모두를 타겟삼아 실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김기춘의 블랙리스트 통치는 검열이 위헌인 국가에서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위법적인 사태로, 그 비정상성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 볼 수 있다. 작동방식과 형식,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째, 블랙리스트의 작동방식과 관련해서 비정상성은 제도적 검열이 폐지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최고위 권력자에 의해 사태가 시작되고 추동되었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의 수행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

\* 서강대 연구교수, 『문화과학』 편집위원

- 1) 한국에서 공개되는 무대공연물, 영화, 가요, 음반, 비디오 등과 이러한 공연물의 공연광고물을 심의했던 종합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는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등급제 체제로 진입하면서 사실상 해체된다.
- 2) 김기춘은 블랙리스트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진보세력에 편향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바로잡으려는 정책수행이었다고 주장한다.



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문화체육관광부-예술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 라인이 자리하고 있다.<sup>3)</sup> 이는 이전의 보이는 기구로서의 검열, 즉, 법령과 검열관이 존재하는 체제로서의 검열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가시적인 검열 효과’를 만들어내고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환경 내부의 자율적 비판성을 뿌리째 도말하려는 노력이었다. 둘째, 블랙리스트 검열의 형식적 기술의 핵심에는 ‘배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통치술이 자리해 있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일 것이다. 지배 권력의 두려움이 특정 문화 혹은 예술인의 배제를 낳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해 신경증적 지원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돈’을 매개로 특정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과 국가라는 지배 권력이 자본의 역할을 직접 맡아 문화생산을 관리하는 전제정치적 발상이 기이하게 결합된 형식이다. 셋째, 블랙리스트 사태의 비정상성은 그 시대착오적 정신과 내용에 있다. 마치 해방 후의 제도적 검열이 냉전 체제의 규정력에 의해 좌우된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그 수사학과 키워드들을 들여다보면 북한, 중북, 좌편향, 체제전복, 시국사건 등 이데올로기 전쟁으로서의 냉전 정치학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립을 그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sup>4)</sup>

블랙리스트 사태는 은폐된 검열 정치로서의 비정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뚜렷한 사실은 블랙리스트 검열이 독해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징후이자 담론이라는 사실이다.<sup>5)</sup> 블랙리스트 검열은 억압적 문화작용으로서, 미학적이고 언어적 수사학으로서, 혹은 경제적 배제 지원으로서 작동되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과 예술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행된 문화정치적 폭력을 담론화할 수 있는 징후이자 그 징후를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들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블랙리스트 검열을 지배 문화의 뚜렷한 텍스트성과 통치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 스스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텍스트성들이 검열되고 배제되거나 혹은 지원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희생양 혹은 매개물이 되었던 텍스트들을 통해서 답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형의 〈개구리〉 공연, 흥

3) 이현호, 「‘검열연구’의 현재와 열려진 가능성」, 『검열연구의 향방, 그 3막 앞에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발표 자료집, 2017년, 11-12쪽.

4)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집회의 대중심리와 한국 보수우익집단의 냉전적 신화 만들기에 대해서는 줄고, 「태극기집회의 대중심리와 텅 빈 신화들」, 『문화/과학』 91호, 문화과학사, 2017을 참조.

5) Francesca Billiani, “Assessing Boundaries: Censorship and Translation,” *Modes of Censorship and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2014, p. 2.

성담의 <세월오월> 전시, 이상호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그리고 신은미의 여행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등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텍스트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매체별, 시기별로 대표적인 피해 작품들을 집중 조명해봄으로써, 일종의 비정상적 담론이자 폭력적 통치술이라는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검열과 그 배제 지원의 역학과 텍스트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박근형의 <개구리> 공연

### 가. “용서할 수 없는” 작품

2013년 9월 경 국립극단 기획으로 공연되었던 연극 <개구리>(2013.9.3.~9.15.)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징후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자 박근혜 정부의 내재적 불안을 건드린 문제작이다. 먼저, 어떻게 <개구리>가 블랙리스트의 징후적 예시가 되었는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밝힌 바대로, 2013년 당시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본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위한 첫 공식 모임에서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과 검열을 시도했다는 사실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구리>가 문제적 작품으로 등장한 것은 다양하고도 동시다발적인 채널을 통해서다. 먼저, 연극이 개막한 후 3-4일이 지나지 않아,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이었던 김 OO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연극을 보게 된다. 이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년 9월 9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이 제기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는 김기춘의 당시 발언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백승우 감독, 2013)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해서 <개구리>에 대한 적개심도 함께 표명하고 있다.<sup>6)</sup> 같은 날,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조운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이 지원방

6) 김기춘의 발언을 모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중복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 2017공9【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김기춘이 언급한 <개구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며칠 후 공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의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이 민간 극단이 아닌 국립 극단에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다.<sup>7)</sup> 기사가 보도된 2013년 9월 12일은, <개구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시가 있는 후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가 최종 완성되어 청와대에 보고된 날이기도 하다.

김기춘의 분노, 청와대의 문제제기, 문체부의 대응,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 <개구리>를 둘러싸고 불과 며칠 사이로 매우 분명하고 신속한 검열 논의가 공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맥락과 동시에 내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 역시 <개구리>의 블랙리스트 텍스트성을 조망하는 데 간과할 수 없다.

앞서 말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는 공연 개요, 주요 내용 검토,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내용상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들로,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한 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을 풍자”한 점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 사항’을 별도의 글상자 속에 기입하여,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8)</sup> 이 문서의 내용과 상응하는 진술로, 박근혜는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보신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9)</sup> 또한, 참고인 김재엽은 <개구리> 공연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전에 박근혜 연출가에게 손진책 예술감독이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10)</sup> 특히, 연극의 결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대신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 역시 손진책 예술감독과 박근혜 연출의 대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되

7)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12.

<http://news.joins.com/article/12589817#none>.

8) 김OO,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12.

9) 2017공9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10) 2017. 10. 22. 2017공9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었다.<sup>11)</sup> 손진책 예술감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은유와 풍자보다 지나치게 직설 화법이 많은 게 다소 유감이지만, 이런 연극을 현재 상황에서 국립극단이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sup>12)</sup>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 미루어 그가 블랙리스트 검열의 적극적인 수행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후 손진책 감독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서의 향후 조치계획 중 하나로 명시된 바대로,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하라는 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임기를 마치는 대로 국립극단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김OO 예술국장은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큰일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하여서 대책마련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했는데 공연 중인 작품을 중단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손진책 예술감독을 해임하기보다는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sup>13)</sup>

## 나. 노무현, 박정희,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의 연출을 맡은 박근형은 극단 골목길 대표로, 극작과 연출을 겸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의 습작기를 거쳐, 2005년 〈선착장에서〉 이후 〈경숙이 경숙아버지〉, 〈돌아온 업사장〉, 〈너무 놀라지 마라〉 등의 작품을 연달아 내놓으며 200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 잡았다. 주로 “삼류인생의 밑바닥 언어로 사회를 풍자하고 비트는” 이 연극들은 박근형식 블랙코미디의 세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4)</sup> 이후 그가 연출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2015년 창작산실 지원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포기를 강요받고 지원에서 배제되었는데, 이는 〈개구리〉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사례가 되며 블랙리스트 검열에 대한 연극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개구리〉의 원작은 아리스토파네스의 동명 희극으로 BC 405년 작품이다. 사실 〈개구리〉는 2013년 국립극단 가을마당 기획공연으로 백성희장민호극장에 3편의 아리스토파네스 희극들 중 한 편이다. 국립극단의 아리스토파네스 3부작은 박근형 극본·연출의 〈개구리〉(2013, 9.3-9.15), 남인우, 김민승 극본, 남인우 연출의 〈구름〉(9.24-10.5), 윤조

11) 2017공9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12) 〈중앙일보〉, 2013. 9.12. 앞의 기사.

13)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14) 김옥란, 『레드와 블랙』, 소명출판, 2018, 79쪽.

병극본, 윤시중 연출의 <새>(10.22-11.3)의 순으로 공연되었다. 기원전 5세기, 희극 형식 속에서 아테네의 당대 사회의 문제를 풍자하고 비판한 아리스토파네스의 방식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무대화하는 데 충분히 시의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쓰여진 <개구리>는 당시 전쟁과 궤변으로 어지러운 아테네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시인들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연극의 수호신 디오니소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비극시인을 데려온다는 이야기다. 원작의 저승여행기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사회적 혼란을 시와 예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리스토파네스의 희망을 비틀어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혼란스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저승에서 과거의 정치 지도자를 모셔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각색하였다. 한국판 <개구리>에서는 원작에서의 디오니소스를 신부로 그리고 재치가 뛰어난 그의 하인 크산티아스는 신부의 조카이자 동자승으로, 그리고 저승의 문지기인 뱃사공 카론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뱃사공으로, 술집 여주인은 괴팍한 마고할미로, 저승의 신 플루톤은 동양식 염라대왕으로 변형되었다.<sup>15)</sup>

<개구리> 공연은 동자승이 ‘그 분’을 찾으러 저승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광대들이 그들과 동행하고, 저승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좌충우돌로 진행된다. 무대는 반원형의 경사진 언덕이 주를 이루는데, 무대 뒤 배경으로 허름한 천이 가리워져 있고 무대 위는 판자로 대강 덧붙인 소박한 형식이다. 평론가 하형주는 이 무대 공간의 장치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경사진 부분이 올라가면서 저승의 나룻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인물들이 저승에 도착하면 이 경사가 더 올라가 마치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두 앞발을 벌린 모습을 해 무대 자체가 한 마리의 개구리가 앉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시끄럽게 무의미하게 울어대는 모습들은 이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소박하지만 상징적인 무대를 구성하고 있다.”<sup>16)</sup>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공간 위에서 <개구리>는 배를 태워주지 않으려는 뱃사공과의 말씨름, 그에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해주며 다독이게 되는 사연, 그리고 저승가는 길에 만난 개구리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도깨비

15) 하형주, 「현실에 대한 통찰의 부재: <개구리><구름>」, 『연극평론』 2013년 봄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3, 3. 31쪽.

16) 위의 글, 31쪽.

### [그림 1] <개구리>의 무대와 인물들



와 개구리들의 아귀다툼 등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이들 각 에피소드들에는 분단된 나라의 아픔에서부터 재개발의 폭력과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 그리고 청문회 사건에 관한 레퍼런스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는 사실이다. 신부와 동자승 일행의 저승여행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지옥에서 모셔올 ‘그 분’의 정체가 드러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원작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인물을 택하는 과정에서 두 시인(아이스퀼로스과 에우리피데스)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면, 박근형의 <개구리>에서 그 논쟁의 중심에는 ‘그 분’(노무현 대통령을 암시), 그리고 그에 대결할 인물로 ‘카멜레온’(박정희 대통령을 암시)이 등장한다. 이 둘은 처음에는 저승에서 행해지는 <춘향전>에서 맡은 각각의 역할, 즉 방자와 변사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염라대왕과 마고할멈의 구미에 맞게 각색된 이 <춘향전>은 암행어사와 방자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변사또는 춘향을 능욕하며 승리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원작의 권선징악과는 매우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지옥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부와 동자승 일행은 공연자 무리 중에 ‘그 분’이 있음을 확인한다. 바로 방자 역을 맡은 ‘그 분’ 노무현이다.

<개구리>를 절대 용서받지 못한 작품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후반부 저승 장면에서 드러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 어린 신뢰와 박정희-박근혜 부녀에 대한 비판적 풍자일 것이다. 앞서 말한 중앙일보 기사에서 지나치게 한쪽을 편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근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별로 안 떠올랐다.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띤 거 맞다”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무대 위

에서 숨기지 않았다. 실제 두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캐스팅 방식 속에서, 노무현을 연기한 젊은 배우는 키가 훗칠한 훈남형의 얼굴로 여리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반면, 박정희를 연기한 배우는 콧수염에 선그라스를 끼고 가죽 벨트와 군화를 신고 등장하며 위압적이고 상스러운 인상을 전달한다. ‘그 분’(노무현)은 고뇌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산 자들의 지혜와 방패가 되어 달라는 신부의 요청에 “내게 애초부터 지혜가 있었다면 이런 날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게 어리석은 저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라며 사양을 거듭한다. 이 때 “나도 그 나라를 위해 잠 못 들고 봉사 꽤나 한 사람”이라며 차리리 자신을 데려가라고 나서는 이는 카멜레온(박정희)이다. 사람들이 “앞에선 찢찢매는 척하면서도 뒤에선 수첩공주니 어찌니”하며 딸을 조롱하는 것에 분개하면서, 카멜레온은 세상에 올라가 자신이 아는 “통치의 미학 그 노하우를 딸애한테 전수”시키고자 한다. 이에 대응해 이어지는 양측의 논쟁 속에서 노무현과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비판이 오간다. ‘그분’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끊임없는 공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서 기억과 자존심을 빼앗아간 카멜레온의 과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카멜레온 - 피로 시작하더니?

그분 - 그새 잊은 건가? 왜놈들의 앞잡이가 되고파 손수 혈서를 쓰던 일을, 만주 별판에서의 그 치욕적인 활동을.

카멜레온 - 그땐 어쩔 수 없었던 시대야, 넌 어려서 잘 모를 거다. 사는 것만큼 절박한 시대를 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난 핍박받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 그 먼 길을 갔었지. 그땐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애국하는 길이었어

그분 - 궤변은 여전하시군

게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뒤섞이기도 하는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렇게 변호하고 있다.

카멜레온 - 우리 딸애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컨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이 우라질 것들 요새 아주 염병들을 떨어요. 아니 학교 때 컨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 어디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다시 보자, 아님 퇴학시키자. 아유 이 나참! 부모 없이 혼자 산다고. 지랄을 해요 나 참 어이 없어서! 확 씨발 옛날 같으면 그냥 탕크로 확!

그러나, <개구리>에서 결국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는 카멜레온도 아니고, 그 분도 아닌, 동자승의 어머니다.

그분 - 신부님 당신의 세상 이 아이를 위해 여길 찾아왔다면 나 대신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 가시오.

동자 - 우리 엄마요?

그분 - 그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나간 내가 아니라 아이들 곁을 지켜 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구리>는 동자승과 어머니와 함께 좋은 날을 기약하며 떠나는 일행과, 대신 해서 지옥에 남겨진 신부와의 작별인사로 끝을 맺는다. <개구리> 공연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글을 쓴 임선옥은 특히 공연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소한 아리스토파네스가 균형감각을 갖추면서 두 비극작가를 대결시켰듯이,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를 심도 있게 연구해 정면 대결시키고 극 안에서 설득력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마지막에 노 전 대통령 의도에 따라 동자승의 어미를 올려 보내는 결말을 지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작품의 중심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승에서 이승으로 모셔올 노 전 대통령에게 모두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에 모성신화등장처럼 나타나는 동자승 어미의 이승 출발은 작품의 전체맥락에서 특 떨어져 나와 어리둥절한 결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sup>17)</sup>

작품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더불어 결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언급하는 위 논평자는 <개구리>를 둘러싼 정부의 외압과 블랙리스트 검열에 대해 알았다면 그 어리둥절함이 해소되었을지도 모르겠다.

#### 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개구리> 공연이 보여주는 징후적 의미

박근혜 정권의 검열 권력이 작동된 초기 작품으로서 <개구리>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향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징후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첫째, 좌편향성에 대한 정치적 신경증이다. 즉, <개구리>는 정치적 편향성, 좌파 중복 논쟁, 정부비판적 입장, 그리고 박정희-박근혜 비판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신경

17) 임선옥, 「아리스토파네스와 국립극단, 피상적 만남에 그치다. <개구리> <구름> <새>」, 『연극평론』 통권 71호, 2013 겨울호, 24쪽.



증적 반응을 징후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구현한 <변호인>이 한미문화수교 행사에서 초청되었으나 외압에 의해 명단에서 배제되며 블랙리스트화된 것과 같은 맥락인 동시에,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세월오월>에서 한층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개구리>는 외부적 강압과 내면적 검열이 어떻게 조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근혜의 <개구리> 검열 사건은 블랙리스트가 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만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 대한 개입 및 규제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본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손진책 예술감독의 경우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작가의 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립극단 측이 작가들에게 연극 <개구리>처럼 논란이 될 만한 작품은 쓰지 말아달라고 한 ‘당부’의 목소리에 담긴 경고와 위협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젊은 극작가들을 길들이고 정해진 규범에 따르도록 회유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내재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셋째, <개구리>는 ‘지원을 통한 배제’라는 신자유주의 검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길목에서 과거 중앙집권적 검열에서 블랙리스트 검열로 이행하는 문제들을 드러낸다. <개구리> 사건이 벌어진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모철민 교문수석으로부터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등 취지의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sup>18)</sup> 이는 연극 개구리의 상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으로 지원을 통한 배제, 배제를 통한 육성으로 더욱 전면적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홍성담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 가. <세월오월>의 블랙리스트화: 이념편향성과 “VIP 모독”

2016년 9월 9일 작성된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의 배경은 문건에 명시된 바 2013년 말부터 “문화예술계 정치적, 이념편향적 작품(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이 문제적 작품에 해당하는 두 작품의 작품이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한 연

18) 특별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402호 2013. 9. 30.자 대수비 회의자료.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극 <개구리>와 ‘VIP 모독 그림’인 홍성담의 <박근혜 출산>과 <세월오월(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이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권 시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한 것으로, 여기서 위 두 작품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K(국정원)과 B(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 각 실-국이 검토결과를 반영, 추진하는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9)</sup>

여기서 언급된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2014년 8월 8일 개최될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을 위해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된 작품이다. 2014년 7월 7일, 주필 홍성담을 중심으로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소속 협업작가들이 함께 제작 착수한 이 작품은 7월 17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이 요구되었으며, 작가가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그 의사와 상관없이 8월 8일 개막식에서 ‘전시 유보’를 이유로 작품은 전시되지 못했다. 또한 이는 전시 취소의 외압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2017-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에서 18억원으로 결정되며 13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 요구 및 전시 취소 외압에 가담한 이들의 범위가 20주년 프로젝트 기획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를 넘어 문체부와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김기춘-우병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첫 번째 수정요구<sup>20)</sup>가 있었던 것은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표현한 부분이다. 윤OO 책임큐레이터와 장OO 협력큐레이터의 요구에 대해 홍성담은 두 가지 대안을 논의한다.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흰색으로 지우거나, 닭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결국, 큐레이터의 협의하에 홍성담은 ‘허수아비’를 ‘닭 그림’으로 대체해서 박근혜의 상반신을 닭으로 대체해 허수아비를 수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품이 언론에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크게 확대되었고 논란의 파장이 더욱 커졌다.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홍성담과 책임큐레이터 윤OO, 비엔날레 재단 상임대표 이OO 등은 ‘닭 그림’으로 수정하면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인 보조큐레이터 장OO와 광주시 공무원들은 ‘절대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했음이 드러났다.

19) 「문화예술계 균형지원 관련 보고」(2016.9.9. 예술정책관), 법원 1심 형사소송기록 중 증거기록 제 11권, 5,593쪽. 2017작시1【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진상조사결과보고서 참조.

20) 「‘세월오월’ 제작 및 수정 일지」에 따르면, 2014년 7월 7일이다.

최초의 작품 수정 요구에 따라 닭그림이 채색 완료된 후, 두 번째 수정요구가 들어온다. 8월 3일, 전시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장OO 협력큐레이터가 '닭 그림'도 불가하다는 광주시 관료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재수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홍성담은 분개하여 원래 수정까지도 거부하고 다시 원래대로 그림을 복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다. 8월 6일 오전, 윤OO 책임 큐레이터가 홍성담을 방문하여 '닭 그림'으로 수정하면 책임지고 전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홍성담은 마지못해 수락한다. 그러나, 8월 8일 개막식날 결국 작품은 전시되지 못한다.

또한 청와대 측은 문체부와 행안부 등을 통해 광주시 공무원과 윤장현 시장을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이 '세월오월'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재)광주비엔날레 측에 외압을 가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sup>21)</sup>

#### 나. 홍성담과 <세월오월>의 세 가지 버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 1980 이후>는 광주비엔날레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술비엔날레 전시와 함께 개최된 대규모 특별 프로젝트로서,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광주정신’을 탐색해 나가기 위해 전시, 강좌, 퍼포먼스의 3개 방식으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이 전시는 광주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의 작품을 연결하는 동시에 저항미술작가 케테 콜비치의 작품과 루신의 판화들도 선보였다. 광주비엔날레 자체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탄생한 행사로, 20주년을 맞아 민주와 인권, 평화를 의미하는 1980년 5월 광주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망자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담은 감로도’에서 빌려온 전시명인 ‘달콤한 이슬’이라는 제명 아래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취지가 희석화되고 있던 당시의 맥락에서 작가 홍성담이 보기에 애초에 그 기획의도가 그다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다.

21)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32-33쪽.

그 횡수가 거듭할수록 서구미술계가 거듭할수록 서구미술계가 제시하는 미술형식과 전시형식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光州性’이라는 정체성이 글로벌이라는 미명아래 퇴색되었고 광주비엔날레 시스템은 세계 미술기획자라고 하는 미술브로커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대접받는 잔칫상이 되고 말았다.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도록 아시아적 전시 양식과 형식은 커녕, 오히려 서구미술의 선전장이 되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존폐여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광주정신을 되찾는 비엔날레가 되기를 권고했다.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비판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본전시를 광주정신의 이름 위에 올려놓는 대신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라는 행사를 시의 예산 지원의 도움으로 따로 계획하고 ‘光州精神特’e展-달콤한 이슬’이라는 전시회를 끼워 넣게 된 것이다.” (홍성담, 2014. 10.)<sup>22)</sup>

홍성담이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세로 2.5m, 가로 10.5m 폭의 걸개그림을 통해서 1980년 5월 항쟁, 그 이후의 진상규명 투쟁과 19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세월호 사건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현재 첨예하게 진행되는 역사적, 정치적 주요사건들을 형상화했다. 제작 양식은 한국 민중미술에서 이룩한 걸개그림 양식인 ‘강한 먹선과 오방색’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조선 민화, 그리고 1980년대 목판화 운동에서 획득한 민족적 형식을 기본 토대로 하며, 한국적 팝아트와 전통 수묵화 형식을 포함하고, 광주 화단이 이룩한 현대 미술의 여러 중요한 형식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작업은 공동 작업의 성격을 띠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주필(主筆, 홍성담) 외에 보필(補筆, 협업작가)을 선정하여 함께 작업하고 일반시민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미술적 성격을 강조하였다.<sup>23)</sup>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홍성담의 <세월오월>은 세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게 된다. <세월오월> 작품 완성본과 작품 수정본, 그리고 <세월오월-베를린 버전>이 그것이다. 세 버전의 공통점이자 걸개그림의 중앙에 차지하는 형상은 위아래로 뒤집혀진 세월호의 모습이다. 이후에 거친 수묵 화법으로 그려진 <세월오월-베를린 버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세월오월> 완성본과 수정본에 나타난 상세한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뒤집힌 배를 떠받

22) 「걸개그림 <세월오월>에 새겨진 文身 ‘계엄령과 야스쿠니’」,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374~375쪽.

23) 2017작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12쪽.

들고 있는 큰 두 형상은 왼쪽에는 총으로 무장한, 그러나 맨발의 남성 시민,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밥 광주리를 들고 있고 한복에 고무신을 신은 젊은 여성이다. 이들은 5.18 광주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상기시키며 세월호의 넋과 광주정신을 연결하는 형상들이다. 이들 사이로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무지개빛 잉어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며 정면에서 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도 보인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정령의 모습들도 중앙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에서 우측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 노란 우비를 입고 ‘가만 있지 말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촛불집회에서의 유모차 부대를 연상시키는 유모차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가장 우측에는 국군주의 일본 병정들의 열차려와 신사를 배경으로 아베 신조가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다. 우측 하단으로는 초록 대지를 가로질러 푸른 강물의 여신이 잠들어 있고 이 강줄기를 파헤치는 굴착기들과 이명박 얼굴의 어류충이 강물 위를 헤엄치고 있다.

[그림 2]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을 위한 〈세월오월〉의 오리지널 완성본



세월호를 중심으로 반대편 좌측에는 데스크 앞에서 컴퓨터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들과 군인들, 그 옆으로는 베레모를 쓴 군인들이 김정은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환호하는 모습이 하단에 배치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팽목항에서 웅크리고 흐느끼는 유가족의 뒷모습, 한 청년의 얼굴 물속에 거꾸로 잠겨 고문당하는 모습<sup>24)</sup>, 그 주변의 해골들, 안기부 직원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주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정요구’된 장면이 보이는데, 박근혜 허수아비가 박정희의 손에 들려 있고 그 뒤에 김기춘이 뒷받

24) 이 형상은 1987년 고문치사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광주 항쟁의 경험과 물고문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홍성담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어머머마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물속에서 아이들과 승객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일간에 걸친 물고문으로 죽어간 대 학살극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세월호 3주기 추모 홍성담 ‘세월오월’ 전시를 개최하며」에서)

침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수아비 모양의 박 전 대통령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허수아비 앞에는 부러진 총을 들고 소리치며 맞서는 민중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박근혜 허수아비는 그들을 대면해서 포악을 부리는 얼굴로, 한쪽 눈에 큰 눈물을 매달고 있다. 박근혜의 눈물에 대한 홍성담의 설명이 흥미롭다.

한국 현대정치역사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며, 이 어둡고 캄캄한 인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시민들이 절뚝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sup>25)</sup>

### [그림 3] 박근혜 허수아비(좌)에서 닭 허수아비(우)로 수정



〈세월오월〉 수정 버전은 이 허수아비 모양의 박근혜를 닭으로 대체한다. 붉은 벼슬과 뾰족한 부리, 눈물 한 줄기가 매달려 있는 노란 눈, 그리고 털이 모두 뽑힌 몸통을 드러낸 닭이 박근혜의 자리에 대신해서 박정희, 김기춘에 잡힌 허수아비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는 박근혜의 도상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지우고 정치성을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

25) 「홍성담 전시 사진철회 기자회견문」(2014.8.24.), 『‘세월오월’ 자료 백서』, 광주시립미술관, 2017, 6-7쪽.

지만, 박근혜의 별칭 중에 ‘닭’, ‘닭근혜,’ 혹은 ‘닭통령’이라는 명칭 등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풍자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해석적 차원에서 정치성을 따지기에 무리인데, ‘닭 그림’이 외부의 억압적 규제에 의해 수정된 것이니 만큼 그 의미는 독자적인 차원의 풍자적 기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월오월-베를린 버전〉은 광주비엔날레 사건이 있는 후 2015년, 독일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New Society for Visual Arts, 신사회미술협회) (이하 nGbK)에 홍성담이 초대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애초에 홍성담은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골든타임〉, 〈닭대가리〉, 〈바리깡〉, 〈꽃놀이〉 등과 함께 〈세월오월〉을 포함하는 다섯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작품들 중 부피가 큰 〈세월오월〉을 한국에서 독일 전시장까지 해운을 통해 배송하기로 계약한 범양해운 주식회사가 계약 후 갑작스럽게 작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송 기일에 맞추기 어렵다는 표면상의 이유였으나,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작품이라 회사 입장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결국 작품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nGbK는 결국 해당 작가들을 독일로 직접 초청, 애초 작품을 전시하기로 한 위치에 대형 벽화를 그리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때 그린 벽화가 〈세월오월-베를린 버전〉이다. 이 벽화는 중앙의 세월호를 제외하고 이전의 〈세월오월〉과 큰 차이가 있는데, 원작과 수정본에서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채색법과 대조적으로 검은 묵으로만 전면이 그려져서 전체적인 디테일은 어둡고 불길한 바다와 유령같은 군중들의 형상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검은 배경을 바탕으로 박근혜 허수아비와 닭 허수아비가 원래 그려졌던 방식의 붉은 채색으로 나란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두 허수아비 매달린 흰색의 두 줄에 매달린 빗자루를 타고 군복을 입은 박정희가 날고 있는 형상이 별도로 벽화 앞에 설치되었다.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를 거부당한 〈세월오월〉은 그 후, 홍성담 화백 작업실 수장고에서 3년간 잠들어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과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원본의 박근혜 허수아비의 형상을 포함해서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에 걸릴 수 있었다. 이 전시회에서 건물 상단의 외벽에 닭 그림이 든 〈세월오월〉 수정본이 그려져 있기도 하며, 〈조정자들〉(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145×112cm)은 박근혜-박정희-김기춘 부분만 따로 작업하여, 박정희를 제외하고 두 형상은 흰 색으로 색칠해 검열의 흔적을 전면화시켜 전시하였다.

#### [그림 4] 세월오월-베를린 버전



#### 다. <세월오월>가 보여주는 블랙리스트 검열의 형식과 작동술

홍성담과 <세월오월> 사건은 ‘속인주의적’ 검열의 전형을 보여준다. 속인주의적 검열은 작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검열보다는 작가 개인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으로, 정근식, 최경희에 따르면, “해방 전의 검열이 주로 텍스트에 대한 검열이었다면 해방 후 검열은 작가에 대한 통제, 즉 속인주의적 경향을 띤다.”<sup>26)</sup> 즉, 텍스트가 아니라 ‘특정인(단체)’ 자체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은 해방 이후 분단의 고착화 과정 즉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생산된 것으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가능성으로서의 인신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속인주의적 검열의 재귀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는 해방 후 한국사회가 검열대상 작가의 이념적 정체성과 단체적 귀속성에 따라 사상규제를 정당화하던 시기로 문화예술 전반의 시계침을 되돌려놓았다.

홍성담은 조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5월 학생을 경험한 후 계속 민중미술을 작업해온 작가다. <세월오월> 이전에 그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2012.11 경 <골든 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sup>27)</sup>를 그려 서울시

26) 정근식, 최경희, 「해방 후 검열 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과제」, 『대동문화연구』 74집, 2011, 32쪽.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서 ‘A급’으로 규정되며 민간 사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28)</sup> 이에 따라, 홍성담은 여러 차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국내 행사에서 보수단체의 시위에 부딪혀 방해와 위협을 받았으며 해외 전시회의 경우 작품의 운송이 운송업체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끊임없는 규제를 당하게 된다. 정부는 홍성담 작가의 활동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의 작품이 배급, 유통, 상영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고립, 배제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더욱이, 그에 대한 민간인 사찰은 숙인주의 검열 양태의 가장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8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오월> 작품과 관련하여 홍성담에 대해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故김영한 업무수첩」 2014.8.7.자 메모는 “허수아비 그림(광주)과 관련,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에게 첫째, 애국단체 명예훼손을 고발토록 하고, 둘째, 국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목록을 만들고, 추적하여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메모에는 “있으면 안 된다 - 응징해줘야” 등 매우 강한 표현이 들어 있어 김기춘의 분노를 가감없이 보여준다.<sup>29)</sup>

또한 <세월오월> 전시 취소 이후 광주비엔날레에는 대규모 예산 삭감이 결정된다. 2017~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에서 13억 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 조항에 따라 삭감 권한이 있었음을 설명하지만,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초에 있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 김기춘은 2014년 8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를 사례로 들고, 전 수석들에게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 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sup>30)</sup>에 비추면, <세월오월>

27) 소위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불린 이 유화는 2012년 평화박물관에서 진행된 “유신 40년 공동 주제 기획 6부작 전시 유체이탈(維體離脫)” 중 3부 “유신의 초상”에 출품된 작품이다. 출산실에서 이제 막 출산을 한 박근혜에게 박정희 특유의 선글라스를 낀 아이를 안기는 장면으로 왼쪽 가장자리의 한 의사가 이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VIP 모독’ 그림으로 청와대에서 문제제기된다.

28)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2018.4.20. 5쪽.

29)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2018.3.23. 33-34쪽.

이 기획 전시된 광주비엔날레 자체의 예산 규모를 규제함으로써 유사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 4. <다이빙 벨>과 영화계 검열 사태

##### 가.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까지

영화계에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뿌리가 깊고 다발적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MB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2008년 마련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서 당시 정권은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 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비판적 영화를 통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오석근 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전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수년간 두 정권과 결탁해 집도한 영화 검열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2009년 단체지원사업에서 촛불시위 참여단체를 배제하고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사업의 공모제 전환과 사업자 선정에 영진위가 부당개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는 2008년 8월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 실행된 조치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sup>31)</sup>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하여 영화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를 강화했는데, 특히 사회참여적인 독립다큐영화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상영한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했으며 문제영화가 제작되거나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를 취했다.<sup>32)</sup> 문

30) 2017직시1 【2014년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전시 취소 외압 의혹 및 2018년 광주비엔날레 예산 삭감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43-44쪽.

31)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첫 공식 사과」, <한겨레 신문>, 2018.4.4.  
<http://www.hani.co.kr/arti/PRINT/839127.html>

32)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극장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펼쳐 온 독립,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지원 중단 혹은 검열 사태로 변질된 것을 일컫는다. 영진위는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대상에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대구 오오극장 등 민간운영전용관들을 제외하고, 기관에서 직영하는 인디플러스, 인디플러스 영화의 전당,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테크 KOFA를 지원했다. 이런 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영이 어려운 민간 운영 전용관을 배제하고, 공공기관 직영 극장에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 배제된 세 극장은 모두 지난 2014년 <다이빙벨>을 상영한 곳으로 보복성 탈락이 확실했다. 「극장판 블랙리스트’ 등장... “다이빙벨” 틀면 지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취임 직후인 2013년 9월 경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박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되자, “중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sup>33)</sup>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배제’ 국정기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국정원은 배제 키워드를 설정한 후 이와 연관된 영화들이 영진위 지원대상에 올라오면 사전에 국정원이 검증하고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제영화 선별을 위한 배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반정부’, ‘정부비판’, ‘공권력비판’, ‘정치비판’ 등 ‘좌파적 성향’
-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용산참사,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시국사건’
-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 등 ‘북한’ 관련성
- ‘위안부’, ‘재일조선인’ 등 민감한 ‘역사’ 관련성
- ‘시네마달’ 등 특정 블랙리스트 단체 연관성 (시네마달 제작 또는 개봉작 등)<sup>34)</sup>

이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이다.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며 문제가 되면서, 김기춘은 문제영화의 상영 차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영화에 대한 배제 조치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였다고 한다.<sup>35)</sup>

## 나. <다이빙벨>과 세월호

이상호, 안해룡 감독이 공동연출한 <다이빙벨>(제작 아시아프레스 씨네포트, 배급 시네마달)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구조당국의 감시와 방해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참사 직후 영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안해룡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제안하면서 작품이 완성되었다.<sup>36)</sup>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었고 2015년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에서

원 OUT], <노컷뉴스>, 2016.11.17. <http://www.nocutnews.co.kr/news/4686172>

33)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보도자료, 2018.2.6. 3쪽.

34)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보도자료, 2018.2.6. 7쪽.

35) <독립다큐영화, 영진위 지원사업 배제 27건 추가 확인> 보도자료, 2018.2.6. 3쪽.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작품의 영어 제목은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로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갈등을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전직 MBC 기자였던 이상호 감독이 고발뉴스 기자로서 세월호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침몰의 규모와 구조 상황을 보도하고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이상호 감독은 관찰자 역할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인 유가족들과 다이빙벨 잠수단의 이종인 대표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면서 영화의 메시지와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다이빙벨(잠수중)은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에 이미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구조 도구다.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종인이 2014년 4월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다이빙벨의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화는 팽목항에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구조장비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구조 작업에서 벌어지는 의혹스러운 방해와 당국의 대립적 반응, 그리고 언론의 태도에 집중조명하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김주현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매개 현실과 ‘다이빙벨’을 활용해 구조를 속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좌절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무능과 부조리, 주류 언론의 현실왜곡에 저항한다.”<sup>37)</sup>

이종인은 4월 21일 다이빙벨 장비를 실은 바지선을 타고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을 반대하여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해 다이빙벨 투입을 약속받자, 이종인은 이번에는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는데, 첫 시도에서 공기주입 불량(“잠수부 1명의 공기호스가 다이빙벨 운용 와이어에 씹혀 터졌다”)과 통신장애로 급히 끌어 올려졌고 두 번째 시도에서 약 2시간 가량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다이빙벨이 구조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다이빙벨 잠수단은 현장을 떠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이빙벨의 실효성, 수색시일 허비 여부, 다이빙벨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종

36) 이상호 감독은 MBC 출신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GO발뉴스의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며, <다이빙벨>(2014), <김광석>(2016) 등을 연출하였다. 안해룡 감독은 1996년 단편 <블랙 코리안>을 시작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들>(2003),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7) 등을 연출하였다.

37) 김주현, 「역사와 마주선 독립다큐멘터리의 대항 역사 쓰기 사실-왜곡을 넘나드는 <천안함 프로젝트>와 <다이빙 벨>을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48권, 한국드라마학회, 2016, 102쪽.

인의 발언 등이 다양한 논란들의 제기되었다. 영화 <다이빙벨>은 이러한 논란들을 관통하는 여러 정황들을 이상인 감독과 이종인 대표의 시점에서 서술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실패로 끝난 원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한다. 이는 다이빙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당시 구조 당국의 의문스러운 행동과 지속적인 압력과 방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작품 의도에 대해 안해룡 감독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영화 <다이빙벨>은 희생자나 유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구조의 책임을 져야 할 권력과,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sup>38)</sup>

<다이빙벨> 사건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치적 무능을 ‘있는 그대로의’ 다큐멘터리 형식에 담았다. 당시, 주류 언론이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를 재생산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총체적인 가성성’을 만들어냈다면, <다이빙벨>은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건의 이면을 드러내고자 시도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일정 부분 시네마 베리테를, 기획과 연출에 의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시네마를, ‘다이빙벨’의 투입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한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작자 스스로의 위치를 은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사적인 시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제작자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39)</sup> 또한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 주장을 펼쳐 나가는 설명적 방식의 다큐멘터리”로서 초반부터 “다이빙벨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표와 의도를 설정하고, 이종인 대표와 이상호 기자의 시선과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다이빙벨>의 한계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다양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주관적 재현의 영역에 머물렀다는 데 있다. 이는 몇몇 논평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특히 다이빙벨 투입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나 해경의 입장, 혹은 제3자적 전문가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제작자와 촬영대상자가 지나치게 감정을 노출하고 자기주장을 전달했다는 점은 이 작품의 한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유병언, 구원파 문제로 뒤덮이면서 한국의 언론과 뉴스가 진상 조사가 아닌 호기심 자극의 방향으로만 흘러갔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다이빙벨>은 다시 되돌아보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어떻게 언론의 눈가리개 역할을 했었는가 엿볼 수 있도록 해준다.

38) 「화제작 ‘다이빙벨’ 공동연출자 안해룡 감독 ”정부 비판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묻는 것”, <부산일보>, 2014년 10월 7일, 8면.

39) 김주현, 위의 글, 96쪽.

## 다. <다이빙벨> 상영 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는 상영작 발표에서 <다이빙벨>을 포함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10월 6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화 개최가 결정되고 작품의 소재와 간단한 시놉시스만 공개되었던 순간부터 공격이 쇄도하였다. 영화계 보수단체인 '차세대 문화인연대'에서 영화제 상영 취소를 요구하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트위터에 상영 취소에 동조하는 글을 남겼다. 파장은 더욱 크게 일어났는데,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이 영화제 측에 상영 취소를 강하게 요구한 사실과 문화관광체육부가 영화상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병수 시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가 부산영화제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화제는 편향적인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편향적인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지영 감독의 말에서처럼<sup>40</sup>, <다이빙벨>의 편향성은 영화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닌 공공성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이를 배제하는 것이 결국 검열 폭력의 사례임을 보여준다.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이 문제가 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제영화의 상영 차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문제영화에 대한 배제 조치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김기춘의 명령은 확실히 지켜졌다. <다이빙벨> 상영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사퇴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글로벌국제영화제지원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은 50% 삭감 조치되었다. 그 외에도, 2014년 10월 23일 <다이빙벨>을 개봉했던 씨네코드 선재와 인디플러스는 각각 상영 중지 혹은 상영 거부를 당했으며, 영화를 극장 상영한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씨네센터는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는 사태를 겪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구축과 운영이 본격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로 작동했다. '세월호'는 당시 '강력한 금기어'였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연은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만 포함되어도 공연이 차단"되었다.<sup>41</sup> 이 모든 일들이 당시로서는 그 실체를 알길 없던 블랙리스트 검열과

40) 「화제작 <다이빙벨> 공동연출자 안해룡 감독 "정부 비판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묻는 것", <부산일보> 2014년 10월 7일, 8면.

41)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기술한 대로, 팝업씨어터의 <이 아이> 공연 방해 사건이다. 김미도, 『세

지원배제의 체계적인 작동에 의해 이루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구상이 시작된 시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2014년 5월로 잡을 수 있다. 이 때 논의가 시작된 것을 기점을 삼아 “블랙리스트 작업이 1차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활동과 행사를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부부터 겨냥했다”고 경향신문은 적고 있다.<sup>42)</sup> 이 기사보도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범위를 2014년으로 협소하게 잡고 있는데,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힘들지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점 문제는 그 범위와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신은미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 가. 신은미 작가의 ‘종북몰이’

신은미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저자가 2011년 첫 방북 이후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기행문으로 매회 수십만 명의 독자를 모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30회에 걸쳐 기고된 이 연재 기행문은 같은 해 동일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2013년 8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통일부 유니TV에선 홍보동영상을 찍는 등 신은미는 ‘통일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재미교포로서 미국 국적의 신은미는 수필 형식의 기행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마주친 북한의 얼굴을 솔직하고 스스럼 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과 5월에 걸쳐 북한의 여러 곳을 다녀오며, 북한의 주민들과 나눈 대화와 일상적인 환경, 스스로 느낀 감상적인 소회 등을 적었다.

신은미는 대구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국위선양의 일환으로 조직된 리틀엔젤스의 단원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외조부는 제헌국회의원이었고 부친은 육사출신으로 철저히 반공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이화여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남편을 만나 LA에 가정을

월호 이후의 한국연극-블랙리스트에서 블랙텐트까지』, 연극과 인간, 2017, 8쪽.

42) 「블랙리스트 시작은 ‘세월호’였다」, <경향신문>, 2017.1.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12002001&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12002001&code=940301).

꾸려 살고 있다. 배경적인 측면에서, 반공세대와 강남 출신의 부르주아성과 보수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필자가 ‘종북 마녀’로 내몰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다. 신은미 자신은 “북한의 현실을 느낀 대로 전하는 것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고 최고의 국위선양”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43)</sup>

여행이 곳곳에는 북한에 대한 연민의 정이 묻어있다. 처음 남편의 제안으로 떠난 북한 여행에서 신은미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느꼈지만, 곧 필자는 “방북 첫날, 일종의 충격을 느꼈다”고 적는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모습에서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은미는 북한을 여행하면서 만난 북한 주민들에 대해 특히 강한 애정과 친근함을 드러내는데, 그 곳에서 만난 안내원을 수양딸로 삼기도 하며 북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세계관이 형성되었음을 긍정했다. 역사학자 이만열은 익산의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일어난 폭발물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은미의 활동을 평가한다. “우선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솔직한 표현이 뒷날 남북한 당국에 의해 족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걸 개의치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썼다. 그것이 북한 이해와 통일외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내가 읽은 범위에서는 그런 솔직함을 느꼈고 그 책은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44)</sup>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야기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카드 가운데 하나로 종북몰이가 시작되면서, 신은미는 ‘종북 마녀’로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다. 2014년 11월 19일 신은미와 황선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 ‘종북 콘서트’로 규정하고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신은미가 주장한다는 과장된 비난을 쏟아부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동강맥주가 맛이 좋다’와 ‘북녘에 흐르는 강물이 깨끗하다’는 식의 말들로,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찬양했다는 왜곡 보도가 이어졌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은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요”(2014년 11월 22일), “조계사-황선 장소 제공 -경위 조사 후 조치 (자승)”(2014년 11월 25일)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오마이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 콘서트 등을 여러 차례 해온 신은미와 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가 2014년 겨울 익산에서 열릴 때 폭발물 테러까지 당하게 되며 종편, 보수언론, 공안기관에 의해 종북 색깔 공세를 받게

43)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네잎클로바, 2012.

44) 이만열,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 포이에마, 2015.



된 이유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다.<sup>45)</sup> 먼저, 익산 테러사건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회 인권사회분과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즉,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마당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콘서트가 열리면 안된다는 말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른바 ‘종북몰이’를 지속해 야권 전반을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여론몰이 소재”였다.<sup>46)</sup>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반복여론을 조성하려던 정부 여당 입장에서 통일토크콘서트는 분명 걸림돌이 틀림없었다.

둘째, 통일토크콘서트의 종북몰이는 당시 정권이 ‘종북몰이’를 극단으로 활용해야 겨우 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처단이었다. ‘종북몰이’는 보수세력의 극우적 마녀사냥 논리로서 북한을 악마로 묘사해 혐오감을 주입시키고 평화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북한추종세력으로 몰아 보수 우익의 집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급격히 붕괴한 북한의 모습을 기회로 삼아 ‘종북몰이’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북한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종북몰이’의 세력들은 새로운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양상으로 종북몰이에 열중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토크콘서트의 ‘종북몰이’에서 절정이 된 익산 테러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오마이뉴스는 ‘정윤희 문건’ 파문을 들고 있다. 당시 ‘정윤희 문건’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감하고 권력층 내부가 분열되는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정윤희 문건’ 파문을 덮을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익산테러사건이 부각된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테러에 대한 조사보다는 테러 피해자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신은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작가는 강제출국된다.

45) 「신은미-황선 종북공세의 4가지 이유: 콘서트가 종편공격에서 테러까지 확대된 이유」, <오마이뉴스>, 2014.12.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46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462)

46) 위의 기사.

## 나. 우수도서목록의 블랙리스트

2015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한 신은미의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도서목록에서 삭제했다. 문체부는 전국 각 지역 도서관에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회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여 같은 달 31까지 해당 책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sup>47)</sup>

신은미의 책 우수도서 선정 결정이 취소되면서 이는 2014년 세종도서 부당 배제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운선 수석은 직접 우수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 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창비의 2014년 출판물 〈소년이 온다〉(한강), 〈그리운 나무〉(정희성) 등과 같은 작품들이 우수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문체부는 출판진흥원에 9종의 도서를 반드시 제외하라고 지시하는데, 배제 기준과 관련하여 성문화된 원칙 또는 규정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주로 대상이었다.

-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원칙에 부담을 주는 작품
-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작품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작품
- 국내 유관산업 진흥 및 해외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작품
- 이미 특정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시장을 형성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작품
- 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
- 표절시비 또는 저작권 침범 연관, 민법과 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품<sup>48)</sup>

문체부가 하달한 위의 기준을 가지고 출판진흥원은 선정 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산하 기관 담당자들에게 검토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배제지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월호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는데, 문학 부문이 아닌 교양 부문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서적이거나 사회주의 관련 서적도 선정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2016년, 신은미는 2014년의 충북마녀사냥에서 강제출국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과 북의 오작교가 되어』를 출간했다. 자신을 충북프레임에 가두고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고 한 이들에게 신은미는 정면 돌파하는

47) 「2017출1\_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_창비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48) 「2017출1\_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_창비 세종도서 부당배제 사건」

방식으로 중복의 의미를 되묻는다. “중복으로 모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중복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다. ‘내가 본’ 북한과 북녘동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모국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 나아가 통일을, 그것도 평범한 민간인이 원하고 이야기하면 ‘중복’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중복’이야말로 멋진 별명 아닌가.”<sup>49)</sup>

## 6.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연극, 회화 전시, 영화, 출판 등에 걸쳐 직접적인 검열과 지원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이나 광주 5.18 항쟁을 기억하는 <소년이 온다>와 같이 특정 문화예술인, 작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정부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취약한 부분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배제된 작품들도 존재한다. 이동연의 지적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예술검열과 배제의 사례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화려하다. 개봉중단, 연재중단, 상영거부, 예산삭감, 사퇴압력, 대관불허, 압수수색, 검찰고발, 지원배제, 강제중단, 공연자 배제 요구 등 예술검열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과 사례들을 동원했다.”<sup>50)</sup>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진상조사와 국가와 책임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제도개선이 치열하면서도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검열의 폭력에 부대끼고 억압되었던 직접적인 텍스트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과정은 앞으로 블랙리스트 없는 문화예술계에 새롭게 등장할 작품들을 위한 통로이기도 할 것이다.

49) 신은미, 『남과 북 오작교가 되어』, 말, 2016. 31쪽.

50) 이동연, 「검열에 저항하는 새로운 상상력」,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88쪽.

## 제3절 | '블랙리스트 문건'에 드러난 '전체성의 폭력' : 담론적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오창은\*

## 1. 지극히, 사소한, 혁명의 그늘 아래

“우리는 혁명을 기다리는 검은 그림자도 되지 못하고 그림움으로 뿔어나가는 푸른 이파리는 더더욱 되지 못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쏘다니지요, 단지, 고삐 풀린 천사처럼.” (김근, <지극히 사소하고 텅 빈>, 『당신 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 문학과지성사, 2014, 28쪽.)

김근 시인은 <지극히 사소하고 텅 빈>에서 ‘혁명의 그늘’에 관해 읊었다. 시인은 혁명의 질은 어둠을 이미 보아버렸기에 낭만적인 열망을 버렸다. 혁명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리움에 대한 지향도 사라졌다. 세상은 푸른 이파리의 생명력도 없이 말라가는 듯이 보인다. 시인은 목적 없이 배회한다. 하늘과 땅 사이를 쏘다니고, 그 어떤 구애받음도 없이 흘러다닌다. 하지만, 조그만 반전이 있다. 그 배회가 자유가 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흥이 되면, 그 때 시인은 온전한 주체가 된다. 시인, 작가, 예술가는 “고삐 풀린 천사처럼” 자유롭게 “하늘과 땅 사이를 쏘다니”는 존재이다. 예술가가 된 혁명가, <지극히 사소하고 텅 빈>에는 시대의 풍경과 예술가의 한 지향이 포개져 있다.

이 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제도화된 대의민주주의에서 ‘혁명은 어두운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면, 그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힘쓴다. 체제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억압한다. 정치 권력은 ‘자유 의 표상’인 예술가를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배제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정치 권력이 개인의 내면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개조하려는 물리적 힘에 규제를 가한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억압은 헌법에 보장된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문화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억압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예술가는 세계관과 미적가치 추구에서 자유롭고자 하기에 표현의 자유에 더 예민하다.

블랙리스트 시대를 살았던 시인, 예술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으로부터 배신당했다. 시인, 예술가로서, 더불어 한

\* 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수

사람의 시민으로서 양심에 따라 한 행위가 억압당하면, 생명의 이파리는 순식간에 수분을 잃고 만다. ‘푸른 이파리’가 푸석푸석하게 시들면, 예술가들은 생명의 재생을 위해 ‘하늘과 땅 사이’를 누비며 햇빛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 예술가는 다시 ‘혁명을 기다리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끊임없이 쓰고 창작함으로써 모두와 함께 공감하는 세계를 상상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시대’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암흑기였다. ‘블랙리스트 시대’는 2008년 8월 27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2013년 9월 박근형 연출의 <개구리> 공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의 최초 입안은 2008년 8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sup>1)</sup>을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블랙리스트 시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017년 1월 21일에 현직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초래했다. 그의 혐의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여를 위해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이었다. 2017년 1월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사과문 발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작동은 멈췄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sup>2)</sup>했다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실행에 대해 사과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시대’는 2008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2017년 1월 23일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어두웠던 8년 7개월여의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부당한 배제’로 인해 고통 받았으며,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전체성의 폭력’ 아래에서 놓여 있었다. ‘블랙리스트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은 실체가 명료하지 않은 어둠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문화예술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문화예술 지원에서의 ‘부당한 배제’로 인해 혼란스러워 했다.

1)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기획관리비서관실, 2008.8.27.

2)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일동,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 문화체육관광부, 2017.1.23.

## 2. 작가들은 ‘전체성의 폭력’에 저항했다

불온한 소문은 시대의 풍경이 되었고, 시인·소설가들은 소문의 안개 속을 배회했다. 그 징후적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2009년 6월 9일, 시인·소설가·평론가 188명이 시대의 상처를 견디지 못해 광야로 나섰다. 문인 188명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6·9작가 시국 선언’을 했다. 그때부터 문인 188명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작가들은 모호한 소문 속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반사 효과로 보았다. 광야에 선 작가들은 비바람을 감내해야 하기에, 기꺼이 ‘천사처럼 쓰다니는 존재’가 되기로 했다.<sup>3)</sup>

2012년 12월 14일, 137명의 작가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였고, 실명으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작가들의 의견표현을 서울시선관위에서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년 8월 27일,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의 대표로 손흥규 소설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137명의 시인·소설가에 대한 정치권력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배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은 있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시인·소설가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넘나들’며 배회했다.<sup>4)</sup>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사건’ 이후 작가들은 보다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진상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14년 6월 2일, 754명의 작가들이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을 했다.<sup>5)</sup> 8월 26일부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하기도 했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에 따르면 ‘젊은 문인 183명 MB 정부 비판 6·9 작가선언(2009)’의 183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8.5.8., 21쪽.)

4) 박근혜 정권이 ‘2015.7.6. 정무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단체 4곳, 개인 104명 등 총 108건이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배제사유는 ‘문재인 지지선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5.23.),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명 선언(2012.12.14.), MB 정부 비판 6·9 작가선언(2009.6.9.),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2000~2001), 조선일보 거부 1차 지식인 명단(2008.9.20.), 야권단일후보 지지성명(2012.4.8.),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 참석자’ 등이었다. (위의 책, 49쪽.)

5) <한국일보>는 2016년 10월 12일자로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을 보도했다. 이 명단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학인 시국선언’에 서명한 75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태성,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10.12., 1면.)

다. 2015년에는 진도 팽목항에 ‘천개의 타일로 만든 기억의 벽’ 작업을 하고, 2016년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인 ‘기억·약속·행동문화제’에 참여했다. 『꽃으로 돌아오라』<sup>6)</sup>를 2017년 3주기 추모시집으로 간행하여, 문학적 실천을 하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희망의 길 찾기(순례길)’ 릴레이 대장정에도 참여했다. 2014년 9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304낭독회’는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작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다짐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작가들의 실천은 사찰의 대상이었고, 배제의 과녁이었으며, 블랙리스트 목록의 표적이였다. 작가들은 자유로운 창작자이며,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행동하고자 했을 뿐이다.

문학 분야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감지하기 시작한 때는 2015년 1월 즈음이었다.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었다. 통상 1월초에 발표되던 결과가 3월 31일에야 나왔다. 결과 또한 의아했다. 총 98종이 신청했는데, 단지 14종만 선정된 것이다. 2014년 55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결과였다. 지원규모도 10억원이었는데, 단지 3억원만 배정되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은 더 심각했다. 3월에 최종 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어야 했는데, 7월에야 최종 선정 발표가 있었다. 공모에 참여한 959명은 의구심을 갖고 기다렸으나, 최종 선정인원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든 70명이였다. 사업비 10억 중 7억원만 집행되었고 3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겨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 진실은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밝혀졌다.<sup>7)</sup> 그 때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왜 결과발표가 3개월씩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선정문예지가 40종 내외에서 14종으로 줄고, 아르코 창작기금 선정 작가들이 102명에서 70명으로 줄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에 ‘11개의 문예지에 대한 배제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11개의 문예지 중 『실천문학』과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청와대의 양해를 받아 두 문예지는 포함하는 대신, 다른 9개의 문예지를 배제하기 위해 선정 종수를 대폭 축소하여 발표가 이뤄졌다. 이런 과정 때문에 2013년에는 55건, 2014년에는 39건이었던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이 2015년에는 14건으로 축소되고 총 10억의 예산 중 30%만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반발에 대응해

6)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꽃으로 돌아오라-세월호 3주기 추모 시집』, 푸른사상, 2017.

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앞의 책, 102~109쪽.

2016년부터는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다는데 있다. 문예지에 대한 전체적인 응징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2015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11월 공모신청자 949명 중 76명에 대한 배제지시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화예술위원회에 내렸다. 2015년 1월에 1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문체부는 선정자 198명 중 16명에 대한 배제지시를 다시 내렸다. 2차 심의가 진행된 3월에도 102명의 선정자 중 14명에 대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 책임 심의위원들이 배제지시를 거부하고 102명을 확정하자,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서면결의를 통해 7월 18일에 102명을 70명으로 축소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파행적인 행위들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뤄졌다.

‘2015년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과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파행이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사실을 작가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다만, 무언가 이상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했을 뿐이었다. 한국 사회는 ‘블랙리스트 시대’를 통과한 후에야 정신을 멍들게 했던 과거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시대’ 이후에야 모든 단편적인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주목할만한 작가상’에도 개입되어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교류지원 사업’에서도 부당하게 배제된 작가들이 있었다. 문학계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영화, 시각예술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폭력적인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행위가 이뤄졌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는 단체 342개, 개인 8,931명 등 총 9,273개에 이른다.<sup>8)</sup>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된 단체와 개인은 ‘블랙리스트 시대’에 사찰, 검열, 배제의 피해를 당해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전체성의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9)</sup> ‘전체성의 폭력’은 특정한 정치권력이 국가 기구를 부당하게 동원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폭력 행위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세기』에서 ‘정당화 justification’와 ‘정당성

8) 위의 책, 19쪽.

9) “권력은 결코 정당화 justification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동체의 현존 자체에 내재한다. 권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당성 legitimacy 이다. 이 두 단어 [정당화와 정당성]를 동의어로 다루는 일반적인 논법은 복종이 곧 지지라는 세간의 등식과 마찬가지로 오해를 일으키고 혼란시킨다. 권력은 언제든 사람들이 모이고 제후하여 행동할 때 생겨나지만, 그 정당성은 나중에 뒤따라올 어떤 행동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모임에서 유래한다. 정당성은, 도전받을 경우, 과거에 대한 호소에 기초하지만, 반면에 정당화는 미래에 위치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한나 아렌트,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84~85쪽.)



legitimacy'을 구분해 제시했다. 그는 '정당화'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고, 정당성은 '나중에 뒤따라올 어떤 행동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모임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즉, 정당화는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인 반면, 정당성은 과거의 기원으로 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sup>10)</sup>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내세워 행한 '전체성의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작동은 국가기구의 행정력을 동원해 권력, 강성, 강제력, 권위, 폭력 등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전체성의 폭력'으로 규정한 이유는 최고의 권력기구부터 하위의 집행기구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적인 통제를 맡았으며,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자료원·출판진흥원·한국문화번역원 등이 미시적인 실행을 담당했다.

이 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원이라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8.27.)과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3.),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인 「건전화예술 생태계진흥 세부 실행계획」(2014.10.)을 담론적 층위에서 분석한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담론은 동일한 형성체계에 속하는 제도화된 언술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sup>12)</sup> 푸코는 담론을 지식과 권력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체계로 보고 있다. 담론적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건을 살펴보면, '전체성의 폭력'이 집행되는 작동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시대'에 정치권력의 정당성 담론은 어떻게 생산되었고, 조직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체계로서 제도안에서 작동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과제다.<sup>13)</sup> 이 글은 핵심 문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블랙리스트 시대'의 정치권력은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었으며, 어떤 담론적 질서에 기반해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10) 위의 책, 85쪽.

11) 김미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단순한 지원배제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서 국가가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며 얼마나 심각하게 예술가들을 모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민간인 사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미도, 「블랙리스트 2심 판결의 의미, 이제 시작이다」, 『연극평론』 통권 88호, 연극과인간, 2018년 봄호, 33~34쪽.)

12) 이지은, 「담론분석적 서술이론」, 『독어독문학』 제73권, 한국독어독문학회, 2000, 181쪽.

13) 안환기, 「담론(談論) 그리고 욕망 - 유식 사상과 푸코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40집, 인도철학회, 2014.4., 150쪽.

### 3. 「문화 균형화 전략」, 자본을 통한 통제 전략

2012년 7월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장 화면에 하나의 문건의 띄워졌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띄운 이 문건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년 8월 27일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문건의 의도와 관련해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sup>14)</sup> 이에 대해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sup>15)</sup>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전 MBC 기자였던 이상호가 2012년 7월 20일에 인터넷 방송인 <고발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것을 정청래 의원이 다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론화시켰다. 2012년 공개 당시에 이 문건은 이명박 정권의 ‘좌파집단 인적 청산’이라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 쟁점이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1년여 동안 유인촌 당시 문화부장관 주도로 문화예술 기관장 25명에 대한 표적감사, 사퇴압박 등을 했다. 이로 인해 해임된 문체부 관련 기관장이 20명에 이를 정도였다. 당시에도 이 문건에 입각한 교체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공식출범하면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 이 문건은 ‘블랙리스트의 시대’를 알리는 시발점이었으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초래한 입안서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대외비로 작성한 2008년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어떤 담론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문건은 I.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II.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III. 균형화 추진전략, IV. 주요대책(안), V.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VI. 향후 일정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념 정립부터, 현황파악, 집행계획까지 갖춘 일종의 기획서로서의 담론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권력’을 담론의 정점에 위치시켰다. ‘문화권력’

14) 김성환, 「“청와대가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 만들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사, 2012.7.24. 6쪽.

15) 이병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라” 청와대 문건 파문」, <오마이뉴스>, 2012년 7월 23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0060&CMPT\\_CD=P00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0060&CMPT_CD=P0001), 2018. 7. 18.

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계”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좌파 문화권력’의 하위 층위로는 ‘좌파 문화단체’, ‘좌파 제작사’, ‘좌파 실무자’, ‘좌파성향 단체’, ‘민간 좌파 인사들’, ‘반정부·좌파문화활동’ 등을 제시했다.

좌파 문화권력의 작동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문화관광부장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주요 국립문화기관의 수장이 좌파로 임명되면서 권력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부에서 위원회, 국립문화기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시민단체로 연계되어 예산, 사업 등 제도권의 수단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좌파 문화권력으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등을 거론했다.

여기서 징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를 넓은 범주에서 좌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를 좌파로 규정하다보니, 한국의 상황을 좌경화로 판단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의식개조 수준의 접근을 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대중적으로 흥행한 영화인 <괴물>, <JSA>, <효자동 이발사>를 좌파 문화예술인의 ‘국민 좌경화 프로젝트’의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자본의 대중추수주의를 거론했다. 이 문건은 “대부분의 영화 투자자본들은 우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좌파제작사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균형화 전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균형화는 비정상성을 전제하며 균형의 상태를 ‘정상’으로 상상한다. 문화권력을 균형화하겠다는 것은 ‘좌파 문화권력’의 대응점에 ‘우파 문화권력’을 놓겠다는 것과 같다. 담론 구성체는 대립항을 설정하며, 지식의 체계를 형성한다. 형성된 담론체계는 ‘비판적 상동성’을 갖는다. 여기서 ‘비판적 상동성’은 대립항을 설정하면서 스스로의 담론체계를 구성하고, 이것이 또한 대립항의 체계와 의식·무의식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권력’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다시 환원하여 ‘우파 문화권력’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간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좌파 문화권력’에 대응하는 ‘건설 문화세력’, ‘우파 문화권력’이라는 대칭적 담론이 도출된 것이다. 그 하위 언술로는 ‘건설한 우파’, ‘우파 실행기관’, ‘우파 영화’, ‘우파 전문인력’, ‘새로운 문화인재’, ‘새로운 문화 인력 기반’ 등을 제시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첫 번째 기본 담론적 목표는 ‘젊고 새로운 우파 문화세력화’이다. 이 문건은 ‘좌파 문화권력’에 대응하는 단순한 ‘우파 문화권력’ 지원을 기획한 문건이 아니다. ‘좌파 문화권력’을 대체할 ‘건전 문화세력’으로 신진세력, 젊은 소장학자 및 이론가, 새로운 문화인재를 제안했다. 새로운 ‘우파 문화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문건의 핵심적 지향점이다. 이는 기존 우파 세력인 ‘예총’이 외형상 120만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지만, “회원공감대 및 정체성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는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다. 예총은 “규모확장, 정부지원금 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외형 및 자리다툼에 치중하여 구심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반면, 좌파인 ‘민예총’은 회원수는 10만명이지만 “DJ집권후 문예아카데미, 문화정책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 확산 및 현실 문화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좌파 문화단체인 ‘문화연대’가 1999년에 결성되어 “문화전반에 걸쳐 전문가 그룹을 포섭·육성”함으로써, 일종의 외연의 확장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젊고 새로운 문화권력을 형성해 왔다는 주장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건전 문화세력 형성’을 위해서는 ‘신진세력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인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장르적으로는 원로 문화예술인들의 영향력이 큰 오페라와 연극과 같은 기존 분야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우파 문화권력의 ‘항구적 문화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ThinkTank인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고, 기획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대상으로 ‘1주/1개월/6개월/1년’의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역할을 하도록 배치했다. 우파 문화권력의 미래세대 형성을 위해 ‘창조문화센터’를 건립해, 젊은 세대의 장르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방송제작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두 번째 기본 담론적 목표는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 통제’이다. 이 문건은 “좌파예술인들도 그동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자본의 힘에 매우 익숙한 상태로 변화”했다고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의 차단을 통해 좌파 문화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인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들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뀐 담론의 체계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신 구속, 가혹

한 검열 등 물리적이면서도 강제적인 탄압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예전의 권위주의적 국가질서 아래에서의 통제전략이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으로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 통제’를 제시했다. 자금지원 통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원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화예술계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진흥원 등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운영방식과 심의체계까지 바뀌가며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 문건은 더 나아가 ‘건전문화세력 형성’을 위한 자본 형성 전략도 제시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 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정책 포럼’과 같은 곳에는 “연구, 심포지엄, 출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한다고 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자금으로는 ‘건전 문화세력’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문화산업 모금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문화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의 통제 및 새로운 자본의 형성을 위해 청와대와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의 역할을 배분했다. 기재부에는 좌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을 동원하여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형태로 ‘건전 문화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권력’을 오염된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대적점에 ‘건전 문화세력’을 놓는 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보수적 문화세력을 비판하면서, ‘건전 문화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젊은 이론가, 예술가들의 육성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더불어, 핵심적 담론으로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의 통제’를 제시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본의 질서에 의한 ‘자유시장’, 보수주의적 질서에 대한 옹호를 담론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문화예술을 정치적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로 구획해 분할 통치하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좌파 문화권력’이라는 낙인적 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체를 ‘내부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 ‘우파 문화예술인’을 호명하여 세력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본을 통한 길들이기 담론의 기본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좌파 문화권력’으로 규정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인적 청산과 정부 지원예산 근절이라는 기본 구도를 제시했다. 더불어, ‘건전 문화세력’의 형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우파 실행기관’을 통한 ‘우파 전문인력’과 ‘새로운 문화 인력 기반’ 조성을 자

본 지원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구도가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적 담론 체계로 작동했다.

#### 4.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유신 회귀의 무의식

2017년 9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중요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여가 되는 시점이었다. 문건의 제목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sup>16)</sup>이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이 입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 문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작성 경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국가정보원은 이 문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해 2013년 3월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민정·정무·교문수석에게 배포되었다”라는 답신을 보내왔다.<sup>17)</sup>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는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기본 개념도였다. 이 문건은 □ 좌파들의 문화예술계 헤게모니 장악 실태, □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국론 분열 및 편향된 가치관 조장의 영향, □ 문화예술계 건전세력 협조 통한 문화계 좌파 세력 대응 방안, <붙임>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론적 측면에서 이 문건은 ‘건전화’를 중요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균형화’가 ‘정상성’을 상상하였다면, 박근혜 정권의 ‘건전화’는 ‘건강성’을 상상했다. 좌우의 균형이나 문화예술 진영 내부의 경합을 통한 갈등 유발에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위해 건강성 회복을 제시하며 정부기관이 직접 치료에 나서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는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현실 분석을 동일한 맥락으로 형성했다. 문화예술계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한예중 등 제도권을 장악하여 ‘문화권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의 건강성 회복’, ‘건전 문화예술인 지원’, ‘건전영화 투자’, ‘건전세력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는 언술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건전화’ 담론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임학순은 「박정희 대통령의 문

16) 국가정보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청와대 민정수석실, 2013.3.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앞의 책, 27쪽.

화정책 인식 연구」라는 논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네가지 지원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선별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건전성의 원칙, 세 번째는 예술대중화와 문화생활화의 원칙, 네 번째는 민족문화예술과 국민정신교육 연결의 원칙이었다. 임학순은 건전성의 원칙과 관련해 “건전한 문화예술이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반인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의미”한다고 했다. 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퇴폐 대중 예술은 정화의 대상으로 삼았고, 반공이념 또한 중요한 잣대로 제시했다고 한다.<sup>18)</sup> 박근혜 정권의 ‘건전화 담론’은 박정희 정권의 ‘건전성의 원칙’을 가져온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계 좌파 영향력’ 차단을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과, 박정희 정권이 선별성, 건전화 등의 원칙을 통해 ‘문예중흥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은 상동성이 있다. 박정희 정권이 퇴폐 대중예술의 정화를 내세웠다면, 박근혜 정권은 정치오염의 정화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는 문화예술계 전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문건은 좌파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위·영진위·한예중 등 제도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문화권력’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황 파악은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권이 좌파단체로 ‘민예총’, ‘문화연대’를 집중 거론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 ‘작가회의’, ‘영화제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을 첨가했다. 그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인터넷 영역에서는 ‘나꼼수’의 김용민 등이 <국민 TV>를 발족해 중장년층을 포섭하고 있다고 봤다. 좌파문화예술인은 문학·미술·영화 등에서 분야별 조직을 바탕으로 ‘문화계 신주류’로 행세하고 있으며, “순수 창작활동보다는 맹목적 정책비판 등 정치 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하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적으로서의 좌파 문화예술인은 “공권력·정부를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약자’로 왜곡,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은 물론 그릇된 대북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안적 접근이 ‘건전화’와 결합해, 오염의 상상력을 확장했다. 건강한 국가적 신체를 좌파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기에 제거하고 정화해야 한다는 논의인 셈이다.

18) 임학순,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인식 연구 -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21,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2., 174쪽.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의 ‘좌파 오염’ 혹은 ‘병든 신체’를 치료해야 ‘문화융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은 중요 국정과제였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 중 문화융성은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의제였고, 2013년 7월 25일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정권의 문화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문예중흥 제1차 5개년계획’(1974~1978)의 현대적 재현이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문화창달’이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으로 바뀌었고, 박정희 정권의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이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으로 대체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문화융성과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범국민운동을 진행하려 했다.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내세운 문화융성은 박정희 정권의 정신문화개조운동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문화융성의 중요한 걸림돌을 ‘좌파 문화예술인’로 설정하고, 국가기구의 적으로 낙인을 찍어 정화하려 했다. 그렇기에 박근혜 정권은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국가기구를 동원해 ‘전체성의 폭력’을 문화예술인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행사했던 것이다.

문화융성의 토대로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위한 대응 전략은 이명박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을 통한 통제로 귀결되었다. 자본을 통한 ‘문화계 건전화 촉진’을 위해 문화단체·기업간 협력 MOU를 체결해 지원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 창출을 위해서는 메세나 협회의 펀드 조성·교육사업 등 문화지원을 적극 독려한다고 했다. 예총과 자유총연맹을 건전세력으로 규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는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 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바로 이 부분이 박근혜 정권이 작성하고 시행한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쟁점이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첨 자료로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을 목록화했고, 12곳의 단체, 17명의 인물을 명시했다. 이 목록이 ‘정부지원 배제 대상’인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변별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현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균형을 통해 문화예술계 내부의 경쟁세력 형성 및 내부갈등 조장방식을 선택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명박 정권이 좌우 ‘균형화’를 제시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문화예술인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배제/격리”를 계획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파 문화예술인’에 장악되었다는 판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통



적인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계 전반을 병든 신체로 간주하고, 건강화를 위해 수술에 상응하는 치료를 감행하겠다는 적극성을 표방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모두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의 통제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한 문화자본을 형성을 지향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장르에 투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목표는 우파 정권의 장기적 재집권을 위한 문화예술영역에서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은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의 적대세력이 ‘문화예술인’이라면서, 제거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sup>19)</sup>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비가시적인 형태를 유지하려 해도, 끊임없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었다.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전체성의 폭력을 동원한 것이 바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였던 것이다.

## 5.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국가주의가 가한 ‘전체성의 폭력’

박근혜 정권 시절,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3년 8월 5일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다. 2014년 6월 11일 퇴임 때까지 11개월여 동안 작성한 업무수첩이 2017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공개되었다. ‘박준우 수첩’으로 불리는 이 기록에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19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에서 한 발언도 적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한다고 했고, “MB 때 한 일 없어”라고도 했다. 이 메모에 대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라며 개탄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증언했다.<sup>20)</sup>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입각한

19) 이동연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박정희 정권의 ‘민족문화 중흥’의 유사성에 대해 논평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융성의 무의식이라는 점에서 정신병리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정신병리학적 성향은 박근혜 통치 안에 내재한 심리구조이고, 역사적 유산을 갖는다. 그것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배운 유신 문화정치의 학습효과이며, 유신의 문화정치를 재생산하려는 의지의 연장에 있다. 박정희의 ‘민족문화 중흥’과 ‘유신의 문화공안 조치’의 관계는 박근혜의 ‘문화융성’과 ‘블랙리스트’의 관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아니 전자는 후자로 계승되고 재생산된다. 문화융성도 유신의 애국적 향수를 재생산하며, 블랙리스트도 유신의 공안적 문화통제를 재생산한다.”(이동연, 『블랙리스트와 유신의 종말』, 『문화과학』 89, 문화과학사, 2017년 봄호, 27쪽.)

‘문화계 권력’을 되찾는 작업에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부응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 21일 회의에서 “문화계 15년 중복세력 장악”되었다면서, “정권초 사정 서둘러서 “비정상적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3년 9월 9일 회의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문제”와 관련해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돼”라고 했고, 블랙리스트의 중요 사건 중 하나인 박근혜 연출가의 <개구리>와 관련해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돼”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2일에는 “좌파 정권 탄생 문화계”와 관련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 하지 않으면 박 정권 5년내 척결 곤란”이라는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sup>21)</sup>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문화예술계와 대결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 강력한 행동력을 가지려 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실행을 위해 ‘문화예술계 좌파의 배제와 격리’라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푸코는 담론이 사회 규칙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실천’이 요구된다고 했다.<sup>22)</sup> 이를 충실히 따르듯, 박근혜 정권은 국가정보원과 문체부, 그리고 산하 문화기관을 동원해 ‘배제와 격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권의 담론은 ‘제도적 실천’과 결합해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도록 물리력을 강력히 동원하여 집행한 인물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1958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는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찰에서 경력을 쌓아나갔다. 그는 박정희·박근혜 부녀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김기춘은 5·16 장학회 장학금 수혜자였고, 정수장학회(구 5·16 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1991~1997년)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 신직수 전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다. 신직수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기춘을

20) 김민, 「박준우 수첩 속 박근혜 “이명박 좌파척결 한 일 없어 나라 비정상”」, <동아일보> 2017년 5월 5일자, 10쪽.

21) 조현호, 「김기춘, ‘좌파세력 끌어내야… 천안함·변호인 용납 안돼’」, <미디어오늘> 2017년 5월 5일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668>, 2018. 7. 21.

22) 안환기, 앞의 글, 150쪽.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시켰고, 중앙정보부장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법률보좌관의 보직을 주었다. 1974년 8월, 재일교포 문세광의 육영수 대통령 부인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김기춘은 사건 수사를 맡아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문세광 사건 수사를 계기로 김기춘은 대공수사국장으로 승진했고, 공안 담당으로서 1975년 11월 중앙정보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인 ‘학원침투 복괴간첩단’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관련자들은 2016년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41년만에 복권이 이뤄졌다.<sup>23)</sup> 그는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김기춘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김기춘은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변호사, 법과대학원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아래에서 권력 행사 방식을 학습했고, 국가 기구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도면밀한 인사정책과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위압적인 명령체제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관철시켰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좌파’라는 낙인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담론 체계이다 보니 실행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게다가 은밀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도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부 공무원들과 산하 조직 공무원들도 명백한 공권력의 오·남용이기에 실행 지시에 초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강력한 실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지원 배제’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유진룡 장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부터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sup>24)</sup>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장관직을 맡아 수행해오다가 2014년 7월에 면직되었다. 면직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블랙리스트 집행과 관련된 청와대와의 갈등이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더

23) 박재찬, 「1975년 유학생 간첩단 사건 누명 벗은 목사 3인 “41년 만에 무죄… 이제야 해방감”」, 〈국민일보〉, 2016. 12. 19.

24) 「유진룡 “블랙리스트, 김기춘 지시…역사 30년 전으로 후퇴”」, 〈한겨레〉, 2014. 1.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898.html#csidxea989c1202a6e7ab9679217769e5746](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898.html#csidxea989c1202a6e7ab9679217769e5746), 2018. 7. 21.

불어 조현재 문체부 차관도 같은 이유로 경질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 8일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문체부의 1급 공무원이었던 기획조정실장 최OO, 종무실장 김OO, 문화콘텐츠실장 신OO을 사직 처리했다.<sup>25)</sup> 청와대가 나서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인사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기춘은 2013년 8월 5일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한 이후인 8월 16일에 국가정보원에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활동 실태」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문체부에는 「특정편향(좌편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10월 2일, 국가정보원은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를 청와대에 올렸다. 국가정보원과 문체부의 보고를 기반으로 문체부에 ‘문화예술정책 점검 TF’가 구성된 것이 2013년 9월 9일이었다. 이 TF는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단장이었을 정도로 비중이 컸으며, 매주 월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2014년 4월 20일까지 활동했다.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는 세월호 사건 이후인 2014년 4월 21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1년여 동안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로 바뀌어 활동했다.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는 유진룡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인에 대한 인사조치 이후 신임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기(2014.8.21.~2016.9.4.) 기간에 보다 강력한 문예진흥기금 운영을 지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후, 조윤선 문체부 장관(2016.9.5.~2017.1.21.)이 구속될 때까지 블랙리스트 집행이 문체부를 통해 지시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기, 블랙리스트 집행의 실질적 토대가 된 문건이 2014년 10월 21일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sup>26)</sup>이다.

이 문건은 1. 문화예술 분야 1)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방안 2) (지역)비엔날레 지원 개선 방안 2. 콘텐츠 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 개선방안 2) 영화제 지원 개선방안 3)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 관련 개선 방안 3. 미디어 1)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를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로 구분하여 영역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5) “그(최OO 전 문체부 기조실장)는 “2014년 6월 조현재 당시 1차관이 김소영 교육문화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 명단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최 전 실장은 법정에서 나온 뒤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것을 청와대에서 눈치챈 것 같다. 한마디로 머리 굴리다 들통난 것이었다”며 웃었다. 그는 “당시 함께 강제사직을 당한 김OO 전 종무실장, 신OO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내가 서로 ‘잘린 3총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문현경, 「“2014년 6월 블랙리스트 최초 명단 받아”, <중앙일보>, 2017년 5월 3일자, 6쪽.)

26) 문화체육관광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2014.10.21.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집행을 문제 삼았다. 문예기금 일반 공모 사업에서 기존 관행적 지원을 20~40% 축소하고, 신규 사업 비율을 20~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언술적으로는 신규사업이지만, '기획 공모 사업'의 비중을 강화해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선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심사단계에서도 예술위와 문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배치했다.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 예술위 간부 간사 심의 참여(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위원회 간부가 심의 단계에 참여해 '블랙리스트 예술인'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위원회와 문체부에서 "결과 공유 및 최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단계별로 '배제조치'(블랙리스트 예술인 배제)가 이뤄지도록 중복 체크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일반 공모 사업에서 심의 단계 강화가 이뤄진 이유는 박근혜 연출의 <개구리>가 국립극단 기획공연(2013.9.3.~9.15)으로 상연되었기 때문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9월 9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의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라며,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고 박정희·박근혜 부녀에 대해서는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연출의 <개구리>는 기획 공연이었지만, 이후 각종 일반 공모 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작동'의 계기가 되었다.

'(지역) 비엔날레 지원 개선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광주·부산·대구·창원·공주·강원에서 6개 비엔날레가 국고 지원을 받고 개최되었는데, 2013~2014년에는 68.4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문건은 (지역)비엔날레에 대해 사전심의, 예산교부시 이행조건 강화, 평가와 연계시키는 등 분명한 개입의지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시·도 예산신청시 문체부는 형식적인 검토 후 적정의견만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상 균형감 있는 인사가 예술감독(작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경우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재부에 통보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비엔날레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홍성담 결개그림 <세월오월>이 2014년 8월 8일부터 개최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달콤한 이슬>'에 출품 예정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세월오월>에 대해 수정 요구가 있었고, 홍성담 작가가 요구를 수용해 닭 그림으로 대체했다가 결국 전시가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도 예산 심사 때 '2018 광주비엔날레' 행사 예산 13억원이 삭감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강화'와 '건전한

영화 제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년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4,216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도 '정치편향 영화'에 대한 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 문제의 식이었다. 심사단계에서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7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건전 영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선정단계에서는 '9인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정치편향 내용 및 반정부 소재'를 배제하겠다고 했다. 2013년 8월에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이 문제가 되었다.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이빙벨> 상영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영화제 지원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표적 삼는 논의도 이 문건에 포함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012~2018년까지는 기재부 국제행사심사 대상'인 점을 들어, '전년도 영화제 평가 결과를 지원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14억 6,0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2015년에 8억원으로 삭감 조치되었다. 정부 출자 펀드의 영화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투자조합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투자조합 업무 보고의 정례화와 투자심사계획 등 수시 상황보고'를 통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한국출판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 위촉 단계에서 후보자 검토를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균형적 시각의 인사'가 맡도록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2월 24일 「문체부 장관, 좌 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에 등장하는 '좌 성향 「작가회의」 소속으로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한 작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 것에 대한 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문건에는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 비공식 의견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이 입안되어 집행하도록 강제한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2013년 12월 20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나 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4년 8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 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그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조현재 문체부 차관, 그리고 문체부 1급 공무원 3인을 인사조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동을 위해

‘문화예술 정책점검 TF’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와 같은 실행조직이 운영되도록 강제했다.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적 실천 계획 문건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자신의 국가기구 참여 경험을 투영하여, 이 문건을 통해 실질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예술을 길들이려 했다. 그 집행은 민주적 원칙을 짓밟는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 강제력을 동원해 이뤄졌다. 김기춘의 행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전문가와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기획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sup>27)</sup>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담긴 문화예술 지원의 제도 자체를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체계를 바꿈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국가기구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은 ‘전체성의 폭력’이 청와대·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진흥원을 통해 문화예술가들에게 가해지도록 한 ‘실행 문건’이었다.

## 6. 시민민주주의와 문학예술의 대안담론

2017년 2월, 99명의 시인들이 참여해 한권의 시집을 간행했다. 한국 시단의 원로인 강은교·신경림·이시영·이하석·정희성·천양희의 시가 실렸고, 젊은 시인인 권민경·김중일·박소란·박준·서효인·황인찬의 시도 게재되었다. 『검은 시의 목록』<sup>28)</sup>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항의하며, 시인들이 참여해 만든 공동시집이었다.

2017년 2월 11일 오후 2시에는 공동시집에 참여한 시인들이 광화문의 광장극장인 ‘블랙텐트’에 모여 『검은 시의 목록』 출간 기념 시 낭송회도 개최했다. 시인들은 시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색으로 채워져 있는 지를 노래했다. 부당한 정치 권력은 ‘시인들의 세계가 검은 색’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인들의 시세계는 세상의 색깔만큼이나 다

27)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몹시 회의적이다. 다수결 원칙에 의한 통치는 개인적 권리와 헌정적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는 사치스러우며, 단지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중간계급의 등장과 결합된 상대적 풍요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전문가와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적이고 의회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도 행정적 지시 체계나 사법적 결정에 의한 정부를 강력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중앙은행과 같은 주요 기구들을 민주적 압력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90쪽.)

28) 안도현 편, 『검은 시의 목록』, 걷는 사람, 2017.

채로웠다. 『검은 시의 목록』에 실린 김행숙 시인의 〈해피 뉴 이어〉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복합적 의미를 환기하는 주목할 만한 시이다.

케이크처럼 우리는 모여 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칼뿐이라는 듯이

우리는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크게 웃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치아처럼 우리는 나란히 늘어서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이제 우리는 똑같은 입 모양으로 동시에 비명소리를 … 아 아 아 아 잠에서 깨기 위해 기지개를 켜듯

준비하자! 이 세계에는 도화선처럼 점점 짧아지는 무언가가 있다! 곧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듯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푸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치마저고리를 입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척결(剔抉)! 척결(剔抉)! 척결(剔抉)!을 고창했다.

- 김행숙, 〈해피 뉴 이어〉, 『검은 시의 목록』, 걷는 사람, 2017, 98쪽.

이 시는 하나의 익숙한 풍경을 제시한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열망하듯이, 사람들은 ‘재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모여 있다. 너무도 촘촘하게 함께 있어서 날카로운 칼만이 그 사이를 지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12월 31일 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분기점이다. 그렇기에 “도화선처럼 점점 짧아지는” 안타까움과 새해를 “준비”하는 기대가 교차된다.

이 시에서는 그 긴장과 기대를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칼”이라고 표현했다. 칼이 지나가 드러나는 케이크의 단면인양, 사람들은 “가지런한 치아처럼” 서 있다. 사람들은 벽시계를 바라보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처음에는 비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잠에서 깨기 위해 기지개를 켜듯”는 저항의 몸짓으로 변해간다. 낡은 시대는 마치 “도화선처럼 점점 짧아”지고 끝을 향해 긴장감 있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대통령”이 외치는 “척결(剔抉)! 척결(剔抉)! 척결(剔抉)!”은 결국 자신의 시대가 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해피 뉴 이어〉는 제목이 환기하는 힘이 큰 시다. 이 시에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긴장이 있고,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기대가 있으며, ‘카운트다운’이 외쳐



지는 처음과 끝이 공존한다. 끝은 처음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는 잘리는 단면처럼 “척결(剔抉!)”이라는 단절이 자리하고 있다. ‘0’의 지점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 그 새로운 출발을 둘러싼 환기력 있는 은유들이 이 시에는 넘쳐난다. 마치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견한 듯한 <해피 뉴 이어>는 시전문 계간지 『발견』의 2016년 봄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 시가 1년여가 지난 다음에 『검은 시의 목록』에 다시 수록되어 눈길을 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구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자, 한국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신호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통한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 행위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다고 간주되었다. 1987년에 현행 헌법 제21조 2항 ‘검열 금지 조항’ 제정되었고, 민간기구 영역에서는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자본을 통한 통제’를 기본 담론으로하는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이 이뤄졌다. 그 담론 체계를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었다. 이 문건은 ‘신진세력을 중심으로 건전문화세력 조직화’와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 통제’를 중요 담론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했고, 우파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통한 장기집권 기획서였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3월 15일에 작성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병든 신체, 오염된 상태로 진단했다.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을 통한 통제’를 표방했지만, 문화예술인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적대화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더 나아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2014년 10월 21일에는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 집행했다. 박근혜 정권은 문체부 등에 대한 인사 조치와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국가기구에 의한 ‘전체성의 폭력’을 문화예술인에게 가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전략을 앞세워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적·미학적·학문적 가치 평가를 무시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초래했다.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문화예술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문화세력’과 ‘좌파 문화예술인’의 대립이라는 가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예술계는 ‘공안의 문화정치’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통제하려

는, 혹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유신적 무의식’의 재현이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까지 박탈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상상력을 제한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문화예술계 진진화’ 담론에 입각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을 행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저항 담론을 적극적으로 구성했다.<sup>29)</sup> 문화예술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총체적 생활양식의 상징적 표현자로서 존재를 긍정해왔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인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체성의 폭력’에 대해 저항했다. 2015년 10월 6일에는 연극인들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청문회를 요구하면 979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6년 11월 4일부터는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내에 ‘광화문 예술인 캠핑촌’을 만들어 실천활동을 했다. 민간 차원에서 ‘검열백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것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 활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1월 10일에는 광화문에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설치하고, 71일간의 기간동안 72개의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김근 시인의 <지극히 사소하고 텅 빈>에 등장했던 “고삐 풀린 천사”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를 쏘다니”던 예술가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혁명가가 되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광화문 캠핑촌과 ‘블랙텐트’에 정박시켜 ‘전체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싸움을 부당한 정치권력과 벌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간 신뢰를 갖고 대해왔던 문화예술인과 문체부 산하 단체의 관계에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국가가 나서서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삶의 지향이었던 문화예술의 공공적 역할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29)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는 정치와 경제, 또는 넓은 의미의 사회가 물질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문화는 상징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흔히 지리학자들은 상징적인 것이 사람들이 생활양식의 지표로 만들어 내는 인공물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와 같이 문화를(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것이 아닌 상징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상이한 영역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규제하며 사회의 총체, 즉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관계적으로 특정한 인간집단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단순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문화를 단순히 자연이 아닌 존재로 정의하는 것이다. (돈 미첼,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 2011, 61쪽.)

문화예술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인에게 암묵적으로 위임한 자유의 지표이다. 문화예술은 시민적 권리의 잣대이기예, 문화예술인들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려 노력했었다. 자유로운 상상력은 비판적 사고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삶의 틀에 빈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국가를 비판할 자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상식에 도전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낼 자유는 ‘빈 공간, 여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시민사회가 “예술을 즐길 마음의 여백을 만”들면, 예술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진흥”될 수 있다고 했다.<sup>30)</sup> 문화예술을 인간의 기본적 삶의 권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을 포함한 국가 기구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중요한 전환점이 ‘블랙리스트 사태’로부터 만들어졌다. 이제 한국사회는 ‘0시’를 지나왔다. 무엇을 “척결(剔抉)”하고 어디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지는 “마음의 여백”을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30) “예술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즉 경제적 곤궁의 시대에 예술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 진흥에는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마음의 여백을 만들기만 한다면, 예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진흥될 수 있다.”(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옮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195쪽)

## 제4절 |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이양구\*

## 1. 문화예술의 관점

내가 당초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제목으로 백서 원고를 쓰기를 자청한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의 최대 피해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계 사람으로서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기록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면 나는 내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주요 예술지원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 등에는 서명하였기 때문에 소위 9,473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중 하나로 분류하여 문체부에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는 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건은 연극계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연극계 대관배제 및 아르크 대극장 폐쇄 사건, 2015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사업에서 지원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박근형 연출가에게 공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사건, 2015년 10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대학로 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있었던 소위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사건’ 등 모두 세 가지 사건이었다. 연극계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기간 동안 몹시 힘들어했던 사건이 이 세 가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그 밖에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연극분야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겠다.

내가 진상 조사를 하는 동안 견지하고자 하였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의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였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는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검찰이나 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하는 조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입장이란 인간의 삶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

\* 극작가, 블랙리스트조사위 전문위원

라본다는 것은 단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던 행위와 그것이 어떠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조건, 내적 상처까지도 묻고 기록한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관련자들은 내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나 역시 들은 얘기를 여기에 다 적을 수도 없고 다만 진술자들이 조서에 남겨놓은 정도를 인용할 수 있을 뿐이다. 진상 조사 기간이 너무나 빠듯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의문 나는 조사를 지속하다보니 정작 진상조사 보고서는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최대한 간결하게 드러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고작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만 남았느냐는 어느 문체부 공무원의 비판은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를 받게 된 사람과 어느 정도는 내가 그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고, 진상조사를 근거로 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권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그러한 처분을 권고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에게 향하는 기준은 곧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향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자주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었고, 꼭 참고 진상조사를 계속하였고, 형사처벌 및 징계권고 대상자에 대한 참고 의견도 내게 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난 지금 생각해 보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만 바보라던 어떤 기관 직원 분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사실대로 말한 자는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권고 받고 끝내 거짓말을 한 자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처벌 권고를 받지 않게 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기관장 시절 있었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던 연극계 선생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오랫동안 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생각도 난다. 간단한 사실 확인 정도만 해주길 원했는데 매우 상세한 기록을 보내와서 나를 당황하게 했던 문체부 공무원도 있었다. 다른 조사 때문에 조사위 사무실에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보았던 그의 눈빛이 내내 잊혀 지지 않는다. 잠시 마주친 눈빛이었지만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말하듯 그가 느끼는 죄책감이 조사실에서 조사위원 앞에서 보이는 잠깐 동안의 인간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으나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순간들은 기록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하고, 블랙리스트 사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죄악을 감해줄 수 있는 순간들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순진한 생각일 수 있겠으나, 그가 보낸 기록의 상세함은 그가 징계를 권고 받는 근거도 되었지만, 그

가 회복되는 근거도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약 언젠가 신뢰받는 예술지원기관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 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이익을 자처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것은 세상살이를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순진한 생각일 것이지만, 문화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큰일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말할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을 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주는 울림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특별한 것이 분명하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의 조각과 진술들을 맞춰가면서 내가 연극계에 있는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설명해 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법철학자 이재승 교수가 <오이디푸스 왕>을 다시 읽어보라던 의미가 그런 것이었을까.

## 2. 개구리와 구름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8월 중순 경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고 난 후 국립극단 기획 공연 <개구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공연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중앙일보는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 국립극단 연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sup>1)</sup> 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을 만든 게 일반 민간극단이 아닌, 국립극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작품’은 국립극단이 기획한 ‘그리스 희극 3부작’ 중 첫 번째로 연출가 박근형씨가 원작의 골격만 가져다 쓴 채 사실상 작품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상 노무현과 박정희로 대변되는 한국 현대사를 둘러싼 좌우 이념 대결이다. “분열과 원한을 심어 놓고, 이분법으로 재단했다” 등 노무현에 대한 비판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박정희에 대한 공격이다. 공포

1) 「박정희·박근혜 풍자냐 비하냐 ...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 12.

정치, 세뇌, 특혜와 부의 대물림 등을 꼬집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친일 행적 부분이다. “왜놈들의 앞잡이가 되고파 손수 혈서를 쓰던 일을. 만주 벌판에서의 그 치욕적인 활동을.”

노무현을 연기하는 배우는 키가 큰 훈남형이다. 여리고 따뜻하게 묘사된다. 반면 박정희는 콧수염을 기른 배우가 연기한다. 위압적이며 거칠다. 특하면 욕을 한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된 당시에 연극계 사람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연극 <개구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연극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기사에서도 누가 어떤 ‘논란’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사는 당시에 ‘논란’을 다루고 있다기 보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기사로 보였다. 그런데 내가 관련자들을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보니 2013. 9. 당시 ‘논란’의 실체는 이런 것이었다.

연극 <개구리>가 개막(2013.9.3.)한 후인 2013년 9월 5일~6일 경 청와대 문체부서관실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좀 거친 표현으로 청와대에서 ‘길길이’ 하였다고 했다. 김OO 과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나서 국립극단으로 가서 공연을 본 후 김OO 예술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일주일 가량 이 문제로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2013년 9월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개구리>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조OO도 연극 <개구리>를 본 후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하였다고 하니 ‘논란’이 엄청났던 것은 분명했던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12일 위 중앙일보의 기사가 나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 졌고, 기사가 나간 당일 김OO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을 찾아가서 장시간 면담을 나눈 후 손진책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갔다.

문체부가 청와대에 <개구리>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보고하였던 문서인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sup>2)</sup> 문서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먼저 ‘주요 내용 검토’라고 하여서 연극 <개구리>의 줄거리를 검토한 후 ‘내용상 문제점’으로,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세대 풍자는 불가피하나, 일부 정치편향적이라 오해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그 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풍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이라고 하여서, ‘○당초 극본 초안에는 ▲그 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론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손진책)’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는 ‘향후 조치계획’ 또한 보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 작품(구름<sup>3)</sup>)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중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임기:2013.11.8.)

이 문서는 2쪽에서는 ‘참고사항’으로 향후 ‘조치 대상’이 될 작품들을 열거하였는데, ‘젊은연출가전(1)-알리바이연대기(9.3~9.15)’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2)-구름(9.24~10.5/백성희장민호)’이 눈에 띈다. <알리바이연대기>를 연출했던 김재엽 연출가에 따르면 국립극단 손진책 예술감독은 <알리바이연대기> 공연장으로 찾아와 연극 무대에

2)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2013. 9. 12.

3) 1) 000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포함 예정. (원주)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등 우려를 표하였고, 극 내용 중에서 박정희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였다고 한다. <구름>의 경우에는 손진책 예술감독이 남인우 연출가를 예술감독 사무실로 불러 ‘풍자의 내용보다 미학적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최OO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OOO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풍자 부분에 대하여 특정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은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겠느냐고 하였다고 한다. 문체부가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 <구름>을 언급하면서 ‘조치 예정’이라고 하였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2013년 9월 당시에는 중앙일보 기사가 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진상 조사를 하고 보니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누군가가 청와대에 공연 내용을 말하고,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문제제기를 한 후 문체부와 국립극단이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작품들에 대하여도 검열 계획을 세운 후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을 긋는 등 실제 검열 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남인우 연출가는 공연 연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간섭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공연이 끝난 후에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국립극단에서 정치적 소재의 공연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감독은 이 정권에서는 다시 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다. 실제 그 뒤로 국립극단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검열이 점철된 과정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구름> 공연에 참여하였던 배우 한 분이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 배우는 그때 당시에 손진책 예술감독이나 최OO 사무국장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 선에서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이었다. 국립극단이 시민의 극단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극단으로 기능해왔던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 사태가 터지고 난 후 국립극단이 정부의 말을 듣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국립극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민주시민에게 복무하는 대신 정권의 뜻에 따르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행정 관료 조직이 전반적으로 그러했을 것이다. 왜 국립극단이나 문체부는 정권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민주시민과 예술인과 연대하지 못하였던 것일까.

2014년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자 청와대에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배우 000의 자살을 명분으로 갖다 붙인 매우 비도덕적인 사건이었다. 해당 사업의 담당자였던 강00 사무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처음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회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더니, 거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유진룡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경우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예술국의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문체부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했던 인식은 그런 것이었던 것이다. 불법·부당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없었다. 장관부터 주무관·사무관까지 작은 구멍을 방치하자 구멍은 점차 커졌고 마침내 독이 무너질 정도까지 갔던 것이다. 국립극단을 비롯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도 하등 다르지 않았다.

### 3.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

진상조사를 하면서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 사실들을 점차 알게 되었다. 같은 연극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참을 수 없어 마로니에 공원 근방에서 서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도 계셨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극장인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에서 하는 공연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한 사람 혹은 하나의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한 사람 혹은 하나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기구와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일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밥 한 그릇이 내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땀이 있었듯 한 사람 혹은 한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배제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했던 것이다. 진상조사위 사무실에 새벽까지 남아서 자주야근을 하는 동안 관료조직 안에서 출·퇴근을 반복하는 내 몸은 내 정신보다 더 잘 블랙리스트 실행 노동의 감각을 쫓아가고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공무

원들은 문화적 파시즘에 잘 길들여진 몸과 마음으로 자기를 더 잘 개조하여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함께 일했는지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배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2월 21일에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팩스 하나가 도착했는데, '예술위(위원장: 권영빈)는 금년 상반기~'로 시작되는 한 장 짜리 문서였다. 그 내용 중 연극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4)</sup>

- 예술위(위원장: 권영빈)는 금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78억 8,800만원) 지원대상을 선정(7개 분과 448건: 단체 238개·개인 210명)하였는데
  - 지난해 '봄페스티벌-국보법·아이리스 PC방' 등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해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도 재선정
- 이는 지원 대상에 작품·단체 선정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분야별 5명)에 맡기는데다 심의위원도 대중적 인기·지명도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에 따라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지적
  - ▶ 건전 문예계에서는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 ① 문체부가 나서 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 추천(1.2배수)→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 ②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재선정되자 청와대가 문체부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부터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모든 사업에서 지원배제 조치되었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배제되기 전에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2015~2016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사를 진행하여 보니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선정된 후 2015년 지원 배제되기까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거의 드러난 상태였다.

4) 팩스송부문서(다), 2014. 2. 21.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팩스가 왔던 당일인 2014년 2월 21일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서를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였다. 유진룡 장관은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예술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선정된 경위를 보고하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2014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는 배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도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였던 것이다.<sup>5)</sup>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배제하기 위한 계획은 2014년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진행됐다. 먼저 2014년 3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심사위원은 모두 19명으로 파악됐는데, 그들이 배제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2014년 2월 21일경 문체부 유진룡 장관이 김기춘에게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조치 등 조치계획 등을 담은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대면 보고를 한 후,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과 오OO 사무관은 위 보고의 후속 조치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이 명단은 국민소통비서관실 신동철 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 신동철은 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황현산 등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 강좌’ 등의 사유로 배제 의사를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A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오OO은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과 장OO 창작지원부장에게 안치운, 차근호 등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은 예술위 사무처의 이OO과 장OO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sup>6)</sup>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먼저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이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5) 문체부,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6) 「김기춘 외 3인에 대한 1심 판결」, 11-12쪽.

2014년 4월 이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과 선임행정관 A는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가 많으니 2015년 예술위 공모사업 이전에 심의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문체부 예술국에 몇 차례 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2014년 4월~9월 사이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등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박OO 예술정책과 사무관에게 전달하였고 박OO 사무관은 황OO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전달하였다. 황OO 창조행정담당관은 2014년 10월 경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를 작성하여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 보고하였고, 이 문서 내용은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는 실제 이 문서에 적힌 매뉴얼대로 실행되었다. 이 블랙리스트 세부 실행 계획 문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세부 단계는 모두 4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단계(공모계획 수립) → 공모단계(신청 및 접수) → 심사단계(심의 및 선정) → 사후관리 단계(보조금 교부 및 정산)이 그것이다. ‘사전단계’에서는 ‘전년도 미지원 단체’ 등 ‘우선배려기준’을 적용하여 신규사업 비율을 20~40% 확대하고 관행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모단계’에서는 예술위와 문체부가 ‘신청서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술위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심의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심의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과 사전협의를 사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하여 단지 관료들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도 땀 흘려 일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보람을 느끼며 일했던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예술위 부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실행을 부탁받고 이를 거절한 후 심사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 한 명은 마치 마피아 게임에 참여하는 것 같았다고 하였던 것이다.

마치 마피아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심의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심사위원들 중 누가 정부의 검열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마피아고, 누가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심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검열이 참 나쁜 것은 평소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심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립극단에서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도대체 국립극단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정부의 조력자이고 누가 검열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7)

한편 ‘심사단계’의 경우 예술위 간부가 심사에 참여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정치편향 작품이나 단체, 예술가를 선정 배제’하도록 하고, 심사 후에는 예술위와 문체부가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확인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 책임하에 해결 조치 하도록 하고 예술위원회 전체회의의 최종 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하고 김OO 예술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2014년 12월 19일 보고하였던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융복합·다원예술분야에서 지원 신청한 ‘프린지페스티벌’의 경우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예술계에 파급효과가 큰 행사여서 심사 제외 곤란’이라고 하면서, 서울프린지네트워크(오성화)의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5’의 경우 ‘○ 지원중단시 젊은 예술가들의 반발 및 부작용 예상 ○ 대표 개인의 활동이 문제되며, 행사 자체는 내용, 인지도, 파급효과 측면에서 국내최고수준 ○ 심사(선정)가 없는 자유참가 제도로 젊은 예술가들 선호 ○ 대안으로 지원액 삭감하고 추후 행사세부내용 사전확인 강화’라고 보고하고 있다.<sup>8)</sup>

한편 이 문서에는 참고 자료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5’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중단 시 ‘우수한 축제 탈락에 대한 현장의 반발 및 젊은 예술가들의 동조 우려’, ‘다원예술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심의에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다원예술분야 개척, 문예기금 지원 신설계기)’, ‘특별한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탈락시킬 사유가 많지 않음’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활동 등 특이사항]’으로는 ‘○ 오성화 대표, 용산참사 해결, 철도파업지지 시국선언에 참여(‘13.12.27 민중의 소리/’09.7.23 한겨레신문)’ 등의 내용도 보고하고 있다.<sup>9)</sup>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단체 하나를 배제하기 위하여 청와대에서부터 산하기관까지 국가조직이 총동원되었고, 그 배제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땀흘려 일했던 것이다. 그 과정은 단지 국가공무원들만이 땀 흘려 일한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 역시 힘을 합쳐 일했다. 다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누가 보람을 느끼며 일했는지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일했는지 하는 점이였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행위를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였다.<sup>10)</sup> 내가 궁금한 것은 국정

7) 「정OO 1회 진술조서」.

8)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3쪽. 2014. 12. 19.

9)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4-5쪽. 2014. 12. 19.

10) 가령 허OO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경제,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정

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 블랙리스트 실행 노동을 하고 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생각이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과 정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국립극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쉽게 사표를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소부터 저의 소신입니다. (중략) 국립극단이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할 경우 당면한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정치극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정치적 사건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품을 하고자 했습니다. 촛불을 통해서 용기 있게 싸운 분들을 존경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예술의 자율성을 위해서 지난 4년간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인격이나 국격이나 국립극단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랍니다.<sup>11)</sup>

#### 4. 세상에 이런 일이

탈락시킬 사유도 마땅치 않고 심의에서 무난하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술위가 마련한 방법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sup>12)</sup>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니 “보다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심사위원들도 큰 의심없이 동의하였다고 하였다.<sup>13)</sup>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는 조사위에서 예술위 직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예술위 직원들에게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예술가들과 동료이며 협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원예술분야는 선배도 없고 협회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1999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예술위 직원들은 다원예술 혹은 예술의 다양성 확산이라는 영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고 소중한 맞상대였습니다.

당한 통치행위’.. 청 행정관 ‘황당 변명’], 2017. 1. 31.

11) 「김OO 1회 진술조서」.

12) 「장OO 2회 진술조서」.

13) 「OOO 1회 진술조서」.

우리는 서로 같이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프린지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의지가 되었습니다. 예술 행정가와 예술가 사이에 수평적 맞상대로서 우정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술위 직원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혹합니다. 예술위 직원들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왔던, 예술행정가들과 현장예술인들 사이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sup>14)</sup>

그런데 예술인들과 예술행정가들 사이의 깨진 신뢰는 단지 예술행정가들이 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하였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예술행정가들이 예술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배제할 방법을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배제를 실행하고 배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예술인들을 이간질<sup>15)</sup> 하고……. 그러한 행위를 수년간 반복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신뢰를 깬 것은 단지 예술행정가들만은 아니다. 적지 않은 예술현장의 전문가들도 하등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가령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원장 양OO은 2015년 6월 25일 개최된 제162차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예술위원들에게 당시 예술위 지원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폭넓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향후 예술위 조직 차원에서 정식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항을 예술위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이었다.<sup>16)</sup> 하지만 예술계 현장을 대표하여 예술위에 들어간 예술위원들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책임지고 공론화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침묵했던 예술위원들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런 것이었다.

예술위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블랙리스트 작동에 가담한 적도 없다.<sup>17)</sup>

블랙리스트를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위원에서 중도 사퇴하고자 했지만, 연극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를 최대한 막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말려서 사퇴 의사를 철회했던 것이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최대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sup>18)</sup>

14) 「오성화 1회 진술조서」.

15) 제1회 원로연극제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젊은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자 원로연극인들에 대한 우대조치로 도입된 사업이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16) 「양OO 1회 진술조서」.



예술현장의 전문가로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내놓은 입장도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예술위 담당 직원이 문체부로부터)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sup>19)</sup> 저는 유럽에서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유럽은 지원은 하되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모든 심사에서 공평무사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늙기 전에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sup>20)</sup>
- (예술위 직원에게) 배제 협조 부탁을 받은 일이 없으며 심의는 공정하게 진행하였다.<sup>21)</sup>
- 심의 자체가 기억이 안 나고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은 기억도 안 난다.<sup>22)</sup>
- 예술위 직원들을 사전에 만나서 부탁을 받은 사실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도 없다.<sup>23)</sup>

예술위 직원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지원심사 과정에 개입하여 심사위원도 모르게 배제 지시를 관철시켰단 말인가.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심사위원들도 있었다.

- (심사에 들어가자) 처음에는 정상적인 심의 자료가 놓여있었으나, 곧 지원 배제 대상자가 블록 처리된 다른 서류를 심의위원에게 나눠주었다. (예술위 담당 직원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블록 처리된 단체들을 선정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sup>24)</sup>
- (예술위 담당 직원이) 청와대에서 싫어한다며 <안산순례길>을 선정 제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심사에서 제외하였다.<sup>25)</sup>

17) 「오OO 1회 진술조서」, 3쪽. 2017. 12. 12.

18) 「정OO 1회 진술조서」.

19) 「김OO 1회 진술조서」.

20) 「김OO 1회 진술조서」.

21) 「OOO 1회 진술조서」.

22) 「OOO 2회 진술조서」.

23) 「안OO 1회 진술조서」.

24) 「OOO 1회 진술조서」.

25) 「OOO 1회 진술조서」.

일부 심사위원의 솔직한 고백은 예술위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위 직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배제하였다고 진술해주었다. 배제가 진행된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사업 당시 지원사업 공모 마감 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지원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자 목록을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약 2~3주 후에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지원배제 대상자들의 신청번호를 불러주었다. 번호, 신청 단체명, 대표 이름을 불러주었다. 2016년 당시는 이미 예술위 안에서는 그것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은 문체부와 예술위 사이에 묵시적인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배제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받은 후, 내부 심의 진행을 위해 배제명단을 상급자인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본부장은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 후 사업 담당 심의 선임인 차장들에게 공유했다. 위원장에게는 사무처장이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내부 관행상 본 부장과 부장인 내가 소위 '총대'를 매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이 이른바 당시 내가 말아야 했던 '직무'였다. 심사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야별 심의위원 중 일부 친정부적인 심의위원들에게 문체부에서 불러준 번호를 내가 말로 전달했다. 그렇게 번호만 불러주면 그 분들도 그것이 소위 배제해야 하는 명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심의위원은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 등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심의위원들은 결국 지원배제 명단에 있는 단체들을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었다.<sup>26)</sup>

이러한 사정은 예술위 이외 다른 예술행정지원기관에서도 비슷했다. 가령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들은 이렇게 진술했다.

- (문체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지원 배제 지시가 왔다는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를 받았고, 공모가 나갈 때 통상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었으나, 문체부로부터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나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초 공지하였던 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학교재 갤러리가 선정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재 갤러리를 지원 배제하였다. 만약 학교재 갤러리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 배제 지시가 없었다면 학교재 갤러리가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었다.<sup>27)</sup>
- 문체부의 배제 지시는 대표에게 보고하였고, 대표는 문체부 지시대로 진행하라고 하였다.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대표가 심사위원들과 미리 만난 것으로 알고, 김선영 대표와 심사위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심사 전에 얘기를 나누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대표가 모든 심사위원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28)</sup>

26) 「정O 1회 진술조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배제 부탁을 받은 바 없다거나 배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지만, 문체부를 거쳐서 내려온 청와대의 배제 지시는 일부 양해 조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철되었다. 심사와 지원 결정은 심사위원들이 하였다.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피디라면 이 내용을 취재해서 방송할 것 같았다.

## 5. 피해자들의 고통

블랙리스트 실행에 공모하고도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심사위원들의 뻔뻔한 태도와 비교하면 현장 예술지원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일부 직원들의 양심 고백은 차라리 가슴이 아린 것이었다. 가령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조사위에 찾아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고 싶다고 하였던 어떤 직원의 진술은 이랬다.

○ 괴로웠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블랙리스트를 계속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퇴사하고 난 뒤로 현장 예술인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장 예술인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기관 대표조차도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역시 블랙리스트 실행을 함께 하는 상황이 길어졌고, 퇴사라는 선택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사 시점이 너무 늦었고 그 늦었던 선택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sup>29)</sup>

그가 속했던 기관은 2015년 해외문화원과 매칭하여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에서 최종 지원 선정하였다고 통보까지 한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폐지하고 허위 내용을 극단 측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일도 하였다. 해당 사업 피해자인 극단 마실의 손해정의 피해 진술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준다.

27) 「김OO 1회 진술조서」.

28) 「OOO 1회 진술조서」.

29) 「OOO 1회 진술조서」.

(이 사건에서 제가 받은 피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가내 수공업 창작을 이어간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들과 나누고 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함께 연극을 통해 풀어보고, 이주여성의 친구가 되어 함께 공연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초보 엄마와 세상에 처음으로 온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베이비드라마 워크숍과 공연을 하고.. 등..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을 주고 싶어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믿고 지원했던 공공기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정 취소되고 그 일을 보고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예술가를 바보 취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설득하고 겁주고 어르는 예술행정가와의 만남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 예술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금에 대한 실망으로 번져 그것에 기대어 사는 우리들의 작업을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나누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활동을 현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피해가 큼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집니다.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를 짓고 누구나 편히 쉴 공원도 관리하고 손쉽게 탈 수 있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등 눈으로 바로 보이는 삶의 부분에 쓰이는가 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말을 걸고 상처받은 마음에 노크하는 등 예술을 통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예술공공기금이 씨앗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마실은 2006년 창단 이후 청소년 폭력 문제, 이주여성 프로그램, 베이비드라마 창작 등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과 마주하며 예술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공공기금을 받아 비상업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극단의 예술가들과 최소한의 땀 값을 나누며 세상에 예술로 희망의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십여 년을 이어왔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불기를 반복하면서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지원서를 쓰는 것은 공공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하늘에 기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떨어지면 슬퍼하였지만 다시 또 기회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만나며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과정이 이토록 투명하지 못함에 좌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 줘야 할 예술 행정가들의 솔직하지 못하고 예술가를 동료가 아닌 하대하는 태도에 실망했으며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려 가며 지원서를 쓸 것인가? 아니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공공의 기금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이 무색해져버렸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혼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싸우면서 현장 예술가의 힘없는 위치를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 막막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하고 싶었고 지금까지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략)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공공기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의도가 간섭되어 진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씨앗이며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뉴욕문화원 순회공연사업 취소를 누가 지시했는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가? 그것을 따르면서 이익을 본 자와 불이익을 본 사람을 가려내고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30)</sup>

30) 「손혜정 1회 진술조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예술경영지원센터 김OO 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세세하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였다. 이 사업 1차 심사 전에 문체부 담당 주무관이 특정 예술단체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여서 김선영 대표와 상의한 후 심사위원 2명에게 배제 부탁을 하였으나 모두 배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차 심사를 앞두고 문체부에서 다시 배제 지시가 왔는데, 문제는 2차 심사 대상자 전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했다. 다시 대표와 상의한 후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부탁을 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문체부 및 대표와 다시 상의한 후 중복지원금지 원칙이라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여 극단 마실을 선정할 후 최종 배제하였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직원 하나가 극단 마실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손혜정 대표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손혜정 대표를 배제하는 실무를 하였던 김OO 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은 자신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원래 제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원으로서 근무할 때는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위 해외문화원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간 들여서 문체부를 설득해서 추진했던 까닭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된 사업에서 위와 같은 배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건을 겪을 당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팀장으로서 제가 처했던 상황에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괴롭습니다.<sup>31)</sup>

이 사업에서 김OO 팀장에게 배제 지시를 전달하였던 문체부 OOO 주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그 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배제 대상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국제문화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난감해 하시면서 그냥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략)

그 당시에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직원 분들에게 도리어 예술가들을 지원 배제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전화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지만 그분들은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물론 지원 배제를 받은 예술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sup>32)</sup>

31) 「김OO 1회 진술조서」.

2015년 봄 새로 취임한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설명하고 직접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유선으로 불러주었던 김OO 시각예술디자인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그 무렵 문체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면, 상부의 지시, 특히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무력함을 느꼈던 시기였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국장님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예술국은 누구나 한 번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부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들 예술국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했습니다. 예술국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야 했던 점은 예술가와 직원들 모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게 강요하고 안 따랐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sup>33)</sup>

피해 예술인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산하기관, 문체부를 거슬러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면 피해의 다양한 층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급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던 특검 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이 정작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의 고통에는 주목하지 못한 채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문체부 소속 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고통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에 비하면, 피해 예술인들의 신청조사로부터 출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피해 예술인들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문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데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사 활동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피해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결국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보니 보고서 작성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말았다.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민간 영역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2) 「OOO 1회 진술조서」.

33) 「김OO 사실확인서」.

## 6.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

이OO 예술정책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등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고 실행된 후 보고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대부분의 지시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이 예술국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에게 그때그때 보내주면 배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유하였습니다.<sup>34)</sup>

이OO 과장은 또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중요한 진술을 하였다.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창구가 단일화된 것은 처음에는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국, 문정국, 문화기반국, 미디어국, 관광국, 체육국 등 각 해당 과에서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국정원에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에서 국정원 관련 창구는 오OO 사무관으로 단일화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닌데 너무 많은 문체부 관계자가 국정원에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연락은 오OO 사무관으로 단일화 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담당 사무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가령 김OO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공연 담당 사무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 국장이 전화를 안 받으면 과장이나 사무관에게 전화를 하고, 사무관이 안 받으면 주무관에게도 전화가 갑니다. 처음에는 김상욱 국장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사무관과 김OO 행정관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sup>35)</sup>

‘체육국’ 등 예술국 이외의 부서에서도 블랙리스트 검증을 받기 위해서 국정원에 연락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2014년 4월 4일 경 박준우 정무수석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렸던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 모철민 교문수석 이외에도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8개 비서관이 참여하였고 이후 2014년 5월 경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되었다<sup>36)</sup>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만 하더라도 ‘체육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체육국에

34) 「이OO 1회 진술조서」.

35) 「이OO 1회 진술조서」.

36)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74쪽.

서도 국정원의 검증을 받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결국 이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을 때까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끝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글 초입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면서 <오이디푸스 왕>이 생각난다고 하였다. 내가 이해하는 <오이디푸스 왕>의 중요한 주제는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라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위를 찾아온 많은 공무원들은 관련 문서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서 몹시 놀라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한 진술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기관에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이 결코 작은 악이 아니었고, 커다란 악의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였던 일의 의미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나 역시 그러했다. 문체부나 감사원,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협조받은 자료를 보면서 내가 겪은 일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감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르는 세계가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실감나게 깨달았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아직 내가 잠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꺼내놓고 맞춰보아야 전체 그림이 어렴풋이 보일 듯 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노동 과정 이상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일일 것이다. 다만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과정과 이 작업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일이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일이라는 점일 것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깨달은 것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은 분량이었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애매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누구도 전체 그림을 그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큰 그림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고 들은 관료들과 예술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중에는 자기가 겪은 일이 모호한 상



태에서도 침묵하는 대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겪은 일이 비교적 명확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공기는 그들에게 빛지고 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회주의자가 득세하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실을 말해주었던 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은 마치 예술위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과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지원배제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직원들에게서 ‘악의 평범성’을 실천하는 기계적인 조직원의 모습이 아니라 싫은 일을 해야하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으며 불안 속에서도 ‘선의 평범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 부디 사실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할 것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암묵적으로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외’를 위해 싸울 때 ‘규칙’은 권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다.<sup>37)</sup> 공직자들이 ‘선의 평범성’을 실행하는 동안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규칙은 강화되어갔던 것이다.

37) 지그문트 바우만, 정준일 옮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225쪽.



# 4

## 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행동 및 법률적 대응

제1절 예술행동

제2절 법률적 대응



## 4

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행동 및 법률적 대응

## 제1절 | 예술행동

김소연\*

## 1. 과녁을 향해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증거들과 함께 문화예술계 검열 역시 파편이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수년간 검열에 저항해왔던 예술가들조차도 현재 확인된 ‘블랙리스트 사태’를 헤아리지는 못했다.

물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끊임없이 사건들은 계속 되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 하루 만에 보수단체 협박과 위협을 이유로 상영이 중단되고(2013. 9. 6.), 국립극단 아리스토파네스 원작 연극 <개구리>는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다.(2013. 9. 12.)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기념 전시회에서는 임옥상 작가의 <하나됨을 위하여>와 이강우 작가의 <생각의 기록>이 청와대의 지시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2013. 11. 15.), 월간 『현대문학』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제하, 정찬, 서정인의 소설 연재를 중단한다(2013. 12. 13.). 이듬해에도 사건은 계속 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급작스러운 폐지(2014. 3. 27.), 광주비엔날레재단의 홍성담 작가 <세월오월> 전시 유보(2014. 8. 11.), 광화문

\* 연극평론가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뿌린 이하 작가 연행(2014. 10. 20.), CGV, 롯데씨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 거부(2014. 11. 13.), 제35회 서울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관 탈락(2014. 11. 19.)이 이어졌다.

2015년에도 수상한 사건은 계속된다. 제35회 서울연극제 아르코예술극장 재대관 후 폐쇄(2015. 4. 3.), 영화진흥위원회 <다이빙벨> 상영 논란 등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예산 40% 삭감(2015. 7. 23.), 서울시립미술관 ‘2015예술가길드아트페어’에서 홍성담 <김기종의 칼질> 전시 철거(2015. 9. 8.), 박근형 연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창작산실 선정 취소 종용 폭로(2015. 9. 9.), 한국공연예술센터 세월호 사건 연상 이유로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2015. 10. 18.),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소월산천>에서 박근형 연출이 맡은 연극 부분 제외 요구(2015. 10. 24.) 등등. 게다가 국제교류 행사에서도 사건들이 잇따른다.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막작을 <설국열차>와 <관상>에서 <도둑들>로 교체했고(2013. 11. 6.),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차승재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할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을 철회하겠다는 압박으로 차 교수가 자진 하차(2015. 10. 23.)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어떤 사건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된 절차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건들은 명백히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 사건이었다. 또 검열의 정황이 너무나 뚜렷했던 사건들도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검열의 정황이 드러난 사건들에서조차도 지금 밝혀진 ‘블랙리스트 사태’를 헤아렸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언론을 통해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보도되었을 때도 그랬다.<sup>1)</sup> 만명에 육박하는 방대한 규모도 그렇지만, 당시 기사에 게재된 문건의 표지 또한 놀라웠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서명(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1,608인)으로 9,473명에 이르는 명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취합되었는가가 표지에 적혀 있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러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서명’이라는 방식의 견해 표명이 ‘블랙리스트’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 배제, 차별을 실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문건이 보도되자 당시 문체부(장관 조윤선)는 이 문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했다가 널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너무

1)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 2016. 10. 12.  
<http://www.hankookilbo.com/v/0abb634242a64afca79799b09f8564f4>, 2018. 6. 20.

바빠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는 등 갈팡질팡이었다.<sup>2)</sup>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해명은 ‘실제 적용이 곤란’한 참고 수준의 자료라는 것이었다. 최근에 당시 해명을 기획한 문건이 확인되었다. 당시 문체부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분석」에는 9,473명의 명단과 관련하여 “동 명단은 과도하게 많은 명단인데다가, 세부 인적사항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실제 지원사업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실제 적용 곤란)”라고 적혀 있다.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통해 해명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문건이 나왔을 때조차도 문체부는 수년간 계속된 블랙리스트 사태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복수의 직원들은 이 시국선언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활용하였으며, ‘본부(문체부)에서 해당 명단을 보고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예술가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배제하라’는 지시를 상급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sup>3)</sup>

특검 수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 그리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밝혀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의 지시로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국정원, 문체부, 산하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차별과 배제가 실행된 국가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되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겨진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왜 극장은 급작스레 폐쇄되었는지, 왜 카페 한 칸의 공연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막았는지, 왜 심사가 끝난 지원사업이 발표 직전 갑작스레 폐지되었는지 물어도 묵묵부답이거나 동문서답 같은 해명만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전모를 알 수 없었던 당시, 많은 ‘의혹’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적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었고, 예술가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당시 의혹으로 마주쳤던 사건들은 몇몇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 취임 직후부터 기획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속된 것이었다.

2) 「블랙리스트 해명자료도 못 내는 문체부 … 문화계 “청문회 열라”」, 〈한겨레신문〉, 2016. 10. 12.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65382.html>, 2018. 6. 20.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종합결과 발표 자료집」, 2018.5.8. 52쪽.

이만큼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수 개월에 걸친 촛불집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 1심, 2심은 ‘직권남용’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따른 형사고발 및 징계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있고, 사건조차 되지 못한 배제와 차별도 있을 것이다. 이만큼의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던 때 그 거대한 범죄의 어떤 한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저항이 있었다.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극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을 때, 그 광장을 지키며 시민들과 함께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 권력의 위헌·위법한 국가범죄 사건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는 훼손된 공공성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어간 담론장이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권리투쟁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원리의 심각한 훼손임을 고발한 민주주의 싸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예술가들은 시민사회를 향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했다. 예술이 사회의 커다란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2. ‘블랙리스트’라는 퍼즐맞추기

### 가. 공공극장의 공공성 훼손

2013년 9월 6일 <천안함 프로젝트>를 개봉했던 메가박스는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며 개봉 하루만에 상영을 중단한다. 이미 개봉 전 천안함 유족들과 해군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상영 중단 직후인 9일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영화단체들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에서는 정치적 외압에 의한 상영 중단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sup>4)</sup>

한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가 벌어진지 불과 일주일 후인 9월 12일 <중앙일보>에는 「박정희·박근혜 풍자나 비하나 ... 국립극단 연극 논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된다. “표현의 자유인가 정치적 선동인가”라는 부제를 단 기자 칼럼은 국립극단에서 공연 중인 <개구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깎아내리는” 연극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극을” ‘국립극단’이 제작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sup>5)</sup> 연극 <개구리>는 국립극단 가을 시즌 기획으로 공연 중인 아리스토파네스 희극3부작 중 첫 번째 공연이었다. 이미 9월 3일 개막하였고 공연에 대한 반응도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고전의 재해석에 대한 통상적 반응, 긍정과 비판이 오가는 것이었지, 이 칼럼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작품이 특정인을 미화했다거나 비하했다는 ‘논란’은 없었다. 도리어 칼럼이 발행되면서 논란이 시작된다. 국립극단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진 것이다. 칼럼 한편으로 <개구리>는 대통령 비하 연극이 되고 공연을 기획 제작한 예술감독 손진책과 공연의 연출자인 박근형은 연일 ‘사상검증’에 가까운 인터뷰를 쏟아내야 했다. 당시 칼럼에 대한 비판 의견은 있었지만 연극계 혹은 예술계의 집단적 대응은 없었다. 이 사건은 이후 연극계 검열의 주요 사건인 ‘창작산실’ 박근형 연출 배제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천안함 프로젝트>와 <개구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본격화된 블랙리스트 실행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개구리>의 경우 드러난 사건은 일간지 기자 칼럼이었었지만, 개막 직후부터 청와대와 문체부는 분주했다. 9. 6.~9. 7.경, 청와대는 문체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극단 예술감독 면담 후,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킨닝’으로 풍자한 점” 등을 내용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조치계획으로,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강력 조치,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교체 추진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의 향후 계획처럼 아리스토파네스 희극3부작 두 번째 공연인 <구름>에서는 연출자에게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이 전달된다.<sup>6)</sup> 문체부는 <개구리> 사건 이후 블랙리스트 실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한다.<sup>7)</sup>

4) 「영화계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규탄 한목소리」, <뉴스핌>, 2013. 9. 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30909000880>, 2018. 6. 20

5) 「박정희·박근혜 풍자나 비하나 ...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 2013. 9. 12.  
<https://news.joins.com/article/12589817#home>, 2018. 6. 20

6) 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종합 발표」, 76쪽. 2018. 5. 8.

7) 위의 글.



2014년 3월 27일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은 같은 해 2월부터 진행 중이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 10억원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에 4월 2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은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에서는 “이미 공모와 지원, 심사를 마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이유와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뭉개버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조속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sup>8)</sup> 이 사건 역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다.<sup>9)</sup> 상영중단, 대본 수정, 사업 폐지 등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예술계의 비판도 거듭되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비판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도 없었다. 비정상적 조치와 항의 성명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사건이 추가된다. ‘2015년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 대관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연극제’가 대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서울연극제’는 대표적인 민간연극축제로 매해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개최되어왔다. 공모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1월 15일, 서울연극제 주관 단체인 서울연극협회는 대관 심사를 주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에 대관 탈락 사유 공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7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극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18일 1차 성명서를 발표한다. 19일 공연예술센터 항의 방문, 20일 2차 성명서 발표, 12월 2일 연극인 쫓기대회에 이어 12일에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및 공연예술센터장, 공연운영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sup>10)</sup> 공연예술센터 측도 비상대책위원회 항의 방문 다음 날인 11월 20일 긴급 비공개 기자회견, 22일 ‘서울연극제’ 대관 제외에 대한 입장 발표 등으로 대응한다. 형사고소 직후인 12월 15일에는 양측이 면담을 갖고, 24일 공연예술센터 유감 표명 및 아르코예술극장 일부 대관 승인 공문을 발송한다. 형사고소라는 강경한 행동까지 이르렀지만 양측의 갈등이 일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sup>11)</sup>

8) 「문학단체들, 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비판」, <경향신문>, 2014. 4.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1939161&code=96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1939161&code=960100), 2018. 6. 20.

9)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종합 발표」, 88쪽. 2018. 5. 8.

10) 연극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싸움은 서울연극제를 주관하는 서울연극협회가 주도했다.

당시 연극인들은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이라는 심의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예술위 공연 예술센터 측의 사업운영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공연예술센터는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연예술센터 해명 과정에서 밝힌 심사기준이 대관 공모 공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절차의 투명성은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것이 훼손되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서울연극제를 개최할 극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공공극장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다. 피해 당사자인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 지키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론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연극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학로X포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다.<sup>12)</sup>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공공극장의 공공성만이 아니라 ‘서울연극제’ 역시 연극계의 공공재로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관 탈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연극인들이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서울연극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다.

11) 최운우, 「2015 서울연극제 대관심의 탈락으로 촉발된 연극계 공공성의 문제, 그리고 남겨진 과제」, 『대학로X포럼 1,2차 토론회 자료집』, 2015. 3. 13. 101쪽~103쪽.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565686410377480/>

12) 토론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차 대학로X포럼 토론회

“우리는 생산적 논의를 원한다!- 공공극장 공공성 훼손과 연극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주장

일시 : 2015년 1월 6일 오후 2시~8시

장소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0. 모두 발언 / 이해성

<1부 극장>

1. 한뼘 대관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극장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 / 이양구(극작가, 연출가)

2. 한뼘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 최운우(연극평론가)

1부 지정토론 : 한뼘 관계자, 문예위 정대경 위원

1부 자유토론

사회 : 김소연(연극평론가)

<2부 축제>

3. 서울연극제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이진아(연극평론가)

4. 발전적인 서울연극제를 위한 대안 / 김재엽(극작가, 연출가)

2부 지정토론 : 서울연극제 집행부

2부 자유토론

사회 : 이해성(극작가, 연출가)

<3부 자유토론>

사회 : 김재엽(극작가, 연출가)

자칫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을 다루면서 양비론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극장의 공공성만큼이나 연극계 공공재로서 서울연극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대학로X포럼 1차 토론회는 문제의식에서나 대응 방식에서나 대관 탈락이라는 결과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연극계 공공재에 대한 토론회에 더 가깝다. 쟁점을 정확하게 정돈할 필요를 느끼고 발제문은 발의자들의 사전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

첫 번째 발제인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sup>13)</sup> 민관 거버넌스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는 대신, 정책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하고, 시민들 스스로 각종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극장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 어떤 작품이 선정되었는가 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공공극장의 공공성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이 글은 민관거버넌스의 정책 목표가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서 어떻게 훼손되었는가를 ‘의사 결정 방식’ ‘형평성’ ‘갈등 해결 방식’ ‘책임의 공동 이행과 인지적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시민사회가 함께 검토할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서울연극제 표적 심의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형평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은 서울연극제를 대관심의에서 탈락시킨 사유로 ‘대관 신청서 구성 요건인 작품 소개와 주요 참여 인력 기재 미비’를 들었다. 그러나 대관 선정된 여타 다른 축제들의 경우도 축제 프로그래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작품 소개, 주요 참여 인력을 정하지 않았다.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에서도 충실한 문제 해결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행사고발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은 대관 심사 회의록 공개, 심사위원 공개 요구를 거부한 채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엄중한 잣대’로 심의하라는 특별 지시를 심의위원에게 제시하였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사태를 방치했다.

13) 이양구,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 정기대관공모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 『대학로X포럼 1,2차 토론회 자료집』, 2015. 3. 13.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565686410377480/>  
이후 이 발제문에 대한 인용은 따로 주를 달지 않는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 등 공공극장의 운영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서로의 이해와 주장이 엇갈릴 때, 이해를 구하고 조정과 타협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공공극장이 확보해야 할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기관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셈이다. 갈등의 해소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이 쟁점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며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것인지 갈등 해결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한 공공극장의 공공성은 확보될 수 없다. 발제문은 마지막으로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서울연극협회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책임의 공동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안’의 해결만큼이나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사건의 핵심을 비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은 청와대의 배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블랙리스트 단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방법을 변경하고 배제대상에 포함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탈락 근거가 될 만한 사유를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언급함으로써 심사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울연극협회의 강력한 항의로 아르코예술극장 일부 재대관을 합의하였지만 청와대, 문체부 예술국, 예술위로 하달된 서울연극제 배제 지시에 따라 결국 극장을 폐쇄하기에 이른다.<sup>14)</sup> 당시 이러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알 수 없었던 연극인들은, 공공극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공공성 훼손이라 비판했다.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증진, 이를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조정, 타협 등등의 절차적 요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판과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사건을 비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성의 가치라는 법, 규정, 사회적 합의가 확고했다면 과연 정치 권력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동원되는 국가범죄가 가능했을까. 그런 점에서 비록 사태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14)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014년 5월 3일 서울연극제 개막을 하루 앞둔 날 아르코예술극장을 폐쇄한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 구동부 장치 이상에 따른 조치라고 하였으나,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서울연극제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 5. 8. 81쪽~82쪽.

## 나. 2015년 9월 국정감사의 검열언어<sup>15)</sup>

2015년 9월 9일 JTBC는 「[단독:탐사플러스]지원자에 작품포기 종용 … 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을 보도한다. 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 심사 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담당 직원이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여 박근형 작 연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선정작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박근형을 직접 찾아가 공연 포기를 종용했다는 녹취록과 증언을 전하고 있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아르코문화창작기금’ ‘다원예술지원’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서 특정 작가와 작품이 배제되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보도를 접한 연극계는 크게 분노한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및 아르코예술극장 폐쇄 당시만 해도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 훼손의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검열이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지원기관이 예술가에게 작품 활동 포기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욱 컸다. 보도 이후 연극계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다음은 보도 직후 연극계의 대응을 정리한 것이다.

9월 10일	서울연극협회 “문화계의 정치 검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성명서 발표
9월 13일	연극미리행동네트워크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의 정치 검열과 헌법 파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9월 17일	대학로X포럼 긴급 심야토론회 “예술위 검열사태, 무엇을 할 것인가” 개최
9월 21일	희곡작가협회 “연극계의 정치 검열에 대한 한국희곡작가협회의 입장” 성명서 발표
9월 21일	“예술 검열을 반대하는 연극 단체들의 연대 성명서” 발표
9월 22일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연대, 서울연극협회 공동 주최 ‘한국문화예술을 염려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개최
9월 24일	“검열을 거부하는 극작가들” 모임 개최
9월 21일~	“예술인 탄압을 통탄하는 원로, 중견 연극인들의 성명서” 서명 작업 시작
9월 22일~	대학로X포럼 “검열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명 작업 시작

15) 이 절은 필자의 다음 글을 바탕으로 개고했다. 김소연, 「사회적 논란과 예술의 공공성」, 『연극평론』 통권79호, 2015년 겨울호.

연극계 대응은 대학로X포럼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다. 연극계 각 단체들의 성명서와 서명자들이 대학로X포럼에서 취합되는데,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979명이 참여했다. 10월 6일에는 성명자와 서명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갖고, 검열에 항의하는 연극인들의 뜻과 검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요청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교문위에 전달했다.<sup>16)</sup>

2015년 9월 한달 간 교문위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열이었다. 문체부, 한국

16)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979명의 서명한 성명서는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명자 명단은 대학로X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644655225813931/>

[검열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검열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문체부 장관과 문예위원장, 10인의 예술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 및 국정 감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문예위)가 예술지원 심사에 개입, 불법 검열한 사실이 드러났다.

‘창작산실’ 심사에서 문예위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심사위원을 회유 협박하고 지원 선정자를 찾아가 포기를 종용하였다. 문학창작기금 심사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 32명의 문인들이 검열되었으며 다원예술분야 심사에서 “안산순례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요구하였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불법적 검열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문예위에서 정치 검열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예술지원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심사위원과 예술가를 겁박 하면서 정치 검열을 자행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문화체육부장관은 근거 없는 지원액 산정으로 거짓 답변을 하는가 하면 문예위원장은 취임 전 권영빈 위원장 당시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 이뿐 아니라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에 대한 지원 배제’를 공공연하게 주장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검열을 자인하고 옹호로 일관하였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망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이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민의는 시민의 공개적인 의사 표명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열을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국가의 순수예술지원기관으로서 학문과 예술의 표현의 자유 및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야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앞장서 정치 검열을 자행하고 있으며, 문체부 장관과 문예위원장이 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검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문예위 검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인의 예술위원들은 이번 검열 사태에 대한 묵인, 방조 또는 협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5년 9월 22일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창작산실’ 등 검열에 대한 추가 의혹과 사실이 공개되는 자리였다. 그와 더불어 ‘검열’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횡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추가 사실을 발표하거나 보도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문체부와 예술위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드러난 검열 정황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sup>17)</sup>

9월 9일 창작산실 검열 의혹 보도, 9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창작산실, 아르코우수문학 창작지원, 다원예술지원 등에서의 특정 작가 특정 작품 배제 의혹이 공개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월 12일 “예술계 편파지원 논란에 대한 예술위 입장”(이하 ‘입장’)<sup>18)</sup>을 발표한다. (그런데 ‘입장’은 제목부터 사건을 왜곡한다. 첫 보도에서부터 제기되었던 ‘검열 의혹’을 ‘편파지원 논란’으로 바꾸어 놓았다.) ‘입장’에서 예술위는 “(박근형 연출은)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기에 “공공지원을 받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이 야기한 사회적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 작품이 공공지원에 적합한 작품인가를 살펴야 하며, 첫 보도에서 공개된 심사위원 녹취에서 나온 예술위 “직원의 ‘정치적인 이유’라는 발언 역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서 보도에 인용된 ‘위원장 지시사항’ 이메일 역시 “사회적 논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입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은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박근형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대한 해명은 한 예술가의 전작을 들어 그의 창작활동을 예단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검열이다.<sup>19)</sup>

이러한 주장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 의원인 한선교, 박창식, 박대출 그리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에 의해 되풀이 된다. 박명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창작산실 심사결과 번복 및 공연 포기 중용을 ‘사회적 논란을 예방’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 주장했다. 불법 검열을 예술작품에 대한 공공지원의 기준에

17)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 개막작으로 공연된 <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김재엽 작연출, 드림플레이테제21, 2016.6.9.~12.)은 2015년 창작산실 검열 사건 관련 기사, 인터뷰 등의 자료와 국정감사 녹취록을 재구성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재연되고 이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면서 당시 검열을 정당화하는 의원들의 주장은 국가 아닌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으로 분열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예술계 편파지원 논란에 대한 예술위 입장”.

[http://www.arko.or.kr/m1\\_03/m2\\_02.do?&mode=view&page=3&cid=360746&searchValue=%EC%9E%85%EC%9E%A5&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http://www.arko.or.kr/m1_03/m2_02.do?&mode=view&page=3&cid=360746&searchValue=%EC%9E%85%EC%9E%A5&searchOperator=or&searchField=title,body), 2018. 6. 20.

19) 당시 국정감사에서 실행 의혹이 제기되었던 ‘창작산실’ ‘아르코우수문학창작기금’ ‘다원예술 지원’은 모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것으로 특검 조사,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졌다.

대한 논란으로 뒤바꾸고, 이른바 ‘사회적 논란’은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주장이 문제적인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른바 공공영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이다.

‘입장’과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던 연극 <개구리>가 일으킨 사회적 논란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칼럼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술작품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이에 대해 작품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의견을 반대하는 폭력적인 댓글이 몰려들고, 그러한 폭력을 여론이라 포장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들이 이어졌다. 비단 <개구리>만이 아니다. 예술위 ‘입장’, 국정감사장의 여당 의원들, 문체부 장관, 예술위 위원장이 ‘검열’을 ‘논란’으로 왜곡하고 공적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던 2015년 9월 홍성담 <김기종의 칼질>을 두고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

홍성담 <김기종의 칼질>은 루퍼트 미대사 테러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공허한 제국’전에 전시된다. 전시가 개막하자 이 작품을 두고 「[단독]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이라는 기사가 게재된다.<sup>20)</sup> 이 기사는 테러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기사는 그림의 중앙에 한눈에 읽어 볼 수 없는 뻣뻣한 글씨로 쓰여진 ‘글’을 두고, 이 글이 명백한 태도로 테러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테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테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사건이 명명백백하다면 그것을 왜 굳이 예술작품으로 다루겠는가. 기사가 게재되자 댓글이 폭주하고 이것이 다시 여론이 되어 재생산되면서 작가, 기획자, 미술관에 정치 공세가 쏟아졌다. 결국 이 작품은 전시 중 철거된다.

‘검열’을 ‘논란’으로 왜곡하는 주장들은 예술가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이란 예술가의 무책임한 예술활동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치선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술지원기관이라면 지원금 분배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왜곡된 여론으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의 임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문체부, 예술위, 여당의원들은 왜곡된 여론의 폭력에 예술가를 내몰고서는 그

20) 「[단독]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 걸린 ‘리퍼트 美대사 테러’ 옹호 그림」, <동아일보>, 2015.9.8., <http://news.donga.com/3/all/20150908/73488493/1>, 2018.6.20.



것을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블랙리스트’라는 위헌 위법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공론장에서 횡행하면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심각하게 후퇴한다.

예술의 가치라 일컬어지는 창의성, 즉 새로움이란 통념을 뒤흔들고 논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예술은 그 존재 자체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술의 속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공적 지원은 검토해야 할 여러 다양한 문제들 앞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에서, 사회적 합의에서나 제도에서나 가장 취약한 관점은 예술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다. 우리 사회 예술 지원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실패한 예술에 대한 구호와 예술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다.<sup>21)</sup>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작품들은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공공연한 주장은 그 동안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에서 예술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취약성을 보완해야 할 정책과 행정도 리어 이러한 취약성을 토대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구호와 사회적 효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정책의 퇴행이기도 하다.

사회적 논란이 보장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제각각의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혼란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이라는 부정적 양상은 어느 하나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차이들을 헤아리고 살피 그 차이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예술의 창의성이 기존의 통념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술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의 과정이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다. 그러한 장치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예술지원기관이 지원금의 분배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힘써야 할 임무인 것이다.<sup>22)</sup>

21) 그러나 구호이든 효용이든 그조차도 근거는 예술 그 자체의 가치다.

22) 이번 검열 사태에서 예술의 공공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놓고 안드레 세라노 <오줌 속의 예수>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열 사태는 그러한 공개적인 논쟁과정도 없는 불법 사건이며 여전히 사건의 전모조차 밝혀져 있지 않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술의 공공성,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절차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취약한 상황에서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를 권력이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예술의 공공성, 예술 그자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단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다. 예술의 내상<sup>23)</sup>

2014년 말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은 주최 측인 서울연극협회와 예술위 공연예술센터(당시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운영 기관)의 합의로 다시 아르코예술극장이 부분 대관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연극제 개막을 하루 앞둔 2015년 4월 3일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을 폐쇄하면서 결국 파국에 이른다. 2015년 9월에는 창작산실 검열 의혹이, 연이어 10월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주최하는 팝업씨어터에서 임직원들에 의한 공연방해 사건이 벌어진다.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연극계의 항의는 서명, 국회방문, 거리 시위 등으로 이어졌다.<sup>24)</sup> 그러나 잇따른 검열 사건과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밖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달리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연극계의 내상도 깊어졌다. 2015년 창작산실을 준비하던 공연팀들은 내상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미 공연을 준비 중이던 2015 창작산실 공연팀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배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열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검열의 당사자다, 검열에 항의하기 위해 공연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연극인이다, 연극인이 무대를 포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다 등등의 논의가 창작산실 공연팀과 주변 연극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수많은 고민을 안고 창작산실 공연팀들은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검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검열 반대 홍보물을 만든다. 그런데 이 홍보물을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중앙에는 화면을 압도하는 커다란 가위가 서 있고 바닥에는 잘려나간 날개와 깃털이 흩날린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압도하는 크기의 가위와 대비되는 책상을

수 있을 것이다. 안드레 세라노 <오줌 속의 예수>를 둘러싼 논쟁은 다음 논문 참고. 김진아, 「미국문화, 그 기로에 서서-NEA(국립예술진흥기금)를 둘러싼 논쟁 중심」, 『미술이론과 현장』, 한국미술이론학회, 2006.

23) 이 절은 「검열과 예술의 내상」, 『문화/과학』(2016년 가을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24) 이에 대해서는 '3.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행동의 특징 - 연극계를 중심으로'에서 후술한다.

앞에 두고 깃털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날개를 잘라도 그 깃털로 펜을 삼는다”, 화면 맨 밑에는 “검열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검열의 폭력을 드러내면서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에 꺾이지 않는 저항의지를 담았다는 주장과 검열이라는 불법과 폭력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간 연극계가 저항해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부딪쳤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창작산실 공연팀들은 공연을 올리겠다고 결정했지만 고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 저항은 공연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하나, 공연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닌가, 관객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할 수 있나, 그런데 검열 사건이 벌어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반대할 수 있는 주장과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예정된 일정대로 공연이 올랐다. 이러한 의견과 의견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sup>25)</sup>

검열 의혹에 대한 교착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술계의 분노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실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가 기획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장장 5개월간 ‘검열’을 주제로 한 공연이 계속된다. 이에 앞서 5월 10일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올모스트 프린지 포럼’ “이 시대 검열과 자유는 어떻게 맞서는가”가 열렸다. 그 외에도 여러 매체들이 검열을 테마로 한 특집, 포럼, 좌담 등등을 개최했다. 검열을 테마로 한 이러한 기획들은 검열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만은 아니다. 도리어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이해(理解)가 제출되어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각각의 목소리에는 사건에 대한 그리고 검열에 대한 혼란한 이해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혼란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유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검열을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들, 논쟁들은, 힘의 과시를 통한 영향력의 행사에 앞서 개개인들이 ‘검열’을 자신의 문제로 사유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창작산실 선정작 공연팀들의 고민을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가 공공지원에서의 차별과 배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25)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못했지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중 이러한 예술계 안의 갈등은 개별 사업의 지원금 배분보다 더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창작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동료들간의 네트워크는 특히 공동작업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의 추락한 지원기관의 신뢰, 연극계 동료들 간의 갈등은 열악한 창작 현실을 뒷받침하던 토대를 파괴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연극계가 분노와 갈등에 휩싸여 있던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2015 연극 창작 산실 우수공연제작지원 사업이 검열 의혹에 휘말려 들고, 예술위 자체 기획 공연에서 임직원에 의한 공연 방해로 한달이 넘는 릴레이 시위가 극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위는 2015년 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sup>26)</sup> 2015년 12월 4일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하는데, 이를 본 연극인들은 경악하게 된다. 작가의 이름 대신 접수번호가 작품 이름 대신 최우수작, 우수작1,2,3,4로 발표된 것이다.<sup>27)</sup> 대본 공모의 경우 작가와 희곡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선정작 발표에서 작가와 작품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관례’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미 예술위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서 심사위원 비공개로 정보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후 예술위는 2015년 정기공모 발표에서 공모결과를 전체 공지하지 않고 지원자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도리어 사업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결과를 공지하면서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을 가림으로써 공모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선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예우마저 내팽개친다.

이번 창작산실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은 그로테스크한 심사평을 통해서 ‘우수작1,2,3 그리고 최우수작’으로 불리면서 작가가 고심 끝에 붙인 작품의 제목은 당당하게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우수작에 선정된 작가를 비롯하여 작가들 전원은 자신의 이름 대신 ‘접수번호 201530523’등으로 불려졌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에서 이렇게 읽는 이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심사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창작산실에 공모하지 않은 작가조차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작품에 공모한 180여편의 작가들은 어떤 심정이 들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심사평을 읽기 전까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작품명과 작가명이 사라진 심사평을 읽고 나니 모든 것에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차단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모든 의혹이 풀릴 것입니다.<sup>28)</sup>

26) 창작산실 사업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에 대한 단계별 창작지원 사업을 표방하는 사업으로 연극의 경우, 대본, 시범공연, 공연제작, 재공연 등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 작품으로 대본 창작부터 재공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도 민간제작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27) 「문화예술위원회 불투명 행정 논란…작가와 작품명은 안 밝히고 지원대상 접수번호만 공개」, 〈경향신문〉, 2015.12.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0600035&code=960100#csidxd74710af8d5d5c0bca773498b80b99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0600035&code=960100#csidxd74710af8d5d5c0bca773498b80b99e)

현재 ‘2015년 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심의 결과 발표 공지’에는 작가 이름과 작품명이 추가되어 있다. [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362207&sf\\_icon\\_category=cw00000020](http://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362207&sf_icon_category=cw00000020), 2018. 6. 20.

지금 되돌아보면 2015년은 블랙리스트 실행이 본격화되던 때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 역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예술위는 이러한 파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

작년 검열 사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감정은 화에서 불쾌감과 모욕감 같은 것들로 넘어갔다. 그 감정의 근원은 그들이 연극인들을 개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술인들에게 돈을 적선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략) 어떤 날의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최근에 보편적인 예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유명세를 늘리려는 일부 작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자신들의 과오나 잘못이 마치 검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 양 자꾸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검열의 대상이 되는 연극인들은 아주 남루하고 비루한 작은 존재였고, 그들의 그러한 무의식이 검열의 근거로 나열되면서 검열의 본질을 흐렸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술인들은 가난해서 돈은 원하는데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는 종자들이었다.

이 글은 2016년 5월에 개최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올모스트프린지’ 포럼 두 번째 섹션 “이 시대 검열과 자유는 어떻게 맞서는가”에서 발표된 구자혜 연출의 「우리 안의 검열과 나의 예술의 관계성 - 혐오시대 작업인의 검열 자화상」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검열 사건에서는 예술, 예술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횡행했다. 검열에 대한 예술가들의 항의는 지원금 수혜를 받지 못한 불만의 표출이며,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 번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연극계 동료에 대한 인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앞으로 지원 심사의 심사위원 풀에서 연극인들을 배제하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국회의원, 문체부장관, 문예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연주 연출은 이러한 언어폭력을 우리 시대의 광범위한 혐오 정서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8) 김재엽, 「권위주의 시대의 창작자가 견디기 어려움 모델감에 대하여 - 창작산실 대본 공모 심사평을 읽고」, 〈대학로X포럼〉, 2015. 12. 11.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667824350163685>, 2018.6.20.

검열은 권력의 기준에 '위반'된 것을 ('일반'이 아닌) '이반'으로 규정하며, 강제, 억압한다. 그리고 언어,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령'하고 대중들에게 '명령의 내면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명령의 내면화'는 '강제'라는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중략) 혐오의 본질 또한 단순히 싫어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상화'하면서 발전되는 감정이다. 내면적 검열의 '대상화'가 일상에서 혐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쉽게 학습되고 전염된다.

예술가들을 지원금에 목매는 무능한 존재이며, 공공지원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원금 장사꾼이라 매도하는 것은 단지 검열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검열 대상을 '대상화' 타자화는 검열의 작동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상화는 혐오와 같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에 대한 동정과 연민 역시 대상화의 '부드러운 얼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정과 연민이라는 대상화의 부드러운 얼굴은 예술지원정책의 문제적 현실과 연관하여 주목할 견해다. 우리 사회의 예술지원은 예술의 가치가 아닌 예술의 '가난함'을 근거로 한다. 게다가 최근 예술지원정책에서 예술인 복지 이슈는 '구휼'이라는 예술지원의 근거를 더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sup>29)</sup> 예술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닌 가난함에 대한 지원에서는 동정과 연민이라는, 이연주 연출이 지적하는 '부드러운 대상화'가 작동한다. 물론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등장한 예술에 대한 모욕은 '부드러운 가면'마저도 벗은, 검열 대상에 대한 타자화를 넘어 배제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취임 직후 검열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창작산실 검열 사건은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답변과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현재 진상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취임 이후 박명진 위원장은 2015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대면 보고를 했으며, 그녀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내내 2016년 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은 계속되었다. 박명진 위원장은 2015년 일련의 사건들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데, 그 일성이 '지원금 장사'였다. 「욕 먹을 각오 돼있다, 창작 예술 획일적 지원 꼭 바꿀 것」이라는 기사에서 박명진 위원장은 "공공 기금에 의탁하는 예술가가 상당수다. 지원금 깎이면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원금 시장'이라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말한다.<sup>30)</sup> 예술지원 기관의 수장이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면서 '긴급구조'를 내세웠는데, 이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른 조치였다.

예술가들을 공적 자금 사기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검열은 없다, 검열이 필요하다는 상충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예술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모욕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다.

2015년 검열 사건 이후 이를 다루는 토론회, 좌담, 특집 등이 각종 매체에서 다뤄진다. ‘예술 검열과 표현의 자유’(월간 『한국연극』 2015년 11월 특집 좌담), ‘검열의 귀환’(계간 『연극평론』 2015년 겨울호 특집), 세미나 ‘문화예술 검열 사태와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대חק로X포럼, 검열을 거부하는 극작가들, 국선즈연 공동 주최), ‘이 시대 검열과 자유는 어떻게 맞서는가’(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올모스트 프린지’),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 검열의 일상성 또는 무감각에 대하여’(서울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예술가소위 토론회)<sup>31)</sup> 등은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창작산실 등 예술위 검열 사건에 대한 여러 논점들을 살피고 있다. 앞의 두 특집은 사건이 알려지고 국정감사에서 논박이 오가던 때에 발행된 것으로 창작산실 사건이 불법 행위이며 정치검열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반면 사건 직후인 2016년 봄과 여름 각각 열린 두 토론회는 정치검열을 비판하면서도 검열에 대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논점을 보여준다. 사건 직후의 논의가 검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가해자(권력)와 (배제된 특정) 피해자 구도에 갇혀있었다면 여러 시선과 논점들에서는 특정 사건을 넘어 현실에 대한 더 폭넓은 사유로 확장하는 단초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 당시 드러나는 ‘의혹들’ 앞에서의 혼란도 보여준다.

“공공성을 명목으로 한 선택, 배제, 검열 - 검열의 일상성 또는 무감각에 대하여”(이하 서울문화재단 정책위 토론회)는 작가, 기자, 연출가, 비평가, 예술행정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기사로 정돈된 토론회 내용을 보면 쟁점이 있었다기보다는 토론자들이 각각 일련의 검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펼쳐 보여주는 데에 가깝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드러난 검열의 특징으로 80년대까지 있었던 작가에 대한 인신 구속, 작품 파괴 등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즉 그러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지원에서의 배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기 위해 당시 검열 사건을 전자와 같은 고강도 검열이 아닌 저강도 검열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은 이 토론회에서만 아니라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검

30) 「욕 먹을 각오 돼 있다. 창작 예술 획일적 지원 꼭 바꿀 것」, <중앙일보>, 2016. 3.30.

<http://news.joins.com/article/19807602>, 2018.6.20.

31) 『문화+서울』 2016년 7월호에 동명의 기사로 게재됨.

열 사건을 예술지원정책, 예술창작환경의 문제적 현상과 연관하여 비판한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도 깊이 있게 토론될 주제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관점은 사건의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 상황은 아니었다.) 먼저 ‘고강도 검열’ ‘저강도 검열’과 같은 논의가 자칫 이번 사건을 공공지원의 문제로 한정되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술창작에서 공공지원의 의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자생성 획득으로 저항하고 극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지원에서의 배제라는 검열의 방식이 갖는 영향력을 자칫 간과하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각각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나 「문화융성기반정비」 등에서 예술지원제도를 중요한 검열의 실행도구로 주목하는 것은 그만큼 예술의 통제에서 공공지원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창작, 특히 공연예술창작에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 문제는 이번 검열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은 쉽게 지적하면서 정작 연극창작에 투여되는 전체 비용과 거기에서 공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sup>32)</sup> 경험적으로, 연극인들은 창작에 투여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은 지금도 스스로 마련한다. 문제는 창작에 투여되는 비용이 창작의 결과물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 지원은 그러한 생태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에서의 배제라는 검열 행위는 지원금의 수혜를 넘어 창작환경 전반을 왜곡시킨다. 또한 공공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열은 비단 창작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도 그 피해가 미친다. 사회적 논란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공공지원의 수혜가 제한될 때 관객들의 향유권 역시 제한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검열에 의해 배제된 특정한 작가, 특정한 작품 혹은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이 심각하게 파괴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원금의 수혜 없이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고강도 검열, 저강도 검열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예술지원을 가난함에 대한 구휼에 묶어둔다거나 가난하고 무능한 예술가라는 모욕이 공공연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저항은 공공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타자화와 배제라는 검열의

32) 예술지원정책에서 자생성은 중요한 의제임에도 정책 입안에서 예술창작에 투여되는 창작자들의 비용에 대한 연구는 없다. 공공지원 의존을 논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사례가 아닌 창작자들이 스스로 감당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작동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적 지원이 아니라 타자화라는 검열의 작동방식을 드러내고 거부해야 한다. 도리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 그 자체의 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3.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행동의 특징 - ‘연극계’를 중심으로

#### 가. 새로운 공론장 형성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실행은 이미 정권 초기부터 기획되어 국정농단이 불거져 나오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저항이 계속 되었다. 여러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연극계의 활동은 지속성과 다양성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어 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극계 블랙리스트 사태 중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이미 2013년 국립극단 <개구리> 결말 수정, <구름> 대본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당시 <개구리>와 관련하여 연극계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예의 논란을 일으킨 보도뿐이었고, 당시 기사에서 촉발된 논란은 직접적인 행정권을 사용하는 검열의 방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개구리> 논란에 대해서는 예의 보도를 비판하는 개별적인 기고 활동이 당시 대응이었다.

반면,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은 피해 당사자라 할 서울연극협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을 운영하던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와 예술위가 대관 심사 진행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연극계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 당사자인 서울연극협회는 고소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한팩 및 예술위 측과 재대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이라는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서울연극제 지키기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 심사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공공극장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되지 못한 채 상황에 대한 냉소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몇몇 연극인들은 연극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토론회

를 열기로 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그룹 ‘대학로X포럼’을 개설하여 토론회의 취지를 알리고 발의자를 모집한다. 52명의 연극인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sup>33)</sup> 다음은 당시 ‘대학로X포럼’에 게재된 발의문 전문이다.

지난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 대관심사 결과 서울연극제가 대관에 탈락하면서 이에 대해 서울연극제를 주최하고 있는 서울연극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극계 구성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사건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진영논리와 냉소주의에 빠져 우려되는 현실 앞에서 연대는 고사하고 치열한 논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그동안 연극계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안인 서울연극제 한퍽 대관 탈락 사건을 계기로 세대와 분야와 진영을 떠나 누구나 마음껏 말하고 정성껏 들어주는 토론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뒤로 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함께 야단법석을 만들기를 바라며 한 페이지를 열고자 합니다.<sup>34)</sup>

2015년 1월 6일 개최된 제1차 대학로X포럼 “우리는 생산적 토론을 원한다 - 공공극장 공공성 훼손과 연극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주장”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공개적으로 발의자를 모으고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토론 참여자들 역시 공동주최의 의미로 참가비를 내고 토론회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합의하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연극인들이 공공지원 등 연극 환경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연극인들 모두 이러한 자리를 목말라했다. 앞으로도 연극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창작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sup>35)</sup>

33) 이 절에서는 토론회의 논의 내용이 아니라 토론회를 주최한 ‘대학로X포럼’이 어떻게 공론장의 역할을 해갔는지를 서술한다. 제1차 대학로X포럼에 대한 논의 내용은 이 글의 2절 ‘가. 공공극장의 공공성 훼손’ 참고.

34) <대학로X포럼> 게시글. 2014.12.27.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524167201196068>, 2018.6.20.

35) 김한내, 「‘대학로X포럼’: 연극인들 현안 놓고 장시간 릴레이 토론」, <연극in>, 2015. 1. 22.

[http://webzine.e-stc.or.kr/03\\_story/column\\_view.asp?flag=READ&Idx=549&rd=1](http://webzine.e-stc.or.kr/03_story/column_view.asp?flag=READ&Idx=549&rd=1)

「“대관 봉합”보다 더 중요한 건 한퍽과 서울연극제의 뼈아픈 자성」, <경향신문>, 2015. 1. 7.

‘대학로X포럼’은 서울연극계 대관 탈락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다양한 현안이 게시되고 있다. 공론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대응도 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5년 창작산실 검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즉각 심야토론회가 개최되었고<sup>36)</sup>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게시되자 천여명의 연극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해 10월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사건에 대한 릴레이 거리시위는 실시간 중계라 할 만큼 ‘대학로X포럼’에 현장 사진들이 게시되었다. 직접 거리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극인들은 손팻말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 ‘대학로X포럼’에 공유되었다. 따로 기획된 것이 아님에도 ‘대학로X포럼’은 온라인 시위장이 되었다. 2016년 국정농단이 터져나왔을 때 타 분야와 연대하여 1인 시위가 조직된다거나, 문화예술인선언에 참여하는 등이 대학로X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다.

블랙리스트 사태만이 아니다. 지난 해에는 ‘연극학과 및 연극계 위계 문화 개선을 위한 대학로X포럼’이 오프라인에서 개최되었고, 최근 연극계 미투사태에서는 미투 증언이나 소식들이 ‘대학로X포럼’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다. 예술강사 문제, e나라도움, 대학로 소극장 문제,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비상대책회의’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학로X포럼을 통해 연극 및 공연예술계 동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정보 공유의 기능이 크지만, 그간 현장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던 데에는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되어 오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연극계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현안에 대한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연극계의 저항은 기존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아닌 ‘대학로X포럼’을 비롯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진상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연극계의 피해는 광범위하다. 기존 연극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2018. 6.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72055235&code=9603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72055235&code=960313), 2018. 6. 20

36)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학로X포럼 긴급심야토론 “예술위 검열 사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 2015년 9월 17일(목) 오후 10시 30분

장소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642833429329444>, 2018. 6. 20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를 지원해 줄 것을 문체부와 예술위에 요구했다.<sup>37)</sup> 대학로X포럼과 같은 자발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던 것은, 기존 단체들이 연극현장의 대의기구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극계의 경우 극단이나 제작단체 중심으로 작품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역별 직능별 ‘협회’ 이외의 현장 조직이 미미하고, 변화하는 창작 환경이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 조직이 미미하다. 게다가 규모가 큰 단체들 역시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집행부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주의적 폐해가 지적된다. 그러다보니 블랙리스트 사태만이 아닌 연극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기존 단체들은 사후적으로도 무기력하다. 대학로X포럼은 기존 ‘협회’ 등의 대의체계가 무기력해진 현실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폭력적인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담론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학로X포럼’은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연극 및 공연예술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한편 누구나 일정 수 이상의 발의자가 모이면 ‘대학로X포럼’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극계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과정에서, 기존 협단체나 협단체 중심의 연대 모임과는 다른 양상의 자발적 네트워크들이 등장했다. 때로는 단일 이슈에 대한 대응 모임으로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5년 가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선임 과정에서 활동했던 ‘국선즈’(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선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sup>38)</sup>가 전자의 경우라면, 무용인희망연대 ‘오롯’<sup>39)</sup>은 후자의 경우이다.

국선즈는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선임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바르토메우 마리 스페인현대미술관 관장이 보도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바르토메우 마리 후보가 스페인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스페인 군주제를 풍자한 작품의 전시를 막기 위해 ‘집승과 주권’전을 개막 직전 취소하고 큐레이터 2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즈는 ‘집승과 주권’전 파행에 대한 마리의 공식적 입장, 국립현대미술관 신입관장 선정과정 및 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공 미술기관에 대한 실질적 독립

37)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83쪽, 2018.5.8.

38) ‘국선즈-미술인들의 입장’의 활동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petition4art>, 2018. 6. 20.

39)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의 활동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804966236430932>, 2018. 6. 20.

성 확대,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검열·감시’ 반대 등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의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11월 14일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의 1인 시위, 서명에 참여한 미술인들이 직접 자신의 견해를 이미지를 통해 공개하는 ‘포스터 프로젝트’, ‘대학로X포럼’ ‘검열을거부하는극작가들’과 ‘문화예술 검열 사태와 예술의 자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한편 문체부와 마리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한다.<sup>40)</sup> 마리 관장 취임 후인 2015년 12월 18일 2차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국선즈 활동은 마무리된다. 이후 국선즈연(국선즈 연구모임)은 토론회 ‘예술통제와 검열의 현재성’을 개최한다.<sup>41)</sup>

국선즈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선임’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한 한시적 활동 이후 마무리 되었다. 국선즈 역시 기존 협단체 혹은 기존 조직이 아닌 미술계 이슈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리 후보의 검열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검증만이 아니라 문체부의 인사 및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11월 14일 밤샘 토론에서는 공적 지원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미술계 이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40) 미술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국선즈의 입장문에 대한 별다른 답변 없이 2015년 12월 2일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를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으로 임명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임명」, 〈헤럴드경제〉, 2015.1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759>, 2018. 6. 20.

41)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선즈연’ 토론회 〈예술 통제와 검열의 현재성〉

일시 :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오후 17시30분-20시

장소 :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토론 주제 및 발표자

1. 예술 통제와 검열 전말 - 최근 주요 검열 사례와 그 양태 분석/ 임인자(독립기획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
2. 국가권력과 예술검열 - 국가의 통치 관리 장치로서 예술검열/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3. 검열 이후의 검열 - 검열 이후의 검열 : 검열의 과잉 혹은 과소에 저항하기/ 서동진(계원예술대 교수) + 지정질의자 윤율리(아카이브 봄 디렉터)
4. 혐의와 검열의 경계 - “큐레이터쉽과 검열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안소현(독립 큐레이터) + 지정 질의자 옥인콜렉티브(미술가)

- 자료집 수록 원고

- 최근 미술계에서 있었던 검열사태를 보며/ 박찬경 (미술가, 영화감독)

- 예술의 행정화 이후, 검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https://www.facebook.com/artist.solidarity/posts/437498976374771>, 2018. 6. 20.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은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정오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무용인들의 1인 시위가 모태가 되어 만들어졌다. 당시 ‘블랙리스트 예술행동 문화예술인 1인 시위’가 기획되면서 각 분야 장르별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씩 돌아가며 정오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와 함께 11월 4일에는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박근혜퇴진, 문화행정 파탄 책임자 처벌, 블랙리스트 예술가 시국선언’ 후 참여한 예술가들이 광화문광장을 점거하면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각계에서 참여하여 광화문 캠프촌이 형성된다. 이후 다른 분야의 1인 시위는 11월 한 달로 마무리되었지만, 무용인들의 목요일 1인 시위는 탄핵심판 전날인 3월 9일까지 계속되었다.

무용인들의 1인 시위는 다른 분야의 1인 시위와는 사뭇 달랐다. 다른 분야에서는 함께 마련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던 반면 무용인들의 1인 시위는 마치 거리 공연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시위에 참여하는 무용인만이 아니라 동료들이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었다. 1인 시위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다. 네 달에 걸쳐 계속된 무용인들의 1인 시위는 무용인들의 집단적 정치적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전공이나 세대의 구분 없는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활동이었다.<sup>42)</sup> 1인 시위와 함께 3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장극장블랙텐트에서 <뭉! 외치다>를 공연했고, 광장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에도 참여했다.

42) 박성혜, 「블랙리스트 반대 서명운동과 무용인 1인 시위」, 『바람직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생각과 실천을 공유하는 무용인 네트워크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토론회 춤, 상생을 꿈꾸다』 자료집, 2017.3.18.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의 첫 번째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다.

춤, 상생을 꿈꾸다 - 첫 번째 이야기 <검열장막과 춤>

일시 : 2017년 3월 18(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

무용인 예술행동 경과 보고

블랙리스트 반대 서명운동과 무용인 1인 시위/ 박성혜(무용평론가)

광장극장블랙텐트 시즌2 무용프로그램 <뭉, 외치다>&광장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 김서령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공동대표)

발제

블랙리스트와 유신의 종말/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예술검열과 검열백서/ 김재엽(극작가, 연출가)

신체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를 담보하는가/ 정영두(안무가, 두댄스씨어터 예술감독)

장막을 거둬라 그대의 작은 몸으로/ 변우균(한국민족춤협회 교육홍보위원장)

블랙리스트 이전의 예술,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 손준현(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사회 김윤진(무용가)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은 이러한 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오롯’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예술행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지만, 창작환경, 예술인고용보험 등 무용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참여 등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예술인들의 저항은 지속적이고 광범위 했다. 분야나 장르에 따라 그 활동 양상이 다른데, 기존 협단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태 저항했던 분야가 있는가 하면, 위에 언급한 ‘대학로X포럼’ ‘국선즈’ ‘오롯’ 등과 같이 개인들의 자발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발적 연대 활동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과 대응으로 전개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나. 젊은 예술인들의 연대와 실천

2015년 9월 한달 내내 국정감사에서는 창작산실, 아르코우수문학창작기금, 다원예술지원 등 예술위의 지원사업에서의 검열 의혹이 내내 쏟아져 나왔다.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올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연극계는 심야토론, 연대포럼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의혹을 밝히려는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덕 당시 문체부장관과 박명진 당시 예술위 위원장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도리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활동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치면서 명백한 진상규명 없이 국정감사가 끝났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연극인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전히 분노가 계속되고 있던 10월 18일 이번에는 예술위가 자체 제작한 공연에서 ‘세월호가 연상된다’는 이유로 공연예술센터 문화사업 부장이 공연을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사건이다.

팝업씨어터는 마치 팝업창이 뜨는 것처럼 관객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는 공연이라는 컨셉으로 아르코예술극장 등 대학로 주변 공간에서 20~30분 정도의 소규모 공연들로 기획 제작되었다. 팝업씨어터 <이 아이>(프로젝트 내친김에, 김정 연출)는 프랑스 작가 조엘 폼트라의 동명 희곡 중 한 장을 무대화했다. 원작이 독립적인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팝업씨어터 <이 아이>는 여행을 떠났던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시

신이 되어 돌아온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엄마와 그 이웃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에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공연되었다. 일상적 공간에서의 공연이라고 하지만, 테이블, 음악, 조명 등 공연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돈을 하고 17일 첫 공연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18일, 전날과 마찬가지로 카페 테이블을 재배치하는 등 공연 준비를 마치고 공연이 곧 공연이 시작될 때였다. 공연 관람을 위해 카페를 찾은 관객들도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공연을 기획 제작한 문화사업부장이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테이블을 다시 제 위치에 놓고 음악 볼륨을 키우라는 등을 지시한다. 카페 영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공연팀은 급작스럽고 강압적인 예술위 간부의 지시에 공간 연출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연을 마친다. 한편 예술위는 일주일 후 공연 예정인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한다. 두 연출은 이에 대해 사전 검열이라며 거부하고, 공연은 취소된다.

김정, 윤혜숙, 송정안 세 연출은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및 대본 제출 요구 등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글을 2015년 10월 27일 예술위 사이버민원게시판과 대학로X포럼에 게시한다.<sup>43)</sup> 이 일련의 사건은 당시 팝업씨어터 실무 담당자의 증언으로 의도적인 공연 방해 사건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첫 날 〈이 아이〉 공연을 본 간부가 ‘이거 세월호 얘기 아니야?’라는 발언을 했고, 심야에 예술위 간부들의 대책회의와 공연 취소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다.<sup>44)</sup> 창작산실 검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 사건은, 창작산실 검열 의혹과는 또 다른 점에서 연극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창작산실 검열 사건이 심사위원과 해당 작가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게다가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세 연출은 이제 막 연극계에 입문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던 이들이다. 젊은 창작자들에게 공연활동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획을 하면서 도리어 공연을 방해하고 대본 사전 제출을 요구하는 등 예술지원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43) 2015. 10. 27.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654638511482269>, 2018. 6. 20

44) 「"수학여행이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이야기 아니냐?"」, 〈노컷뉴스〉, 2015.11.4.

<http://www.nocutnews.co.kr/news/4498609> 2018. 6. 20.

팝업씨어터 담당자인 OOO는 이러한 증언을 세 연출에게 전했고, 팝업씨어터 공연방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연극인들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던 2015년 11월 4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실명으로 출연하여 증언했다.



저버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검열 의혹을 부인하고 공공연하게 특정한 경향의 작가와 작품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종덕 문체부 장관, 박명진 위원장,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보았던 연극인들에게 이 사건은 ‘위에서 시킨’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 예술위의 적극적인 조치로 다가왔다.

사건을 공개한 세 연출은 2015년 10월 29일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젊은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세 연출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연극인들도 시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릴레이 시위가 되었다. 창작산실 검열 사건이 ‘대학로X포럼’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견 개진과 서명, 성명서 발표 등으로 전개되었던 것과 달리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사건’은 직접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학로예술극장 앞 릴레이 시위 현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증계되다시피 ‘대학로X포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계속 소개된다. 직접 현장에 갈 수 없는 연극인들은 ‘팝업씨어터 공연방해’에 항의 하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면서 릴레이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양상이었다.

대학로예술극장 주변에서 연극인들의 릴레이시위가 시작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국립국악원이 자체 기획제작한 금요공감에서 공연예정이었던 앙상블 시나위의 <소월산천>에서 박근형 연출을 배제할 것을 국립국악원이 요구한 것. 공연팀은 이를 거부하고 공연을 취소한다. <소월산천> 다음 프로그램인 <SOLO RITES : SEVEN BREATHS>에 출연 예정이었던 정영두는 이 소식을 듣고 출연을 포기한 채 국립국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sup>45)</sup> 정영두는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국립국악원 측에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와 국립국악원 측의 답변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다. 대학로에서 릴레이시위를 진행하던 김정, 윤혜숙, 송정안 세 연출이 연대의 의미로 정영두를 지지 방문한다. 시기적으로나 사건의 성격에서나 자연스레 연대가 형성된다. 정영두의 1인 시위로 국립국악원의 검열 의혹이 알려지면서 금요공감 공연 예정이었던 공연팀들이 잇달아 공연을 취소했다.<sup>46)</sup>

45) 정영두는 출연을 거부를 밝히면서 <소월산천> 연출가 배제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다. 이 글을 통해 이 사건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다.

정영두, 「국립국악원은 명분없는 예술가 탄압과 작품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 <페이스북>, 2015. 10. 28.

[https://www.facebook.com/youngdoo.jung/posts/785414641586080?\\_\\_tn\\_\\_=K-R](https://www.facebook.com/youngdoo.jung/posts/785414641586080?__tn__=K-R), 2018. 6. 20.

46) 「[단독] 국립국악원 ‘검열사태’ 출연 취소로 확산」, <한겨레신문>, 2015. 11. 13.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17294>, 2018. 6. 20.

정영두는 국립국악원 1인 시위 이후 문체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본 교토에서도 이 사건을 알리는 시위를 계속했다. 또 다음해인 2016년 10월에는 런던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인다. A 주 영국한국문화원장은 <소월산천> 연출가 배제 사건 당시 국립국악원 운영단장으로 배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는 물론 정영두가 런던 시위를 이어갔던 때에도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도 A 전 운영단장은 사건의 진상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10월 29일 세 연출들의 1인 시위에서 시작된 릴레이 시위는 잠시 휴지기를 갖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파법(破法)씨어터 릴레이퍼포먼스’로 다시 시작되었다. 제목부터 예술위 ‘팝업씨어터’를 비틀었다. 손팻말을 든 1인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연속 거리공연을 진행했다.<sup>47)</sup> 짧은 즉흥 퍼포먼스부터 1시간여 연극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검열 사건을 비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검열과 직접 연관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기존 공연의 한 장면을 발췌하여 공연되기도 했다. 장면의 맥락을 다르게 놓는 것이다. 팝업씨어터 공연이 취소된 송정안 연출의 <불신의 힘> 낭독 공연도 있었다. 새롭게 창작된 퍼포먼스도 공연되었다. 퍼포먼스로 참여하는 공연팀과 퍼포머들 중에는 개방적인 공간에서의 공연이 처음인 경우도 많았다. 스스로가 작가, 연출, 배우 3역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고, 극단의 작품이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새롭게 공연을 만든 것이건 기존 작품을 발췌한 것이건, 새로운 시도이고 실험이었다. 한편으로는 연극인들의 항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시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적인 퍼포먼스인 셈이다. 릴레이 퍼포먼스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대학로X포럼에 게시되었다.<sup>48)</sup>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세 연출은 공연방해, 대본 사전 검열에 대한 해명과 사

47) 대학로X포럼에 게시된 ‘파법(破法) 씨어터’ 공지문은 아래와 같다.

파법(破法) 씨어터는, 창작의 자유를 막는 모든 “검열”에 반대하는 자발적 릴레이 퍼포먼스입니다. 이번 기획은 최근 자행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항하는 젊은 공연예술인들의 건강하고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마련된 즐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11월 11일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될 파법씨어터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기대합니다. “어떤 장르, 어떤 컨셉, 어떤 이, 어떤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파법(破法) 씨어터 참여방법! “누구나” 관객 혹은 퍼포머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11월 11일(수)부터 11월 22일(일)까지

평일 오후 19시, 토요일 14시 (러닝타임 1시간, 15분 내외의 릴레이 퍼포먼스)

장소 : 한국공연예술센터\_씨어터카페 앞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658554857757301/>

48) 대학로X포럼 2015년 11월 게시물에서 ‘파법(破法)씨어터’ 릴레이 퍼포먼스’에 참여한 공연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과를 요구하는 질의서 게시, 면담 요청 등을 계속했다. 그러나 예술위의 답변은 팝업씨어터의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유지하는 과정의 단순 실수로 고의성이 없으며, 카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끝내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파법(破法)씨어터 릴레이퍼포먼스’는 11월 22일 참가자들이 사과를 물고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일대를 도는 ‘사과받지 않겠습니다’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sup>49)</sup>

‘파법(破法)씨어터 릴레이퍼포먼스’ 또한 기존의 연극단체 등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세대, 분야를 막론하고 연극인들의 참여 속에서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었지만, 무엇보다 세 연출들과 세대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연극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시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진행을 돕고 직접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성명서에 서명을 하면서 뜻을 모으는 것과 달리 시위는 이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담아야 한다. 1인 시위는 미리 준비된 손팻말을 들기도 하지만, 직접 자신이 문구를 적어 들기도 한다. 퍼포먼스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 발언이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건 아니건, 공론장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도 구체적인 발언이다. ‘파법씨어터’ 릴레이퍼포먼스는 젊은 연극인들이 연극계 주요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젊은 연극인들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협회와 같은 단체든 사적인 인맥이든 연극계에 막 입문한 젊은 세대들의 경우 넓은 네트워크를 갖기 힘들다. 연극작업은, 특히 배우 연출의 경우, 극단 혹은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시간이 투여되면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다양한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갖기 어려운 것이다. 창작활동이 아닌 ‘시위’의 방식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연극인들 사이의 세대적 연대는, 단일 이슈에 대한 지속성 집중성과 함께 파법씨어터 릴레이퍼포먼스의 주목되는 점이다.

거리시위 이후 스스로 발언의 장을 만들고 발언에 참여했던 경험,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연대의 경험은 느슨하게 그러나 활발하게 계속된다. 예를 들어 젊은 연극인들이 스스

49) 블랙리스트조사위 조사결과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방해 사건에 제기되었던 의혹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등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첫 공연이 있던 날 밤 예술위 간부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가 있었다. 공연 취소, 공연 방해 등에 대해 검토했고, 회의가 끝난 후 문화사업부장은 담당자에게 공연 취소 지시를 내렸지만 담당자가 이를 거부한다. 다음 날 공연에서는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공연방해가 이루어졌다. 블랙리스트 조사위에서 확보한 공연 동영상을 보면 배우들의 동선이 확보될 수 없도록 큰 테이블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술위 간부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 공연을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 한편 당시 ‘단순 실수’라는 문화사업부장의 해명문은 문체부의 검토를 거쳐 게시되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 보도자료(2018.4.13.))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보고, 특검수사, 블랙리스트 재판 등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블랙리스트 조사위를 통해 진상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로 만들어가는 창작플랫폼이라 할 ‘화학작용’ 등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업을 한다거나, ‘2030모임’(20대 30대 연극인들의 토론 모임) 등을 개최한다거나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연극계 이슈에 대응하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거리시위에 참여한 젊은 연극인들이 그대로 움직여가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활동들은 내용도 인적 구성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스스로 창작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자신들이 놓여 있는 창작환경에 대해 공적 지원만이 아닌 연극계 문화와 관습에 대해 토론하고 행동하는 젊은 연극인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험과 계기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다. 거리에서 극장으로 극장에서 광장으로

2015년 벽두부터 1년 내내 계속된 사건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예술위 등은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 축소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연극계의 저항이 도리어 체제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sup>50)</sup> 이러한 인식은 크게 현실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특검 수사, 감사원 문체부 운영 감사,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사결과 등을 보면 연극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거치면서 정책 및 사업 개편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가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검열은 예술정책, 예술행정에서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 체제와 권력의 완강한 벽 앞에서 연극인들은 다시 긴 싸움(長戰)을 시작한다.

2016년 4월 18일 ‘권리장전(權利長戰) 2016\_검열각하’ 클라우드 펀딩이 개설되고, 26일에는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킵오프파티’가 열린다. 이날 모임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극단 및 작품 소개와 프로젝트 발기문이 낭독되었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행사는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장기 릴레이 발언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극인들은 “각각의 작품은 현재 진행형 검열에 대한 연극인들의 진솔하고 즉각적인 답변”이라고 소개했다. 발의문에서는 “우리가 긴 권리장전을 시작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각자의 주권에 부당하게 침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국가 권력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대신 다수로부터 소수의 자유에 대

50) 특검 수사, 감사원 문체부 운영 감사,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조사위 조사결과 등을 보면 연극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거센 반발이 가시되었던 2015년에는 이미 블랙리스트 실행이 정책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그만큼 검열은 예술정책, 예술행정에서 일상화된다.

한 보장과 구현으로 우리의 주권을 확장해가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sup>51)</sup>

‘권리장전(權利長戰) 2016\_검열각하’는 윤한솔, 이양구, 김수희, 부세롬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알음알음 주변의 연극인들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우려와 달리 많은 연극인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프로젝트는 20여 개 극단, 개인, 팀이 참여하는 5개월간의 장전이 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검열과 달리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실행되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주제로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지원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그 자체가 이미 창작환경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지원금 더 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원금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원금 제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다.”(김수희)<sup>52)</sup>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 블랙리스트 사태도 드러나게 되었지만, 출발은 길고 힘겨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4월 18일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은 427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48백여 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으로 프로젝트 기획비를 마련하고 각 공연의 제작비는 티켓수익으로 충당했다. 티켓 가격은, 관객들의 참여를 위해 만원으로 책정했다. 제작 여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재공연 작품이 있었지만, ‘검열’을 주제로 한 신작이 발표되었다. 공연만이 아니라 참가하는 공연팀의 인터뷰와 리뷰가 언론을 통해 연재되고, 격월포럼, 집담회, 관객수다모임 등 극장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sup>53)</sup>

작품의 형식도 다양했고, 검열에 접근하는 시선도 다양했다. 박근혜 정부의 검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가 하면(〈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 고전을 재해석하기

51) 「‘권리장전’ 연극인들 “극장 안에서 극장 밖으로 싸움 시작”」, 〈민중의 소리〉, 2016. 4. 26.

<http://www.vop.co.kr/A00001016767.html>, 2018. 6. 20.

이날 발표한 발기문 전문은 ‘권리장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right\\_project/220713376352](https://blog.naver.com/right_project/220713376352), 2018. 6. 20.

52) 「“검열이 연극계 판을 분열시키고 있다”」, 〈노컷뉴스〉, 2016. 6. 3.

<http://www.nocutnews.co.kr/news/4602868>, 2018. 6. 20.

53) 참여 작품에 대한 소개는 권리장전 블로그 및 페이스북페이지 참고.

권리장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ight\\_project](https://blog.naver.com/right_project)

페이스북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project.for.right/>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아카이빙북

<https://drive.google.com/open?id=0B2nzruOMWUYcalBSVTIUCWJXYTg>

(아카이빙북에는 전체 프로그램 일정, 인터뷰, 리뷰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18. 6. 20.

도 하고(〈안티고네〉), 지난 시대의 검열을 되돌아 보고(〈해야 된다〉, 〈괴벨스 극장〉, 〈그때 그사람〉, 〈씨씨케이쥬아이〉, 〈검열관과 털〉, 〈대한민국사람〉), 문화예술계 검열 사건으로부터 확장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되돌아 보았다.(〈이반검열〉) 또한 외부적인 억압으로서의 검열만이 아닌 자기검열에 시달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흔들리기〉, 〈15분〉, 〈불신의 힘〉) 한편 형식도 다양했는데,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현장이었던 씨어터카페에서 진행된 〈비끼ing〉은 관객들이 카페 손님을 가장한 채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사건에 대해 예술위 측의 “카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해명에 대한 풍자가 흥미로웠다.

재공연도 이어졌다. 첫 번째로 막을 올린 〈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드림플레이 테제21, 김재엽 작·연출)은 프로젝트 공연 후 자체 기획공연을 이어갔다. 매 공연 후에는 ‘토크가 아니어도 좋은 토크’로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여 검열, 현 정치상황,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야 된다〉(극단 돌파구, 전인철 구성·연출), 〈이반검열〉(전화벨이 울린다, 이연주 구성·연출), 〈괴벨스극장〉(극단 파수꾼, 오세혁 작, 이은준 연출) 등은 재창작되거나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공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프로젝트 자체이다. ‘검열’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5개월에 이르는 장기프로젝트에 공연팀, 후원자, 관객 등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6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4일간 21개 팀 332명의 22개 작품이 110회 공연되었다. 10월 30일 프로젝트 종료 전후로 많은 언론은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의 의미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사에 유례가 없는 저항의 무대였다. 정부의 표현자유 억압에 맞선 저항이었지만, 상업화와 무기력이라는 연극계 자체 문제와 맞선 싸움이기도 했다.”<sup>54)</sup>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순항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다. “거리로 나가서 운동을 하지 왜 극장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숨는 거 아니냐, 너희의 안전망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비판”(김수희)도 있었지만 “권리장전을 통해서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것으로도 나의 시민됨이나 예술가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장전은 학교였다. 연습을 하고 동료의 작품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정진세) “올해의 중요한 창작극이 거의 ‘권리장전’에서 나왔”(김미도)고 “관객에게나 창작자에게나 연극이란 무엇이고 극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김소연)<sup>55)</sup>

54) 「블랙리스트에 맞선 연극의 주먹 “강편치였다”」, 〈한겨레신문〉, 2016. 10. 31.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68132.html>, 2018. 6. 20.

‘권리장전’은 현재 정치극페스티벌로 계속되고 있다. 2017년 ‘국가본색’에 이어 2018년에는 ‘분단국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수 개월 계속 되고 있다. 첫 해 ‘검열각하’ 참여팀이 당시 상황 때문에 비공개로 구성되었다면 2017년 ‘국가본색’부터는 참여의 문을 열었다. 첫 시작이 검열 정국에서의 ‘저항’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었다면, ‘권리장전’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극적 사유와 실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6년 가을 권리장전이 마무리를 향해 갈 즈음 드러나기 시작한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때까지 검열에 저항해온 예술가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그간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들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지극히 한정된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일보가 처음 보도한 9천여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그 규모와 근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서명만으로도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연일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화예술계의 대응도 빠르게 움직여갔다.

이제까지 검열 의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야별 장르별로 대응해왔던 것과 달리 각 분야와 장르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예술가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극계는 이날 밤 10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아르코극장 앞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 모여라, 슈퍼블랙! 나도 블랙리스트다!” 집회를 가졌다.<sup>55)</sup> 11월 1일부터는 매일 정오에 광화문 광장 1인 시위가 분야별 장르별로 조직되는 한편 11월 4일에는 7,449명과 288개 단체가 참여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연극계도 예술행동위원회의 연대활동에 참여하여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시국선언에 천 여 명의 연극인들이 서명한다. 시국선언이 광화문 광장 접거로 이어져 광화문캠핑촌이 시작되자 연극인텐트를 운영한다. 그리고 광화문 캠핑촌과 함께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우게 된다.

55) 「“예술검열에 대한 저항과 연대로 ‘연극의 힘’ 다시 일으켜 세워 뿌듯”」, 〈경향신문〉 2016. 11.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2118025&code=9603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2118025&code=960313), 2018. 6. 20.

5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하라” 한 목소리」, 〈이데일리〉, 2016. 10. 18.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25686612814232&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25686612814232&mediaCodeNo=257&OutLnkChk=Y), 2018. 6. 20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사건에 항의하는 거리시위가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 극장으로 그리고 다시 ‘광장극장블랙텐트’가 세워진 광장으로 이어졌다.(광장극장블랙텐트는 ‘4. 블랙리스트 사태와 광장-광화문캠핑촌’에서 다룬다.)

## 라. 검열백서위원회

11월 4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연극인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이후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행 추이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이 사건을 연극인들 스스로 기록하는 백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검열백서를 비롯해 시국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로X포럼을 발의하기로 하고 11월 11일 제5차 대학로X포럼 ‘검열과 예술정책 파행,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인시국선언 등 연대활동에 대한 경과 공유, 조운선 장관 수사 촉구 등과 더불어 검열백서 발행을 제안한다.<sup>57)</sup>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정치권력의 문제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권력은 교체되지만 이를 수행한 관료와 전문가 등의 기득권 동맹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 윗선을 핑계로 말단 관료부터 고위직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기록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낱알이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토론도 열어둠으로써 기록의 과정이 검열에 대한 논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한국현대연극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등 검열백서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지금까지 검열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과 달리 ‘검열백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리고 연극인들이 스스로 기록하는 작업인 만큼 연극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공개하는 등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별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날 토론회의 참여자가 발의자가 되어 검열백서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한다.<sup>58)</sup> 대학로X포럼 논의 결과에

57)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시국선언 등의 연대활동은 대학로X포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광화문캠핑촌연극인테트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거쳐 방혜영 연출이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광화문캠핑촌 연극인테트가 시작된다.

58) 대학로X포럼 제5차 토론회 회의록 게시글. 2016. 11. 15.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1823946654551453>, 2018. 6. 20.



따라 11월 24일에는 ‘검열백서 발간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에서 갖는다. 검열백서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갖기로 한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검열백서 제작 목적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진상규명이 목적인가, 기록이 목적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 또한 계속 논의해 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이후 한 차례 포럼 준비 모임을 거쳐 12월 26일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을 개최한다.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발족 포럼’은 연극인 ‘검열백서’의 첫 공개활동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과보고, 검열백서준비위 조직, 운영안 보고 및 승인, ‘문화예술계 부역 및 부역자 문제 - 예술검열 및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발족 포럼 이후 검열백서준비위원회는 사무국, 대외협력국, 조사팀을 두고 자료정리와 연대활동을 시작한다. 조사팀은 자료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는 한편 2017년 2월 18일, 25일에는 광화문 광장극장블랙텐트 앞에서 모금활동도 펼쳤다. 검열백서를 준비하는 연극인들과 정영두 등 검열에 저항했던 예술가들이 함께 검열백서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연극인 ‘검열백서’ 모금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up>59)</sup>

연극인 ‘검열백서’ 논의의 중요성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연극인들이 스스로 이 사건을 주체적 관점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의 법률적 쟁점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게 했는가였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문체부 공무원, 예술위 직원 등 블랙리스트의 실행자들은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고 언론을 그들의 증언을 실어 날랐다. 이러한 ‘직권남용’을 다투는 재판의 구도 속에서 정작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인 예술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워졌다.<sup>60)</sup> ‘검열백서’는 ‘부당한 지시’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에 주목한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수 년간 공적 조직을 통해 실행되었던 데에는 단지 권력의 ‘부당한 지시’ 때문만은 아니며, 그 부당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공공조직의 직원, 그리고 연극계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극인들이 이 사태를 직접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왜

59) 김재엽, 「검열백서위원회 경과보고」, 『검열백서 6월 포럼 자료집』, 2017. 3. 28.

60)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2심 판결을 앞두고 대학로X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탄원서’ 서명자를 공개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와 서명자는 대학로X포럼 다음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ermalink/2050699168542866>, 2018. 6. 20.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과 그 책임자들은 검열이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자들이 되었는가” “윤리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sup>61)</sup>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연극계 안으로도 향한다.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몰락하는 정권과 함께 했던 연극인들에 대한 질문, 그 실행을 함께 했던 연극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질문이다.

문화예술계에서 좀 멋있는(?) 어르신들의 양심적인 고백을 듣고 감동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운명공동체라기보다는 이익집단에 불과했기에 그분들의 공적인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권력은 유지하면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연극계의 선배들에게 많은 후배들이 그들에 대한 존경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sup>62)</sup>

2017년 3월 28일 검열백서 3월 포럼을 시작으로 준비위는 ‘검열백서위원회’로 전환된다. 3월 포럼에 이어 6월, 12월 포럼을 개최했다.<sup>63)</sup> 처음 검열백서가 제안과정에서나

61) 김소연, 「[기고] 연극인 ‘검열백서’가 묻는 것」, <경향신문>, 2017. 4.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320480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32048035&code=990304), 2018. 6. 20.

62) 김재엽, 「탄핵 이후, 검열백서를 준비하며」, 『검열백서 3월포럼 자료집』, 2017. 3. 28.

63) 검열백서 주요 행사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검열백서 3월 포럼>

일시 : 2017년 3월 28일 6시 30분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세미나실

1. 예술검열의 사건 개요 및 분석을 위한 개관/ 이양구, 임인자, 신재훈, 윤혜숙, 홍예원(검열백서 조사팀)
2.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법률적 제언/ 김종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예술검열 관련 주요 공공기관 및 책임자에 대한 공식질문 발표 및 토의/ 이해성(광장극장 블랙텐트 극장장), 김재연(검열백서 사무국장)

자유토론- 사회 : 김재엽

<검열백서 준비1호 발간 기자회견>

일시: 2017년 5월 3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앞

<검열백서 6월 포럼>

일시 : 2017년 6월 26일 6시 30분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0. 검열백서위원회 활동보고/ 김재엽(검열백서위원회 사무국장)
4. 검열사건일지 업데이트 : 새롭게 밝혀진 사실/ 이양구(검열백서위원회 조사위원)
5. 블랙리스트 재판 방청 보고/ 임인자(검열백서위원회 조사팀)
6.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쟁점/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추진위 토론, 발족 포럼 등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검열백서’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64)</sup> 3월 포럼과 6월 포럼을 정리하여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열백서준비1호 : 사건일지와 질문들』, 『“밝혀진 사실, 은폐된 진실” 검열백서준비2호 :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특집』을 발행했다.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열백서준비1호 : 사건일지와 질문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었다. 검열백서가 토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을 기록했다. 이 모든 과정은 연극인들 시민들의 후원과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검열백서위원회는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조사위에도 참여했다. 검열백서위원회가 기획했던 조사활동은 많은 부분 블랙리스트조사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블랙리스트조사위 조사결과가 백서를 통해 발간되면 이를 토대로 검열백서 제작이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연극인 『검열백서』는 처음 이 활동이 제안될 때의 문제 의식, 즉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연극인들 스스로의 관점을 만들어가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종합토론-사회: 김소연(검열백서위원회 기획위원)

〈블랙리스트 사태 피고 김기춘 조윤선 등 재판 방청 및 기록자 간담회〉

일시: 2017년 7월 1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사회: 임인자(검열백서위원회)

〈검열백서 12월 포럼〉

“검열백서 ing를 위하여”

일시: 2017년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블랙리스트 2심 방청기/ 임인자(검열백서위원회)

MB 정권의 블랙리스트 맞보기/ 김미도(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위원)

종합토론: 검열백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64) 김재엽, 앞의 글

## 4. 블랙리스트 사태와 광장

### 가. 광화문캠핑촌과 예술행동위원회

2016년 11월 4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예술인 7,449명과 288개 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시국선언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관련 문체부 공직자 퇴진 등의 요구가 발표된다.<sup>65)</sup>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경찰들에 둘러싸여 긴장감이 돌았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참여했던 백 여명 예술인들이 시국선언의 요구 사항을 함께 외치자 경찰측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 선언문 발표에 이어 텐트를 펼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는데, 퍼포먼스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퍼포먼스 현장을 둘러싸고 텐트 펼치기를 막고 텐트를 수거했다. 텐트를 뺀 예술가들은 늦가을 밤 이슬을 맞으며 광화문 광장을 지킨다.

다음날인 11월 5일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제2차 주말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 토요일이었다. 집회는 오후부터 시작되지만,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은 집회 준비 등으로 일상의 광장을 벗어난다. 경찰도 광장에서 물러났다. 전날 광장에서의 충돌과 점거 소식을 들은 여러 사회단체들은 광장으로 속속 텐트를 보냈다. 주변에서 여러 이슈로 장기 농성 중인 단체들도 광화문광장 점거에 합류했다. 그렇게 ‘박근혜 퇴진 광화문캠핑촌’이 열린다.

‘광화문캠핑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성과 활동은 문화예술인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문화예술단체들을 비롯하여 파인텍,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등 장기간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이 합류했다. 특히 ‘비정규직없는세상’ 운영진들은 광화문캠핑촌 운영에서 큰 역할을 했다. 광화문캠핑촌은 이름처럼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회의’가 열리고, 한겨울 한파를 막기 위해 함께 텐트 보강작업을 하고, 혹여 지원이 없는 텐트가 있을까 컵라면이나마 일용할 양식을 나누었다. 캠핑촌 촌민들이 늘면서 마을회관도 생기고, 회의실도 만들었다. 한 겨울을 이곳에서 나면서 설을 맞아 함께 합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한겨울 한파를 비닐천으로 막아야 하지만, 블랙리스트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으로 뜨거운 촛불광장에서 제 목소리를 다 낼 수 없었

65) 「“문화행정 파괴한 박 대통령 물러나라” ...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뉴스1〉, 2016. 11. 4.  
<http://news1.kr/articles/?2821806>, 2018. 6. 20

던 이들이 광화문캠핑촌 촌민이 되었다.

이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퇴진행동 촛불집회가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토요일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광장은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되돌아왔다. 광화문캠핑촌은 지난 촛불집회의 불씨를 지키며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광장을 다시 촛불의 광장으로 되돌려놓았다. 도심의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한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광장에서 토론회를 열고(광장토론회), 출판을 벌이고(금요출판), 캐리커처를 그렸다. 미술관을 열고(궁핍현대미술광장), 밤이 오면 공연을 올리고(광장극장블랙텐트), 마치 지난 주말을 기억하고 다가올 주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촛불 조형물에 불이 켜졌다. 한낮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다니기도 했다. ‘새마음애국토크근혜자율청소봉사단’은 청와대로, 국회로, 서울구치소로 청소를 다녔다. 청와대 앞을 쓸고, 국회 앞을 쓸고 서울구치소 앞을 쓸었을 뿐인데도 경찰은 내내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 토요일이면 시민들을 맞는 준비가 바빴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구명조끼가 광장에 놓이고 시민들은 조끼에 촛불을 켜놓고 꽃을 놓고 온 힘을 다해 공기를 채워 뱃고동을 울렸다(〈구명조끼304+숨〉). 12월 10일 7차 집회는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박근혜 전격 구속’을 1면에 담은 〈광장신문〉이 발행되었다. 오늘의 신문이 아닌 시민들이 열망하는 내일의 신문이었다. 토요일이면 광장으로 모여드는 시민들에 앞서 빨간도깨비들이 행렬을 이루어 거리를 돌았다(〈시국퍼포먼스 ‘옴!’〉). 풍물패들의 길곳이 촛불의 길을 열었다(새나라로 가는 길 곳). 온갖 낡고 녹슬고 버려진 것들이 최병수의 손에서 거대한 설치물이 되어 광장을 지켰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은 한편으로 주말 촛불집회의 시민들을 맞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 주말 촛불집회가 박근혜 퇴진으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때 그 물결 속에 있던 여러 목소리들을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들리게 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예술적 실천들의 귀환이면서 새로운 실천이었다.

광화문캠핑촌의 다양한 구성원은 예술행동을 더 다양하게 혁신해갔다. 기존의 예술형식을 벗어나 현실의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는 예술행동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정치적 장인 광장 전체를 예술형식으로 재맥락화한다든가,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예술형식들이 광장이라는 새로운 맥락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기도 했다. 때로는 기존의 예술형식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분야가 뒤섞이고 이질적 장르가 나란히 놓이고 서로 다른 세대와 경험이 만났다. 온갖 이슈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백만 촛불이 목소리를 함께 하는 것과는 또다른 실천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의 특징이라면 조직화

되지 않은 느슨한 연대이면서도 집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날인 3월 11일 ‘촛불승리 20차 범국민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주 촛불시민들이 열었던 광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촛불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한 때에도 내내 그 광장을 지키고 있던 광화문캠핑촌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화문캠핑촌의 예술행동은 상주하는 촌민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 그룹,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물론 공간의 사용이라든가,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과의 협의 등등 운영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광화문캠핑촌이 형성되면서 장르별 분야별 연대의 틀이었던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예술가 예술행동위원회’가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역할을 맡았다.

예술행동위원회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연대를 위한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깝다. 행동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여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여러 활동들을 공유하고 연결해가는 것이었다.<sup>66)</sup> 이러한 ‘느슨한’ 연대는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개개인의 실천에 머물지 않고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어 광화문미술행동은 촛불집회 기간 동안 12차에 걸쳐 ‘미술행동 Over the Wall’을 진행했다. 이 또한 특정한 단체가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미술인들의 연대였다. 광화문미술행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광화문캠핑촌 및 예술행동위원회와 공간 및 활동을 협의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모여든 이들의 논의 구조가 예술행동위원회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공현대미술광장 개관이 있었고, 차벽공략공략 Project, 차벽넘어 광장으로, 촛불광장Project 등의 활동으로 전개되었다.<sup>67)</sup>

2002년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집회 현장 혹은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은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개별적 실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은 다양한 예술활동이 연결될 수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데에는 광화문캠핑촌이라는 공간의 공유 그리고 예술행동위원회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66) 물론 이 ‘연결’을 위해 광화문캠핑촌 및 예술행동위원회의 여러 노력이 있었다. 매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획이 제안되면 그에 수반하는 여러 기획적 실무를 함께했다.

67) 김준권·김진하 엮음, 『광화문미술행동 100일간의 기록』, 나무아트. 2017.4.

## [박근혜 퇴진 광화문캠핑촌 낙달보름 일지]

11월 4일	블랙리스트 기자회견 후 노숙농성 시작	
11월 5일	광화문 광장 텐트 설치 및 광화문 캠핑 예술행동 시작	
11월 9일	깃발제작소 제작 / 시민참여 깃발제작	
11월 10일	광화문 캠핑촌 블랙리스트 페스티벌 개최	
11월 11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박근혜 퇴진-정몽구 구속 광화문 캠핑 돌입 기자회견	
11월 12일	똥치우는 날 조형물제작 풍물단체연합 터밧기 터굿 마임공연	파견미술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1월 13일	검열-성폭행에 항의하는 '검은시장' 블랙마켓	
11월 17일	하야하락(타틀즈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김대중 손병휘 윈디시티)	
11월 18일	하야하락(데드버튼즈 스트릿건즈 렉스 로만티카 아날로그소년)	
11월 19일	새나라를 여는 길 곳 광장신문 1호 발행(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호외 박근혜 하야 발표(손아람 소설가) '새로운 나라' 밀그림부터 주요 과제 만들기 착수... '95%위원회' 활동 어떻게 (송경동 시인) 2면 함께 보내야 할 것들 '길라임과 17인의 부역자들'(김민하 <미디어스> 기자) 열공 '박정희 개발독재학'(안수찬 <한겨레21> 편집장) 3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인 '5시 퇴근법에 페미니스트 된 김씨'(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우리 안의 박근혜, 뿌리 캐내기(박권일 칼럼니스트) 4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존중받는 '아녀자' 질주하는 휠체어(이지원 공헌 박경석 곽형수 권용식 명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꿈(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야하락(갤럭시익스프레스 킹스턴루디스카 허클베리핀 더 모노톤즈, 엠씨메타)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
11월 22일	'새마음애국튀근혜자율청소봉사단' 활동 시작	
11월 26일	새나라를 여는 길 곳 <광장신문> 2호 구성(신문대판 4면 칼라, 5만부 발행) 1면 박근혜 전격 구속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정(손아람 소설가) 2면 전경련의 몰락... 재벌 해체까진 '정신 바짝'(김경락 <한겨레> 기자) 96%위원회 '새 나라' 7대 긴급 과제 발표(96%위원회) 3면 청소년 힘에 눌려 선거연령 낮춘 국회(밀루 청소년 인권운동 '아수나로' 활동가) "어른들이 망친 나라, 우리가 다시 만든다"(김해원 동화작가) 4면 화보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노순택)  <하야하락> 전국9개 도시 동시다발콘서트 서울-크래쉬 폰부스 안녕바다 말로 노선택과 소울소스 부산-김태춘 김일두 김광일(언체인드) 스카웨이커스 춘천-소보 일곱시반 노는삼촌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

	전주-안태상밴드 크림 화요일11시 노악자석 픽업 귀갱주의 이상한계절 소리에 대전-버닝햄번 스모킹구스 프리버드 블레스 박홍순 진채밴드 바리톤조병주 광주-삼춘밴드 우물안개구리 김과리 더티라곤 제주-강산에 권순익 김신익밴드 나무꽃 뚜렷부라더스 러피월드 묘한 방송 철 밴드홍초 비니모터 사우스카니발 선경 오버플로우 조성일밴드 조 성진 조약골 태히언	
11월 27일	일과노래 콘서트 <고백>	
11월 29일	광장토론위원회 구성, <광장토론01_박근혜퇴진을 위한 광장의정치와 경로>	
11월 30일	박근혜 조형물 제작	파견미술
12월 1일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12월 3일까지)	
12월 3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 <하야하략> 전국7개 도시 동시다발콘서트 서울-불한당(MC메타 나찰 피타입 냇업산 마이노스 키비 라임어택 옴티칼 아이즈엑셀 DJ스킵) VMC크루(딤플로우 녍살 던밀스 우탄 오디 DJ티 케이) ADV 크루(JJK 울티 루고 리플로 DJ켄드릭스) 허클베리피 루그 페이퍼(쿤타 알디 케본) 아이삭 스퀴브 대전-어쿠스타&박창룡 스모킹구스 흑시몰라 파인애플밴드 소리여행 이희 원 진채밴드 블래스 부산-아스트로너츠 브록스 뱅크럽츠 사이드카 춘천-타카피 녹우 김성호 아 이보리코스트 에이볼렛 참교육밴드 나눔의집 합창단 대구-튜나스 옐로우 제주-조성진 소금인형 모다정 강릉-엘리펀디와 친구들(엘리펀디 풍키몽키 프렌즈) 삶은 노래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12월 6일	<광장토론02_진짜 퇴진을 위해광장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근혜퇴진호 제작 <광장신문> 2.5호(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박근혜 전격 구속 정몽구 구속영장 청구 결정(손아람 소설가) 2면 전경련의 몰락... 재벌 해체까진 '정신 바짝'(김경락 <한겨레> 기자) "파견법 통과시켜 불법파견 해결해달라"(박점규 기자) 3면 김씨, 난생 처음 민주공화국을 맛보다(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우리 안의 반근혜, 뿌리 캐내기(박권일 칼럼니스트) 4면 화보 누구를 감옥에 보낼 '타임'인가(노순택)	파견미술 광장신문
12월 8일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즉각 퇴진 및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수사 촉구'	
12월 9일	희망촛불 조형물제작	미술행동
12월 10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곳 <광장신문> 3호 구성(신문대판 4면 칼라, 2만부 발행) 1면 "나도 재벌 할 걸...자괴감" '본지, 박근혜 옥중편지 단독 입수'(박민규 소설가) 2면 박근혜 퇴진 이후 진화하는 직접민주주의(송경동 시인)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광장신문



	<p>낮은 정치 전복시킨 대안민주주의의 외국 사례(조일준 한겨레 국제부 기자) 3면 복되다, 잉여로움,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세상(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386 친권자' 둔 청년이 '부심' 찢는 기성세대에게(공혜원 촛불집회 참가자) 4면 화보/ 잘라라 약자에게만 가혹한 그 손을(노순택) &lt;광장토론03_탄핵 이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gt; 박근혜 즉각 퇴진 퍼레이드</p>	
12월 12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 고발' (특검 사무실 앞)	
12월 13일	<광장토론04_평등한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2월 14일	<양심수를 위한 연대의 밤>(서울구치소)	
12월 17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공물인연석회의
12월 20일	<광장토론05_탄핵 이후 광장정치의 문화적 의미와 예술운동의 방향>	
12월 21일	정몽구 이재용 조형물제작	파견미술
12월 24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1 차벽공략project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공립현대미술광장> 개관전시 "내가왜" (~1월 13일까지)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공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공립현대미술광장
12월 27일	<광장토론06_재벌총수 즉각구속, 재벌해체와 삶의 변화>	
12월 29일	기자회견 <조윤선 사퇴 및 구속수사 기자회견>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1차 회의	블랙텐트
12월 30일	<공립현대미술광장>개관식 박근혜 정권 열사, 희생자 추모제 <광장을 비추는 별>	공립현대미술광장
12월 31일	시국퍼포먼스 '옳!' 광화문 새날맞이 곳 촛불광장 Project-2 차벽공략project 촛불이 국민의 명령이다!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2차 회의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공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블랙텐트
<b>2017년</b>		
1월 2일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위원회 3차 회의	블랙텐트
1월 7일	시국퍼포먼스 '옳!' "뻘뻘한 극장, 이 곳에 세우다, 광장극장 <블랙텐트>"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깃발 제작	주류아닌예술가들 블랙텐트 전국공물인연석회의
1월 10일	<광장토론07-2017 촛불에 바란다> 광장극장블랙텐트 개관식 '노동블랙리스트, 검은 거래를 부쉬라' 기자회견	토론위원회 블랙텐트
1월 11일	<블랙리스트 버스>(세종시 정부청사, 1박2일, 1월 12일까지) 쌍용차해고노동자의 집 제작 김기춘 조윤선 조형물제작 블랙텐트 천막 그림그리기	파견미술
1월 13일	광장극장블랙텐트 개관기념공연	블랙텐트

1월 14일	<p>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춧불광장 Project-4 차벽공략project 응답하라! 1987! &lt;궁핍현대미술광장&gt; 춧불항쟁사진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김명진(한겨레)김도훈(연합)조성봉(뉴시스)이정용(한겨레)윤성호(국민)김성룡(중앙)신선영(시사인)이승환(매경)권우성(오마이뉴스)정지윤(경향)장승윤(동아)한중찬(연합)임태훈(뉴시스)조수정(뉴시스)박승화(한겨레21)신웅수(뉴스원)오종택(중앙)조우혜(프리랜스사진)정택용(사진가)양지웅(포커스)이승배(포커스)안상진(사진가)변백선(노동과세계)이치열(미디어오늘)윤성희(사진가)문병희(더팩트)정기훈(매일노동뉴스)노순택(사진가)이기범(언론노조)조승진(노동자연대)최윤석(오마이뉴스)이미진(노동자연대)양지웅(민중의소리)최형락(프레시안)김진석(사진가)박상훈(조선)김성현(사진가)정병혁(대학생)류영주(대학생)박민석(대학생)</p>	<p>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궁핍현대미술광장</p>
1월 16일	<p>블랙텐트 시즌1 (~2월 3일까지) &lt;빨간시&gt;, &lt;그와 그녀의 옷장&gt;, 마음 : &lt;노란우산, 푸른아이&gt; &lt;여자, 女子&gt; &lt;어루만지는 몸, 꽃&gt; &lt;전봉준&gt; &lt;잠수사 이야기&gt; &lt;모래아이, 나비&gt; &lt;아빠, 엄마의 바다&gt; &lt;접촉&gt; &lt;어른&gt; &lt;걸음을 멈추고&gt; &lt;인생&gt;, &lt;검열언어의 정치학 : 두 개의 국민&gt;</p>	블랙텐트
1월 20일	유성기업 노동자의 집 제작	파견미술
1월 21일	<p>시국퍼포먼스 '옳!' &lt;광장토론08_광장정치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전략&gt; 춧불광장 Project-5 차벽공략project 동녘이 밝아 온다! 새나라를 여는 길 곳</p>	<p>주류아닌예술가들 토론위원회 미술행동 전국풍물인연석회의</p>
1월 24일	<p>&lt;광장토론09_대안언론과 광장의 정치&gt; 광장극장블랙텐트 포럼</p>	
1월 28일	<p>시국퍼포먼스 '옳!' 노동자+블랙리스트 합동차레 새해맞이행사 춧불시민만복래 새나라를 여는 길 곳</p>	<p>주류아닌예술가들 미술행동 전국풍물인연석회의</p>
2월 1일	<p>&lt;궁핍현대미술광장&gt; 광장 목판화전(2월 14일) 김동인 김봉준 김준권 김억 류우종 류연복 박구환 박홍규 서인희 손기환 안혜자 유대수 윤여걸 이언정 홍익중 홍진숙 홍선웅</p>	궁핍현대미술광장
2월 4일	<p>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텐트 특별상영회 &lt;7년, 그들이 없는 언론&gt; 춧불광장 Project-6 차벽공략project 새로운 나라로! &lt;광장신문&gt; 4호 구성(신문대판 8면, 4개면 칼라, 5만부 발행) 1면 탄핵, 이젠 재벌 차례다. 재벌의 추억 &lt;노동자연쇄살인극&gt;(손아람 소설가) 국회가 로두스다 의원들아 뛰어라(김수민 전 녹색당 시의원) 2면</p>	<p>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광장신문</p>

	1면에서 이어짐) 우리들의 함성, 재벌 해체할 준비 되었는가 황상기(삼성전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국석호(유성기업 고 한광호씨 유족) 인터뷰 3면 1면에서 이어짐)탄핵 뒤 손놓은 국회, 광장 뜻 잊었는가 4면 콜트콜텍·유성·쌍용차... 광장의 킹왕짱 노동자들(명지현 소설가) 미술팀·공연팀·토론팀 문화예술로 피운 촛불(김금영 언론인) 5면 블랙리스트 찢고 나와 낙인의 정치 끝장내자(천명관 소설가) 6면 '태극기 집회' 관찰보고서(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7면 광장에 한계는 없다, 낙인을 두려워 말라(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8면 화보/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노순택)	
2월 6일	기자회견 <천박한 정치인들은 더러운잠에서 깨어나라> 블랙텐트 시즌2(~3월 3일까지) <씻금>, <광장 꽃, 피다!>, <노란봉투>, <길을 묻다>, <킬링 타임>, 무용 : <개구리> <묵음> <슬픔 속으로> <유랑 - 이름없음의 이름> <Puzzle 퍼즐> <내 팔을 백원에 팝니다> <물의 꿈 : 빛을 향하여> <승무> <망나니칼춤> <엇중물이 신칼대신무> <우포따오기춤> <살풀이춤> <허튼 덧배기춤> <벽사 진경 사자놀이> <영남 말뚝이춤> <산천초목> <송파산대놀이 노장춤>, <33한 날에 : 29개 팀>	블랙텐트
2월 7일	<광장토론10_광장정치의 과제 : 촛불의 정치화>	토론위원회
2월 9일	광장학교 : 광장, 혁명을 말하다	토론위원회
2월 10일	촛불광장 Project-7 대선? 탄핵이 먼저다! 오픈에어갤러리 전시 천만촛불 시와 사진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차 행진(~2월 11일까지)	미술행동 미술행동
2월 11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8 黑雲萬天 天不見 <하야하락> 열쑤! 탄핵하세! 국악콘서트 윤주희와 소우주양상블 김기영 오단해 허창렬과 더광대 양상블시나위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2월 14일	광장토론10_적폐청산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광장의 제안 광장미술전 "A small movement is a great miracle"(~2월27일까지) 권홍 김기호 강성봉 김중찬 박영균 박은태 변대섭 박일훈 박준모 류우중 서수경 성효숙 오은주 이선일 이오연 이원석 이재민 이해균 임영준 정세화 정평한 차진환 황정경 현용안 이영학 박충의 김성수 임영선	토론위원회 공립현대미술광장
2월 18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9 오픈에어갤러리 전시 '黑雲萬天 天不見'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풍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하야하락〉 죄와 벌 합합공연 이그니토, 헝거노마 반블랭크, 로벤, 익스에이러, 댄클락 DJ티즈 다이알로 그 최삼 만수	
2월 24일	청년의 집, 재벌 쓰레기 조형물제작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차 행진(~ 2월 25일까지)	파견미술
2월 25일	시국퍼포먼스 '옳!' 새나라를 여는 길 곳 촛불광장 Project-10 임을 위한 행진곡 〈하야하락〉 별받아 락 락밴드공연 로맨틱펀치 스카웨이커스 전국비둘기연합 태히언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공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2월 28일	〈궁핍현대미술광장〉 일곱 빛깔 투쟁전(~3월 14일까지) 정택용 이윤엽 노순택	궁핍현대미술광장
3월 1일	촛불광장 Project-11 민주주의 촛불공화국 만세! 대동놀이	미술행동
3월 3일	〈추모문화제〉 한광호의 사계절	
3월 4일	시국퍼포먼스 '옳!' 전국공물인연석회의 촛불광장 Project-12 역사, 광장 민주주의 광장극장블랙텐트야외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_숨+구명조끼304+헌법 퍼포먼스〉	주류아닌예술가들 전국공물인연석회의 미술행동 블랙텐트
3월 6일	광장극장블랙텐트 페스티벌 '봄이 온다' (2017. 3. 6 ~ 3. 9) 〈꽃 할머니〉, 〈신문지 이야기〉, 〈민중가요, 포크콘서트〉, 〈변화〉 〈후시기나 포켓도〉, 〈소곤소곤 콘서트〉, 〈내 아이에게〉, 〈불온한 상영회〉 〈심장이 뛰다〉, 〈거인〉, 〈짧은, 그리고 영원한〉, 〈우리시대의 연인〉 〈결혼굿〉, 〈배의 밤이〉, 〈닭잡고 한마당〉, 〈망명바다〉	블랙텐트
3월 7일	광장토론11_박근혜 탄핵과 한국사회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사태와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토론위원회
3월 9일	황교안 조형물제작	파견미술
3월 10일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3월 11일	시국퍼포먼스 '옳!' 촛불광장 Project-13 촛불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나라를 여는 길 곳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퍼레이드	주류아닌예술가들 미술행동 전국공물인연석회의
3월 14일	〈궁핍현대미술광장〉 촛불역사전(~3월 21일) 곽명우 권홍 김문호 김이하 노순택 라운지 박영환 양시영 엄상빈 이정환 전 민조 정영신 조문호 채원희 최연택 하형우 한이정 홍윤하 이재민 큰곰대장외 촛불시민다수	궁핍현대미술광장
3월 16일	광장극장블랙텐트 토론회, 파티	블랙텐트
3월 17일	광화문미술행동 천막철거	미술행동
3월 18일	광장극장블랙텐트 천막 해체	블랙텐트

- 1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전춤 시작
- 매주 금요일 : 박근혜 구속 금요 춤교실
- 매주 토요일 : 낮전춤, 길거리 붓글쓰기(18회차), 촛불시민 걸개그리기 등 실시<sup>68)</sup>

## 나. 광장극장블랙텐트

광장극장블랙텐트는 광화문캠핑촌 연극인텐트에서 시작된다. 2016년 11월 4일 시국 선언 이후 광화문캠핑촌이 형성되면서 제5차 대학로X포럼(11월 11일)에서 연극인텐트 운영이 논의된다. 방혜영이 운영 책임을 맡기로 하고 연극인들은 릴레이로 텐트를 지키고 지지방문을 했다. 광화문캠핑촌에서는 이미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야외공연이 불가능한 추운 날씨인데다가 많은 연극인들이 소극장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에서 공연해왔던 터라 야외 퍼포먼스 중심의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희곡낭독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활동을 이어가기에 어려웠다. “왜 이곳(예술인텐트촌)에 많은 연극인이 나오지 않을까”(임인자)하는 고민은 이곳에 극장이 세워진다면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sup>69)</sup>

광화문미술행동이 미술인들과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과의 협업과정을 거쳐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궁핍현대미술관이 개관하고 운영되었던 것처럼 광장극장블랙텐트도 연극인들과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기획되고 운영되었다. 방혜영에 이어 연극인텐트에 입주한 이해성, 예술행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임인자 등은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천막극장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광장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의 문제, 극장을 운영하는 문제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았다. 처음 이 기획이 추진될 때는 반대도 많았다. 우선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미 4~50개의 텐트가 광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상시적인 활동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3층 높이의 구조물이라 할 천막극장이 들어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퇴진행동도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는 만큼 안전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했다. 광화문캠핑촌도 역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설치의 여러 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극장운영의 구체적 방안도 필요했다. 한겨울 광장에 설치된 천막극장은 난방, 소음 등에 대처할

68) 광화문캠핑촌 해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69)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침몰하지 않은 채 떠 있는 작은 극장 - '블랙텐트 광장극장'을 이끌고 있는 운영위원 4인」, 『한국연극』 2017. 3. 21쪽.

설비 문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제, 그리고 홍보, 티켓 관리, 공연진행 등 비록 광장을 무단 점유한 천막극장이지만, 하나의 극장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장에서 어떤 공연을 올릴 것인가 하는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있었다.

극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광화문캠핑촌 운영진인 송경동, 이사라 그리고 이해성, 임인자, 이양구, 김소연, 홍예원, 나희경, 조재현, 유진규 등 연극 및 공연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첫 회의의 안건이 극장 이름을 짓는 것인 만큼 극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말고는 운영비, 운영인력, 프로그램 등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했다. 그만큼 연대와 협업이 절실했다. 가능한 한 참여를 열어 두어야 했지만, 물리적 공간을 상설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 만큼 책임도 명확해야 했다. 우선 광장에 세워진 극장이라는 점에서 ‘광장극장’을,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의 의미와 천막극장의 의미를 덧붙여 극장이름은 ‘블랙텐트’로 결정되었다. 1월 7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토요일로 설치일을 잡고 설치 계획을 짜는 한편 개관식, 개관기념공연 그리고 16일 개관 이후 4주간의 공연작품을 섭외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등의 일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텐트 설치가 끝나야 하기에 설치 시작은 오전 7시에 하기로 했다. 1월 6일 설치 전날 한편으로는 청송 나무담움직임 연구소의 천막극장을 옮겨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장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광화문캠핑촌의 무대를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 퇴진행동과 광화문캠핑촌의 우려는 송경동, 이해성이 운영 계획을 통해 설득했다. 설치 전날 연극인 20여 명이 광장에 와서 광화문캠핑촌 무대를 옮겼다. 연극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화문캠핑촌의 우려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광화문캠핑촌이 시작되었던 텐트 설치 퍼포먼스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듯, 천막극장의 설치에 경찰의 방해가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sup>70)</sup>

2017년 1월 7일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리는 토요일 오전 7시 한 겨울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슴프레한 가운데, 광화문캠핑촌 촌민들과 연극인들 70여 명이 모여 텐트 설치가 시작되었다. 준비 과정이 비공개였던 만큼 보도자료도 설치가 시작된 오전 7시에 배포되었다. 청송 나무담움직임연구소에서 해체하여 옮겨온 천막극장을 세우는 한편, ‘광장극장 블랙텐트’ 선언문과 공연홍보물을 토요일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극장운영을

70) 광장극장블랙텐트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송경동, 「광장의 사건,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연극평론』, 2017년. 봄호.

위한 모금활동도 했다. 운영비 모금도 중요했지만, 왜 광장에 극장을 세우고자 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했다. 설치 장소에는 ‘빼앗긴 극장 여기 다시 세우다’라는 펼침막을 세웠다. 다음은 광장극장블랙텐트 선언문 전문이다.

이곳은 임시 공공극장입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사회적 삶의 극장입니다. 시민들은 고통과 분노의 한 복판에서 그것을 뚫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며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회적 삶의 극장 한 복판에 연극인들이 예술가 동료들, 시민들과 함께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웁니다. 우리는 이 극장에서 연극의 공공성, 예술의 공공성, 극장의 공공성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공공극장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될 뿐 연극과 극장이 동시대 국가와 사회 인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위안부’ 등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지워지고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장에 극장을 세우고 지워진 목소리, 추방된 이야기를 불러들이고자 합니다. 억압받는 자들, 약한 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대립과 갈등조차도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이 묻지 않았던 극장의 공공성에 대해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광장 한 복판에서 끝없이 묻고 물어 답을 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연극인 여러분, 동료 예술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광장극장 블랙텐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극장들이 외면했던 세월호 참사, ‘위안부’ 등 동시대 고통 받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임시 공공극장입니다.

하나.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정리 해고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탄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등 각종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동시대 시민이 만나는 시민극장입니다.

하나.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난 한국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국가·사회·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공론장입니다.

하나.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예술가들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연극의 미학적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실험극장입니다.

1월 7일 기습적인 설치였음에도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현장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임시 공공극장’을 표방함으로써 공공극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극장을 빼앗긴 예술가들이 한 겨울 천막극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차별 받고 배제 당한 예술가들의 현실을 명징하게 드러냈다. 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장극장블랙텐트에서는 위안부, 노동자, 세월호 이야기 등이 공연되었다.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고 광장 가득이 촛불이 일렁일 때면 마치 극장이 촛불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비록 주말집회 때에는 공연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광장극장블랙텐트의 공연을 보고 있다면 촛불혁명 안에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새겨 넣는 작업으로 다가왔다.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예술가들의 지원 배제는 결국 이러한 우리 사회 소외된 목소리에 대한 배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sup>71)</sup>

광장극장블랙텐트가 기획될 때 우려 중에는 안전 및 운영의 문제도 있었지만, 왜 집(극장)을 나선 우리들이 다시 광장에 집(극장)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이 질문은 광장극장블랙텐트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재논의되었다. 극장을 운영하면서 ‘광장과 극장’은 나침반과 같은 화두였다. 극장과 광장은 물리적으로 상반되는 공간으로 보인다. 극장이 닫혀있다면 광장은 열려있다. 하지만 토론회 등에서 연극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물리적 공간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극장 역시 광장처럼 함께 모여 동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할까. 광화문캠핑촌의 여러 예술행동들이 토요일 촛불집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광장극장블랙텐트는 토요일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광화문캠핑촌의 영상프로그램이라든가, 집회가 끝난 이후 심야 시간에 하야하콰콘서트, 독립영화상영 등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토요일 광화문광장은 아침부터 퇴진행동의 집회 준비가 시작된다. 저녁 집회 때는 물론이고 집회 리허설로 아침부터 광장은 중앙무대에서 나오는 소리들로 꽉 차 있다. 광장극장블랙텐트는 수십만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정작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대신, 광장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일 밤, 혹은 집회가 끝난 후 극장을 열었다. 광장 좌우로 지나가는 차소리와 겨울 한파를 천막극장이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극은, 하나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너와 나의 서로 다름, 그것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극장블랙텐트는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광장의 한복판에서 다름과 갈등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희극이든, 파국을 피할 수 없는 비극이든 우리의 다름과 갈등을 지우지 않고 꺼내놓았다. 광장이 합의를 만들어가

71) 광장극장블랙텐트 프로그램 및 참여자들에 대한 자료는 블로그와 페이스북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장극장블랙텐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lacktent> 2018. 6. 20.

광장극장블랙텐트 페이스북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theaterblack/> 2018. 6. 20.



는 공간이자, 우리의 다름과 같등을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광장극장블랙텐트는 어떤 점에서는 ‘극장’이라는 제도화된 관습적인 예술을 그대로 광장에 옮겨놓은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장’과 ‘연극’이라는 관습적인 형식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광장의 이야기에 기입했다. 이러한 맥락의 충돌 속에서 극장, 광장, 연극은 새롭게 해석되었고, 광화문캠핑촌 예술행동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러한 맥락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광화문캠핑촌 촌민들과 연극인들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장이 설치되던 날 캠핑촌 촌민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극장을 세웠다. 천막극장을 세우고 극장의 설비를 마련할 때, 조명기를 달기 위해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장비를 나르고 함께 나사를 조였다. 함께 일했던 한 연극인은 해고노동자들이 연장을 들고 설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을까 새삼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바람에 극장이 날아갈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달던 노동자들, 겨울 바람을 맞으며 극장 외벽에 그림을 그려넣던 파견미술팀들, 그리고 광화문캠핑촌 촌민들이 부족한 물품을 구하느라 함께 뛰어다녔다. 그렇게 함께 만든 극장에서 연극인들은 공연을 하고 노동자들, 촌민들은 연극을 봤다. 광장극장블랙텐트의 공연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들이다. 그러나 광장극장블랙텐트에서의 공연은 관객들과 또다른 특별한 교감을 만든다. 그것은 한편으로 촛불시민들이 만든 광장이라는 공간의 맥락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만든 극장에서 올려진다는 특별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극장운영은 연극인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극장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이 연대했다. 하야하왁 <얼쭈! 탄핵하세! 국악콘서트>, 독립영화협의회가 주관한 <그들이 없는 7년> 상영회, 무용인들이 프로그램 기획, 진행, 공연을 맡았던 <뭉! 외치다>, 마임연속공연, 광장극장블랙텐트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20여 공연팀들, 광장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숨+구명조끼+헌법퍼포먼스)에 함께 했던 기획팀, 무용수, 연극인, 서예가 등등이 광장극장블랙텐트의 실험을 풍성하게 했다. 광장극장블랙텐트 운영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극장’을 매개로 이루어진 예술인들의 연대활동이었다.<sup>72)</sup>

72) 광장극장블랙텐트운영진은 아래와 같다.

- \* 마임/무용 프로그램 자문 및 기획 : 유진규, 이정훈, 김서령, 박성혜, 김윤진, 장순향, 김경수
- \* 토요일영화제 토요일특별공연 기획 및 진행 : 광화문캠핑촌 기획팀
- \* 무대감독팀 : 신재훈, 전운환, 송경화, 김수정, 백석현, 구자혜, 김정, 윤혜숙, 설유진, 이연주
- \* 그래픽디자인 : 황가림

연극인들은 2014년 서울연극제대관 탈락 사태를 시작으로 창작산실 검열 의혹, ‘팝업 씨어터’ 공연 방해 사건 등을 겪으며 토론회, 성명서, 거리시위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를 5개월간 공연하기도 했다. 이 모든 싸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와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연극인들의 블랙리스트 싸움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불의에 의해 억압받는 너무 많은 고통들이 차고 넘쳤다. 광장극장블랙텐트는 그렇게 고통 받는 이들의 연대이기도 했다. 함께 극장을 만들고, 극장을 찾아와 우리가 만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시민들에게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동료예술가들에게서, 비록 블랙리스트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깊은 위로를 받았다. 예술행동이나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 예술가의 지원이나 헌신이 아닌 서로의 교감과 공감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 5.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행동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과 예술적 실천은, 연극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글에서 담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행동에 대한 부분적 서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극계의 활동이 연극인들만의 활동은 아니었다. 첫 문제 제기가 검열이 아닌 절차의 훼손, 투명성의 훼손에 대한 것이었을 때, 세상을 뒤흔드는 큰 목소리가 아니었더라도 귀 기울여주는 동료 예술인들, 시민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인들은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갔고, 그 연대의 힘으로 극장의 공공성 훼손(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열 의혹(창작산실 검열 의혹,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에 맞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예술위 검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대학로X포럼과 한국문학작가회의는 함께 연대포럼 ‘검열과 파행’을 주최했다. 문학계에서는 이미 2014년 현장예술계교육지원사업에서 공모 심의를 마치고서도 사업을 폐지하는가 하면, 우수문학지 지원사업이 급작스레 축소되는 등 무수한

\* 기록팀 : 이보람, 이은서, 백은호, 조소이, 강현우, 박준호

광장극장블랙텐트운영위원회

이해성(극장장), 김성구, 김소연, 나희경, 송경동, 이사라, 이양구, 이정훈, 임인자, 조재현, 홍예원

주최 : 광화문캠핑촌, 박근혜퇴진과시민정부구성을위한예술행동위원회

주관 : 광장극장블랙텐트운영위원회

후원 :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유니콘사운드, MAP STAFF COMPANY, 제작소 수, 엠제이플래닛, 검열에 저항하는 연극인들과 시민들

정책적 파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그러던 것이 예술위 검열 의혹에서 두 장르의 예술가들이 연대한 것이다. 한편 정영두 안무가는 국립국악원 연출가 배제 의혹을 놓고 국립국악원, 문체부 앞, 사건 당사자가 있는 런던 주영한국문화원까지 날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광화문캠핑촌에서는 노동자, 시민, 동료 예술가들, 연극인들이 함께 광장극장블랙텐트를 운영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난 지금, 당시 연극계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들은 검열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방대한 규모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었고, 연극인들의 거센 저항의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극인들의 저항을 그저 지원금에 목매고 있는 예술계의 투정으로 호도했다. 돌아보면 연극계 내에도 그리고 연극계를 향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때로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충돌과 갈등의 과정에서, 검열을 ‘예술지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연극제대관탈락 사태 당시 동료이자 피해자인 서울연극협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서울연극협회를 지지하는 활동이 아닌, 자칫 양비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것은 대관탈락 사태의 문제가 그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훼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위해 연극계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공론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다. 그 고민이 대학로X포럼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에서 연극계의 움직임은 외부로 향한 ‘싸움’만이 아니라 연극계 안의 성찰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나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연극계 블랙리스트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대응의 격렬함 등으로 조직적인 활동으로 비춰지지만, 특정한 조직을 두지 않고 그때 그때 사안마다 대학로X포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슈의 확산과 과정을 공유하면서 진행되었다. 대학로X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표자나 집행부가 있는 조직이 아니다. ‘팝업씨어터’ 거리 시위의 경우, 오프라인 시위로 진행되었지만 그야말로 알음알음 이슈를 공유하면서 전개되었다. 대학로X포럼은 이슈를 공유하는 수단이다. 물론 한 달 여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도 있고, 내내 릴레이 시위의 진행을 맡는 이도 있다. 이 또한 특정한 그룹이나 집단 혹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슈가 공유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구조에서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반면 ‘권리장전2016\_검열각

하’, 검열백서, 광장극장블랙텐트 등은 지속성이 필요한 활동으로 ‘예술감독’ ‘극장장’ ‘위원장’ 등의 직함을 두고 조직을 갖추었다. 그러나 처음 비공개로 진행되던 권리장전이 이제 참여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나 검열백서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여러 쟁점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발성’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활동해왔다. 광장극장블랙텐트가 1월 7일 설치부터 3월 18일 해체까지 운영되는 동안 공연팀은 물론이고 극장 운영에 많은 연극인, 촌민들이 참여했다. 대학로X포럼이 플랫폼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연대를 위해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극인들의’(약칭 ‘블랙타파’)가 조직되었는데, 이 또한 30여 명이 넘는 공동대표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발성을 원칙으로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는, 발 빠르게 이슈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극계의 활동이나 광화문캠핑촌과 예술행동위원회의 활동이 보여주듯이 느슨한 네트워크가 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광화문캠핑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많은 예술행동들은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협업이었다. 느슨한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제안이 빠르게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협업이 이루어진다. 대학로X포럼의 경우 첫 토론회부터 발의와 진행, 그리고 기록까지 자발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세대 간의 다양한 관점들이 토론된다. 물론 이러한 느슨한 네트워크도 드러나는 활동만이 아닌, 네트워크를 움직여가게 하는 많은 땀을 필요로 한다.

블랙리스트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활동의 한계로 아직 밝히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조사위의 제도개선권고안과 책임규명권고안은 앞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연극계 안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건의 해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연극인들에게 예술가이자 시민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은 다른 여러 사회적 이슈와 달리 예술가 자신이 당사자인 이슈다. 예술가로서 예술의 공적 지원의 파행에 대해 싸웠다면,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서 싸웠다. 이 과정에서 연극은 싸움의 무기이자 자기성찰의 장소이고 연대의 공간이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저항의 과정이 자기성찰의 과정이라 할 때, 그 성찰에는 연극인들의 ‘연극’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포함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가 더욱 주목된다.

## 제2절 | 법률적 대응

장지연\*

## 1.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의 결성

## 가. 블랙리스트의 파편들

2010년 방송인 김미화는 트위터에 “케이비에스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들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블랙리스트 논란에 불을 붙였다.<sup>1)</sup> 비슷한 시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담당했던 구본홍 씨를 YTN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언론인들의 싸움이 시작됐고, 2012년 MBC 언론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선임된 김재철 씨 체제에 대항에 파업을 하면서 싸움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낙하산 사장을 선임해 방송사 경영을 장악하고 언론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PD수첩>으로 대표되던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들을 해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가 MBC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sup>2)</sup>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미화를 비롯한 많은 방송인이 방송에서 배제되고 극심한 언론장악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블랙리스트의 진실은 수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은 JTBC가 ‘2015년 창작산실’ 검열 사태를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sup>3)</sup> ‘2015년 창작산실’ 연극 분야 심사위원이었던 한연극평론가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주관한 창작산실 시범공연 심사는 2015년 4월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이루어졌다. 심사 대상 작품은 총 15개였고 5일간 심사위원 다섯 명이 시

\*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1) 「‘블랙리스트’ 김미화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호소까지 했다”」, <한겨레>, 2017. 9. 15.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11151.html#csidx2fc0773f3e76712830b131d19a7b0ee>, 2018. 6. 24
- 2) 장지연, 「누가 방송사 목에 방울을 달까」, <주간경향> 1220호, 경향신문사, 2017.4.4., 34쪽.
- 3) 「단독 탐사플러스: 지원자에 작품포기 증용…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 <JTBC>, 2015. 9. 9., [news.joins.com/article/18630647](http://news.joins.com/article/18630647), 2018. 6. 13.

범공연을 관람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마지막 날인 4월11일 점심시간에 갑자기 당시 문예위 창작지원부의 장OO 부장이 나타났다. 그는 문제가 되는 작품들이 있으니 이들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사위원 중 김 아무개 연출가(2016년 작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중략) 4월11일에 끝난 심사 결과는 두 달을 넘겨 6월이 되었는데도 발표되지 않았다. 급기야 문예위는 6월 18일에 심사위원 전원을 재소집해 심사 결과를 반복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장OO 부장과 함께 당시 문예위의 이OO 예술진흥본부장이 나왔다. JTBC가 보도한 대로 그들은, “세 개 작품이 문제인데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만 빼주면 나머지는 봐주겠다”라고 했다. 그들은 박근형이 2013년에 국립극단에서 연출했던 〈개구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박근형을 배제하지 않으면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나머지 7개 작품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체부로부터, 아니 더 윗선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종의 리스트가 존재함을 암시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였던 것이다.<sup>4)</sup>

박근형 연출은 같은 해인 2015년 11월 6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금요공감에서 〈소월산천〉이라는 제목으로 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 기타리스트 정재일과 협업하는 공연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개막을 2주 앞두고 국립국악원이 박근형의 연극을 빼고 앙상블 시나위와 정재일의 연주만으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이를 협업음악가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공연은 무산됐다. 국립국악원의 검열 의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영두 무용가는 국립국악원의 다른 공연 출연 요청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검열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영두는 “나는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형이 검열을 당했을 때 나도 함께 검열을 당한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치밀한 검열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이는 곧 예술가가 스스로의 상상력과 표현을 억압하고 통제하게 만들 것”<sup>5)</sup>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연극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강한 검열반대 움직임이 있어왔다. 연극계의 검열대항운동은 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가 2014년 11월 14일에 서울연극제가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정기 대관 심사에서 탈락했음을 발표하면서 조직화됐다. 서울연극제의 대관 탈락 사태 이후 ‘서울연극제지키기 시민운동본부’와 ‘대학로X포럼’이 결성됐다. 이에 문화예술위원회는 심사 탈락 이유를 ‘공연 작품 미정’으로 설명하며 심사와 결정 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연극계의

4) 김미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은 문예위다」, 〈시사인〉 제489호, 2017. 2. 2., [www.sisain.co.kr/28293](http://www.sisain.co.kr/28293), 2018. 6. 13.

5) 정영두, 「사회 속 예술가의 실천」, 〈건축신문〉 제16호, 2016. 1. 26. 14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대관을 허가한 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연극제 개막식 하루 전날인 2015년 4월 3일, '모터의 파손으로 구동부의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4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폐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국 대관은 불발됐다. 이에 서울연극제를 주관하는 서울연극협회는 한국공연예술센터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2017년 3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서울연극협회와 당시 협회장이었던 연극연출가 박장렬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조직적인 배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극계의 검열대항운동은 검열백서포럼 출범, 연극인연대 비상대책위원회<sup>6)</sup> 발족으로 이어졌다.

영화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2014년 9월 25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공식반대 입장을 표하며 상영 취소 압력을 가시화했다.<sup>7)</sup> 부산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상영을 강행하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부산시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과 영화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용관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sup>8)</sup> 뿐만 아니라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을 내사하고, <다이빙벨>이 재개봉된 2015년에는 국정원과 검·경찰이 이 회사 직원들의 통신 자료를 들춰보는 식의 방법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정보기관들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sup>9)</sup>

미술계에서는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로 풍자했다는 이유로 2014년 광주비엔날레특별전에서 전시를 거부<sup>10)</sup>당했고, 문학계의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축소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3월 27일,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늘리

6) 97개 극단과 265명의 연극인이 공동발의했다.

7) 「[단독]서병수 부산시장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표명」, <경향신문>, 2014. 9. 25.,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409250600015, 2018. 6. 13.

8)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초 해촉되었다가 2018년 1월 31일에 (사)부산국제영화제의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됐다.

9) 「국정원·검·경, 영화 '다이빙벨' 배급사 직원 사찰 정황」, <JTBC>, 2017. 1. 18.,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03572&pDate=20170118, 2018. 6. 13.

10)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2017년 3월 28일, 세월호 3주기를 맞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3년 만에 관람객을 맞이했다.

기 위해 이미 심사까지 끝난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사)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와 국제펜한국본부(이사장 이상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정종명) 등 세 문학 단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무원칙한 사업 폐지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급작스런 사업 폐지가 정부 부처의 외압과 개입 때문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sup>11)</sup>

현상은 파편적이었고, 의혹은 불명확했다. 3년이란 시간동안 문화예술인들은 현상과 의혹만 있고 실체는 없는 ‘블랙리스트’라는 유령과 개별적으로 싸워왔다. 블랙리스트는 특정한 매체나 장르의 문제가 아닌 문화예술계 전반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은 2016년 촛불정국에 이르러서였다. 공동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 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결성

2016년 11월 21일 문화예술인들과 법률전문가들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첫 번째 모임<sup>12)</sup>을 가졌다. 준비회의의 성격을 띤 첫 모임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법률가와 문화예술 주체들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준비회의와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모임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이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으로 정했다. 정민영 변호사가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한국일보에서 공개한 블랙리스트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이어

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 발표(2018. 5. 8.)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해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 폐지,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비상임 이사 검열 등을 행했다고 밝혀지자, 2018년 5월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특정성향 단체와 개인 지원 배제를 위해 심사결과 지체와 해당 사업 폐지, 대체사업으로 집행·실행한 중차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뒤늦은 공식사과를 했다.

12) 조영선·김중휘(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민영(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원재(문화연대),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전 집행위원장),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가 첫 모임에 참석했고 이후 강신하·김준현·전민경·이상희·하주희·서중희·송상교·이윤주(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경신·김선휴·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소리(법무법인 이공), 이동연·최준영·이두찬(문화연대), 송경동(시인),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현 집행위원장),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안영진(P.G.K 대표), 김혜준(무한상상플러스),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대표) 등이 모임에 합류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결성 직후 모임에서 빠졌는데, 특검 종료 이후 정민영 변호사가 특검팀에 합류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확인된 사실은 도종환 의원실에서 밝힌 권영빈 위원장의 회의 발언과 한국일보 기사에 보도된 사진, 두 가지였다. 일단 공개된 사실만이라도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도종환 의원실에 2013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다. 박근형의 창작산실 지원 배제에 관련해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심사과정에서 외압과 배제 리스트가 있었음을 증언했고,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에 이후 소송이 진행될 시 증언할 의사를 밝혔다. 이윤택 연출 건과 관련해 해서도 도종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있어 추가 요청을 결정했다. 서울연극협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서울연극제에 대한 대관지원 탈락 문제에 대한 소송이 있었으나 기각되어 해당 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홍성담 화백과도 연락을 취했다.

형사적으로 보면 특정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나 당시에 공개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약하고 자료가 불충분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혹만 무성할 뿐 확실한 증거가 턱없이 부족해 안개 속에 갇히는 듯 했다.

#### 다. 서재 속 증거: 김영한 업무일지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활동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세간에 고(故)김영한의 업무일지(이하 ‘김영한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부터였다. 김영한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8년 검사로 임관하여 2012년 7월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를 퇴임한 다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후 2016년 8월 21일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꼼꼼하게 메모하여 업무일지로 남겼다. 이 업무일지는 고인의 주거지 서재에 꽂혀 있다가 고인 사망 후 유가족들이 발견해 세상에 알렸는데, 다음<sup>13)</sup>과 같은 주요 기재사항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운동에 중요한 증거와 토대가 되었다.

13) 장지연, 「문화예술계 사례 발표」,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료집』, 2017. 12. 27., 51~61쪽.

### 1)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김기춘이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2014. 8. 3.) 지시한 시점에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추천으로 김종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2014. 10. 문체부 내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 사표 (3명 수리), 2014. 11. 김상률<sup>14)</sup> 교육문화수석 임명, 2015. 04.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임명, 2015. 10. 미르재단 설립, 2016. 01. K스포츠재단이 설립 됐다.

### 2)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은 5.18 시민군들이 침몰한 세월호 바다에서 승객을 탈출시키는 모습과 박근혜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이었다. 2014. 08. 0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메모와 같은 날, 광주시(시장 윤장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중 홍성담 화백 작품 <세월오월> 전시가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014. 08. 08.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날, 광주비엔날레는 <세월오월> 전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홍성담에 대한 계속적 사찰을 진행했다.

### 3) 이하 작가의 전단 살포 건

2014. 10. 20.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가 서울 동화면세점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미친정부’ 지명수배 전단 4, 500장을 뿌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sup>15)</sup>되었고 2014. 11. 03. ‘대통령모욕전단살포행위 ① 건조물 침입 ② 경범죄법 → 경범죄법 법정형 상향 개정’ 지시가 있었다.

### 4)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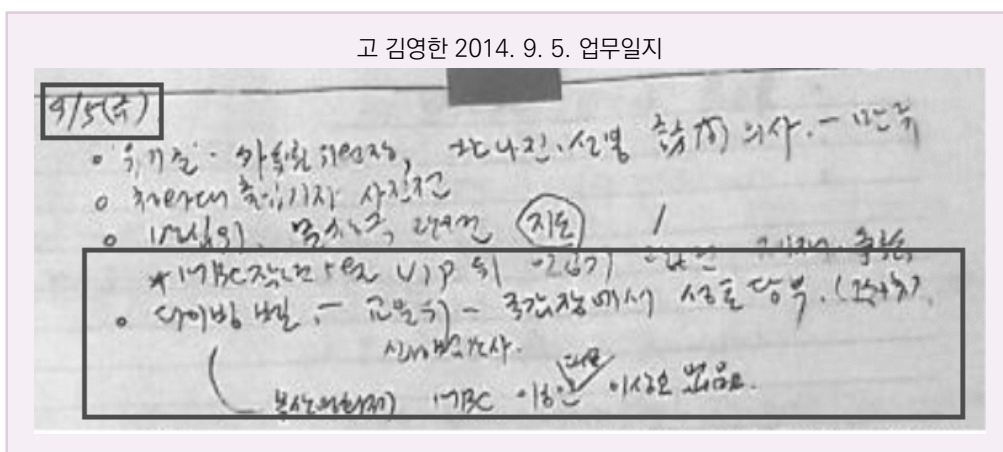
<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 난맥상을 다룬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4. 09. 05.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2014. 09. 20. ‘다이

14) 차은택 외삼촌.

15) 첫 체포 혐의는 광고물법 위반.

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查(수사)라고 지시해 부산시는 11월~12월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래가 없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를 수행했다. 이후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한편 급기야 2015. 12. 11. 검찰에 고발, 2014. 10. 23. 「시네마달」, 內査(내사)를 지시해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은 실제로 상영관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 [표 1] 김영한 업무일지 중 <다이빙벨> 언급 부분



### 5)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2015. 10. 2.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 사태로는 ① 박근형 연출에 작품포기 종용: 심사위원 5인에게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심사를 반복할 것을 요구 → 심사위원 거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박근형 연출가를 직접 찾아서 포기각서 작성 요구 및 서명 강요, ② 양상블 시나위 공연 취소: 2015. 11. 6.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소월산천> 공연 예정 → 국립국악원의 한 연구관이 양상블 시나위에게 박근형 연출가와 의 협업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 → 양상블 시나위 측에서 거부 → 공연 취소, ③ 이윤택 작가에 대한 기금선정 결과 무력화: 2015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사에서 100점으로 1위를 한 이윤택에 대한 심의결과 반복 요구 → 심의위원 거부 → 2015년 7월 경 이사회를 열

어 지원대상을 102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선정 결과를 무력화, ④ 소설가 한강 등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지원 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2016년 세종도서 지원 심사 때 ‘5·18, 북한 등 다룬 책 다수 탈락’하도록 사상검증 → 소설가 한강은 2016년 12월 한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라고 밝힘, ⑤ 모태펀드 장악: 2014. 12. 28. “영화 〈국제시장〉 제작과정 투자자 구득난-문제가 有(있음),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지시 → 한국벤처투자에 조강래 사장 부임(2014. 10.) → 신상한 상근전문위원 영입(2015. 1.) → “신상한이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온 → 2015년부터 모태펀드 심사에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도입됐고 영화 〈변호인〉을 만든 최재원 대표가 제작한 〈밀정〉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액 없으며, 영화 〈암살〉에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이수창업투자가 엔딩 크레딧 자진 철회한 일도 있었다.

## [표 2] 김영한 업무일지 중 문화예술계 언급 정리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김종덕 문체부장관 비호	8. 3.	“김종덕 교수, 방어에 최선을 다하도록”	2014. 08.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임명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추천) 차은택,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4. 10. 문체부 내 ‘유진룡 라인’ 1급 공무원 6명 사표 (3명 수리) 2014. 11.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임명 (차은택 외삼촌) 2015. 04.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임명 2015. 10. 미르재단 설립 2016. 01. K스포츠재단 설립
홍성담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8. 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 같은 날, 광주시(시장 윤장현)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중 홍성담 화백 작품 〈세월오월〉전시가 불가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 〈세월오월〉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침몰한 세월호 바다에서 승객을 탈출시키는 모습과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  [관련보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관련 광주시의 입장”, 광주시 보도자료. 2014. 8. 6.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8. 7.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 (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2014. 08. 08.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홍씨의 작품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홍성담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  [관련보도] ‘박근혜 풍자그림’ 홍성담 작가 명예훼손 고발 당해, 연합뉴스, 2014. 8. 8.
	8. 8.	“•광주비엔날레 - 개막식 엔 걸지 않기로 - 광주市長” “•김종덕-계속적 issue 에만 대응, 단발성에는 別無’	-광주비엔날레는 <세월오월> 전시를 유보하기로 결정  [관련보도] 광주비엔날레, 박 대통령 풍자 그림 전시 유보, 연합뉴스, 2014. 8. 8.
	8. 26.	“○신문 홍성담 걸개 그림 관련 기사(반 국가교육적 결국민연합)”	
	9. 1.	“○홍성담, NYT인터뷰-최상언-경향”	2014. 08. 30. 뉴욕타임즈가 홍성담 화백의 삶을 상세히 보도
	9. 13.	“○홍성담, 대만 민중미술전시회 개최”	
	9. 21.	“長) ○홍성담”	
	11. 19.	“○홍성담, 다이빙벨”	2014. 11. 17. 홍성담 작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선정 ‘올해의 사상가들(예술가 부문)’에 선정
	11. 1.	“○대통령 모욕 전단 살포 件(경찰) - 이병하 - 건조물 침입 의율 상태 - 輕犯罪法으로 卽決 처리 검토”	2014. 10. 20.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 서울 동화면세점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려진 ‘미친정부’ 지명수배 전단을 4, 500장을 뿌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첫 체포 혐의는 광고물법 위반)
이하 작가의 전단살포 건			- 이하 작가의 혐의를 상향 개정하라고 지시
	11. 3.	“대통령모욕전단살포행위 ①건조물 침입 ②경범죄법 → 경범죄법 법정형 상향 개정”	※ 이후 2015년 3월에는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희화한 전단지 살포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  [관련보도]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경찰 지침 하달 ‘논란’, 헤럴드경제, 2015. 03. 13.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9. 3.	“✓다이빙벨, 손석희 被訴事件(업무방해) - 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다이빙벨&gt;은 세월호 구조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이상호)</li> <li>- 2014. 05. 07.경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위 손석희와 이종인 대표 및 다이빙벨을 취재하던 이상호 기자를 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요지: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인해 정부의 세월호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겼다.)</li> <li>-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이란 보수단체의 위 고발사건을,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은 이종인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됨</li> </ul>
<p>&lt;다이빙벨&gt;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 화제 감사</p>	9. 5.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出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 10. 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선,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고가 지원되는 영화제에 국격에 안 맞는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다이빙벨 같은 영화는 제재해야 한다”고 비난</li> <li>- 서용교 의원도 “정치 편향적인 영화가 상영돼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주장</li> <li>- 업무일지를 통해 당시 국회 교문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에게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했음이 드러남</li> </ul> <p>[관련보도] [2014국감]새누리 의원 “다이빙벨은 정치 편향적인 영화”, 아시아경제, 2014. 10. 07.</p>
	9. 6.	“○다이빙 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여타죄책)?”	
	9. 10.	“○부산영화제 60억 예산지원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손석희, 송옥숙, 이종인 부부, 이 상호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 09. 20.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용관에게 “다이빙벨을 상영할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함</li> <li>-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만약 예정대로 상영한다면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다 하겠다’고 밝힘</li> </ul> <p>[관련보도] 서병수 부산시장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표명, 경향신문, 2014. 9. 25.</p>
	9. 20.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는 2014. 11월~12월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래가 없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 까지 나서서 감사를 수행</li> <li>- 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한편</li> </ul>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p>급기야 2015. 12. 11. 검찰에 고발</p> <p>- 업무수첩 2014. 09. 20.자에 적혀있는 “수사”가 실제로 실현</p> <p>[관련보도] 부산시-영화제 갈등 2라운드...이용관 위원장 검찰고발(종합), 연합뉴스, 2015. 12. 15.</p>
	10. 22.	“√○다이빙벨 上映 - 貸館料(대관료) 등 資金源(자금원) 추적, 실제폭로”	
	10. 23.	“√○「시네마달」, 內査 - 다이빙벨 관련”	- ‘시네마달’은 ‘다이빙벨’의 배급사로 실제 상영관 확보에 난항을 겪음
			-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는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작품 검열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p>〈주요 사태〉</p> <p>○ 박근혜 연출에 작품포기 종용</p> <p>-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2015. 6. 18.경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이미 4월 경 심사가 완료되어 선정된 박근혜 연출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심사결과를 반복할 것을 심의위원 5인에게 종용</p> <p>- 이는 2013년 박근혜 연출이 국립극단 제작공연 〈개구리〉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p> <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들은 심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직권을 남용하여 2015. 6. 22. 박근혜 연출가를 직접 찾아가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하고 서명을 받음</p> <p>[관련보도] “지원자에 작품포기 종용..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 JTBC. 2015. 9. 9.</p>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10. 2.	“長)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다이빙벨, 파주, 김현”	<p>○ 양상블 시나위 공연 취소</p> <p>- 국악그룹 ‘양상블 시나위’는 2015. 11. 6.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lt;소월산천&gt; 공연이 예정 되어있었음</p> <p>- 공연 시작 2주 전인 2015. 10월 경 국립국악원의 한 연구관은 양상블 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에게 박근혜 연출가와의 협업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p>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p>- 이에 신현식 대표는 국립국악원 측의 요청을 예술 검열이라며 공연을 포기하였고, 결국 공연이 취소 [관련보도] “블랙리스트 논란 국악원 녹취 입수..제 입장도”, KBS. 2016. 11. 15.</p> <p>○ 이운택 작가에 대한 기금선정 결과 무력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장르별 우수 작품 100편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에서 이운택은 희곡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순위에 있음 - 이운택은 문제인 지지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극계의 대가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이운택을 포함해 10여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보여 주며 이운택에 대한 결과 번복을 요구하며 협박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7월 경 이사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102명에서 70명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선정 결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운택의 작품을 배제 [관련보도] [단독] “100점 맞고 1등해도..정부 입맛에 안 맞으면 ‘탈락’”, 한겨레, 2015. 9. 11.</p> <p>○ 소설가 한강 등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지원 탈락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2016년 세종도서 지원 심사 때 “5·18, 북한 등 다룬 책 다수 탈락”하도록 사상검증을 했다는 증언이 나옴 [관련보도] “블랙리스트 만든 정부, 한강 소설도 ‘사상검증’ 정황”, 한겨레, 2016. 11. 15. - 당시 탈락된 소설 중에는 5.18을 다룬 &lt;소년이 온다&gt;도 포함됨 - 위 소설의 작가 한강은 2016년 12월 한 강좌에서 “&lt;소년이 온다&gt;를 낸 순간부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뼈아픕니다.”라고 밝힘 [관련보도] 소설가 한강 “‘소년이 온다’ 출판 후 블랙리스트 올라”, 연합뉴스, 2016. 12. 13.</p>
12. 26.		“○영화 「국제시장」 - 保守, 애국”	<p>-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며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서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라며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p>



구분	메모일 (2014년)	내용	배경, 이후 진행 및 평가 (2016. 12. 23. 기준)
			<p>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영화 &lt;국제시장&gt; 중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울리자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한 것임</li> </ul> <p>[관련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영화 ‘국제시장’”, 인사이드, 2014. 12. 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정부가 모태펀드 투자심사를 장악하려 함</li> <li>- 한국벤처투자에 조강래 사장 부임(2014. 10.) 이후 2015년 1월 신모 상근전문위원이 영입되면서 모태펀드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정부 의중을 담은 ‘코멘트’를 전달하는 등 운용에 간섭했다는 주장이 나옴</li> <li>- 한 벤처캐피탈 고위 관계자는 “신 전문위원이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과거 사회비판적 영화를 찍었거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었다”고 밝힘</li> </ul>
	12. 28.	<p>“長) ○영화 「국제시장」 제작 과정 투자자 구득난 - 문제가 有,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p>	<p>[관련보도] “사회비판적 영화 투자 말라” 갑질 한 한국 벤처투자“, 머니투데이, 2016. 12.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모태펀드 심사에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도입됨</li> <li>- 2015년~2016년 모태펀드 영화계정 외부전문가 중에는 사회학과 교수, 관광대학원 교수, 미국변호사, 행정학 박사,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출판사 대표 등 영화 혹은 투자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다수 포함 되어 있어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제도가 실질적인 검열과 모태펀드 장악 기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의심을 받고 있음</li> </ul>
	(2015년) 1. 2	<p>“○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lt;변호인&gt;을 만든 최재원 위더스필름 대표가 제작에 나선 &lt;밀정&gt;의 경우 모태펀드 투자를 한 펀도 받지 못함</li> <li>- 영화 &lt;암살&gt;에 투자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이수창업투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투자회사 명단을 보여주는 엔딩 크레딧에서 자진해서 빠짐</li> <li>- 영화 &lt;판도라&gt;, &lt;보통사람&gt;, &lt;일급기밀&gt;, &lt;택시운전사&gt; 등도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거부당하고 제작 위기를 겪음</li> </ul> <p>[관련보도] “외압에 숨죽였던 영화들, 이제는 만날 수 있다”, 한겨레, 2016. 12. 14.</p>

비단 블랙리스트 작성만이 아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최측근 차은택이 문화계를 부정과 비리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데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측근들은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문화의 이름으로 더러운 부를 축적하게 하고, 사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공적 자원에서 철저히 배제한 졸렬한 공작정치의 주범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예술행동’과 ‘법률대응’이라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 2.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주요 활동

### 가. 형사고발

#### 1) 추진과정: 누구를 고발할 것인가

김영한 업무일지가 공개된 직후 김남근 변호사의 제안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김기춘 특검고발 1호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2016년 12월 8일 소송 준비를 위한 모임을 민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12월 1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 선릉역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일에 맞춰 선릉역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결의하고 고발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영선 변호사의 총괄로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이 고발장 작성을 지원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주심을 맡았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홍성담 건, <다이빙벨> 건과 함께 좌파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지시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로 박근혜 건, 양상블시나위 건, 이윤택 건을 고발장에 넣기로 확정했다. 피해자는 김영한 업무일지를 중심으로 특정하여 구성할 수 있었으나, 피고발인 즉 ‘누구를 고발할 것인가’는 마지막까지 숙제로 남았다.

연극계에서는 박명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권영빈 전 위원장이 피고로 고발장에 적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학, 미술, 연극 지원금을 모두 집행하고 박근혜, 이윤택 사건이 전·현직 위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모철민 프랑스대사(당시 교문수석)와 김소영 숙대 교수(당시 교문수석실 비서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다. 당시 교문수석실에서 차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는데, 교문수석실에서는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 했다는 것이다. 정무수석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김기춘이고 이를 연결해주는 핵심인사가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이라는 정보였다. 도종환 의원실에서도 ‘김기춘-모철민-김소영’이 실제 명단 작성에 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의견과 정보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다. 모철민과 김소영을 고발장에 넣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검 고발 하루 전인 2016년 12월 11일, 모철민과 김소영이 블랙리스트 전달의 핵심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다.<sup>16)</sup>

그 사이 A와 김OO을 피고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거친 후 A 한 사람만 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앙상블시나위 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구성해 피고발인에 들어갔다. 그 외 다양한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지만, 이후에 추가 공무원 사실관계 등이 파악되면 추가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하고 고발장 작성을 완료, 단체 고발<sup>17)</sup>을 진행했다. 피고발인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조운선(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광용(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현 부산광역시장), 모철민(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전 정부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박명진(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A(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sup>18)</sup>, 성명불상(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국립국악원 공무원)이었다.

## 2) 주요내용: 직권남용·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및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16) 「단독」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달 핵심은 모철민·김소영”, <뉴스1>, 2016. 12. 11., [news1.kr/articles/?2854761](http://news1.kr/articles/?2854761), 2018. 6. 6.

17) 고발인은 문화연대(대표자 최준영), 예술인소셜유니온(대표자 나도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고승하), 서울연극협회(대표자 송형종),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자 고영재),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자 봉준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대표자 안병호),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자 안영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자 이은),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대표자 채윤희),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대표자 김형구), 스크린쿼터문화연대(대표자 양기환)이었으며, 고발인들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청맥(담당변호사 박수빈, 최강욱),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법률사무소 MAST(변호사 김종휘)였다.

18) 전·현직 표시는 2016. 12. 12. 고발일 기준.

### 가) 피고발인 김기춘·조윤선·송광용의 홍성담 작가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① 김기춘 주재로 열리고 조윤선, 송광용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4. 08. 06.자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 ② 같은 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세월오월> 작품 전시가 갑자기 불가능하다며 변경된 입장을 표명한 사실, ③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의 임직원은 홍성담 작가에게 <세월오월> 부분 중 대통령 풍자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압박을 행한 사실, ④ 홍성담 작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사실, ⑤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김기춘이 우병우 팀을 통해 관변단체가 홍성담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지시하는 기재가 있는데, 실제로 고발이 행해진 시기(2014. 08. 08)와 고발주체는 물론 고발범죄내용까지도 위 업무일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실, ⑥ 작품수정도 불구하고 <세월오월>은 끝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전시되지 못한 사실, ⑦ 개막식에 전시되지 못했다는 마무리 내용까지 2014. 08. 08.자 김영한 업무일지에 고스란히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발인 김기춘, 조윤선, 송광용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 임직원들을 통하여, 혹은 우회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홍성담 작가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홍성담 작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고위공무원이라는 위력행사를 통해 위 홍성담 작가의 예술창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 나) 피고발인 김기춘·조윤선·송광용·서병수의 <다이빙벨> 상영 관련 압박

① 김기춘과 고 김영한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 출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윤선, 송광용 등은 2014. 09. 초순경부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영화인 <다이빙벨>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영 시 여타 죄책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한 사실, ②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 등을 여당 의원이 집중 성토하도록 미리 준비하였는데, 이후 국정의 공론장인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실현된 사실, ③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하여도 압력 행사 및 불응 시 수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부산시장인 서병수, 감사원 등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유례 없던 지도 점검, 감사가 행해진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이용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행해지거나 고발이

행해진 사실, ④ 이후 <다이빙벨>을 배급한 배급사에까지 내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종합하면, 김기춘을 비롯한 고 김영한, 조윤선, 송광용은 2014. 09. 초순경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 무능함을 보였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상영되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없도록 그 상영을 최소화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미리 준비했던 대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영화제의 문제점을 성토히게 하였고, 서명수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합법을 가장한 보복 조치로서 부산시와 감사원을 통해 위 이용관을 끝내 사퇴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다이빙벨> 배급사인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까지 지시함으로써 그 상영을 최소화하는 노력까지 기울인 바, 이로써 위 피고발인들은 국고지원 관련 결정 등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갖는 위세를 바탕으로 위 이용관의 의사를 제압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집행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용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이빙벨>의 감독 이상호 기자의 표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했다.

#### 다) 피고발인 김기춘·조윤선·정관주·모철민·김소영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은 조윤선이 동석한 2014. 10. 2.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뒤, 2015. 1. 2. 회의에서는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경제)”고 논의하는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하여 정치성향 등을 파악,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등을 빌미로 압박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실제로 위 지시는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산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이유 없이 배제토록 하였다. ① 김기춘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석비서관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문화예술계의 검열을 주도할 목적으로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무수석인 조윤선에게 위법·부당한 문화계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② 조윤선은 이를 국민소통비서관인 정관주와 위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문화수석실로 하달하고, ③ 모철민과 김소영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함으로써, 위 피고발인들은 각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각 그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명단

을 통해 명단에 적힌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차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라) 피고발인 박명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의 강요 및 업무방해의 점

①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대하여: 박명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2015. 6. 18. 경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2년 전 국립극단이 제작하고 박근형이 연출한 연극 <개구리>에서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4월에 선정된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대한 심사결과를 바꿀 것을 당시 심사위원 5인에게 종용하여 심사위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6. 22.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박근형에게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창작산실의 공연을 포기하게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와 박근형의 연출가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문학창작기금 선정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장르별 우수 작품 100편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에서 특정 작가 배제 및 결과 조정을 요구하였다. 그 특정 작가는 이운택으로서, 이운택은 위 지원자들 중 희곡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1순위였음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이 이운택을 거론하며 심의위원의 결정을 조정하라고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 7. 경 이사회를 열어 애초 선정되었던 102명 가운데 32명을 제외한 70명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 선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선정 결과를 무력화시켜 이운택의 작품을 배제시켰다. 박명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명불상 직원들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심의업무와 이운택의 작가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 마) 피고발인 A과 성명불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의 점

주목받는 젊은 국악그룹 '양상블 시나위'는 2015. 11. 6.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금요공감 <소월산천> 공연이 예정 되어있었으나, 공연 시작 2주 전인 2015. 10.경 국립국악원의 한 연구관은 양상블 시나위의 공연에 포함된 위 박근형과의 협업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양상블 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은 국립국악원 측의 요청을 예술 검열이라며 공연을 포기하였고, 결국 공연이 취소되었다. A는 당시 국립국악원의 기획운영

단장으로서 기획운영단장은 기획운영단 소속 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였다. A는 국립국악원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신현식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써, 앙상블 시나위 구성원들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종래 청와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 111조를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마치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111조 2항은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무관한, 권력의 사안들에 대한 부당한 권력행사, 탄압에 대한 사건으로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수 있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특검에 청와대의 태도 여하에 굴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진실을 낱알이 밝히기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사안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핵심 관계자들이 실제적 진실 발견과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중략) 또한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이뤄진다면, 이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재적 통치의 그릇된 관행을 씻어내고 민주공화국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인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와 노력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발인 측에서도 협조할 것인 것, 부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sup>19)</sup>

성탄절 연휴가 지난 2016년 12월 26일, 특검은 문화예술인들의 수사진행 요청에 응답했다.

19) 「특검 고발장」, 2016. 12. 12., 34-35쪽.

### 3) 파급효과

2016년 12월 26일 낮 뉴스부터 특검의 블랙리스트 조사가 헤드라인<sup>20)21)22)</sup>으로 뜨기 시작했다. 특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기춘, 조윤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sup>23)</sup>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2016년 12월 2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정 유린’, ‘탄핵의 실질적 사유’ 등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조윤선의 증거인멸 중단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조윤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퇴 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고지하고 고지한 날짜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1일 대규모 ‘블랙리스트 버스’ 및 문화체육관광부 앞 1박2일 예술행동을 전개하여 강제 사퇴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SBS에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입수하고 ‘맨부커상 소설가’ 한강 작가 역시 블랙리스트였음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조윤선이 장관에 취임한 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인물<sup>24)</sup>과 사건들이 물려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았다.<sup>25)</sup> 리스트는 하나가 아니었고, 연루된 인물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sup>26)</sup>이 드러난 데 이어 국

20) 「[1보]특검, 나주 혁신도시 한국문화예술위 압수수색」, 〈중앙일보〉, 2016. 12. 26., [news.joins.com/article/21045557](http://news.joins.com/article/21045557), 2018. 6. 3.

21) 「[단독]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업 컴퓨터 ‘하드 교체’ 의혹」, 〈한겨레〉, 2016. 12. 26.,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137.html#csidx0542ace5fcf10fe9e25e86239b9ef1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137.html#csidx0542ace5fcf10fe9e25e86239b9ef1e), 2018. 6. 3.

22) 「김기춘 자택·조윤선 장관 집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2보)」, 〈연합뉴스〉, 2016. 12. 2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6/0200000000AKR20161226020053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6/0200000000AKR20161226020053004.HTML), 2018. 6. 3.

23) 「[특검 브리핑IN] 김기춘 특검 칼 피할 수 있을까?」, 〈시사인〉, 2016. 12. 26., [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83](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83), 2018. 6. 3.

24) 「[단독] ‘맨부커상’ 한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한겨레〉, 2016.12.28.,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44.html#csidxf70d55168b41061ad41b4fcf119b552](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444.html#csidxf70d55168b41061ad41b4fcf119b552), 2018. 6. 3.

25) 「[단독] 치밀한 ‘관리 지침’…명단 1만 명 넘는다」, 〈SBS〉, 2016.12.28., [www.youtube.com/watch?v=Gaf-EQ7JH-Y](http://www.youtube.com/watch?v=Gaf-EQ7JH-Y), 2018. 6. 3.

26) 「[단독] “조윤선 장관 취임 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 내려와”」, 〈한겨레〉, 2017.01.02., [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76952.html#csidx6125cc9ade852eea04ec104c1ee76b8](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76952.html#csidx6125cc9ade852eea04ec104c1ee76b8), 2018. 6. 3.



정원이 블랙리스트 예산 삭감에 직접 개입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에게 직접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검은 김종덕, 김상률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이 첫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활동을 억누르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결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가 침해되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도 헌법 위배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sup>27)</sup>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판결이 탄핵결정문에 들어가길 원했다. 탄핵 소추안의 다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부패와 능력 부족의 문제이지만 블랙리스트는 ‘사회 원리를 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견해차에 따른 차별, 즉 정치적 차별을 통해 국가 보조금의 수혜자를 권력이 정당한 심사과정을 무시한 채 입맛에 따라 배제하거나 선정했다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치적 차별과 배제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후 조운선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모두 시킨 거라 자백하면서 ‘블랙리스트 몸통’인 김기춘·조운선이 모두 구속됐다. 2017년 1월 21일 오후 12시 30분에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조운선의 구속을 환영한다! 이제는 박근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고, 성명서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조운선은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사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송수근 1차관을 내세워 사죄문을 발표했다.<sup>28)</sup> 송수근 문제부 1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 의혹을 받고 있던 장본인으로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비판자에 대한 차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의 공무원 중립성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공무원도 국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7) 「블랙리스트 지시, 뇌물보다 치명타…탄핵심판 변수되나」, <JTBC>, 2017.01.21.,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0565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05651), 2018. 6. 3.

28) 「‘블랙리스트 총괄’ 의혹 당사자가 발표한 사과문 논란」, <한겨레>, 2017. 01. 23.,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90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904.html), 2018. 6. 3.

## 나. 민사소송

### 1) 추진과정: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특검 고발로 인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법률대응모임 준비모임에서 최초로 검토했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특검과 언론이 밝혀낸 사실들을 기반으로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그 사이에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공모 및 김기춘, 조운선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되었고, 2017년 1월 30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첫 기소였다.<sup>29)</sup> 민사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진행하고, 추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리단을 모집한 결과 10여명의 변호사가 민사소송 대리단에 자원해 강신하 변호사를 단장으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단<sup>30)</sup>이 최종 구성됐다. 문제는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였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유형화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예술행동위원회를 통해 각 문화예술단체에 회람을 요청했다.

### [표 3] 블랙리스트 1차 민사소송 모집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9)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블랙리스트 관련 첫 기소(종합)」, <뉴스1>, 2017. 01. 30., news1.kr/articles/?2898446, 2018. 6. 3.

30)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강신하, 최홍은, 장주영, 천낙봉, 이정택, 장경욱, 이미숙),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전민경,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우리로(담당변호사 김준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아인(담당변호사 차상익), 법무법인 항법(담당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김종휘, 변호사 임선아였으나, 조영선·김준현·전민경 변호사가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민사 소송대리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표3과 같이 공지가 되자 다수의 비평가 및 학자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신들이 심사위원 등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와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 관련 비평가, 학자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행동위원회와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총 3개의 채널을 중심으로 원고 모집 보름만인 2017년 1월 31일까지 46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실질적으로 원고 모집을 마감한 2월 3일까지 각계의 문화예술인 474명이 원고로 참여하였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과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포함되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100만 원으로 상징적인 금액을 청구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하기로 했다.

## 2) 주요내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미 법원은 중앙정보부, 노동청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배포 및 관리하고 취업방해 등을 한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행위가 노동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전례<sup>31)</sup>가 있었다.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에서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가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sup>32)</sup>한 바 있었다.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

31)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2202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1996.08.020. 선고 95나44148 판결, 상고기각 확정.

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컸으며 지원배제로 인해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 재산상 손해는 추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법적 근거에 의해 손배소를 제기하였다.

#### 가) 『헌법』 제 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 및 관리행위는 정보 주체인 원고들 모르게 원고들의 정치 성향 및 대외 활동 등을 조사한 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sup>33)</sup>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sup>34)</sup>하므로 원고들이 한 세월호 관련 서명 또는 문재인 지지 서명 등 각 행위가 행위 당시 언론 등에 공개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원고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관리한 이상 그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양심의 자유 침해

피고들이 원고들의 세월호 관련 성명 발표나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 등 특정한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 배제하기 위하여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포함<sup>35)</sup>하는 개념으로 사상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양심 형성 및

33) 헌법재판소 2005.7.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34) 위 결정 등.

35)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35결정.

결정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적·철학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이고, 이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불안, 억압, 공포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만 제한<sup>36)</sup>할 수 있다. 원고들은 미술, 영화, 문학 등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로서 각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을 이용해 전시, 공연, 보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다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이 신청한 정부 지원의 각종 창작지원금,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하고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지원금 수급을 막아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 전시, 공연, 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sup>37)</sup>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 3) 피고 대한민국의 변론

2017년 2월 10일에 특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범죄일람표를 언론에 공개<sup>38)</sup>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구성원들은 추가적인 원고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차 원고 모집 이후에도 소송 의사를 밝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는 상황인데다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에 포함된 피해자 명단 중 상당수가 1차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터였다.

3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37) 헌법 제21조.

38) 매일경제, 2017. 2. 10. [단독] 특검 “朴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주도”, <http://news.mk.co.kr/newsRead.php?no=94582&year=2017> (최종접속일: 2018. 6. 6.)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은 그 자체가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점이 있었다. 2차 원고 모집은 대상이 특검의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로 한정하여 문화예술 협·단체를 통해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시에 1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 간 대리인단이 개별면담 후 진술서를 작성했다.

2017년 3월 28일에는 광화문에서 모임<sup>39)</sup>을 갖고 2차 소송에 대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아르코, 영진위, 콘진원 각 내부관계자 및 담당자와 개별 연락하여 각 분야별 2013년~2016년까지의 기금지원사업과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2017년 5월 22일, 23명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원고로 하는 2차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차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추궁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하기로 했다.

민사소송 첫 공판이 7월 3일 16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366호로 확정됐다. 첫 공판을 앞둔 6월 16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김미도·김소연 평론가와 이양구 극작가를 초청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화예술인들이 기금지원사업과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소송대리단 변호사들이 법적 쟁점을 브리핑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전략을 세워나갔다.

공판 일주일 전인 2017년 6월 27일 피고 대한민국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준비서면의 변론에서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원고들의 이름이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있다면 해당 명단과 이 사건 원고들이 동일인인지 여부,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나

39) 참석자는 이상희, 전민경, 이원재, 장지연, 하장호였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sup>40)</sup>이라 주장했다. 피고측 주장의 요지는 이러했다. ① 사실관계 입증 없다, ② 블랙리스트 작성행위가 개인정보침해행위로 단정키 어렵다, ③ (아직 입증이 없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불법행위와 손해사이 인과관계 입증 없다, ⑥ 손배책임 범위에 입증 없다.

2017년 7월 3일 오후 4시에 예정대로 1차 공판<sup>41)</sup>이 열렸다. 먼저 원고 쪽 진술이 있었다. 원고 쪽에서는 이 사건 소송 제기하는 것은 정권이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사들에 대해 정권에 종속적 관계를 만들고 사상을 통제하려 함에 있다, 블랙리스트 실제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사법적 책임 추궁을 통하여 정치권력이 문화예술계 지배 음모 분쇄하고 진정한 문화융성 꾀하고자 한다,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문화예술 인사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 통해 정치적 소신, 신념을 저해하는 표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술,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뒤이어 피고 측의 진술이 이어졌다.

- 피 고 1. 대한민국 - 답변서 진술, 구체적이며 객관적 자료 없다.  
 피 고 2. 박근혜 - 답변서 진술, 소장에 적시된 것은 동아일보 기사를 원용한 것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  
 피 고 3. 김기춘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진술, 구체적인 근거 및 증거 없다.  
 피 고 4. 조윤선 - 기각을 구함. 원고 주장 입증 구체화되면 대응하겠다.  
 피 고 5. 예술위 - 원고들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련한 사실 없으며, 원고들을 지원사업에 배제한 사실 없다.

40)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880 손해배상(기) 2017. 06.29 피고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제출 준비서면.

41) 참석자는 다음과 같았다.

- (1) 재판장 : 함종식 부장판사  
 (2) 원 고 :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동화 법무법인 조영선, 서중희, 전민경, 법무법인 우리로 김준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법무법인 항법 하주희, 임선아 변호사 (문화예술인 대표로 고영재, 장지연 2명이 동석했다.)  
 (3) 피고 1. 대한민국 : 정부법무공단 정성윤, 피고 2. 박근혜 : 도태우, 피고 3. 김기춘 : 임이삭, 피고 4. 조윤선 : 장종철, 피고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원중, 피고 6. 영화진흥위원회 : 장국진, 피고 7. 한국콘텐츠진흥원 : 최중영

피 고 6. 영진위 - 구체적인 입증 없으므로 기각 구한다.

피 고 7. 콘진원 -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사실 없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종류의 블랙리스트인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고 그 행위가 위법한지,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형사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을 하면 바로 형사법원에 촉탁서 발송하도록 하고 1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민사소송의 실질적인 공판은 형사소송 판결 이후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 다. 기타 활동

### 1) 헌법소원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활동 중 가장 오랜 법리검토 기간을 거쳐 실행한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헌법재판소가 선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담당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은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의미가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먼저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논리를 쌓아 승산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사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2016년 12월 안에 헌법소원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소원 제기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탄핵결정문에서 블랙리스트의 위헌 여부가 다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늘품체조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등에 예산을 지원한 것 등 최순실 관련사업에 이권이나 특혜를 줘서 평등원칙을 침해했다는 정도는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는 큰 연관이 없었다. 결국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 시기를 형사와 민사 다음으로 미뤄 충분한 법리검토와 증거확보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침해사례를 넘어서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



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청구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침해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대표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정권이 행한 전체적인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했다. 따라서 ① 특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지원배제 사실이 드러나 있는 문화예술인, ② 지원배제시점이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즉 2015. 3. 30. 이후 배제된) 문화예술인, ③ 지원배제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된 문화예술인, ④ 지속적인 지원배제 때문에 실제 공연이나 축제 등의 사업을 축소했거나 진행이 어려웠던 경우, 혹은 예술활동을 아예 접거나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활동을 해야 한 경우, ⑤ 지원배제 과정이나 전후에서 지원배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던 경우, 관련 공무원의 언질이나 압력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경험한 경우, 그런 압박 때문에 향후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을 경험하였던 경우, 이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청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sup>42)</sup>

지원배제시점은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건들도 청구기간 예외를 주장하며 청구했으나, 만약을 대비해 1년 이내에 배제된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인이 청구인으로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다. 총 8인의 청구인 구성을 완료한 후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교육문화체육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017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김선희 변호사와 김진영 변호사가 맡아 피청구인들의 다음 표4와 같은 행위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42) 이렇게 구성한 청구인이 이운택,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그린 피그, 시네마달, 정희성이었다.

#### [표 4]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적시한 위헌행위

- ① 피청구인들이 2014. 4. 경부터 직접 또는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을 통하여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청구인 이윤택, 윤한솔, 정희성의 성명, 소속이나 경력, 특정 정치인지지 선언 참여여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참여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며 별지 목록의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
- ② 피청구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비서실장에게, 피청구인 비서실장이 2013. 8. 경부터 비서관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각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 ③ 2014. 4. 경부터 '피청구인 정무수석비서관과 소동비서관이 지원 배제를 위한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및 문체부비서관실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하달하고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
- ④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소속 사무관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청구인들을 별지 목록 기재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행위

세월호와 관련된 거리극 <안산순례길>을 연출한 윤한솔과 그린피그, 세월호와 연관된 축제포스터를 제작, 배포한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세월호와 관련되어 정부의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시네마달 등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는, 예술 창작 및 표현에 있어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을 국가지원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 문화예술인들을 재정지원에서 배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철을 통해, 사전적 표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검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그러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권이 불편해하는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생시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문화계의 균형발전이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가상의 목적을 세운 것 자체가 통치자나 권력이 예술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정부지원을 통해 개입하여 편향성을 시정하려 한 것으로 문화예술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할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 2) 국정원 고발

형사고발 이후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 중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up>43)</sup> 이에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에서는 2017년 2월 6일과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 국정원을 고발했다.

2017년 2월 6일에는 문화연대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여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팀<sup>44)</sup>과 함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장 1차장·당시 국정원장 권한대행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국정원을 고발하였다.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의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법원·검찰의 내부동향 파악, 세월호 관련 공작, 언론동향 파악·사찰 및 공작 등 온갖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기재사항이 국정원 고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30여년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통해 독재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는 사라진 유물이 되었을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하여 유신독재정권에서 공작정치를 담당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찰과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검찰수사, 세무조사, 정부 지원 차단, 공연이나 전시 배제 등의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다음 달인 2017년 3월 7일에는 문화예술계 단독으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예술행동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가정보원에게 블랙리스트 사태와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7년 7월 4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을 대표해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김유정·이유정 변호사가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원 고발 건 고발인 조사에 다녀왔다.

43) 「[단독]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직적 개입 정황」, <경향신문>, 2017. 1. 4.,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40600065#csidx73555f767526b0183781d336bbec1a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40600065#csidx73555f767526b0183781d336bbec1a9), 2018. 6. 6.

44) TF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중연합당,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문제대응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다.

### 3) 토론회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2017년 3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종환 전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예술행동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이었다. 토론회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고, 몇 가지 새로운 시각이 제시됐다.

김선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국가의 재정 지원에 있어 차별함으로써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 주최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2008년 12월 경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후 매 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반영되어 실제로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는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14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지침부터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로 그 범위가 약간 축소되었으나 2015. 10. 29.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명문화 되었다. 그는 “2008년 광우병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소위 ‘불법시위’를 명분으로 정부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고, 어쩌면 그 시도들이 문화예술계 사태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sup>45)</sup>는 폭넓은 견해를 제시했다.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아예 노골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원천 배제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취지와 그 시행을 위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sup>46)</sup>으로 보고,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상관에 복종할 의무<sup>47)</sup>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sup>48)</sup>가 있는데 만약 공정하지 않은 직무 수행 지시가 내려진다면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좀 더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 선언적 규정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불복종권을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홍성수 교수는 “하지만 이것이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과 공직사회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차별에 대한

45) 김선휴, 「불법시위단체 지원배제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문제-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국가 자원배분의 차별」,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17. 3. 8., 39쪽.

46) 홍성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2017. 3. 8., 39쪽.

47)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8)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차별금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집행할 공무원들의 감수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의 선발, 교육, 인사평가 등에 반영되면서 철저히 ‘관행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빈틈없는 제도는 없으며 “블랙리스트를 낳은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획책될 수 있”으므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이나 제도적 손질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민주적인 정치가 제도의 작동을 공정하게 통제하고, 건강하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감시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sup>49)</sup>고 보았다.

발제 이후 긴 토론을 통해 ① 검열백서 작성, ② 예술인들의 선언,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출판문화산업위원회 등 산하 기관장 사퇴, ④ 이상 산하기관 운영의 독립과 예술인 자치권 보장, ⑤ 예술인 창작환경과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개혁, ⑥ 예술인들의 자치 문화공간(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보장과 확대를 위한 예술행동, ⑦ 문화정책의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개입 활동, ⑧ 아르떼 예술강사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조사 및 아르떼 파행 문제 해결, ⑨ 블랙리스트 관련해 변형, 폐지된 사업에 대한 복원 작업, ⑩ 문화예술 관련 법률 개정안, 특별법 등 모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조사 연구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향후 대응을 위한 10개의 의제를 도출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토론회 다음 날인 2017년 3월 9일, 문체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① 부당하게 폐지된 사업 복원, ② 심의 과정 투명성 제도화, ③ 예술지원기관 독립성 보장, ④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⑤ 문체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예술행동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① 지금은 문화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② 이번 문체부 개선방안은 대부분 새누리당 집권 이전에 집행되고 있었고, 이미 진행되었어야 하는 정상적인 내용들로 현재 이런 상식들이 적용되지 못했던 원인을 찾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의 출발점이고 ③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정상화, 개선방안 수립과 혁신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인 현재 문체부 고위직, 기관 위원장 등이 추진할 수 없으며 이들

49) 홍성수, 앞의 글, 38쪽.

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도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원인을 알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돼 있을 거라는 송 직무대행과 박 위원장이 내놓는 방지책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며 “조직 지키기이고 문제를 대충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sup>50)</sup>

문화예술인과 문체부의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무죄<sup>51)</sup>라는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다음 날인 7월 28일, 민변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 [논평]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처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 50) 「책임자 처벌없는 ‘블랙리스트’ 대책…반응은 ‘짜늘’», 〈노컷뉴스〉, 2017. 3.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939415&sid1=001>, 2018. 6. 14.
- 51) 조윤선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 받자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7년 7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한 신문의 인터넷판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는 무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을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돼 있다. 트위터 팔로어가 72만 명이 넘는 표 의원의 SNS를 타고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서울중앙지법이 반박했다. 법원은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황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중략) 표 의원은 처음 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라면 판결이 이번 재판 황 판사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다.
- 출처: “조윤선 집행유예 판사, 라면 도둑엔 실형 선고” 인터넷 가짜뉴스 퍼 나른 표창원, 〈조선일보〉, 2017. 07. 29.,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9/201707290020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9/2017072900206.html), 2018. 6. 14.
- 황병헌 판사 ‘라면 도둑 3년 6개월 선고’ 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큰 당혹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장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 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루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의 1심 판결 일주일 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에서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는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2017고합102)을 분석했다. 대표 발제를 담당하 하주희 변호사는 조윤선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전부 무죄 부분 판단의 문제점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위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하여 그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피고인 김상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부분 수립된 ‘시스템’에 따라 보고 받고 승인하였다면(조운선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지원배제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그대로 이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승인권자인 피고인 조운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일정한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sup>52)</sup>

또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범관계 인정 안 됨’이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이 박근혜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를 적용할 수 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던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었다.

**[표 5] 검찰 1기 특수본과 특검의 박근혜 관련 수사결과 중 문화예술계 부분<sup>53)</sup>**

검찰 1기 특수본		특검	
혐의사실	적용범죄	혐의사실	적용범죄
조원동과 공모하여 CJ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하도록 압박	강요미수		
		[문화예술계 · 블랙리스트 사태] 최순실, 김기춘, 조운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과 공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하여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9,473명에 달하는 지원배제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종 지원이나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	직권남용, 강요
		김기춘,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공무원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	직권남용, 강요

52) 하주희,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분석과 과제」, 『긴급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는다 “조운선은 과연 무죄인가?”』자료집, 2017. 8. 4., 23쪽.

53) 김종보, 「퇴진특위와 미완의 촛불혁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9호(2017-상반기), 2017, 176-177쪽 발췌·재구성.

박근혜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 제1항 등에 적시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sup>54)</sup>고 판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즉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여 모두 처벌 되었는데 유독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sup>55)</sup>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동대표 이양구 작가는 “1심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면서 동시에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재판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었다며, 조운선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1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문화예술이 무엇이며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sup>56)</sup>며 항소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정초 지을 수 있는 잣대를 사용해줄기를 요청했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징역 4년), 조운선 전 정무수석(징역 2년)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2017노2425, 2424(병합))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이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가 없다며 조운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취소한 것이다.

54)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6헌나 1 참조.

55) 하주희, 앞의 글, 18쪽.

56) 이양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이 남긴 것들」, 『긴급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는다 “조운선은 과연 무죄인가?”』자료집, 2017. 8. 4., 30쪽.

### 3.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성과와 과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형사고발을 통해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문제를 가시화했다. 또한 각종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과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초석을 마련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을 통해 ‘예술과 법’ 양 쪽이 공유했던 문제의식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으로 이어졌고, 법률대응모임이 한계로 안고 있었던 ‘구체적인 입증’의 벽이 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허물어졌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대한민국과 박근혜, 김기춘, 조운선 등은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의 모든 활동은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의 피해 양상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각 분야 법률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피해 양상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이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구체적인 해결을 촉발한 것을 넘어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가 ‘사회정의’라는 공동의 이상향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임에 동참했던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리고 집행했던 세력의 싸움은, 결국 적폐 청산의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며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고질적인 적폐청산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sup>57)</sup>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 강신하 단장은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적·철학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불안·억압·공포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혀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임을 시사했다.<sup>58)</sup>

문학과 법에 대해 사유했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상상력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정의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가교를 잃게 될 것”<sup>59)</sup>이라고

57) 고영재, 「구속,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작」, ‘스토리펀딩: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 11화, 2017. 4. 3.,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0302>,

58)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의 법적 의미와 재정지원심사제도의 개선방향」,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자료집, 2017. 3. 8., 13쪽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문학적 심판’ 다시 말해, 문화예술이 상상하는 심판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현실에서의 심판은 헌법 조문 없이, 구체적인 판례의 범위 없이, 다수 의견의 수용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고발과 고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헌법 제29조 없이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억압을, 헌법 제21조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를 심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문학적 재판관은 비문학적 재판관에 비해 총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보다 뛰어난 듯”하나, “문학적 심판이 결코 훌륭한 심판을 위해 충분한 것은 아니며, 만약 그것이 다른 순수한 제도적 법적 덕목들의 적절한 제어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치명적일 수 있다”<sup>60)</sup>고 보았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인들이 가진 상상력은 사회 정의를 향한 총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힘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제도적·법적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인식했던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란 지원사업의 잠재적 수혜자일 뿐이며, 문화예술은 시장 실패의 위기에 직면한 공공재에 불과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향성에 반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좌파 책동’으로 치부해 탄압했다. 탄압의 방식은 자본에 의한 검열 방식과 유사했다. 권력자들이 택한 방식은 유신 시절과 같은 공권력의 동원이 아닌, 문화예술인 개개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경제를 신음하게’ 하여 교묘하게 ‘말려 죽이는 것’이었다. 문화용성으로 거창하게 포장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이기적인 자본의 독점 창구, 말 그대로 ‘게이트’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사전에 차단됐고, 예술행위와 감상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단절됐으며, 나와 타인의 주체성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창의성과 탄생성(natality)<sup>61)</sup>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문화예술 행위는 외화를 벌어들여오는 상품으로 발현되거나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환대받았다.<sup>62)</sup>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는 <다이빙벨>, <세월오월> 등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작품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문화예술이 표현해 낸 시대의 양

59)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20쪽.

60) 위의 책, 246쪽.

61) Arendt, Hannah, 2nd ed.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246.

62) 장지연,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9호(2017-상반기), 2017, 158쪽.

심을 시대착오적인 권력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화예술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을 이루는 상상력을 체험하게 한다. 문화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up>63)</sup>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문화예술정책이란 한 사회가 예술가를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만나 우리 사회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함께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현실은 헌법 조문 없이, 구체적인 판례의 범위 없이, 다수 의견의 수용 없이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들은 사회 정의로 향하는 새로운 협업 가능성을 경험하는 동시에, 법률이 가진 한계를 인식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리적으로 구성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업무방해, 강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그것만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자행된 모든 범죄와 모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민사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특검 수사에서부터 위원회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예술과 법’은 앞으로도 함께 문화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협치구조를 모색하면서 적폐청산, 표현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그려낸 가교에 법과 제도라는 현실적 설계를 더할 때 비로소 사회정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을 통해 법과 예술이 만나게 된 보다 큰 의미라 생각한다.

63) UNESCO,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54&page=3&SearchItem=&searchStr=&Gubun=&Cate=](http://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54&page=3&SearchItem=&searchStr=&Gubun=&Cate=), 2018. 6. 13.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http://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http://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9 791163 570394

ISBN 979-11-6357-039-4

ISBN 979-11-6357-035-6 (세트)

비매품/무료

94300

